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KAW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한국여성학회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일시 | 2021년 06월 19일(토) 10:00~21:00
방식 | 상연재 현장토론 및 온라인 중계

주최 | 한국여성학회, 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후원 | 한국여성재단, 여성가족부, 유한김벌리

KAWS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유한김벌리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일정표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시간	순서		
10:00~12:00	인사말		
	#1. 라운드테이블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		
13:00~15:00	#2. 라운드테이블 (2021 한국여성학회 특별세션) 공공부문 성인지교육의 미래와 전망 :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5. 낙태죄 폐지, 그 이후 과제와 전망	#8. 디지털 시대의 정치경제와 젠더
15:00~17:00	#3. 기획세션 전환의 길목, 돌봄사회책임의 재검토: 돌봄, 노동, 교육, 지역이 뒤엎힌 실타래	#6. 기술로 지연된/당겨진 재생산과 새로운 생애사 구축	#9.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모색
17:00~19:00		#7. 과학하기와 여(남)성하기	#10. 디지털 매체와 페미니즘 윤리
19:00~21:00	#4. 해외석학과의 대담(동시통역) 돌봄찬 성장(또는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10:00 - 12:00 #1 라운드테이블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

- 인사말** 이혜숙(한국여성학회 회장),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사회**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발표**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 - 그린뉴딜이나, 탈성장이나 ·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 발표** K-그린뉴딜, 젠더관점으로 보기: 정책 너머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 ·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부소장)
- 발표**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 정연보(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시민평화대학원장)
- 발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 기후재난 시대의 여성농민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표)
- 발표** 탈성장: 낭만인가 전망인가? · 박이은실(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전담교수)

13:00 - 15:00 #2 라운드테이블 (2021 한국여성학회 특별세션)

공공부문 성인지교육의 미래와 전망: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사회**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의미와 과제 · 이은아(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 발표** 성인지 교육 운영체계와 입법방향 · 윤정화(여성가족부 사무관)
- 발표** 지역 성인지교육 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 이순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성평등 관점에서 본 공직사회 조직특성과 성인지 교육 ·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15:00 - 17:00 #3 기획세션

전환의 길목, 돌봄사회책임의 재검토: 돌봄, 노동, 교육, 지역이 뒤엎힌 실타래

- 사회** 이은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장)
- 발표**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 ·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 발표** 마을공동체의 지역기반 돌봄 시도와 과제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이사)
- 토론** 김수경(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국장),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영선(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19:00 - 21:00 #4 해외석학과의 대담 (동시통역)

돌봄찬 성장(또는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 사회**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기조강연**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
· Susan Paulson(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 대담** 백영경(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질의응답 및 토론**

13:00 - 15:00 #5 낙태죄 폐지, 그 이후 과제와 전망

- 사회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발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나영(SHARE)
발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최현정(희망법 변호사)
발표 공공의료로서 피임 및 임신중지 ·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토론 나무(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15:00 - 17:00 #6 기술로 지연된/당겨진 재생산과 새로운 생애사 구축

- 사회 하정옥(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표 한국 난임시장에서의 다층적 희망의 서사와 희망의 비용 · 김진영(텍사스주립대 박사수료생)
발표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싱글여성의 생애 기획 · 최송희(한국여성재단)
발표 임신부 관리하기, 태아 예측하기: 한국 산부인과 내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 조희수(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토론 강지연(서울대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 남승현(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17:00 - 19:00 #7 과학하기와 여(남)성하기

- 사회 이은경(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발표 의료분야의 기술변화와 여성일자리 변화: 간호분야 중심으로 ·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자율감각쾌락반응(ASMR) 남성 유튜버들의 "디지털 젠더" 수행 · 이소림(컬럼비아대 방문연구자)
발표 페미니스트로 과학하기: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연구 · 임소연/김도연(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학생)
토론 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윤보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3:00 - 15:00 #8 디지털 시대의 정치경제와 젠더

- 사회 전의령(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표 데이터 경제와 여성 ·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여성 자영업의 재구조화 · 김미선((사)아시아여성학회 사무국장)
발표 이루다 트러블: 시상품화와 젠더문제 · 손희정(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김주희(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강현주(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박사)

15:00 - 17:00 #9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모색

- 사회 현남숙(성균관대)
발표 오이코폴리틱스 - 자각없는 자들의 정치 · 최유미(수유너머 104 연구원)
발표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본 인류세 담론과 페미니즘 · 송은주(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발표 그로츠크를 통해 본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 사유하기 · 이성림(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발표 인간 사이의 the Third: 그 발견과 구성 ·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지영(이화여대 철학과 강사),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17:00 - 19:00 #10 디지털 매체와 페미니즘 윤리

- 사회 황정미(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백경훈(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발표 취약성의 윤리와 페미니즘: 기저질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향수(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강사)
발표 게임화된 액티비즘: 대중 페미니즘의 동력 · 정의술(요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토론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1. 라운드테이블

-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 그린뉴딜이나, 탈성장이나.....2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 K-그린뉴딜, 젠더관점으로 보기: 정책 너머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12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25
정연보(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시민평화대학원장)

-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기후재난 시대의 여성농민.....33
김정열(비아캠페시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표)

- 탈성장: 낭만인가 전망인가?.....36
박이은실(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전담교수)

#2. 라운드테이블 (2021 한국여성학회 특별세션)

- 공공부문 성인지교육의 미래와 전망: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의미와 과제.....50
이은아(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 성인지 교육 운영체계와 입법방향.....57
윤정화(여성가족부 사무관)

- 지역 성인지교육 운영체계 현황과 과제.....66
이순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평등 관점에서 본 공직사회 조직특성과 성인지 교육.....75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3. 기획세션

- 전환의 길목, 돌봄사회책임의 재검토: 돌봄, 노동, 교육, 지역이 뒤엎힌 실타래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83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마을공동체의 지역기반 돌봄 시도와 과제.....97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이사)

#4. 해외석학과의 대담(동시통역)

- 돌봄찬 성장(또는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104
Susan Paulson(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5. 낙태죄 폐지, 그 이후 과제와 전망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119
나영(SHARE)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149
최현정(희망법 변호사)

공공의료로서 피임 및 임신중지.....166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6. 기술로 지연된/당겨진 재생산과 새로운 생애사 구축

한국 난임시장에서의 다층적 희망의 서사와 희망의 비용.....175
김진영(텍사스주립대 박사수료생)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싱글여성의 생애 기획.....186
최송희(한국여성재단)

임신부 관리하기, 태아 예측하기:한국 산부인과 내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190
조희수(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7. 과학하기와 여(남)성하기

의료분야의 기술변화와 여성일자리 변화: 간호분야 중심으로.....202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율감각쾌락반응(ASMR) 남성 유튜버들의 "디지털 젠더" 수행.....240
이소림(컬럼비아대 방문연구자)

페미니스트로 과학하기: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연구.....247
임소연/김도연(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학부생)

#8. 디지털 시대의 정치경제와 젠더

데이터 경제와 여성.....259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여성 자영업의 재구조화.....260
김미선((사)아시아여성학회 사무국장)

이루다 트러블: AI상품화와 젠더문제.....261
손희정(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9.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모색

오이코폴리틱스-자격없는 자들의 정치.....273
최유미(수유너머 104 연구원)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본 인류세 담론과 페미니즘.....284
송은주(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그로츠를 통해 본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 사유하기.....294
이성림(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인간 사이의 the Third: 그 발견과 구성.....300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디지털 매체와 페미니즘 윤리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307
백경훈(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취약성의 윤리와 페미니즘: 기저질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315
김향수(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강사)

게임화된 액티비즘: 대중 페미니즘의 동력.....324
정의솔(요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

사회: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 그린뉴딜이나, 탈성장이나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K-그린뉴딜, 젠더관점으로 보기: 정책 너머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정연보(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시민평화대학원장)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기후재난 시대의 여성농민
김정열(비아캠페시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표)

탈성장: 낭만인가 전망인가?
박이은실(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전담교수)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 - 그린뉴딜이나, 탈성장이나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는 의미 없다”
-마하트마 간디

1. 이것은 상상력의 싸움이다

‘지구를 떠날 때’를 상상해본 적이 있다. ‘대안사회 구상하기’란 대학 교양수업에서였다.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지구인은 뭘 갖고 가야 할까? 치열한 토론 끝에 도달하는 결말은 ‘또 다른 지구’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행성을 개발할 돈과 시간과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행성에 쏟아 붓는 것이 더 희망적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다분히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흥미롭다. 때로는 예상 경로를 벗어나기도 한다. 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평소의 이삿짐처럼 짐을 쌀 수는 없다.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일테니까. 처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존도구’를 고른다. 나침반, 물, 성냥, 시계, 손전등, 침낭, 비닐, 정수키트, 등등.. 떠올릴 수 있는 생존키트가 줄줄 나온다. 그러나 곧 그 생존도구들이 모두 지구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마치 난민보트에 오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기후난민’이란 용어는 우리가 곧 지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도착할 곳이 다른 행성이 아니라 지구의 다른 곳이라고 해도, 어떤 곳에 도착하든 우리가 알던 그 지구는 없을 것이다. 기후난민은 어떤 이들에겐 아직 미래형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상상이 아니라 이미 닥친 현실이다. 매년 농사를 망치고 있는 농민들과 좌초산업의 해고 노동자부터 이미 기후난민이다. 코로나19 백신대기자인 우리들도 모두 조금씩 난민화 되고 있다. 살았던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브뤼노 라투르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법>에서 미래로 혁신하는 시간적 전진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지구로의 귀환 경로를 찾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지점과 다시 충돌하지 않으면서 거주의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상상력이 각자 다르게 발휘되는 것도 흥미롭다. 첫 번째 생존키트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는 이들은 이공계 학생들이다. 주로 과학기술적 대안과 근거가 제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떤 곳인 줄 어찌 아는가? 우리는 곧 ‘개인적 차원의 생존’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물을 갖고 가도 그 물을 혼자서 마실 수 있을까? 침

냥을 갖고 가도 혼자 덮을 수 있을까? 도둑을 신고할 경찰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길고 불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경찰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웃음이 터진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운 침묵이 덮친다. 군대와 경찰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여행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로운 우주여행이 아니라 ‘난민 캠프’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존했던 제도적 안전함에 대한 믿음도 웃음과 함께 거품처럼 꺼진다. 어떤 사람이 우주선의 탑승자로 선별될 것인가? 1%를 위한 우주 파라다이스에 당첨된 이들일까? 아니면 어디서 우주 쓰레기가 되어도 상관없을 99%의 사람들일까? 누가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구할 것인가는 권력의 문제다. 여기에 이르면 지금 부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인류의 도전’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가 가장 높은 물건을 고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희소한 것을 선택하라고. 일회적으로 소모되는 물건보다는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도구’가 유용하다고 한다. 즉,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교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라면 더 좋다. 이토록 합리적이고 냉정한 이성은 결국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첫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쳐왔구나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정글’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힘센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 만인이 만인의 적으로 돌변한 ‘사회 없는 자연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 때 사회학적 상상력이 빛을 발한다.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 안에서 불신이 쌓이면 그만큼 모두의 생존에 위험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보여야 한다. 도움이 도움으로 돌아오고 돌봄이 돌봄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경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를 생각한다. 친구임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나 ‘선물’이 될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게임이론’의 합리적 선택론을 인간행동의 법칙으로 여기는 이는 극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그건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상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반론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를 믿는 사람이다.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래 관계 외에 어떤 사회적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이나 시장이 그렇다. 그러나 ‘반복 게임 이론’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거래할 수 없다. 신용은 바닥이 날 것이고, 교환이 반복될수록 타인에게 손해를 키우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도 크게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새로운 별에서도 우리는 남을 등쳐먹고 내 배를 불리는 그런 시장경제를 건설할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우리는 비로소 국가 없는 나라의 입법자가 되어 새로운 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본다. 마치 플라톤의 <노모이>를 한 명의 현자가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써가는 과정 같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건가. 그때부터 정치적 상상력이 피어난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일어났던 토론이 지금 기후위기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담론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은 흥미롭다. 동시에 우려스럽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들대로, 각자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찾고 제시한다. 각 분야의 연구결과물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관점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 기후위기 담론은 지나치게 압도적으로 기술주의와 경제주의적(시장주의적) 언어와 서사에 의존하고 있다. 마치 임박한 파국 앞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것 같다. 기술적 유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담론을 지배한다. 그린뉴딜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담고 있다.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생존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생존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면 삶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요구들이 모두 생존 이후로 미뤄진다. 전체의 생존을 제1의 사회적 목표로 삼을 때, 소수의 목소리와 생존 이상의 사회적 가치들은 손쉽게 생존의 목적에 종속된다. 생존부터 해야 정의도 평등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는 논리와 동일 형식이다. “지구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는 환경주의적 구호도 그런 문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구가 멸망하면 8년 후에 죽지만, 해고는 내일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나중에’의 논리는 소수와 약자를 담론장에서 배제시키는 국면 마다 힘을 발휘해왔고, 특히 재난자본주의가 정치를 중지시키는 비상상태에서는 강력한 전체주의적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재난담론’과 ‘생존담론’으로 구축되는 것은 위험하다. ‘생존사회’는 ‘생명자본주의’와 ‘생명정치’의 토대다.

2. 그린뉴딜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

지금 ‘그린뉴딜 패러다임’은 바로 그런 ‘생존담론’을 대표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은 생존의 서사 뒤로 밀려난다.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탈동조화 전략은 생존서사의 변형이다. ‘탈탄소사회’나 ‘탄소중립’ 같은 탈정치화된 용어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봉쇄하고, 지난 30년간 전 사회적으로 유포된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관점을 환경주의 언어로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등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개념은 대차대조표로 나타나는 물신화된 등가성과 적정관리를, 기간별 부문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탄소 계산에 과몰입하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탄소 거버넌스와 탈탄소 정책은 대처 시대 신공공관리에 도입되었던 목표관리경영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숫자의 통치는 많은 것을 가리고 속인다. 탄소를 배출하면 그만큼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법은 배출하려면 흡수원을 만들면 된다는 인식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원본 없는 이미지로 현실세계에 명령을 내리는 시뮬라크르처럼 썬범의 기획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기괴한 전도력을 발휘한다. 이 상상계를 우리는 어떻게 전복하고, 기존의 지배 언어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지나온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 사회에 불타는 지구와 녹아내리는 극지방의 사진과 함께 녹색 구명정이 하나 도착했다. 구명정이 도착했음을 녹색당은 총선의제로 애드벌룬처럼 띄워 올렸다. 거기엔 ‘그린뉴딜’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린뉴딜은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거래에 ‘정책연합’의 명분으로 사용되었고, 언론에서도 그린뉴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과 달리 ‘그린뉴딜’이란 말에서 아무 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한국 사회 내부적인 경험이라고는 이명박 시대의 ‘녹색성장’ 밖에 없었다. 2008년의 그린뉴딜은 보수정권에서 수입되어 ‘녹색성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2019년의 그린뉴딜은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녹색당에서 수입되어 ‘그린뉴딜’이란 영어 표기 그대로 사용되었고, 마치 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표상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린뉴딜은 기의 없는 기표였고, 제목만 있는 빈 서판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 뭉이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기입했어야 했지만, 곧 이 상징 기호는 자본과 정권의 녹색성장 신산업 정책으로 채워졌고, 그린워싱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녹색은 저항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라 온도상승으로 지구 재난을 초래할 탄소의 역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상징하는 색이 됐고, ‘녹색정치’는 녹색이란 상징을 빼앗기고 훼손당했다.

물론 처음에는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나는 그린뉴딜에서 무엇을 상상했는가. 뉴딜 주체의 재구성과 사회 협약의 재해석이었다. 1930년대 뉴딜과 2008년 그린뉴딜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넘어서는 사회계약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뉴딜’이란 용어에서 루즈벨트 시대와 전후 유럽의 노사정 협약을 읽을 수

있는 정치학 연구자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회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전지식을 전제한 '뉴딜'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 시민 대부분에게 그린뉴딜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호와 같은 말이었다. 뉴딜 앞에 붙은 '그린'이 그나마 '녹색'이라는 상징을 통해 직관적 이해를 도왔고, 여기에 대한 상상적 해석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그린뉴딜을 구상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린뉴딜을 적극 수용하자 곧 '그린뉴딜'을 운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주창했던 사람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그린뉴딜이 자신이 상상했던 그린뉴딜과는 많이 다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행동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정부의 모순된 행보를 보면서 '구린 뉴딜'이나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린뉴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린뉴딜은 원래 그 자체로서 명확한 체제관리 프로젝트로서의 한계를 지닌 것일까?

사실 '진짜 그린뉴딜, 진정한 그린뉴딜, 올바른 그린뉴딜, 그린뉴딜다운 그린뉴딜..' 그런 건 없다. 유럽의 그린뉴딜이 있고, 미국의 그린뉴딜이 있으며, 한국의 그린뉴딜이 있다. 오바마의 그린 뉴딜이 있고, 샌더스와 AOC의 그린뉴딜이 있으며, 이명박의 그린뉴딜이 있고, 문재인이 그린뉴딜이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그린뉴딜이 있고 나옴이 클라인의 그린뉴딜이 있다.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정치사회적 효과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말이, 그린뉴딜이다. 새로운 협약 혹은 거래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들의 합의한 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뉴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자의 이상과 현실이 어긋나며 동상이몽이 깨어지는 혼란이 빚어진 것은 그린 뉴딜을 마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생태적 사회 전환의 보편 가치처럼 사용하면서, 상징은 진보적 기후운동에서 차용하고, 실제 내용은 기술주의적 시장주의적 관리정책으로 수립하는 이상한 어긋남 때문이다. 진보적 상징을 보수적 실행과 결합하는 상징계와 현실계의 교착은 근래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실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이다.

미국의 선라이즈 무브먼트나 유럽의 멸종저항 운동이 그린뉴딜의 상징처럼 소개되곤 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 그린뉴딜 초기 공론장에 가장 많이 불러 나온 사람은 녹색 기업가정신(green entrepreneurship)을 설파하는 시장주의적 그린뉴딜 전도사인 제레미 리프킨이었다. 국내 그린뉴딜 그룹은 과거의 뉴딜과 결합하면서 기후정치담론을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통해 추동해낸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와 결합한 그린뉴딜 보다는 리프킨이 지지하는 EU의 보수적 그린딜을 '모델'로 삼았다. 이런 과정에서 운동으로서의 그린뉴딜이 제기했던 급진적 사회 의제들은 실종되고, 기후위기를 생태적 위기로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권리와 불평등의 문제로 확장해 갔던 체제전환의 요구는 '탈탄소 사회'라는 납작한 용어 안으로 축소되어 점차 소멸됐다. 그리하여 지금 그린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K-뉴딜의 하위 범주로 편입되어, 그린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등 자동차, 에너지, 건설사업에서의 새로운 신성장 분야 지원과 산업 전환 및 녹색 시장 부양을 위한 제도적 조정 절차로 완전히 납작해져버린 개념이 되었다. 이제 그린뉴딜은 기후운동의 용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및 그와 연동된 산업전환 계획으로서 국가정책 패키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2020 총선을 '그린뉴딜 총선'으로 치렀던 녹색당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전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더 이상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녹색정치의 슬로건으로서의 기능은 자동폐기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녹색당의 '그린뉴딜'이 좌초되고 정부 여당으로 흡수된 과정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전히 녹색전환연구소 등을 통한 인적 정책적 결합을 통해 민주당과의 그린뉴딜 공조는 계속 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정당과의 내용적 공조를 용인하거나 지향하는 당내 경향은 녹색당 역시 점점 '신자유주의적'으로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녹색정치는 그린뉴딜을 '수거' 하든지, '폐기' 하든지, 아니면 '대결' 하든지, 해야 한다. 정치는 늘

다음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의 싸움이다. 상상계를 재창조하지 않으면 기존의 주어진 가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여성정치도, 녹색정치도, 진보정치도, 다른 언어와 다른 서사를 발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3. 기후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상상력

녹색정치의 상상력을 확장하려 했던 시도가 그린뉴딜이 정부로 흡수되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탈정치화되고 무력화된 반면 역으로 이 용어는 자본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새로운 산업적 동기를 부여했다. 서구 자본의 입장에서 '뉴딜'이란 용어는 역사적으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꺼림칙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시민주의적 정부와 노동계의 정치적 협공에 의해 자본에 규제와 압박이 가해지며 사회적 협약이란 전략에 밀렸던 기억이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미국식의 뉴딜이나 유럽식의 노사정 합의정치는 노동 자본 정부가 각각 1/3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급 간 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와 진보정치의 노동대표성이 서로 교환됨으로서 노동계급과 시민주의 정당의 정치연합이 자본에 대한 협상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운동의 힘이 아래로부터 분출됨으로서 국가를 압박할 수 있었고 - 제도화된 의회민주주의에서라도 최소한 유권자로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 노동자-국가 연합을 통한 이중적 압박이 비로소 자본에 양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국가 외부로 착취를 외부화 함으로서 내부의 자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 노동계급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았고 그래서 노동계급을 대변해야만 했던 정치세력은 지금은 없다. 노동계급은 분쇄되고 와해되고 해체됐으며, 정치적 세력관계는 노동과 국가가 아니라 자본과 국가의 동맹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조직 노조가 한 축을 차지한다고 해도 '노-사' 협상에서도 '노-정' 협상에서도 이미 한 쪽은 너무 무겁고 한 쪽은 너무 가볍다. 주변화된 노동자 민중은 이제 아예 협상의 파트너로도 취급되지도 않는다. 이런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뉴딜에 남아있는 계급적 저항의 역사적 흔적과 그것이 불러올 미래의 정치적 상상력까지, 혹여라도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불씨나 불길한 흔적이 모조리 소거되고 난 후에 '그린뉴딜'은 지배층의 프로파간다로 변화했다. 지금 한국에서 기업들이 앞장서서 그린뉴딜을 내세우며 '탄소중립'을 선전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여전히 경합중인 개념이자 기업들이 의혹의 눈길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노먼 록웰의 연작 그림 '네 가지 자유'는 1930년대 뉴딜 시대의 대표적인 프로파간다를 보여준다. 그림은 루즈벨트를 통해 제시된 '위대하고 풍요로운 미국'에 대한 약속(deal)을 표현한다.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 욕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신앙의 자유(Freedom of Worship),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를 의미한다. 이것은 당대의 뉴딜이 합의했던 목표이자 미국인들이 품었던 뉴딜에 대한 이상과 희망을 보여준다. 양복 입은 신사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노동자의 모습과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 칠면조를 먹는 장면, 각자 믿는 신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그림들은 이후 시대를 거둬들이며 여러 가지 형태로 변용되어 왔다. 이후에 작업한 작가들은 '네 가지 자유'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표현하나 모두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백인 노동자 가정'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록웰의 그림들은 수많은 유명 무명의 작가들에 의해 수정되면서 당시의 뉴딜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된 존재들을 화면 속으로 다시 불러온다. 신사들의 회합에서 발언하던 백인 노동자의 모습이 흑인 노동자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몸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덜어주던 어머

니의 식탁과 요리를 아버지의 요리나 채식주의자의 식탁으로 바꾸기도 한다. 심지어 식탁에 죽은 채로 올려졌던 칠면조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동등한 주체로서 ‘동물해방’의 뉴딜을 새롭게 쓰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변주들이 가능했던 것은 뉴딜이 미국인들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공통의 기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뉴딜’은 그렇게 계속 도전받고 비판받으며 새롭게 갱신되어온 개념이자 실천이다. 2000년대의 ‘그린뉴딜’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뉴딜 다시 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입된 개념으로서 그린뉴딜에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 전제될 수 없다. 미국인들이 ‘그린뉴딜’을 말할 때 그에 앞서 떠올릴 수 있는 ‘뉴딜’이란 것이, 경험으로서도, 상상으로서도, 개념으로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그린뉴딜’이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한 용어로서, 미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기후운동의 실천력이나 급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역사적 맥락을 한국적 맥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난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전달된 타자의 역사적 경험 역시 그것을 요구하고 시작하는 곳에서는 정치적 상상력을 줄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바꾸거나 자기화 한다. 그런데 한국의 그린뉴딜은 뉴딜이 상징하는 민중 저항의 역사적 맥락을 소거시킴으로서 운동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토착화’에 실패한다. 이것은 수입자들의 목적이 대중운동이나 민중연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 패키지를 표현할 용어가 필요했고 그것이 ‘그린뉴딜’이었다. 한마디로 ‘포장지’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그린/뉴딜은 자본에게도 지배권력에도 전혀 두렵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대신 그린뉴딜은 이제 노동자 민중이 두려워해야 할 말이 되었다. 이념이나 상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힘을 발휘하는 동업정치의 그린뉴딜 동맹체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의 중간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뉴딜이 2000년 이후 세계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한 ‘굿 거버넌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 ‘정부-기업-시민사회’라는 지배 엘리트 거버넌스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거버넌스 위원회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아니라 ‘탄소중립 위원회’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뉴딜의 목표가 ‘탈탄소’로 표현되는 한, 우리는 ‘에너지 전환’ 이상의 체제 전환을 상상하기 힘들다.

자본도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자본주의를 늘 상상한다. 2008년의 그린뉴딜은 금융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생명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21세기 자본의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2019년 북구의 발전 국가들에서 부활한 그린뉴딜이 10년 전과 다른 점은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기후운동이 결합했다는 점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위로부터의 전향이다. ‘기후위기 부정론’과 환경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 지배적이었던 2008년과 달리 지금 자본은 기후위기를 적극 수용하며 해결자로 나선다. 시장 진입이나 사업 기회 확대의 계기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 투자자이자 체제 재편자로 변신하여 기후관리 체제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자본이 상상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상징계를 벗어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구 살리기로 둔갑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서사로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굿 거버넌스’ 때처럼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주창자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말한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문장은 이들이 생각하는 뉴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정부-기업-시민사회의 3자 동맹이야말로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기득권 동맹이 아닐까. 법, 자본, 기술과 지식의 소유주체를 엮어 굿 거버넌스가 발명해낸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동맹 말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정부 주도의 전력 개발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강조했던 ‘peer assembly(동업자 의회)’ 모델에 충실히 부합한다. 정

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그린 에너지를 개발 이용한다는 모델이다. 이 개념은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의 보다 우경화된 버전인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말과 달리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지 않으며,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할 뿐이다. '이해관계자'라는 말은 정치세력 간 권력관계를 은폐하며 지배관계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수평적 관계로 치환한다. 이것은 정치적 존재로서의 시민을 인구 1/n의 생명체로 환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와 다원적 개인 선택의 총합으로 왜곡되는 것처럼 탄소중립위원회도 '시민 참여'나 '민관 협력'라는 용어를 통해 기술관료적 과두정을 민주주의로 위장한다. 결국 정부의 정책 하청 기구이자 기업의 로비 무대로 기능하는 '국가-자본 동맹'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대표들은 참여의 정당성을 위해 계속 해서 환경운동의 가치와 목표를 끌어들이고, 기후운동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혼란을 만들어냈다. 운동의 용어에서 저항성과 계급성을 탈각시킴으로서 정치적 상상력을 제거하고 급기야 꺾데기만 남은 개념을 자본과 권력에 넘겨주어 포장지로 쓰이도록 하는 '배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항적 상상력을 재발견할 수도 있었던 '그린뉴딜'은 그렇게 자본의 '신상품'이 되었다.

츨스키가 현대 기술관료제를 '동의 없는 동의' 개념으로 비판했듯이,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다자간 조정협약체 성격의, 대표도 대의도 없는 기구들에 중대한 국가 정책이 맡겨지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정부를 통제하려는 기업, 시민관료화된 전문가들의 테크노크라시 지분이라는 공통적 이해관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다. 지금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을 처리해놓고 나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동의 없는 동의'는 미국의 필리핀 강점이나 베트남 참전을 정당화했던 논리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금 반대하는 현지인들도 우리(미국)를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생각할 것이고, 반전시위를 하는 미국인들도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며, 그 자신도 국익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동의 없는 동의'의 원리는 대중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불신하며, 도로에 뛰어들려는 아이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위력으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듯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설혹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무지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의 대표적 논설이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상황에서 특히 효력을 발휘하는 '동의 없는 동의'의 논리를 오늘날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앞에서 기술관료들과 환경엘리트들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그들을 설득한다. 나중에 설득당할 자들은 전문가들의 테이블에서 배제되며, '교육 대상'과 '동원 대상'으로 대상화된다. 지금 기후위기 시민교육도 바로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설득과 동원의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다. '기후 시민교육'이나 '기후 캠페이너 양성 과정' 같은 계몽주의적 교육과정에서 참여 동원의 주요 대상은 또다시 대부분 '여성'이다. 차라리 이 오래된 공급자-수요자 관계, 즉 논리를 공급하는 '정부-남성-전문가'와 행동을 담당하는 '지역-여성-주민' 사이의 이 고착화된 교육자-피교육자 관계를 해체하고 주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기후운동이다. 풀뿌리 운동, 지역정치는 지역 주민이 중앙정치의 프로파간다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자본은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인적 자원'도 채굴해왔다. 시민사회 전문가, 운동가들이 국가의 관점과 자본의 언어를 지역 구석구석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고, 리빙랩, 소셜디자이너, 체인지메이커, 액티비스트가 '생활정치' '사회개혁' '운동가' '활동가'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전문화했다. 삶으로부터 운동을 유리시키는 데 일조한 용어들이다.

아미타브 고시는 자유무역 협정과 파리 협정이 동일한 신자유주의 문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환경주의 용어가 '이해관계자'나 '비용', '손익' 같은 경제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다양한 역만장자, 기업, 기후기업가(climate entrepreneur)들이 파리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딱히 비밀도 아니다.”고 말하며, “파리 협정문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부터 곧바로 빌려온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 무역 협정은 파리 협정문이 언급하고 있는 ‘가속화하는, 유망한, 권능을 부여하는 혁신’의 출처이자 그 문서가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용어- 이를테면 이해 당사자, 좋은 관례 예방적 해법, 공적·사적 참여, 기술발전 -등의 출처임이 분명하다.”(아미타브 고시 지음, 김흥옥 옮김, <대혼란의 시대> 204-205쪽. 에코리브르 2021) 우리는 이 문법에서 벗어난 언어를 발명해야 한다. ‘탈성장’의 상상력은 그런 점에서 귀중하다.

4. ‘탈성장’의 상상력

일국적 차원의 시민주의적 가부장제적인 국가 프로젝트는 서구 부르주아의 정치적 상상력의 최대치에서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여기서 ‘시민주의적 상상력’조차 배제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협소화 되었다. 강력한 국가 개입과 시장 규제가 아니라 강력한 시장적 요구와 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그린뉴딜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 패키지로 이해되는 그린뉴딜이란 일종의 ‘생존키트’다. 하지만 이 생존키트에는 거주의 상상력이 담겨있지 않다. ‘생존주의’는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말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장 닥친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만 급급한 ‘당면 과제’들은 우리에게서 그 너머를 보는 장기적 전망을 박탈한다. 지금 우리는 임시 필요한 구호상자가 아니라 체제 전환과 전환 이후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20세기 전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통해 상상할 수 있었던,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 말이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통해서만 지속할 수 있는 체제라면 ‘탈성장’은 자본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동맹의 핵심 슬로건이 될 수 있다. 물론 좌파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탈성장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가능할 수 없고, 따라서 탈자본주의 경로를 발견하지 않고서 탈성장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이후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듯이, 탈성장도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하며 시작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화’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도 적용된다. 이념에서 정치를 탈각시키면서, 공유, 코뮌, 커먼즈 같은 개념들도 모두 자본주의적으로 재창조된 바 있다. ‘사회적 경제’는 얼마나 사회주의와 상관없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재창조되었나. 잠식당할 위기는 어떤 개념이나 존재한다. 그만큼 탈환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현실성이 자본주의 안에서 존재한다면, 탈성장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상상적 창조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시대의 공산주의는 자연과 사회, 동물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 ‘코뮌’의 주체를 새롭게 확장할 것을 요구받는다.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치적 권리들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어갈 것인지, 그것을 가로막는 지배 권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탄소의 할당이 아니라, (탄소를 할당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의 할당을 먼저 말해야 한다. 생존의 담론으로서의 그린뉴딜에 대항하는 거주의 담론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다. 또한 탈성장은 ‘탄소중립’이나 ‘탈탄소 사회’가 이미 체제유지를 위해 자본에 의해 수용되고 주도되고 있는 지금, 환경, 노동, 여성, 청소년, 동물권 등 기후 운동 내에서 교차하는 반자본주의 계급정치 전선을 재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탈탄소’가 아니라 ‘탈성장 그룹’으로 모일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기후위기 주범 세력들과 함께 ‘탈탄소 경제사회’라는 인류의 공동목표를 공유하는 대신, 그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탈성장의 노선을 구축하고 반자본

주의 연대와 정치적 세력 확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이나, 탈성장이나’ 하는 이 물음은 그린뉴딜로 재포장한 녹색성장론을 폭로하는 동시에, 다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탈성장을 요청하는 물음이다.

그 학기 토론에서, 제안하고 참고하고 수정하면서 결국 가장 많은 이들이 결론으로 도달했던 ‘지구를 떠날 때 가져가야 할 것’은 놀랍게도 ‘씨앗’과 ‘책’이었다. 자연과 문명을 상징하는 두 가지 항목으로 결론이 났을 때, 나는 약간 소름끼치는 기분이었다. 책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인간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문명’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지구에서 인간이 저지른 일말이다. 새로운 지구를 상상하려면 가장 먼저 지구에서의 삶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방금 막 지구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가장 위험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을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파괴의 원인과 지배의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 새로운 별에서는 그래선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에는 지배자의 악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처럼 새로운 코문을 지구 위에서 상상하고, ‘아직은 있지 않은’ 그러나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저항하며 연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책이 있다면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주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로 돌아오는 법’과 ‘지구를 고향으로 되찾는 법’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의 이 토론 이후 나는 청소년 진로교육이나 미래교육을 할 때도 같은 질문을 사용하곤 했다. 대학 수업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토론 양식에 최적화된 강의실과 달리 청소년들의 답은 질문의 틀을 뒤흔드는 경우가 많다.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고 답한 이의 완고한 부동성은 모두에게 끝없는 이동과 변화를 강요하는 시대에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지구를 떠날 때’의 토론에서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동반자’의 출현이다. ‘가지고 갈 물건’이 아니라 ‘함께 갈 가족과 친구’를 말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그 ‘가족과 친구’에는 사람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식물도 있었다. 생존의 필수품과 삶의 동반자, 무엇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이 둘의 차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인식차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발전/나아감’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발견/귀로/돌아옴’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 가능성’이 ‘거주 가능성’과 동일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거주 가능한 곳이 되려면 온도와 습도, 물과 식량 같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브루노 라투르가 최근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에서 했던 담론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거주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보다 지구에 착륙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가능한 방법이다. 지구를 거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주 가능한 곳은 생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생존 가능한 곳이 곧 거주 가능한 곳은 아니다.

과학은 생존의 가능조건을 계산한다. 2도 이상이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과학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생존의 한계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구 온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은 ‘탄소’다.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지구의 탄소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는 탄소의 흡수량을 늘여야 한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량이 되어 사실상 ‘0’가 되게 만드는 것을 넷제로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감축에는 상당한 사회적 충격이 따를 것이므로, 감축과 함께 적응 계획도 필요하다. 감축과 적응에 기술적 수단들이 검토된다. 성층권에 먼지를 주입하는 방법, 해양에 철분을 투입하는 방법 등, 이런 과학기술주의적 노선은 탄소량을 줄이는 것을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요약하자면 ‘생존이 없으면 거주도 없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게 답한다. 온도 상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마찰력은 자본의 무한 성장을

저지하는 사회운동일 수 있다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계산'이지만,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다. 거주가능성은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살아있을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위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K-그린뉴딜, 젠더관점으로 보기 : 정책 너머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1라운드테이블
: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 K-그린뉴딜이 놓치고 있는 것들

K-그린뉴딜, 정책 너머 정치를 말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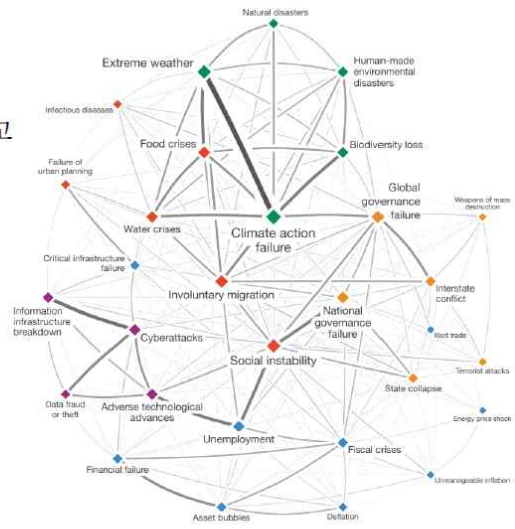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고
 식량 생산은 세 배로 증가했으며
 에너지 소비는 네 배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이 훨씬 더 극적이다.
 지난 50년 동안 인구는 60퍼센트 증가했고
 에너지 소비는 열 배
 화석 연료 사용은 아홉 배 증가했다.

이런 모든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기후문제를 야기했다.”

- 호프 자런(2020),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WEF Global Risks Interconnections Map 2020)

■ 시민들에게 말을 거는 전환의 대안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성평등, 젠더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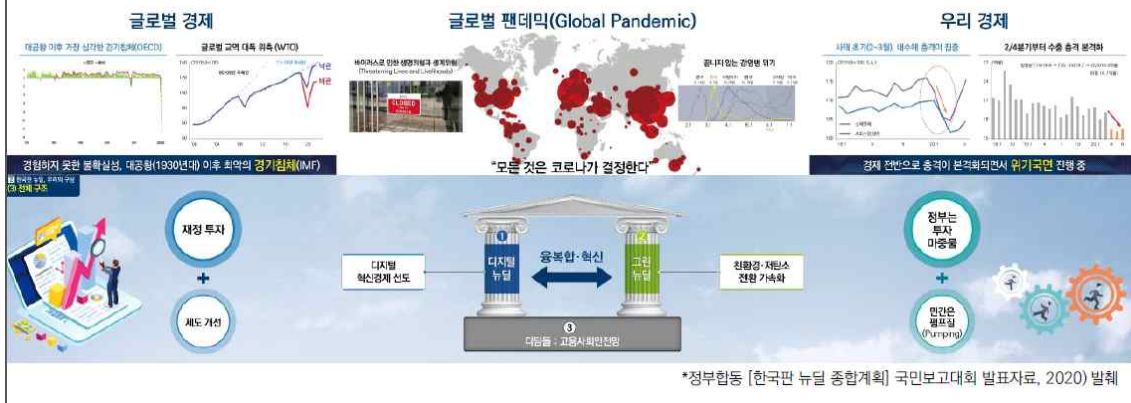
- 운명을 좌우할 십 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 열가지 행동
 (1)옛 세상과 작별하자, (2)슬픔을 마주하되 미래의 비전을 품자, (3)진실을 수호하자,
 (4)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자, (5)화석연료에서 벗어나자,
 (6)지구의 숲을 되살리자, (7)청정 경제에 투자하자, (8)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자,
 (9) **성평등을 실현하자** 그리고 (10) 정치 참여에 나서자
 -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톨 리벳카넥(2020),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선택-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 2050,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
 (1)음식물 쓰레기와 식단 변화, (2)태양·풍력 에너지, 전기 동력 운동,
 (3)숲 보전, 숲 가꾸기, 습지 및 우림 복원 그리고 (4)**여성 권리 신장**
 - 안드러 스나이더 마그나손(2020), 『시간과 물에 대하여』
- 기후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세가지 길, 환경의 길, 경제의 길, **사회의 길**
“젠더평등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
 - 조효제(2020), 『탄소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 발표의 시작점

-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하면서 새삼 각성하게 된 생태사회위기, 불평등과 돌봄위기
- 기후정의와 사회체제 전환, 그리고 삶의 재편으로 나아갈 기회가 열리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요청
-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과 돌봄에 관한 급진적 사유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유하는, 페미니즘이 변화를 생각해야 할 시간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한
담론의 난장(김이은실, 2020) 제안
- 이 시기에, 기후약당이라는 명명도 탄소중립이라는 당면과제도 외면해오던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감염병위기 대응이라는 국면과 맞물려 내놓은
국가정책으로서 ‘한국형 뉴딜’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로 제시된 ‘K-그린뉴딜’에 관한 젠더관점의 문제의식

■ 한국형 뉴딜의 배경과 기본구조, 주요과제 (1)

- 경제위기 감염병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 2020년~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160조원 투자



한국형 뉴딜의 배경과 기본구조, 주요과제 (2)

- 디지털뉴딜 :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
- 그린뉴딜 :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

디지털 뉴딜은 왜?

-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면와 확산
- 디지털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 우리의 경쟁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호국화 확대 필요
- 디지털 경제 가속화
- 경제 역동성(Dynamics)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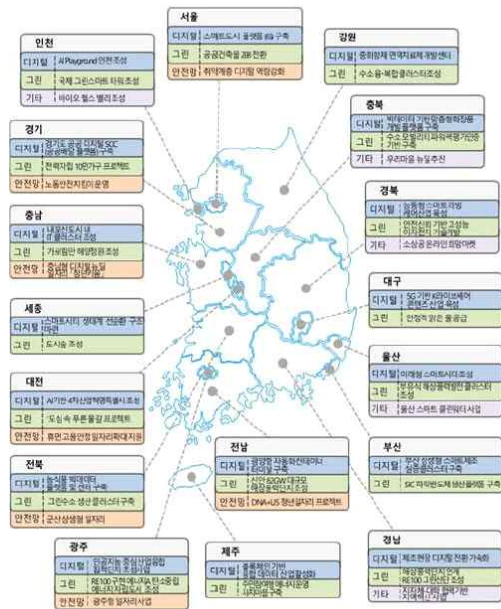
그린 뉴딜은 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시급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선진
- 저탄소 그린경제 가속화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

*정부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2020) 발췌

한국형 뉴딜의 확장과 탄소중립 목표

- 지역균형뉴딜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20.10)
: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
. 목표 : 지역경제 혁신 + 삶의 질 개선 + 국가균형발전 도모
. 방향 : 뉴딜과 지역정책 연계 + 양질의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추진전략 발표 (관계부처합동, 2020년 12월)
: but,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 보완 권고 받은 상황



■ 토론되지 못한 '명명'과 '정의' : '그린' '뉴' '딜'

-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아니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기 곤란한 명명이자, “환경위기와 경제위기에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지구를 살리자’와 ‘자본주의를 살리자’는 두 요구를 모두 실현하겠다는 모순적 과제”(채효정, 2020)라는 지적
- 그린뉴딜/녹색성장, 미국의 급진적 그린뉴딜, 유럽의 그린딜, 한국형 뉴딜과 K-그린뉴딜
- 사회계약으로서 New Deal(3R : Relife, Recovery, Reform)이라는 주창과 정부주도 정책으로서 한국형 뉴딜(New Digital Environment/Energy And Labor/Social Safety Net) 계획의 간극
 - 한국형뉴딜의 하위 전략으로서 K-그린뉴딜
 - K-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범주/관계성
 - 녹색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구심
- 정부주도 정책사업 성격, 그린뉴딜 부차화, 팬데믹 상황의 돌봄위기 대응 실종, 젠더관점의 부재

* 출처: 윤순진, [그린뉴딜 현장과의 정책대화 토론회 발제문(2020.7.1.) 발췌

5. 물어아 일 쟁점들

■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과 공통점과 차이점?

-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SOC(사회간접투자)+녹색성장,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

5. 물어아 일 쟁점들

■ 이명박 정부 그린 뉴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계획

사업명	예산	일자리	건설 단순 생산	전문기술 관리	서비스 사무 기타
4대강 살리기와 저수지 수변개발	-144,776	199,980	199,980	-	-

■ 일면 솔직한, 유럽 그린딜

- 2019년 12월, EU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패키지
“그린딜의 본질은 기후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이지만, EU는 그린딜 이행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병행”
- 2020년 1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발표
-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탄소국경세 도입 의지, 탄소국경 조성
- 2020년 3월, 그린딜의 법적 기반인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 마련
-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젠더이슈로서의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 2019년 “Towards a Feminist Green New Deal,” at the UNFCCC COP25 in Madrid, Spain 2019 UNFCCC(UN Climate Change Conference)
- 글로벌 그린뉴딜과 기후행동의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아젠다 토론



■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아젠다 (A Feminist Agenda for a Green New Deal)

■ Principles for Engagement

As policymakers, advocates, and communities shape the Green New Deal, we must:

1. Require intersectional gender analysis across all actions.
2. Recognize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domestic climate policy.
3. Confront institutional patriarchy and racism.
4. Center Indigenous Peoples' rights and leadership.
5. Systemically confront exploitative and unsustainable production patterns.
6. Advance reproductive justice.
7. Ensure democratically controlled, community-led solutions
8. Reject false and harmfu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that fail to address root causes.
9. Create regenerative economies that center systemic, feminist alternatives.
10. Respect the leadership of young people as they fight for future generations.

-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접근 운동사례
: 영국 여성환경그룹(WEN) & 여성예산그룹 (The Women 's Budget Group)
- 여성들의 삶에 기반한 목소리내기 행동주의와 정책 및 예산 분석 접근 병행

WOMEN'S CLIMATE VOICES CREATIVE PROJECT

WHAT DOES A GREEN, SAFE & FAIR LIFE MEAN TO YOU?

YOUR CONTRIBUTIONS COULD BE:

- A drawing
- A story
- A poem
- A quote
- An experiment
- A map or chart
- A recipe
- Any form of expression that can be published!
- A photograph



<https://www.wen.org.uk/2021/03/09/creativeproject/>

A DRAFT ROADMAP FOR A FEMINIST GREEN NEW DEAL - MARCH 2021

Draft Roadmap for a Feminist Green New Deal

Overview of the main areas the Feminist Green New Deal will address including:

- Mainstreaming Intersectional Analysis
- Devolving Power
- Investing in Collective Social Infrastructure
- Redesigning Physical Infrastructure
- Revitalising Local Communities
- Democratising Banking

<https://wbg.org.uk/fgnd/>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in Glasgow on 1 – 12 November 2021

■ UN차원의 기후위기와 성평등 통합 경과

- ‘성장의 한계’(1972), 리우환경회의(1992), ‘지속가능발전(SDG)’s)
-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행동강령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여성 2000 : 21세기 성평등, 발전 및 평화)
MDGs와 북경행동강령의 연계, UN Women 통합 출범
- 2015년 북경+20 북경행동강령 20주년 정치선언문 채택,
Post-2015 SDGs에 젠더주류화와 성평등 의제 통합
- 2017년 UNFCCC,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젠더행동계획> 채택
“각국 정부는 기후행동의 모든 요소에 젠더관점을 주류화 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젠더행동계획 이행에 참여하고 관여해야”(제2조)
- 반복되는 강조
 - 저탄소경제로 향한 기후거버넌스와 전환 영역에서의 젠더관점 중요성 (A. Kronsell, 2013)
 - 기후 에너지분야의 페미니스트 리더십 필요성 (J. C. Stephens, 2020) ...

■ UN차원의 기후위기와 성평등 통합 경과

- 2020년 북경+25,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에서도 기후정의 의제 강조
- 세대평등포럼
 - 2021년 3월 멕시코시티, 6월 파리에서 세대평등포럼 개최
 - 6개 영역에 걸쳐 정부/시민사회/국제기구/민간기업을 아우르는 행동연합 구성 파트너십

[6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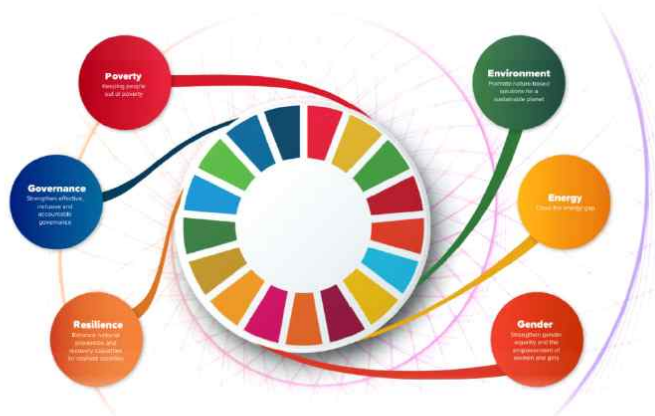
- .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 . 경제 정의 및 권리 (Economic justice and rights)
- . 자기 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 .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 .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 .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Feminist movements and leadership)

■ UN차원의 기후위기와 성평등 통합 경과

- SDGs
 - : 통합적 접근과 명백한 성평등 강조

Signature Solutions
All six working as one
- Because gender equality is irrefutable

- 글로벌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의 SDGs,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전환일까?



*UNDP Annual Report 2020

■ K-그린뉴딜과 SDGs 이행의 젠더통합 : 한국의 제도적 상황

- 2000년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
- SDGs 국내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환경부 위주로 환경 이외의 분야들과 통합에 한계
- K-SDGs 이행체계와 성평등정책 기제와의 연계 부재

- 2020년 이후, K-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입법 추진중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2021.5.29)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통합 기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거버넌스 역할
-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77명에 이르는 민간위원과 총괄1+8개분과, 사무처 설치
- 성별 동등참여와 다양성 미흡, '녹색생활'
- '공정' 전환, 농업 부재 등의 한계

■ SDGs 이행의 젠더통합 : 한국 시민사회 대응

- 한국 시민사회 대응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시민넷),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 활동
- 2020년 다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안) 제출 : 성평등 관련 명시규정 미포함
- 급진적 기후정의운동 그룹과 기존 환경운동 및 SDGs 거버넌스 간의 어떤 간극,
여성청년기후정의활동가들의 목소리 내기

- 한국 여성운동 대응
- 여성환경운동,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은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생태 진영에서도 주변부
“국내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 과정은 남성 중심이고 관료적이며, 그 내용도 다분히
산업기술 중심, 성별균형참여도 부족” (김양희, 2019)
-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도 성평등 이행 취약
: '성평등'을 주요과제로 활동하는 위원회/분과 구성 여부 및 명칭 질문에
전국적으로 성평등 관련 분과/위원회가 '없다'는 응답이 63.5%에 달함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20.12) 참조
- 제도화 된 기존 여성운동의 역할

SDGs 이행의 젠더통합 : 2021 K-SDGs 이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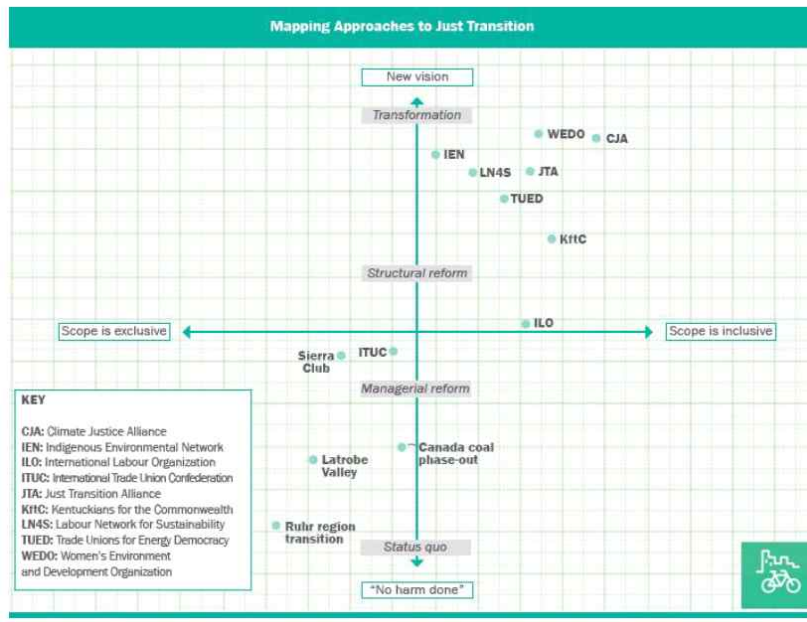
- 성평등, 산업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한 SDGs 현황 점검,
: 코로나19가 SDGs 달성에 미친 효과를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으로 분류 및 분석

영역	17개 목표	지표수	한국 데이터 가용률
사람	1. 빈곤 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3	61.5%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4	64.3%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8	85.7%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12	50.0%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14	28.6%

* 통계청, 2021년 4월 1일자 보도자료 발췌

정의로운 전환

- UNRISD 맵핑



* 출처: UNRISD (2018),
Mapping Just Transition(s)
to a Low-Carbon World

정의로운 전환 :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 IRENA 2020년 연차보고서
- 재생에너지 일자리 성장세 지속, 2019년 1,150만개
- 재생에너지 일자리 63%가 아시아지역 32%가 여성 (화석연료 일자리의 경우 여성 비율 21%)
- 한국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 일자리 25,730개 추정, *성별통계 없음



*출처: IRENA (2020), *Renewable Energy and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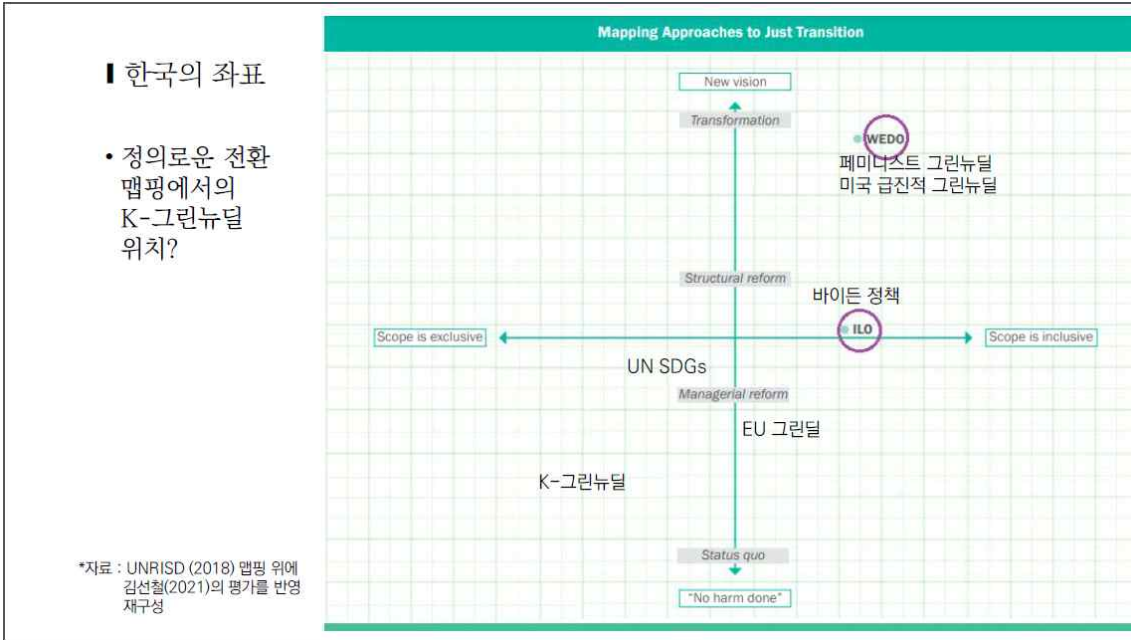
GLOBAL RENEWABLE ENERGY EMPLOYMENT BY TECHNOLOGY, 2012-2019

정의로운 전환 :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석탄발전소가 전부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뀌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여성은 30%, 여전히 그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군분투해야한다면 그건 과연 얼마나 새로운 세상일까?”

전환을 말 할 때 성별권력관계를 짚어내지 않는다면
 성차별적 노동 구조는
 노동자들보다 먼저 가서
 뒤따라올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정은아 (2021).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와 경계를 탐색하기: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 & 정의로운 전환을 넘어서기”, 한국사회 정의로운 전환 지도그리기 집담회 토론문, 녹색전환연구소 (2020.5.1.)



- ### 소결, 두 갈래 (1)
- 정책 차원의 접근 :
 - 젠더정책 범주의 확장
 - 성주류화 정책도구의 재검토 (성인지예산 분석 거시재정 접근 필요성 등)
 - 국가 및 지역 정책 차원의 K-SDGs 성주류화와 젠더이슈 통합
 - 국가계획 차원의 제도화 된 성주류화 정책도구 적용
 - 성평등한 사회, 한국의 미래상,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
 - 앞으로 3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이 맞물리는 시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격변기를 겪게 될 것
 - . 2019년 기획재정부 인구정책T/F 합계출산율 목표 삭제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조 변화
 - . 실행력 차원의 문제 그리고 지역차원까지의 정책통합 시차

■ 소결, 두 갈래 (2)

- 제도적 접근이나 현실적인 사회의 한계를 무릅쓰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망
: 팬데믹 이후, 성장경제에서 돌봄경제로 거시경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향과 활동의 참여로서 정치적 돌봄(care with) (Tronto, 2013),
허울뿐인 돌봄(carewashing), 돌봄의 시장화를 넘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중심이 놓이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보편적 돌봄(universal care)'
(퀴어-페미니즘-반인종차별주의-생태사회주의의 정치적 비전, The Care Collective, 2020)
-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막힘 상태' (낸시 프레이저, 2021)라는 진단,
"갈림길에 선 페미니즘의 두 전망"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파, 티티 바타차리아, 2020)
: 성장이라는 신화와 사회 재생산의 위기,
"타오르는 지구에서 '지배 기회의 평등'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젠더정의를 현재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이끌 사회-생태주의 kick-back 페미니즘
-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에 반페미니즘과 격돌하고 있는 우울한 시절,
보편적 돌봄의 정치적 비전 모색 가능성을 타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방향성 재검토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정언보(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시민평화대학원장)

목차

- 과학기술 중심성과 기술 발전주의
- 시장 성장 중심과 돌봄의 주변화
- 인식론으로서의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 반과학을 넘어 어떤 과학기술?
- 이론적 논의: 공동생성, 횡단신체성
- 공생-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기후위기와 한국형 뉴딜, 과학기술

-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의 근대적 발전주의, 성장중심주의에 대한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상
- 2020년 7월 제시된 '한국형 뉴딜'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성을 담는 중심적 정책으로 등장.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표방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 비판적 관점: 기존의 '녹색성장'과 같은 발전주의의 또 다른 판본(김상현, 2020; 이정구, 2020 등)
- 젠더와 소수자,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
- **과학기술 중심적 해결책의 한계 + 반-과학 시각도 넘는 접근 필요**



과학기술보통신의날 기념식
디지털 뉴딜 | 2021.0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3

과학기술 중심성

-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친환경 모빌리티 등 기존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기술들 초점
 - 과학기술이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등장 -사회구조적 변화, 자본주의밖의 접근에 상대적으로 무관심
- ex. 돌봄로봇 개발 vs. 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ex. 전기차, 수소차 투자 vs. 보행친화적 사회 구조



출처:
<http://www.knewdeal.go.kr/fro nt/view/newDealMe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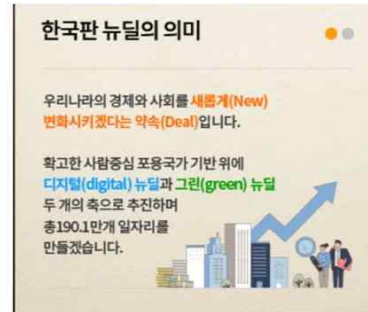
“2050 탄소중립 실현,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혁신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기술발전주의

- 기술사회적 상상 (socio-technical imaginaries) :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집합적 비전 (Jasanoff and Kim, 2009, 2015)
- 기술발전주의(technological developmentalism) – 기술이 국가경제성장의 수단이라는 생각 (Kim, E. 2018) : 부국강병, 근대화론, 박정희시기, 황우석 사건, 4차 산업혁명론...
-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과 투자, 경쟁과 자본주의적 생존전략에 초점
- 경제성장과 생태환경,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상상



출처: <http://www.knewdeal.go.kr/#firstPage>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5

시장 성장 중심과 돌봄 주변화 문제

- 시장 기반, 남성 지배 분야에서 생산 노동자를 위한 기술 혁신 중심, 사회 유지 및 유지에 필요한 노동 재분배에 대한 관심 부족
- 돌봄에 대한 찬양-립서비스뿐, 돌봄을 주된 패러다임 전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함
- 현재의 반복적 돌봄을 생산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 변화, 돌봄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재난은 젠더, 계급, 인종적 불평등에 기생하고 증폭(김현미, 2020), 여성과 약자, 자연은 무한히 채굴/줘어짜내기 가능하다는 시각이 성장모델 가능하도록 함
- 돌봄은 평가절하되어왔지만, 팬데믹으로 돌봄의 공백이 더 가시화되며 돌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됨(백영경, 2021).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6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 인식론, 태도, 방법론으로서의 돌봄
- 돌봄-인기있는 단어. 다양한 의미 혼재. 케어(care)는 동사이자 명사로 애정, 관심, 헌신, 책임, 의무, 걱정, 행동, 동기 부여 및 실천 등.
- 특수성, 맥락 및 감정 중요시,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을 변칙적 상태가 아닌 불가피한 것으로 강조
- 존재론 재구성: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취약성은 단지 일시적이고 이상한 상태로 평가하고 의존성을 갖는 인간이나 상태를 문제적인 것으로 낙인화. 독립성이나 완전무결함을 강조해온 인간관을 넘어 (Haraway, 2016; 더 케어 컬렉티브, 2020; 홍찬숙, 2021 등)
- 주의: 본질주의적 여성성 위험, 여성 착취의 낭만화 위험, 돌봄 노동의 현실 간과 위험. => 기존 페미니즘 연구와 운동;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 소외되고 낙인화된 현실 분석과의 연결이 필요함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7

반 과학을 넘어 어떤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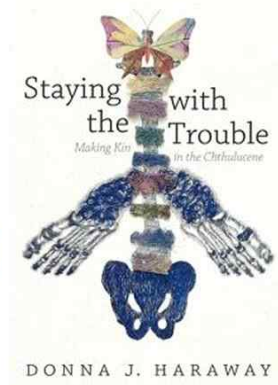
- ‘돌봄의 과학기술’이라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들의 접근들(Puig de la Bellacasa, 2011; Mol, 2002; Martin et al., 2017)
-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에 기초한 ‘느린 과학’(slow science)에 대한 요구 (Stengers, 2018; 주윤정, 2020)
- 돌봄과 수선의 과학기술: 청테이프. (김초엽, 김원영, 2021, 사이보그가 되다 - 장애학의 관점)
- 과학기술 민주주의, 전문성의 정치: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 ‘전문가’는 누구인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STS 접근들)
- 과학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한가? -> 문제 규정, 문제 해결 방식, 필요기술 개발의 동기, 방향, 영향에 대한 논의까지 공생-돌봄 시각의 필요 (+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 경제와 이윤 중심의 과학기술을 넘어, 돌봄과 공생의 과학기술: 취약한 몸들과 비인간, 자연, 물질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며 이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돌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으로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8

낙관과 비관을 넘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심포이에시스(공동생성)

- 사이보그 선언: 문화/자연, 인간/비인간, 남성성/여성성, 사실/허구 등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혼종적 주체. 과학기술 찬반의 양극단을 넘는 개입
- 반러중선언, 심포이에시스(공동생성) : 동물, 식물, 미생물, 지구상의 모든 다양한 비인간과의 공생적 얽힘, 공진화
- 낙관 비관 넘어, 새로운 세계만들기를 위한 트러블과 함께 하기 (Haraway, 2016)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9

Sympoiesis (공동생성)

- '함께 만들기(making with)'. 'sym(함께)'과 'poiesis(제작하다, 생산하다)'의 합성어: 지구 세계는 모든 종들의 공동생산과정
- 무엇도 스스로 고립되어 자신을 만들 수 없으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들 속에서 서로에게 얽히면서 새로운 그물망의 패턴을 만들고 있음
- 공생은 새로움을 낳음. 자연스럽고 혼한 현상.
- 인류는 비인간 생명체와 무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취약함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10

인식론으로서의 공생과 돌봄

- 촉수적 사고tentacular thinking (Haraway, 2016)
시각과 주체-대상의 거리두기 vs. 촉각. 몸에 기반한 감각. 위치성 (positionality), 시각 위주의 관점이 갖지 못했던 밀접한 접촉과 민감성을 강조. 느끼고 생각하기.
- 만지고 만져지는 수동과 능동의 관계 (실뜨기). 함께 하는 복수성.
- 미투운동, 젠더 문제, 생태 문제 등->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낙인
- 무관심, 무감각 => 응답능력 (Response-ability)
- 트러블과 함께하기: 냉소와 지구공학적 낙관 넘기

OCTOPI WALL STREET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11

퇴비되기

-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가 아니라 퇴비주의자(compost-ist): 미생물 군집들, 영양분들을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들
 - 공-지하적(sym-chthonic)땅: 지구의 자연에 포함된 무수한 생명체들이 가진 분해 및 재생산의 거대한 역량
 - 부식토로서의-인간(human-as-humus)
 - 이원론적 세계관을 넘어
- 퇴비-몸-혼종성-트러블-공생-여성-비인간 vs. 하늘-정신-순수성-초월-개인-남성-인간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12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 Stacy Alaimo,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 페미니스트 신유물론의 접근: 비인간 물질들의 작용능력 (능동적, 예측불가능. 상호연결).
- 인류의 생산 및 소비 활동 전반에 퍼져 있는 독성 물질을 추적하고,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회적 부정의, 느슨한 규제, 환경 피해의 실상을 폭로. 물질이 몸과 환경 사이를 이동하는 양태에 주목.
- 자연의 살이 인간의 몸이자 인간의 살이 자연의 몸
- 화학물질복합과민증을 겪는 몸은 “21세기 초반의 화학/산업 사회의 규범에서 ‘일탈하는’ 새로운 윤리적, 인식론적, 정치적, 물질적 실천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몸”(p.71)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13

사례: 최전선에 누가 있는가?

- A산업단지 환경피해예비타당성조사 (정연보, 김현주, 김희윤, 서아현, 2021)- 지역주민, 지자체공무원, 환경단체 인터뷰 60명
- 검어지는 빨래, 끈적한 창틀, 아토피, 피부병, 호흡기 질환, 암, 피부에서 나는 췌가루 냄새 등
- 산단 옆의 농작물
- 본사, 관리직-수도권 또는 산단에서 먼 곳에 거주 cf) 이주 어려운 사람들
- 지역의 지식들- 최전선에서 몸으로 경험한 약자들의 앓, 돌봄노동하는 이들의 앓



기술발전주의를 넘는 공생과 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14

사례: 기술 뒤의 인간 노동

- AI뒤에 숨은 여성 저임금 노동
-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으며, 현재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된 노동이 뒷받침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 기계적인 것/인간적인 것의 구성
- 노동속도 가속화의 문제 - 과부담이 가지 않는 기술의 보조 역할 필요
- 돌봄 로봇 역시 기계 작동, 수선, 유지, 점검할 인간 필요

나가며: 공생-돌봄 패러다임의 확장

- 공생-돌봄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과학기술은 기존의 통제와 성공, 자연 정복을 강조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과의 연결성을 고민하고 우리와 얽히게 된 존재들의 생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마음을 쓰는 감수성을 강조.
- 독립성이나 완전무결함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의 문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인간, 물질, 동식물 등에게 의존한다는 점. 비인간 물질의 작용능력 인식 필요
- 계몽적 관점, 기업중심의 소통을 넘어. 시민 사회, 당사자, 현장, 주변화, 낙인화된 이들, 휴과 물질의 목소리
- 인간 향상과 경제 성장의 꿈을 꾸기보다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취약한 인간과 지구를 돌보는 과학기술
- 경제 성장 중심, 인간 중심 => 공생-돌봄 패러다임 변화, '퇴비공동체' 만들기과 응답-능력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기후재난 시대의 여성농민

김정열(비아캠페시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표)

1. 저는 여성농민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날씨는 달랐고 그 때 그 때 마다 애를 태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 해는 가물어서, 비가 많은 해는 비가 많아서 말이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는 않았습니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24절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 동네 어르신들이 씨앗을 뿌리면 저도 따라서 뿌리며 그렇게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때로는 풍년이었고 때로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기후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8년 8월, 밭에서 일하시던 동네할아버지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 가신 이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해-2018년- 마저도 살만 했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가 더 두렵습니니다.

2. 농민이 느끼는 기후문제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얼마 전 취재 온 방송국 PD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기후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왜 모르겠습니까?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작물을 살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사람들이 농민인데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늘과 구름과 바람을 먼저 살피고, 매일 저녁 다음 날 일기예보를 확인하고서야 잠드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농민들은 내 눈밭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와 연구자들이 그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과 농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 농민 뿐 이겠습니까?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천명 (행안부 자료)이 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는 사람들, 폭염 속에서도 야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폭염 속에서도 찜통 같은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4일간이나 비가 내렸던 작년 농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업소득이 20% 이상 줄었습니다. 벼는 잦은 비로 인해 병충해가 심했고 줄기가 약해져서 쓰러졌습니다. 수확량은 20%이상 줄었습니다. 고추는 병으로 인해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작물 수확량에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생산비용도 높입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한 자재구입,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관수시설, 냉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할 시설 및 자재비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 고스란히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 시키는 요인입니다.

거기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투여되는 추가 노동의 증가도 농민들을 몹시 힘들게 합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민들이 얼마나 더 과중한 농업노동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점점 고갈되어 가는 물, 토지, 종자, 생물다양성은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하고 있고 이는 작물의 취약성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은 농업 자원의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 한다는 것이고 토지의 황폐화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민과 더불어 작물을 키워왔던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햇볕과 바람과 비가 농업 활동에 위협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기후의 변동과 강도가 심해지고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월에도 눈이 내리고 오뉴월에도 서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되어 온 기후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농민들이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하며 농사를 짓겠습니까? 점점 농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나 혼자서 발버둥친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미래가 암울하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국가 정책으로라도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로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도 생길텐데 그렇지 않으니 '혼자 황량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느낌'입니다. 작년 날씨로 인한 그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4.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여성농민들이 감당해야할 노동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노동이 늘어납니다. 오롯이 여성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 지역공동체 노동, 돌봄노동 외에 또 과중되는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농민들이 만성적 피로와 건강의 위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농민이 제일 먼저 농민의 삶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성농민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5. 지금까지 나온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농업 분야 정부정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고작해야 아열대 작물 재배로 유인, 스마트 팜 확대, 디지털 농업,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후위기 대응책임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2050년까지 농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저는 한 번도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농업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농민들과 어떤 직접적인 소통도 없고 현장 조사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첫 번째 과정은 당사자인 농

민들의 참여 속에서 철저한 현장 연구여야 할텐데 말입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농업을 인간 삶의 기본요소인 먹거리 문제로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을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분배 등 체계 전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농업이라는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의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제, 생물다양성의 문제, 생태계 회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이 없습니다.

왜 기후문제가 재난적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농업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6. 지금의 진짜 위기는 ‘기후위기’ 가 아닙니다. 이 위기의 원인을 보지 않고 이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의 진짜 위기는 ‘탄소배출’이 아닙니다. 탄소배출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재의 탄소소비의 사회 경제 정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의 진짜 위기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일으켜 온 지금까지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비 시스템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고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구 생태계의 한 종인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속임수인 거짓 해결책 속에서 농민들에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농촌에서 태양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산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를 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7. 지렁이 한 마리가 우리를 살릴 대안임을 아는 여성농민들이 말합니다

벌 한 마리가 우리를 살릴 대안임을 아는 여성농민들이 말합니다.

매일 매일 죽어가는 다양한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릴 대안임을 아는 여성농민들이 말합니다.

땅을 살리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생물다양성을 살리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생태적인 농사의 전환 없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소농 여성농이 중심이 되는 지역먹거리운동 없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땅을 보존해 오고 종자를 보존해 온 여성농민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없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탈성장: 낭만인가 전망인가?¹⁾

박이은실(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전담교수)

“성장에 대한 욕구가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부른다면 성장은 지금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달리사, 데마리아, & 칼리스, 2018: 13-4)

1. 들어가며

2021년 봄, 옷장 안에는 한여름 옷인 민소매와 한겨울 옷인 솜이 들어있는 외투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다. 이른 봄부터 이미 여름같이 덥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했고 오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장마철도 아닌데 하루걸러 하루 비가 내리고 있다. 아침에는 새파랗게 부시던 하늘이 이른 오후부터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맞으면 아플 듯한 장대비가 퍼부을 때도 있고 종종 거센 돌풍도 함께 분다. 그 와중에 꽃들은 순서를 잊은 채 정신없이 피고지고 게 중에는 제철인 줄 알고 피었다가 갑작스레 닥친 추위나 큰 일교차로 고사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어느 것도 우리가 예전에 겪고 알던 대로의 상황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나왔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주 그렇듯, 피부로 와 닿게 되면 그제야 허겁지겁 실감을 하고 대책 세우기에 분주해진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시작한 일을 이제라도 서둘러 하면 좋을텐데 고려해야할 것들은 너무나 많고 잠깐이라도 예전 알던 대로의 기후가 돌아오기라도 하면 애써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일부러 잊고 싶기라도 하는 듯 무섭게도 재빨리 이전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미래를 꿈 꾸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는 삶과 죽음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탈성장’은 그 중 하나다. 나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는 한국어로 ‘탈성장’이라 번역되는 ‘degrowth’라는 영어 단어를 2012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기본소득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핀란드 학자, 얀 오토 앤더슨(Jan Otto Anderson)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당시 ‘성장’은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전제라고 보고 들어왔던 세계에서 살고 있던 내게 ‘탈성장’이란 말은 너무도 낯설고 심지어 얼토당토않게 들릴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말에 끌렸고 발표장에 있던 작은 팸플릿을 챙겨 귀국했다.

기후 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느껴지는 요즘도, 현 인류의 삶의 방식 때문에 빚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별 수 없이 멈춰버린 가운데에서도, ‘경기 침체가 사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장은 ‘공공재’라는 담론이 만연하다’. 주권자를 기만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1) 이 발표와 토론을 위해 작성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미완성 초고입니다.

정치가와 공모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업가도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사면이 논해지기도 한다. 자본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정치 체계를 쥐락펴락하는 사회에서 성장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더욱 쉽지 않다.(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20-121)

그러나 이대로 관참을 일인가? 이 글에서 나는 이것을 질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탈성장이 향후 인류가 나아갈 공동의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방향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문제로서의 상상계, ‘성장’

(1) ‘성장’이 문제일까?

국가에서 사용하는 ‘성장’이란 말은 대개 ‘경제성장’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경제 성장이란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 즉,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증가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값’을 가리킨다.(빅토르, 2018: 200; 오닐, 2018: 192) UN은 194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 측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 국제적 노력을 규합하는 등 모든 국가가 따르기를 독려하기도 하였다.(빅토르, 같은 글: 201) GDP 이전에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는데, GNP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이 자국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려고 경제 상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피오라몬티, 2013: 23-6, 오닐, 2018: 192 재인용).

GDP와 GNP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총생산에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국가의 계정에 반영되는 반면, 국내총생산에는 공장이 위치하고 자원 채굴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생산으로 계산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이윤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어도 여전히 채굴이 이뤄진 그 국가의 총생산 계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은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의 자원을 가지고 떠나면서, 이를 남반구의 수익이라 부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코브 외, 1995: 68, 오닐, 같은 글: 194 재인용) 현재는 일반적으로 GDP가 경제성장 지표로 쓰인다.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증가분이 현저히 적으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GDP를 통해 말해지는 ‘성장’, 곧, ‘생산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으로 가능해진다. 바로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생산성)의 증가다. 그런데 생산의 증가가 생활수준(삶의 질)의 개선, 즉,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생산 증가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증가가 이뤄져야 된다.(피케티, 2014: 93) 10명이 빵 10개를 생산하다가 100명이 빵 100개를 생산하면 생산은 10개에서 100개로 증가했지만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빵은 여전히 1개로 같으므로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즉, 성장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은 새롭게 생산된 가치의 증가를 가리키므로 이는 곧 ‘가치 축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 10을 투여해 10을 만드는 것은 성장이 아니다. 10이 투여되면 10보다 증식되어야, 즉, 투여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생겨 축적되어야 성장이다. 자본 10을 투여했을 때 새롭게 축적된 자본, 그것이 바로 ‘성장’의 결과물이다.²⁾ 금융자본주의는 이런 논리 하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실물로서의 재화나 서비스가 전혀 생산되지 않아도 여전히 ‘성장’이라 불리는 까닭은 바로 ‘자본 증식’, 즉, ‘축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축적’은 잉여 가치(이윤) 재투자를 통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축적’은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19) 새로운 재화든 새로운 서비스든 어느 것도 세상에 새롭게 생산해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가치’ 생산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재화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의미하는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발전은 생산 증가로 인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과 이로써 생활양식이 이전에 비해 양과 질에서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써 체험된다. 이는 어떤 금전적 지표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일차원의 것이 아니다.

경제발전, 즉, 경제성장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체험되는 현실이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 와서였다. 20세기 초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00유로가 채 되지 않았던 유럽인들이 2010년에는 2500유로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이 말은 이 시기에 유럽인들의 구매력과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급속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는 무엇보다 소비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로 식품류로 채워졌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다양한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이 골고루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피케티, 같은 책: 109-110)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에는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항공 여행도 지금처럼 쉽지 않았다. 첨단 의학기술이 요즘만큼 발달하지도 않았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소수였다. 그러니 불과 30여 년 동안 일어난 통신, 교통, 의료, 교육 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는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양과 질 모두에서 비약적인 것이었다. 이런 변화를 불러온 30년 동안의 1인당 생산 30~35퍼센트 증가는 ‘오늘날 이뤄지고 있는 생산의 많은 부분(4분의 1에서 3분의 1)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오늘날의 직업과 직장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30년 전에는 없었다는 뜻’이다.(같은 책: 120)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개선’, ‘좋은 삶’같은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그런데 ‘발전’으로 체험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양산해 왔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야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성장’과 ‘발전’이란 자체가 사실은 문제 자체임을 가리키는 증거일까?

(2) ‘성장’은 ‘절대선’인가?

GDP, 즉, 국내총생산이란 것은 ‘좋은 경제활동’과 ‘나쁜 경제활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돈이 들고 자본(가치)가 증식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내총생산 증가, 즉, 성장으로 계산된다. 모든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주나 자전거를 사는 일이나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일도 국내총생산에 들어가고 어느 사기업이 석유 유출을 일으켜 환경을 오염시켜서 국민세금으로 정화 작업이 진행되어도 역시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역시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전쟁, 범죄, 환경 파괴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무관한 ‘나쁜 활동’이 돈이 들고 이를 통해 가치를 증식시키는 활동으로 여겨져 국가발달지표에 ‘성장’으로 반영되는 것이다.(오닐, 2018: 194-195)

국내총생산의 증가, 즉, ‘성장’이 곧 ‘삶의 질’, 특히, 행복 증진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면 이후에 추가되는 수입은 ‘지위재’(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값비싼 여행 등)에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 필요, 즉,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추구되는 ‘성장’은 불행히도 누구도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지위 경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지위가 올라가면 누구도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지위 경쟁 속에서 지위재의 가격만 상승하게 만들 뿐 모든 이의 지위재를 충분히 생산하는 성장이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스키델스키와 스키델스키, 2012, 달리사 외, 2018: 33 재인용)

(3) ‘지속적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우호적 ‘테라폴리스’³⁾의 종말

앞서 언급했듯, 성장의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인구증가다. 그러나 맬서스는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 증가 속도(즉, 생산성 향상속도)를 넘어설 것이라 생활수준이 무한정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자연 체계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는 경제를 무한정 받쳐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한계는 ‘행성의 한계’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해양 산성화, 생물 물리적 순환 교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2백 여 년 동안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던 ‘저렴한 화석 연료’의 고갈도 포함된다. 아무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빅토르, 2018: 203)⁴⁾

즉, ‘성장’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계속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구 생태계는 위험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국내총생산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은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앤더슨과 바우스, 2011) 심지어, 이론상으로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발전하거나 ‘서비스 경제로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탈탄소’에 이를 수 있다 해도 실제로는 해마다 2~3퍼센트씩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즉, 계속해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된다고 할 때 필요한 만큼의 탈탄소를 이루기란 가능하지 않다. 2050년, 세계 탄소집약도가 지금보다 20~130배 낮아야 한다는데 1980년부터 2007년까지 탄소배출감소는 23퍼센트에 불과했다.(잭슨, 2008, 달리사 외, 2018: 33 재인용)

(4) ‘성장’,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장, 즉, 국내총생산은 증가해 왔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나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같은 복지지표는 1970년대 이후 정체상태다.(달리사 외, 2018: 31-32) 성장이 부유한 국가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 지표들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의 끝없는 증대라는 전략은 응원이 아니라 우려의 대상이다.(오닐, 2018: 195)

1인당 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상류층에게만 추가 소득이 돌아간다면, 일반 개인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반덴베르크, 2009, 오닐, 2018: 195 재인용)

경제성장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완전 고용, 여가 증대, 풍족한 삶, 더 높은 민주주의 실현, 환경 복원 등 좋은 삶과 번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빅토르, 2018: 205) 1968년,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는 “국내총생산으로는 우리의 유머나 용기, 지혜와 배움, 연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측정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은 쉽게 말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며 국내총생산을 비판하기도 했다.(피오라 몬티, 2013: 81, 오닐, 같은 글: 196 재인용) ‘성장’은 오히려 유용한 재물(부)보다 ‘쓸모없거나 유해한 재물(illth)⁵⁾을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 낸다. 성장의 대가로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노동시간은 실질적으로는 더 길어졌으며, 교통 체증은 심해지고 환경오염 또한 심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달리사 외, 2018: 31)

3) 도나 해러웨이와 다종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얽혀들어 살고 죽고 ‘더불어 되기’하면서 삶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장소(즉, 지구)를 일컬어 사용한 용어다.(Haraway, 2016)
 4) 달 개발 프로젝트나 화성에 인공으로 산소농도를 높여서 언젠가는 지구를 버리고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생각은 개발 신봉자들도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한 무한정한 개발, 무한정한 성장을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회자되는 ‘다행성 종족’이라는 말은 생태정치적으로 볼 때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이다.
 5) 허먼 데일 리가 ‘wealth’의 반대어로 창안하였다.(『탈성장』, 31)

그리고, '성장'은 기본적으로 국가 회계에 결코 반영되지 않는 '가정에서의 무상 재생산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국내총생산은 아직도 대체로 여성들이 하는 집안일이나 돌봄노동, 그리고 자원 활동처럼 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많은 유익한 비시장적 활동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빨래를 하면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원을 주고 세탁을 맡기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만원을 주고 세탁을 맡기면 국내총생산에 2만원의 가치 상승(성장)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세탁된 셔츠의 숫자가 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오닐, 같은 글: 195)

또한, '성장은 중심국과 주변국, 또는 중심 경제와 주변 경제 간 불공평한 자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와 물질은 주로 원주민 거주 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의 상품 개척 경계로부터 추출한 것이며, 이들 지역은 채굴 사업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폐기물과 오염 물질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사는 지역이 아닌 주변 지역, 소외된 공동체, 하층민이나 다른 인종, 민족이 사는 지역 등에 버려진다'. 이처럼 성장은 '그 이익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축적되고 비용은 소외 계층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방식이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달리사 외, 2018: 32쪽)⁶⁾

(5) '성장'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는⁷⁾ 현재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봉건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다른 사회 경제체제와 다음의 다섯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안드레 우치 & 맥도너우, 2018: 118)

첫째,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들에게 생산수단이 집중된다.

둘째, 토지와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상당수의 인구는 그들의 노동을 구매력 확보, 즉, 시장에서 생활수단을 구매할 수 있을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환하도록 강제 당한다.⁸⁾

셋째, 자본가들은 생산 과정에서 나온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⁹⁾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이 생산물을 팔아야 한다. 즉각적인 사용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생산한 이 생산물(재화 또는 서비스)을 우리는 '상품'이라 부른다.

넷째, 자본주의는 은행 신용을 통해 화폐를 생산하기 위해 화폐 제도에 의존하며, 핵심 조정 장치로 시장 교환에 의존한다.

다섯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은 무엇보다 이윤에 의해 좌우된다. 이윤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생산은 실현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 없이 지속될 수 없다. 지속적인 자기 확장, 즉, '축적을 위한 축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여겨진다. 자본가들은 돈, 노동, 원료와 시장에 대한 접근을 두고 경쟁하고 이 경쟁은 이윤의 재투자를 통해 이뤄지며, 따라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익성을 높여야

6) 제이슨 무어는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는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동원해 사용해진 자원(자연, 여성, 인간 노동력 등)없이 처음부터 시작될 수도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도 없다고 논증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본주의의 외부적 한계라는 맥락에서도 언급된다.

7) 이 믿음은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 시스템을 실험했던 구 소련이 체제적 실패를 선언하고 동독이 무너지면서 더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8) '인클로저 운동'(‘종획운동’이라고도 한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공유지라는 생산수단을 통해 생산하며 삶을 이어갔던 방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생산수단을 잃은 이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본주의 혁명의 하나였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짚는다.

9) 자본주의 체제 하의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에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 생산물을 만들어내지만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다.

한다. 이는 노동강도를 높이고 기술발달을 부추기며 생산규모를 확장해 '잉여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출해야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을 위한 자본가의 영역에 더 많은 사회활동분야를 끌어들이고, 지구상에 더 넓은 지역을 끌어들이며, 더 많은 양의 자원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이 확장은 결국 경쟁을 심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은 재생산된다.(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20) 자본주의 초기에 '일과 저축, 투자를 권장하는 서유럽의 청교도 윤리'가 지속적인 축적 논리를 뒷받침했다면(잉엄, 2008: 25-30) 오늘날은 종교 대신 광고 등을 통한 마케팅이 새로운 종교가 되어 새로운 필요와 끝없는 욕구를 만들어 내며 성장을 부추긴다 (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20)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경제 조직형태'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교환의 영역에 두는지 또는 생산의 영역에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같은 글: 117) '위기'라고 말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필수인 성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빚어진 것이다.(칼리스 외, 2009) 예를 들어, 2008년에 불거진 미국의 위기는 석유 값 상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미국 유통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교외에서 통근하는 노동자들이 기름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대규모 주택 압류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 금융과 개인 대출 등의 거품 경제가 커진 이유는 성장에 다른 방도가 없고, 수요를 유지하는 데에도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었다. 즉, 개인 부채와 공공 부채가 다른 방법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성장률을 지탱해 왔던 것이다.(달리사 외, 2018: 35)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내적 한계와 외적 한계를 가진다. 내적 한계는 잉여 자본의 재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자본의 '과다 축적(투자를 위해 추가 이윤을 내는 수단의 부족)'은 1970년대 이후 특히 심각해졌고, 사람들은 이를 공격적인 사유화('탈취를 통한 축적')¹⁰⁾, 부채의 증가와 금융 투기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Harvey, 2010) 그러나 이런 해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금융화는 특히 자본주의 일부 영역의 이윤을 복원했지만, 경제를 오히려 더 불안정하고 위기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을 뿐이다.(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21-122) 자본 축적의 외부 한계는 절대적인 생물 물리적 성장이 갖는 한계와 연결된다. 끝없는 축적을 위해 인간-자연과 비인간-자연을 더욱 더 상품화함에 따라 체계 재생산의 기초 조건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O'Connor, 1991, 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 122 재인용)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보는 제이슨 무어는 자본은 인간의 노동력을 포함한 자연을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전용함으로써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무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전용할 자연이 남아있지 않게 될 때 이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도 작동불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무어, 2020)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이런 한계는 결국 자본주의를 '녹색화'하는 것, 즉,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장 기반 해법을 내놓는 다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기술적 해법'을 내놓는 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소비 양식이 만들어낸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해법이든 그것이 결국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킨다면 물질과 에너지 소비 수준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안드레우치 & 맥도너우, 2018:122) 그것은 그저 지금까지 '성장'에 기생해온 자본주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지속 기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다를 아니다.

(6) '저성장'의 그늘, 불평등 심화

'성장'이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낮은 성장률, 즉, '저성장'이 자동적으로 평등을 의미

10) 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은 그저 하나의 경영용어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다. 1970년대 이후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소득불평등 심화 문제를 다룬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2014)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구조적인 저성장 체제로 특징지어질 것인데, 저성장 체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고 인구 정체 혹은 감소가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인구증가가 부의 재분배와 성장을 통한 소득 기회를 비교적 더 보장하면서 세습된 부의 중요성을 비교적 감소시키는 반면 인구감소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세습자본주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다.(93, 106-107)

그러나 ‘저성장’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살펴 보았던 ‘성장’이 동반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하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온 것들, 행복, 건강, 번영 등 그 어느 것에도 도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장’, 즉,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흔히 여겨지듯 그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현상들과 분석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국내총생산 증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인 ‘좋은 삶’을 실현하는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탈성장’은 그 선두에서 이 논의를 이끌고 있는 사유다.

3. ‘성장’의 대안, ‘탈성장’

(1) ‘탈성장’이란?

‘탈성장’은 ‘성장에 대한 비판, 영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구조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국내총생산과 상품화, 즉, 사회 물자, 사회 생태적 서비스와 관계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비판’한다. 이리하여 ‘경제 성장을 사회의 공동 목표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달리사 외, 2018: 27-8)

‘Degrowth’는 프랑스어 ‘데크로상스decroissance(탈성장)’의 번역어로 앙드레 고르가 1972년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다. 그는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생산에 있어서 무성장, 나아가 탈성장이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지구의 균형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는가?’(Gorz, 1972)¹¹⁾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Ecology as Politics』에서 탈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희소한 자원을 계속 소비하면 결국 자원이 완전히 소모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상식(...) 결국 문제는 더 많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 비현실적인 주장은 탈성장을 통해 더 많은 복지를 이루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방식을 전복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경제 성장이 여전히 인간 복지를 증진하고, 물리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이 바로 비현실적이다.”(Gorz, 1980: 13)¹²⁾

탈성장이 곧 국내총생산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맞다. 좋은 삶에 도움이 되는 환경친화적인 돌봄과 공공 경제가 국내총생산을 2~3퍼센트씩 늘리지는

11) Gorz, A. (M. Bosquet), *Nouvel Observateur*, Paris, 397, 19 June. Proceedings from a public debate organized in Paris by the Club du Nouvel Observateur, 1972. (달리사 외, 『탈성장 개념어 사전』 21쪽, 재인용)

12) Gorz, A. *Ecology as Politics*, Montréal: Black Rosa Books, 1980. First Published in 1977 as *Écologie et liberté*, Paris: Galilée (달리사 외, 『탈성장 개념어 사전』 22쪽, 재인용)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달리사 외, 2018: 28)

그렇지만, ‘탈성장’이 단순히 물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탈성장’은 ‘또 다른 사회, 즉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충분히 가졌고, 더 이상 축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제도(개인 자산, 기업, 임금 노동, 이윤이 붙은 개인 신용과 돈 등)의 총체이다. 이러한 제도는 더 많은 이익, 즉 축적을 위한 역학 관계를 낳는다. 그러므로 탈성장 세계를 의미하는 대안 프로젝트와 정책은 결코 자본주의적일 수가 없다. 탈성장 프로젝트와 정책은 자산, 돈 등 자본주의적 제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다른 가치와 논리를 지닌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성장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전환을 의미한다.(같은 글: 43)

‘탈성장’ 운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프랑스 리옹에서는 ‘차 없는 도시, 거리에서 공동식사, 음식협동조합, 광고 반대 캠페인’ 등과 함께 진행되었고, 2004년 이탈리아에서는 ‘녹색 및 반세계화 운동 슬로건’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프랑스에서 열린 여러 학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용어와 의미가 알려졌다, 월 3만부가 판매되는 『라 데 크로상스: 삶의 즐거움에 관한 잡지』를 통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같은 글: 25)

(2) ‘탈성장 사회’의 상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모두가 더 적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좋은 삶이란 단순한 삶이고, 우리가 어쩌다 살게 된 이 세계에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다.(같은 글: 37)

‘나눔, 단순성, 공생공락, 돌봄, 공유물 등은 탈성장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탈성장 사회’에서는 다른 활동, 다른 에너지 양식과 이용, 다른 관계, 다른 성 역할, 유급과 무급 노동 간의 시간 할당 변화, 인간과 비인간 세계 사이의 관계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탈성장 사회는 ‘돌봄의 재생산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사유화되었던 오래된 공유물을 공유화하고 새로운 공유물을 되찾고 새로운 공유물을 형성하는 사회’다. 공공이 하는 돌봄은 ‘생태공동체나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삶과 생산에 내재되어 있으며, 일자리 나누기, 기본 및 최고 소득 등 새로운 정부 제도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급 노동 시간은 줄고 무급의 공공 활동, 돌봄 노동 등이 장려받게 될 것이다.(같은 글: 27-8)

또한, 탈성장은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프로젝트다. 자율은 개인과 협력 집단이 돈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 생산하고 여가를 즐기는 무임금 노동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탈성장주의자들이 화석연료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석유 정점이나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높은 에너지 사용이 복잡한 기술 체계를 뒷받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가와 관료제가 필요하고 이런 체계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위계질서를 낳는다. 그리고 ‘잡초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나 ‘고속 철도, 에너지 효율적인 스마트 빌딩’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탈성장주의자들이 생태적 근대화와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첨단 기술 사업들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율성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생공락의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탈성장을 상징하는 사업들인 공터 농업, 의도적으로 자본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저작권 침해 프로그래밍, 자전거 수리점, 도시 텃밭, 직접 만드는 휴집같은 것들은 자율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일들은 공생공락을 위하고, 자원 활동을 독려하며, 참여자들이 주도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같은 글: 36-37)

이런 식으로,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들이 이미 있다. 생태공동체, 디지털 공유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다시 땅으로’ 같은 커뮤니티, 협동조합, 도시 텃밭, 공동체 통화, 시간은행(품앗이 등과 같이 시간을 교환 단위로 하여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것), 물물교환 시장, 보육 또는 의료 서비스 연합 등 기존 제도가 사람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데 실패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인 풀뿌리 경제로서 새로운 실천과 제도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코닐 외, 2012).

풀뿌리 경제 실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환을 위한 생산에서 사용을 위한 생산으로의 변화한다. 둘째, 임금 노동을 자원 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일을 비상업화하고 비전문화한다. 셋째, 어느 정도는 이익 추구가 아닌 상호 ‘선물’ 교환을 통해 재화가 활발하게 순환하는 논리를 따른다. 넷째,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태생적으로 축적과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풀뿌리 실천은 ‘공유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참여자들 사이의 연결과 관계는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은 풀뿌리 실천들은 사유 재산과 임금 노동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물을 제안함으로써 비자본주의적인 특성을 갖는다.(달리사 외, 같은 글: 44)

탈성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성장이 없어지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성장으로부터 유급 고용을 분리하거나 좋은 삶을 유급 고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국가를 최후의 고용자로 만들어 실질적인 실업률을 0 퍼센트로 줄이’고,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고 ‘고소득에 대해서 최대소득으로 과세’하여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진보적인 세제와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유급 노동 시간을 줄여 피고용자와 실업자들이 일을 재분배’ 해서 ‘소득손실 없이 실업률을 줄이고 부를 재분배’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고, 일자리 나누기가 사람들을 유급 노동에서 자유롭게 할 경우, 자주적인 자원 활동과 공생공락 활동은 확장될 것’이며 ‘일자리 보장은 돌봄, 교육 서비스, 도시 텃밭, 협동조합, 무료 소프트웨어 생산 등 자율적인 분야에 활동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뿌리 경제 활동과 새로운 복지 제도가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돌봄, 교육, 의료 및 환경 복원 서비스는 성장 없이 번영하는 새로운 경제의 중추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 문제 또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같은 글: 46)

‘공동체 통화, 시간은행 및 지역 교환 거래 체계는 경제 활동 규모를 축소하고 재지역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유통을 촉진하게 된다. ‘공동체 통화는 위기가 닥친 시기에 시장 경제로부터 외면 받는 이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 역할’을 한다. 물론, ‘국가 화폐는 세금 (또는) 지역 간 거래나 국제 거래에서 (지역 화폐가) 충족할 수 없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같은 글: 47)

탈성장 사회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배치되게 될 것이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배치하는 것이 왜 탈성장을 위한 길인지 상상하기란 쉽다. 우선, 돌봄 노동을 공동체 영역과 사회 전체 차원에서 나눔으로써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이에 따라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 전체의 복지 면에서 돌봄이 가진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경제 영역에 적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개발된 사회’에서 결국 여성 이주자에게 가장 많이 지워지고 있는 돌봄 노동의 불공평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 노동 시간 감소는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유급 노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취약한 타인을 돌보는 일은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취약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는 자신을 고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하는 근대인의 데카르트적 ‘자아도취적 확신’과 결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달리사 외a, 2018: 129)

(3) '탈성장 사회'의 지표

국내총생산을 단순히 탈성장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은 진보를 가능하는 지표로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을 가능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이는 똑같다.

탈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지표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의 자원 이용 수준이 일정 기간 얼마나 바뀌는지, 자원 이용 수준이 생태적 한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일련의 생물 물리적 지표, 그리고 둘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지를 측정하는 일련의 사회적 지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탈성장 계정'에 생물 물리적 지표 7가지(물질 사용,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생태발자국, 인구, 가축 수, 구축 자본)와 사회적 지표 9가지(행복, 건강, 평등, 빈곤, 사회 자본, 참여 민주주의, 노동 시간, 실업, 물가 상승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오닐, 같은 글: 197-198)

5. 나아가며: 있는 거 함께 까먹고 살며 사회적 데팡스하며 살기!¹³⁾

'국내총생산', 즉,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설립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와 아마티아 센이 함께 의장을 맡은 '사회발전과 경제성과 측정위원회'는 세계 경제 위기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잘못된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같은 글: 196-197)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지표만이 아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지적하고 있듯, 애초에 상품이 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상품으로 취급받아 온 문제, 즉, 소유권이 주장되고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것을 상품이라고 허구적으로 상정해 시장에서 유통시켜 온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상품화는 성장의 핵심 요소인데 많은 사회적인 것을 파괴한다. 상품화는 '이전에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재화나 서비스가 돈과 시장 교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상징적, 담론적, 제도적인 변화'다. 전통적으로 돌봄, 환대, 사랑, 공적 의무, 자연 보전, 명상 등은 이윤 논리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와 서비스는 시장 교환의 대상이 되었고,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로써 공식적인 국내총생산 경제에 따라 평가되고 매매된다.(히르슈, 1976, 달리사 외, 같은 글: 32 재인용) 시장이 전통적으로 비시장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유지되던 삶에 침투한 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고메즈-바게튼, 2018: 130) 오랫동안 상품화는 공유재를 사유화하는 과정의 핵심이었다. 엔클로저(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 경계를 쳐 사유지로 만드는 것)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프루동(Proudhon, 1840)이나 마르크스(1842)은 공유물의 사적 전용을 절도 행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엔클로저는 아프리카에서의 토지 수탈과 생물다양성 파괴, 탄소 거래제를 통한 자연의 상품화를 포함하게 되었다.(같은 글: 131-132)

이런 맥락에서, 탈성장 논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주로 논의되고, 자급자족 경제가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불안정의 증가, 불평등의 심화, 전쟁에 대한 공포,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가 불러올 우울한 미래 앞에서 성장을 비판하는 감성과 지역에서 공생공락하는 삶의 경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지역 차원에서 생산하는 경험은 매력적일 수 있다.

물론, '시장은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제도'이며 따라서 상품화도 자본주의 전부터 오래 지속된 현상이다. 시장은 '현실적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구에서 교환과 제공을 조직하는 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적이라고 하기

13) '데팡스'는 유기체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순수한 재생산에 필요로 하지 않는 과잉 에너지를 가리킨다.

보다는 어떤 시장이나, 즉, 상품화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다.(같은 글: 134)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지역에서 개인적인 자구책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재생산에서 젠더와 계급 정치에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파괴적이고 소외를 일으키는 역학 관계의 뿌리'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분배의 정치가 명확해지고 실제 삶의 조건이 중요해져서 사회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라야, 비로소 많은 이들을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몰아넣고 여성을 더욱 무급 노동으로 몰아넣어 값싼 유급 노동을 유지시키는 자본주의의 촘촘한 망이 그나마 느슨해질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을 자본으로, 그리고 여성의 신체와 자유 의지를 통제하는 근거로 쓰는 것은 자본주의가 나타난 이후 오랫동안 이뤄진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페데리코, 2004, 피키오, 2018: 373 재인용)¹⁴⁾

그러나 탈성장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필요를 제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생겨나는 잉여가 있다면,¹⁵⁾ 그 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사회적으로 축적할 것인지, 소수가 독식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회적 소진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노프리오 로마노(2018: 163-164)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 에너지의 자주적인 사용”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과잉 에너지는 ‘한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사실 ‘비굴한 정도’¹⁶⁾로 ‘극소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사리 발생하고 이런 이유로 인류는 ‘제물, 축제, 전쟁 혹은 평화 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소진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데팡스’ 개념이 ‘성장 사회’의 맹점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대성은 종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시급함이라는 맥락에서 유래했으며, 당시 사회 생산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인구 폭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필요의 증가로 가속화됐다. (중략) 현대 사회는 생존을 위한 ‘본래의 비상사태’에 계속 짓눌린 가운데 성장의 가속도를 멈추지 않았다. 본래의 비상사태를 지속하는 것은 과잉 에너지 문제를 없애고, 우리가 행동의 ‘의미’와 대면하지 않게 한다. (중략) 우리는 과잉 에너지 출현에 기원하는 ‘존재’의 필요성 문제를 대면할 때만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략) 성장의 시대에 호화롭고 집단적인 데팡스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비공식적으로 소비되는 사적인 해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에너지 문제를 이중적 전략으로 해결하려 한다. 유례없는 수준으로 에너지의 비굴한 이용을 확대(성장에 대한 집착의 강화)하고, 데팡스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중략) 개인화된 인간들은 존재의 불안정한 속성에 얽매이고, 따라서 생존 문제에 집착한다. (중략) 탈성장 프로젝트는 삶의 의미를 집단적으로 구성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복원하는데 대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과잉 에너지의 도전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같은 글: 165-168)

낭만적인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탈성장은 어떨까? 지금 당장의 현실과 아직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실과 거리가 그리 먼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가게 하나를 소개하자면, ‘나눔꽃’이라 불리는 이 가게는 네 명의 여성들이 함께 운영하는 헌옷 가

14) 마리아 미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이를 ‘여성의 가정주부화’라는 개념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타는 주부의 가사노동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달라 코스타의 논의는 『페미니즘: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부터 삶의 보호까지』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15) 생산력이 발전한 사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케티에 따르면, 심지어 봉건제 하의 농촌경제 중심 사회에서도 성장률이 0%보다는 항상 높았다.

16) 조르주 바타이유가 ‘데팡스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키며 쓴 표현이다.(로마노, 2018: 163 참조)

게다. 작은 마을에 있는 이 가게에는 ‘잉여옷’이 항상 넘쳐난다.¹⁷⁾ 이 ‘넘침’, 이 ‘잉여’가 이 가게를 지속시키는 동력인 셈인데, 여기에 옷을 내놓는 사람, 이것을 받아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전시하는 사람, 가게에 들러 옷을 살펴보고 구입해 가는 사람이 이 잉여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의 집단적 활동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재화의 생산이 없지만 여러 의미에서의 필요가 충족이 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지 모른다. ‘당근 마켓’도 그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탈성장은 이미 실현 가능한 정치적 전망일 수 있다. 물론, 이 전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는 부단한 애쓰고 노동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 있는 ‘나눔꽃’ 가게가 그런 애쓰고 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참고문헌>

- 고메즈-바게튼, 에릭, “상품화”,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30-135쪽, 2018.
-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마리오 데리우, “돌봄”,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24-129쪽, 2018.
-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2018.
- 로마노, 오노프리오, “데팡스”,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62-168, 2018.
- 마르크스, 칼,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I』,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9.
- 모스, 마르셀,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02.
- 빅토르, 피터 A., “성장”,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200-205쪽, 2018.
- 안드레우치, 디에고 & 맥도너우, 테렌스, “자본주의”,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17-123쪽, 2018.
- 오닐, 댄, “국내총생산(GDP)”,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92-199쪽, 2018.
- 콘데, 말타 & 마리아나 발터, “상품 개척 경제”,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136-141쪽, 2018.
- 폴라니, 칼,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도서출판 길, 2009.
- 피케티, 토마,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2014.
- 피키오, 안토넬라, “페미니스트 경제학”, 달리사, 데코모, 페데리코 데마리아 & 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369-374쪽, 2018.
- Anderson, K., and Bows, A., “Beyond ‘Dangerous’ climate change: Emission scenarios for a new world”, *Philosophical Transitions of the Royal Society*, 369: 2-44, 2011.
- Cobb, C., Halstead, T., and Rowe, J., “If the GDP is up, why is America Down?”, *Atlantic Monthly*, October, 59-78, 1995.

17) 나는 이 가게의 단골이다. 옷 하나에 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종종 들어서 꽤나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 입고 있다.

Conill, J., Cardenas, A., Castells, M., Hlebik, S., and Servon, L., *Otra vida es posible: prácticas alternativas durante la crisis*, Barcelona: Ediciones UOC Press, 2012.

Fioramonti, L., *Gross Domestic Problem: The Politics Behind the World's Most Powerful Number*, London: Zedbooks, 2013.

Haraway, Donna Jeanne,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Harvey, D., *The Enigma of Capital and the Crises of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Hirsch, F.,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Ingham, G., *Capitalism*, Cambridge: Polity, 2008.

Kallies, G., Martinez-Alier, J., and Norgaard, R. B., "Paper Assets, Real Debts: An Ecological-Economic Exploration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ritic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usiness*, 5(1/2): 14-25, 2009.

Moore, J. W., "Sugar and the Expansion of the Early Modern World-Economy: Commodity Frontiers, 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ization", *Review: A Journal of the Fernand Braudel Center*, 23(3): 409-33, 2000.

O'Connor, J., "On the Two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 107-9, 1991.

Schneider, F., Kallis, G. and Martinez-Alier, "Crisis or opportunity? Economic degrowth for social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Special Issu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8(6): 511-518, 2010.

Skidelsky, R. and Skidelsky, E., *How Much is Enough?* New York: Other Press, 2012.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 P.,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

#2. 라운드테이블

(2021 한국여성학회 특별세션)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공공부문 성인지교육의 미래와 전망 :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의미와 과제
이은아(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성인지 교육 운영체계와 입법방향
윤정화(여성가족부 사무관)

지역 성인지교육 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이순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평등 관점에서 본 공직사회 조직특성과 성인지 교육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의미와 과제

이은아(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순서

- I. 들어가며
- II.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및 ‘전환’ 가능성?
- III. 성인지 교육을 둘러싼 몇가지 딜레마
- IV. ‘전환 가능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의 과제

I. 들어가며

1. 성인지 정책 교육으로서의 성인지 교육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로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채택,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교육' 조항 신설, 2006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제도화
-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2012년 시행):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인지 교육 정의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 근거 마련
-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 및 의무화, 그러나 교육 횟수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 부족.

2. 공공 영역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요구 및 백래쉬 증가

- 공공정책 홍보물, 시정 홈페이지 등 공공 영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증가
- 2021년 3월 25일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발의(권인숙 의원 등 18인): 성인지 교육을 통합 및 의무화하는 법안
- 「90년생 공무원이 왔다」(행안부) 등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 공공영역의 '젠더 갈등' 프레임, '여성중심 행정'에 대한 서울시 '이대남'의 '분노'
- 공공영역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동시에 백래쉬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

3. 문제인식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및 문제 파악 필요
- 정책 현장에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성인지 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모색
- 조직구성원의 변화와 백래쉬 현상에 대한 이해 및 대안적 방안 논의

II.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및 '전환' 가능성?

1. 성인지 교육의 의미

- 의식고양, 역량강화 학습, 지식 습득, 기술 발전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평등 전환을 위한 도구, 전략, 방법. 또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모든 단체 영역에서 정치적 의지와 책무를 갖게 하는 지속적인 과정(UN Women Training Centre, 2016: 11)
- 성 평등을 위한 개인적 또는 조직적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EIGE)
- 개인, 집단, 제도적 수준에서 성평등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학습과정으로서(Ferguson, 2019: 114), 행동 변화를 위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도구이자 전략이며 성찰의 기회(MacDonald, 1993: 32; Porter & Smyth, 1998: 64에서 재인용)
- 「양성평등기본법」: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그러나 목표로서의 '성평등' 부재

2.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및 확대

- 2003년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훈련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 성별영향평가 2004년 시범실시 및 2005년 실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포함에 따라 과제 수 증가(김경희 외, 2015: 22), 2010년 성인지 예산 시행 등 제도 이행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교육명 명료화
-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예: 2013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2018년 성인지 교육 평가지표) 포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성인지 교육 수요 및 교육 인원 증가(4시간 대규모 교육)

3. 성인지 교육의 '저항'의 의미

-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 확대, 내용 및 방법 세분화, 그러나 교육 내용의 중복,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
- '페미니스트 강사'와 '성평등'에 대한 저항: 변화의 내용에 대한 저항과 훈련가 혹은 행위자. 에 대한 저항(Nordvall & Wieslander, 2019). 또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저항은 조직의 남성 특권과 권력을 보여주는 것(Mergaert & Lombardo, 2014; Verge, Ferrer-Fons, & González, 2018). 이데올로기로서의 성평등?
- 성인지 교육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롬바르도와 머게아트(Lombardo & Mergaert, 2016)는 젠더 트레이닝에 대한 저항을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 저항의 내용은 "젠더 변화의 요구를 부정"하거나 "성평등을 사소화 하는 것",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III. 성인지 교육을 둘러싼 몇가지 딜레마

1.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에 대한 백래쉬 증위

가. 외부적 백래쉬

- '남성혐오'로서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백래쉬 : '페미/동성애 교육' 프레임
- 공공조직의 여성 증가에 대한 백래쉬와 '여성혐오' : '무능력'과 '불공정' 프레임
- '페미니즘 백래쉬'의 '성공'? (도서관 사업, GS, 포항공대, 서울시 등)

나. 내부적 백래쉬

- 공무원 조직 내부의 '성평등'에 대한 백래쉬 : '이대남'의 분노
- 미투 이후 '불안'과 '가해자 프레임' 자기 거부
- 승진에서의 남성 역차별 정서

=> '성평등'에 어긋나는 성인지 교육?

=> 남성들'도' 위한 성인지 교육에서 '억울한 남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2. 성인지 정책 교육 vs. 성인지 교육

- 성인지 교육은 자신의 영역과 조직, 제도와 국가 내에서 효과적인 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EIGE, 2016: 1).
- 그러나 단순한 기술적 훈련으로 여겨진다면 교육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Porter & Smyth, 1998: 64), 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교육으로서의 이행 과정
-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오해 : 합리적 이성애 대비되는 감성, 보편적 인간(= 남성 디폴트)이 아닌 왜곡되고 편향적 여성, '페미 강사'를 위한 교육?
- 기술제도화를 넘어선 성인지 교육의 방향과 방안 논의 필요

3. '이중적 위치'와 '의무화'의 한계

- 주류화란 현재의 젠더 규범, 가치, 역할, 권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적, 제도적 영역에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것(Ferguson, 2018: 57), 성 주류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훈련 필요((Verloo, 2005: 351)
- 그러나 성 주류화 전략이 갖는 모호성처럼, 성인지 교육 효과는 모두의 책임이나 동시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음.
- '네거티브'로서의 의무화 강화, '포지티브'로서의 교육동기 약화 : '성평등'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다면?

4. 정책 행위자의 '이중적 위치'와 청년 세대

- 정책 행위자의 '이중적 위치' : 성평등 인식의 변화의 대상이자 성평등 조직 및 정책을 위한 변화의 주체, 즉, 스스로 변해야 하고 변화를 이끌어야하는 이중적 책무.
- '나 답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자기 피해'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 혹은 성평등에 대한 무관심, 특히 안정적 직업 성취로서의 공무원,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안정적 삶'에 대한 불안
- '나 답게' 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

IV. '전환 가능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의 과제

1. 성인지 정책 교육을 넘어선 '성평등 교육'

- '작성법'을 넘어선 '개인의 인식과 조직에 대한 도전'
- 개인의 변화, 조직의 변화를 위한 이중 전략 교육
- 효율성과 발전을 위한 성평등을 넘어선 '성평등 담론' 확대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생산적 긴장'으로의 저항

- 개인과 제도 변화 과정에 필요한 '생산적 긴장'(ferguson, 2019)으로서 '저항' 다루기
- 피해/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넘어 특권/성찰로 나아가기
-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넘어 넘어 조직/사회를 분석하기

3. '모든 공무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

- 공무원의 차이 이해: 직급, 성별, 세대, 직무 등
- 다른 정책 평가 방식과 다른 성인지 교육의 평가 방법 개발 필요, 변화의 책임 인식

<참고문헌>

- 김경희·마경희·김돌순·남궁윤영·이은아. 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여성가족부.
- 마경희. 2007. "성 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 이은아. 2019.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 의 의미와 전환가능성, <여성학연구> 제29권 2호.
- UN Women Training Centre. 2016. Typology on Training for Gender Equality. UN Women Training Centre.
- Ferguson, Lucy. 2018. Gender Training: A Transformative Tool for Gender Equality. Palgrave Pivot.
- Ferguson, Lu . 2019. "Exploring Privilege Through Feminist Gender Train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s and Gender 2(1): 113-130.
- Verloo, Mieke. 2005. "Displacement and Empowerment: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the Council of Europe Approach to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Equality." Social Politics 12(3): 344-365.
- Mergaert, Lut & Emanuela Lombardo. 2014. "'Resistance to Implementing Gender Mainstreaming in EU Research Policy.'" Weiner, Elaine & Heather MacRae(eds). The Persistent Invisibility of Gender in EU Policy'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EIoP) 18(5): 1-21.
- Nordvall, Henrik & Malin Wieslander. 2019. "When Gender Training Backlashes:Participants' Resistance and the Fragility of Commonsensical Feminism." Adult Education Quarterly 69(3): 207-224.
- Verge, Tània, Mariona Ferrer-Fons & M.José González. 2018. "Resistance to Mainstreaming Gender Into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1): 86-101.

성인지 교육 운영체계와 입법방향

윤정화(여성가족부 사무관)

CONTENTS

1. 성인지 교육 추진체계 현황
2. 성인지 교육
추진 방향 및 운영 체계
3. 성인지 교육 입법 방향



1. 성인지 교육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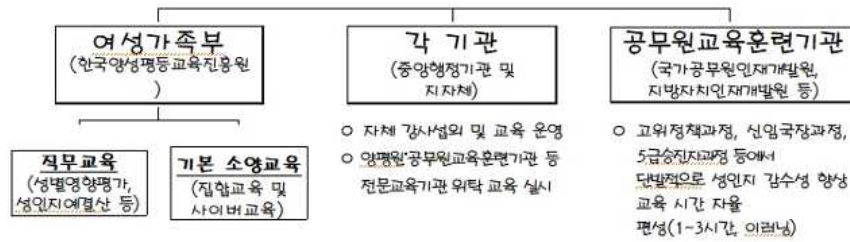
검토 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15년)후, 업무 담당자 중심 교육에서 국가 및 지자체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 확대
※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6.19. 시행)
- (그간 경과) '16년부터 정책 분야별 콘텐츠 개발·보급 중이며, 연극형· 강의형· 젠더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추진
- ('고위직 등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협의 추진) 인사혁신처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20-)를 통해 공무원 직급별·생애주기별 교육체계 구축으로 재직기간 내 지속적인 교육환경 조성 노력

추진 현황

- 여가부에서 '16년부터 정책 분야별 콘텐츠 개발·보급 중이며, 경찰청 등 별도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자체 교육 콘텐츠를 개발·활용

<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체계 현황 >



폭력예방교육과 통합 여부

-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전문가 릴레이 포럼 / 관계자 정책 토론회 운영 등 ('19.6~12월)

※ <폭력예방교육과 통합 실시에 대한 전문가 포럼 결과>

성인지교육은 공무원의 성인지적 직무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폭력예방교육과 그 목적과 내용이 명백히 다르므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으로 편성 제도화 필요

2. 성인지 교육 추진 방향 및 운영 체계

-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추진 방향 및 운영체계

추진 방향

- ◆ (직급별 교육체계 구축) 모든 공무원이 입직단계부터 재직기간 내 직급별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 의무편성
- ◆ (직무별 맞춤형 교육) 기관별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직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교육 수용도 및 효과성 제고
- ◆ (교육 추진기반 강화) 교육과정 의무편성을 위한 법령 규정 및 여성가족부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강사 자격관리 강화

직급별·생애주기별 교육체계 구축으로 재직기간 내 지속적인 교육환경 조성

- 공무원 직급별·생애주기별(신입-승진-관리자) 성인지 정책 역량 모델 제시 및 개인역량·직무역량·관리역량 프로그램 개발
 - ※ 고위급(고위정책, 신입국장), 과장급(신임과장), 5급(신임관리자, 승진자), 6급 이하(신규자, 지역인재) 공무원
-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신규·승진자 및 고위급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편성
 - ※ (' 20) 5급 신입관리자, 7급 신규자 → (' 21) 고위급 → (' 22) 5급 승진자, 7·9급 지역인재 과정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예시) >

역량	개인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
구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평등 정책 실무교육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내용	○ 성평등 정책 이해 ○ 성인지 감수성 향상	+	○ 성 주류화 제도 이해 ○ 성평등정책 기획·집행 평가	+	○ 성평등 조직 문화 ○ 일·생활균형/와열정 참여

- 고위공무원 및 과장 후보자 공직리더십교육 역량향상 과정에 의무편성하고,
 - ⇒ 성인지 역량평가 과제개발을 통해 후보자 역량평가에 성인지적 요소 반영 추진
 - ※ (' 20) 과장 후보자 과정 (시범운영) → (' 21)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으로 확대

직무별·기관별 맞춤형 교육 설계로 실제 업무 적용을 통한 수용성 제고

- 직무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직무별 사례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각 기관별 자체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32개) 교육과정으로 편성
- ※ ('20) 복지부, 고용부 →
('21) 문체부 등 양성평등담당관 8개부처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

성인지 교육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의무교육 과정 편성을 위한 법령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성인지교육자원법(가칭) 시행령 제정 추진
※ <교육과정 기간별 성인지교육 의무 편성 예시>
1주 이내(2시간 이상), 2주 이상 3개월 미만(4시간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8시간 이상), 6개월 이상(12시간 이상)
- 성인지교육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 여가부·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행안부(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 '성인지교육 전문기단' 을 구성하고, 집중 워크숍 실시 및 현장 활용
※ 「강사 국가자격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강사 자격관리 강화('21년 ~) 등 검토

성인지 교육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추진 전략		실행 방안
1 직급별 표준화	공무원 직급별 기본(필수)교육 훈련 과정에 표준화된 성인지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직급별 성인지 역량 모델링 개인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 (성인지 감수성) + (성평등정책 실무) + (성평등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역량 모델에 따른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역량 평가 과제 개발
2 직무별 맞춤화	직무·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과정 반영 * 고위공무원, 4급, 5급, 6급이하 (실규장 지역인재) 등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사전교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기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기관 자체 교육·연수기관교육과정에 반영)

3. 성인지 교육 입법 방향

-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 등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 제정추진 현황

[추진 방향]
 성평등 관련 교육 개념을 재정리하고,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전담인력, 전달체계 등 제도 정비 사항을 법 제정안에 반영 추진



15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 추진 내용

- **법안 주요 내용** (권인숙 의원안('21.3.25. 발의))
 - (목적)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안 제1조)
 - (기본계획) 여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5조)
 - (성인지교육의 실시) 국가기관등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장, 초·중등학교의 장 등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8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중앙·지역 성인지교육지원기관) 여가부장관은 양평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 핵심 내용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성인지교육지원법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장) 성인지교육 기본계획 및 수립체계 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성인지 교육 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성인지교육기관 지정 등
(제3장) 성인지교육의 실시 : 성인지교육의 대상 및 내용, 성인지교육실적 보고, 성인지교육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 전담인력 양성 등

1.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에 대한 용어 재정의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정책 교육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의 적용을 받고 추진되는 공무원 교육에 교육과정 편성(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자체 자체 교육원 등)
ex) 시행령에 '교육기간에 따른 성인지 정책 교육 시수' 추진
 1. 1주 이내 교육 훈련 과정 : 2시간 이상
 2.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 훈련과정 : 4시간 이상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 훈련과정 : 8시간 이상
 4. 6개월 이상인 교육 훈련과정 : 12시간 이상

차이를 외면해 차별을 낳는 일이 없도록

" 같이 가요 "

THANK YOU !

지역 성인지교육 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이순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작하며

법률, 정부합동평가 등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성인지 교육의 당위성이 보증되고,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반면, 질적 수준과 교육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교육이 성 주류화 전략으로 불충분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지역 단위의 운영체계 구축'에 주목하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교육은, 받는 사람의 동기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쪽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또한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지자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준비하지는 못 하였고, 전라남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제한점으로 밝힘. 그럼에도 성인지 교육을 지자체에서 내실있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1. 성인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

1) 조례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성별영향평가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교육 규정만 있는 지역, 성인지 교육 규정만 있는 지역, 둘 다 모두 있는 지역, 둘 다 없는 지역 등 차이가 있음.

○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둘 다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23개 지자체 중 12개 지역(52.2%)으로 이 중 5개 지역은 성별영향평가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고, 7개 지역은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음.

○ 2개 지자체는 성인지 교육만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음.

○ 8개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 교육만 성별영향평가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음.

○ 전라남도는 두 조례 모두 공무원 대상 교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교육'규정을 두고 있음.

<전라남도 및 시군의 공무원 성인지 교육 관련 조례 현황>

규정	지역	조례명	비고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7개)	성별영향평가 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성인지 교육 규정)	연 1회 이상 규정 해남군은 교육대상, 내용, 방법 상세 규정
	여수시, 고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5개)	성별영향평가 조례	연 1회 이상 규정
성별영향평가 교육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구례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7개)	성별영향평가 조례	연 1회 이상 규정
	곡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인지 교육	영광군, 완도군	양성평등기본조례	
둘 다 없음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성인지 교육 의무참여 대상과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안 업무담당자, 젠더폭력 업무담당자는 교육 의무대상자임. 또한 성인지 역량 향상, 성인지 관점 이해, 양성평등 법·정책·제도 이해, 사회·문화 이해를 성인지 교육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해남군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성인지교육 조항>

<p>제11조(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p>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p>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2) 성과평가 반영

○ 그동안 정부합동평가가 교육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정부합동평가가 '명예'지 실익은 없다고 말하기도 함. 그래서인지 상급자들은 정부합동평가를 중시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성과평가를 더 선호함.

○ 전라남도에서 성인지 교육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외 순천시, 여주시 3개 지역으로 적음. 지표의 중요도에서도 성 주류화 추진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

〈성 주류화 추진 관련 성과관리 지표 운영 현황〉

	성과평가제도	관련 내용
전라남도	BSC(부서성과 평가)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BSC 성과평가 공통지표에 반영(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70)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15) 폭력예방교육(15)
순천시	BSC(부서성과 평가)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BSC 성과평가 공통지표에 반영(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수(1점) 정책개선 비율(1.2점)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실적(0.8점)
여주시	TOP 성과관리 주요업무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공통지표에 반영(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 사업추진 건수(40%) 세출예산 세부사업과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15%) 성별영향평가 실시건 중 개선과제 산출율(3%) 법령 성별영향평가 실시율(2%) 법정 운영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10%) 성인지예산 확보 노력도(10%) 성인지교육 이수율(10%) 폭력예방교육 이수율(10%)
영광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업무 평가 지표에 반영(9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실시율(3점) 성인지예산 확보율(3점) 여성위원 참여율(3점)
광양시	BSC(부서성과 평가)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공통지표(가점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1점)
	부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포상(양성평등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 성인지 교육 추진 근거와 성과평가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제도적 기반이 가장 잘 구축된 지역은 여주시라고 할 수 있음. 직무훈련만이 아니라 성인지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교육 횟수 규정을 두고 있는 고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만 횟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인지 교육의 대상과 내용 범위를 상세 규정하고 있는 해남군도 타 지역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할만함.

○ 그러나, 제도적 기반의 수준과 교육의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임. 이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봄.

2. 교육 이수율, 방법, 내용

1) 교육 이수율

○ 집합교육이 가능했던 2019년, 폭력예방교육을 제외한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이수율은 7.7% ~ 92.4%, 관리직 이수율은 0.6% ~ 18.9%로 전체 평균을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군간 편차가 큼.

-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 성인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여수, 고흥, 진도, 함평, 화순, 해남의 경우 교육의 양적 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것은 아니며, 조례에 성인지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있어도 일부 시군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제도적 기반이 성인지 교육 실시 확대 혹은 참여 확대를 자동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게 됨.

- 교육 실적, 제도화 수준,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 운영체계 등을 조작정의한 후 교육 실적에 대한 해당 요소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인과모형 분석을 시도할만함.

2) 교육 방법

○ 짧은 교육시간과 대규모 집합교육 방식이 교육 효과에 부정적임은 널리 알려져있으나, 전라남도 시군의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교육 시간은 4시간이 가장 많음. 3개 시군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4시간을 운영하였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한 지역도 1곳 있음. 5개 지역에서는 2시간 과정을 운영하였음.

- 순천시만 성인지 관점,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를 내용으로 하여 7시간 과정을 운영하였음. 그런데, 참가자들의 교육평가서에 교육시간 축소 요구 내용이 가장 많았음.

- 화순군은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을 준비하면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운영,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3) 교육 내용

○ 교육 운영(강사 파견) 기관과 교육 내용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성인지 관점과 관련한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순회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지역의 양성평등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 주류화 도구 이해와 적용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적음 (17개 시군 중 5개).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2019년)>

기관명	과정명	교육방법	이수 시간	운영기관 혹은 강사 파견 기관	이수율	
					전체	5급이상
목포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집합(자체)	2h		10.2	0.6
여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인지 관점 이해	집합(자체)	3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86.1	10.3
	성인지 사이버교육	온라인	1h			
	성인지 예산 개념과 작성법	집합(자체)	1h			
순천시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 이해(1교시)	집합(자체)	7h	전남여성평등센터	32.1	7.5
	성인지 예산 및 여성친화도시 이해(2교시)					
나주시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이해	집합(자체)	2h		41.1	7.7
광양시	성평등의 중요성과 성인지 정책의 이해	집합(자체)	3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33.7	7.2
	성인지 사이버교육	온라인	1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구례군	성별영향평가 업무역량 강화	집합(자체)	4h		15.3	1.7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교육	집합(자체)	2h	전남여성평등센터	29.9	6.1
장흥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집합(자체)	2h		92.4	10.3
강진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및 GIA 이용법	집합(자체)	4h	전남여성평등센터	50.8	14.9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집합(전남)	4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해남군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집합(자체)	2h	전남여성평등센터	81.1	16.0
	성인지 사이버 교육	온라인	2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영암군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워크숍(자체)	2h	전남여성평등센터	7.7	0.0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과제발굴	워크숍(자체)	2h	전남여성가족재단		
	성인지 사이버교육	온라인		여성평등교육진흥원		
무안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접근	집합(자체)	3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26.1	0.0
함평군	성인지 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집합(자체)	4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82.0	17.3
영광군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집합(자체)	4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70.2	18.9
장성군	성별영향평가 교육	집합(자체)	4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60.7	14.3
완도군	성별영향평가 찾아가는 순회교육	집합(자체)	2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18.7	1.4
곡성군	성인지 사이버교육	온라인	4h	여성평등교육진흥원	29.5	0.0
고흥군	-					
담양군	-					
보성군	-					
진도군	-					
신안군	-					

자료 : 전라남도 시군 2019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 직급별, 직무별 교육과정 설치, 워크숍 방식의 참여식 교육, 적정 교육시간의 확보 등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속 논의되어 왔으나 적용되고 있지는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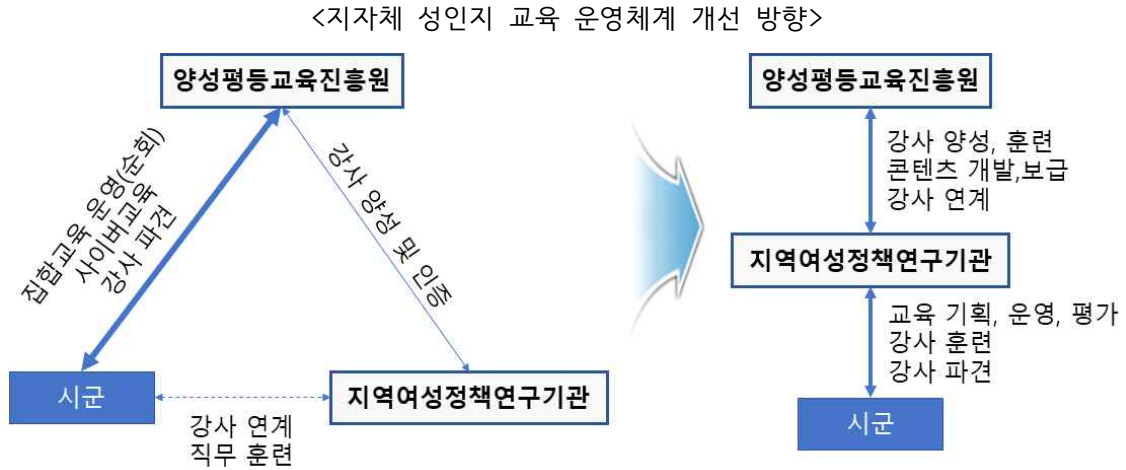
- 대상별 과정 사례(경기여성가족재단) : 관리자 과정, 성 주류화 정책 업무담당자 과정, 의회 등 법령전문가 과정, 소방·경찰 등 안전업무담당자, 시설·환경 업무담당자, 일반공무원 대상 기본과정 등

○ 교육과정의 설치와 운영은 고정된 표준 모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의 여건, 공무원들의 교육 동기와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하에서의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함. 즉 지자체, 젠더 전문가, 지역의 교육운영 기관 등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지역 차원의 교육 운영체계 확립이 중요함.

3. 운영 및 지원체계

1) 지역 성인지교육 운영체계 개선 :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 중심 모델



○ 현재 지자체의 성인지교육 운영체계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 포함)은 긴급시에 성별영향평가 직무훈련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음.

○ 양평원이 시군 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 정책실행 간의 이원화를 가속화시킴. 정책 실행을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이 교육과 분리되면 될수록 성인지 교육과 직무교육의 이원화 및 성인지 교육의 주변화, 그로 인한 성주류화의 기술제도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에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의 경험과 요구에 기반한 교육 기획, 교육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탄력적 적용,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 환류 등 성인지 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임.

○ 문제는 다수의 기관들이 그럴만한 조직 구조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2)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교육역량 강화

□ 제한된 예산과 조직 구조 하에서의 역량확보 문제

○ 다수의 여성정책연구기관들이 교육 운영인력만으로 교육사업 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기관들은 교육사업 부서 내 박사급 교수진(연구직)이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음. 후자의 경우 교육 기획 및 평가, 콘텐츠 개발 등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러한 종합적 교육 기획과 운영이 쉽지 않음.

○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경우, 교육사업팀은 일반 시민 대상의 성평등 교육(양성평등센터의 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포함)을 담당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성인지 교육을 총괄하는 단위가 부재함.

-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여가부의 센터 운영 지침 및 국비 예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교육은 부차적 업무에 해당함. 교육 사업은 도나 지자체가 보조금 혹은 위탁사업으로 의뢰할 경우에만 일어나는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성인지 교육의 기획 및 평가, 콘텐츠 개발 등은 연구부서의 과제로 생성되어야 하지만 적은 연구인력으로 인해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림. 아쉽게도 전남에서 성인지 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시행된 바가 없음.

○ 전남의 경우, 여성가족재단이 성인지 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법 내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인력과 예산 투여를 의무화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재단은 성인지 교육 기획·운영을 위한 기능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투여의 양면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성인지 교육이 주류의 '젠더 전환'을 가져오려면 교육의 기술제도화를 향한 경로의존을 경계해야 함. 즉 행정 논리에서 거리를 두고 성인지 교육을 기획·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투여가 선결조건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지자체의 교육 추진 기반 마련과 별도로, 재단은 교육사업(양성평등센터의 성평등 환경조성 사업을 포함)의 목표와 대상을 '성평등 실행주체의 성인지 역량강화'로 조정하고, 성인지 교육 총괄기획·실행 단위를 마련하는 등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교육이 기존 교육사업에 부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을 메인으로 하여 교육사업을 조정(예: 일반 시민대상 교육은 여성단체, 지자체의 여성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 개입)

* 성인지 교육 총괄단위의 마련은 교육 기획과 실행, 평가 및 환류가 한 호흡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부서 편제만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음

□ 지역 단위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역 내 젠더 전문가, 연구자가 부족함. 전남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젠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평원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양성 강사의 수가 매우 적음. 또한 양성된 강사들이 관점과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에 바로 출강이 가능한 것도 아님. 성별 영향평가 교육 역시 강의 역량을 갖춘 컨설턴트는 매우 소수임.

○ 양평원의 강사 및 컨설턴트 보수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역 기관 내에 역량강화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강사 역량강화 교육은 집합교육 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 훈련을 겸한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그러나, 강사 역량강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재단 입장에서는 업무 하중이 될 가능성이 크고,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가 전업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할 동기나 여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음.

○ 전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기관 내에서 강사 역량강화 사업을 상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전남의 경우 2021년부터 재단 교육사업팀에서 운영하는 '페미니즘 대학' 참여를 전문강사와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센터의 환경조성 사업 내에서 인증강사 및 비인증 청년강사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강의 콘텐츠 개발·보급 : 우수사례의 과정 중심의 정리와 접근성 제고

○ 전남의 경우, 교육이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콘텐츠 관리가 쉽지 않음. 지역 차원의 운영체계가 확립되면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될 수 있음.

- 전남 실행기구가 만들어지면 콘텐츠 개발·보급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임.

- 지역에서 양성된 강사의 출강이 많아지고 이들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이 정착되면 콘텐츠 공동생산 및 강의안 모니터링과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교육 수용성 차원에서 '핵심만 쉽게'라는 내용 측면에서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가 필요함. 문제는 '사례' 정보가 불충분하고 접근성도 높지 못하다는 것.

- 타 지역 및 정책 성공 사례들이 잘 수집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재와 같이 결과 중심의 사례 공유는 별로 유용하지 않음. 시책 형성이나 개선이 누구에 의해 발의되었고 누구의 주도 하에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 지역의 거버넌스 작동이 잘 드러나게 정리되는 것이 필요함

* 전남에서 2017년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나주시 로컬푸드 운영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편성되었는데, 이를 강의안에 활용하려 할 때, 강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탐문과 조사를 진행해야 했음. (성인지적 정책개선 사례의 단순 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정책개선 의견이 100% 반영된 결과인지, 사업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컸는지, 성별영향평가와 별개로 지역 여성농업인단체들의 요구가 컸는지 등등...)

로컬푸드 구축- 로컬푸드 운영(나주시, 2017)

평가 전

-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족구성원에게 농가소득을 별도로 분배하지 않음. 또한 2017년 출하농가 등록시 남성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음.
- 가정 내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과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못함.



평가 후

- 부부가 공동으로 경작 및 가공한 농산물에 한해 판매물품에 부부 공동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침에 규정.
- 로컬푸드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에 성별분리통계등을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



@2017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2019년 전남양성평등센터의 성평등 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원 자신이 5분 주제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교육 이후 의원들이 자기가 발표한 주제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긍정효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이 과정에 대한 상세설명은 누락되어 있음.

성평등 관점에서 본 공직사회 조직특성과 성인지 교육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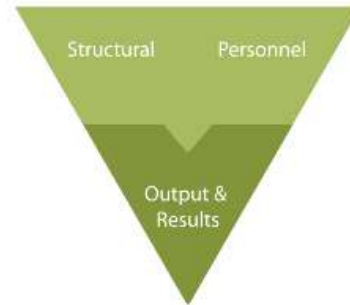
문제제기

- **그동안 성주류화 정책 기반 형성을 위한 노력**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 성인지 교육
 -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 외부 젠더 전문가 지원 + 여성담당부서 조정 기능
- **공무원 개개인이 놓인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질문 간과**
 - 공무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해 담당하는 정책을 변화시키는 전략
 -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가 - 조직의 가치지향, 구조, 일하는 방식 등 조직 특성의 어떤 측면이 성주류화의 가능성을 억제/촉진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부족

문제제기

- 유럽성평등연구소(EIGE), 성주류화를 위한 조직의 전환(EIGE 2016)

- 기관 내 성주류화의 차원, SPO(structural-personnel-output) 모델
- 성평등에 기여하는 조직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기관의 내적 매커니즘 변화 필요
 - 구조(structure) 차원 & 인력(personnel) 차원



3

문제제기

- 구조 차원

- 조직이 따르는 가시적/비가시적 목표, 규칙, 절차, 조직문화 등
- 기관의 경영 및 운영 절차에 성평등을 주류화하기: 조직이 성평등을 위한 구조적 체계를 갖추도록 함(공동의 목표, 예산과 자원, 경영관리 과정 및 도구 등)

- 인력 차원

-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역량 + 성평등을 촉진하는 직장환경
-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과 인력 관리(인적자원 개발 항목에 젠더 지식 포함, 직무 기술 및 성과 평가 등에 성평등 역량 명시 등)
- 성주류화의 일부로서 성평등 인사: 기회 균등 정책 등

4

문제제기

- **성주류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은 무엇인가**
 -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본 발표는 '20년 두 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성평등 조직진단 결과로부터 유추한 몇 가지 지점을 제시
 - 향후 성인지 교육과 함께 공직사회의 조직적 전환 - 성평등을 조직의 목표, 규칙과 절차, 문화, 인력 관리 방침에 통합하는 과정 - 이 필요함을 주장
- **자료**
 - '20년 두 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 면접조사: '20.10~11. 실시, 남녀 공무원 55명 참여(심층면접 및 FGI)
 - 설문조사: '20.11~12. 실시, 남녀 공무원 660여명 참여

5

성주류화를 어렵게 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

6

자원 배분 권한에 따른 부서 간 위계

-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는?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 “주요부서 = 힘 있는 부서, 조직의 핵심이자 두뇌, 내부고객을 다루는 부서”
 - 정보가 집적되고 조직 내외에 자원을 배분하는 부서
 - 좋은 평정과 빠른 승진, ‘요직’에 진출하는 경로
-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보다 전통적인 관리 기능을 통한 통제**
 - 인권, 시민안전, 성평등 등 부서의 영향력은 가장 낮은 순위
 - 물적/인적 자원을 통해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현실 반영

7

주변화된 부서 간 협업

- **타 부서 협조사무 처리, 서무의 역할로 배치**
 - 부서마다 지정되는 서무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 ... 부서장 일정 관리, 부서원 복무관리, 공문서 접수·발송, 예결산 및 회계처리, 기타 소관이 명확치 않은 일 또는 갑자기 발생한 업무 등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 잘하는 막내’, 그 중에서도 여성이 배치되는 경향 있음
 - 타 부서 협조사무를 처리/취합하는 역할도 서무의 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독려하고 취합하는 역할 담당
- **부서 간 협업을 처리하는 방식, 비중을 두는 정도를 보여주는 이러한 관행 속에서 성주류화 업무 또한 타 부서 협조사무의 하나로 주변화될 가능성 큼**

8

위로부터의 의사결정과 제한적 거버넌스

• 정책 수립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1+2+3순위)

- A단체: 기관장(80%) > 지방의원(78%) > 고위공무원(59%) > 지역 국회의원·정당(36%) > 지역이익단체(19%) > 지역시민단체(13%)

•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접촉하는 집단(1+2+3순위)

- A단체: 없음(43%) >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관(41%) > 전문가(25%) > 지역이익단체(22%) > 기자 등 언론인(20%) > 지역시민단체(19%)

• 조직 안팎으로부터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가 유입, 공유되고 주요 의제로 형성될 수 있는 구조인가

9

상급자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문화

• 동료와의 협업, 새로운 의견의 개진보다 상급자를 잘 모시고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평가에 유리(A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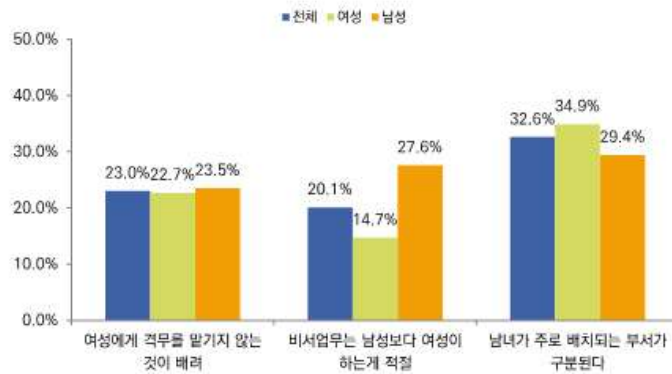
- 사소한 일이라도 상급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6.6%



10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 관행

-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을 승인하는 인식, 성별에 따라 주로 배치되는 부서가 달라지는 관행 잔존(A단체)



11

성평등을 위한 조직적 전환과 성인지 교육

12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인사·복무 영역에서 성평등한 변화 촉진**
 - 권한에의 접근, 성별 업무 분리, 성별화된 일생활균형, 성별 분리와 여성 배제를 초래하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를 추진
- **성인지 교육에 조직적 맥락을 포함**
 -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개발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외에도 성평등한 조직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특히 관리직) 등 조직적 맥락을 포함(김둘순 외 2020)
- **성주류화 추진 기반으로 '조직적 전환'을 위한 모델 개발**
 - 중장기적으로 성주류화를 위한 조직의 목표, 구조, 절차, 인력 관리 전반을 변화시키는 모델 개발
 - 각 조직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사업 구축

13

감사합니다

14

전환의 길목, 돌봄사회책임의 재검토 : 돌봄, 노동, 교육, 지역이 뒤엎힌 실타래

사회: 이은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본부장)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마을공동체의 지역기반 돌봄 시도와 과제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이사)

토론: 김수경(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국장)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영선(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성명서		
	보도일시	2020. 5. 22. 금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5. 22. 금	총 3매 (별첨 0건)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인가?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육자 본분 망각한 교원단체의 초중등교육법 저지 규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초등돌봄 법제화 추진하라!**

▲ 입법예고가 장난인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포기 보도에 해명하라!
▲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교원단체들의 어떤 요구와 주장도 아동들의 행복과 안전보다 후 순위일 뿐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어제(21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고 한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교육부에 묻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인가?

지난 19일 교육부 입법예고 직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계실 거라 믿었던 순진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충격이 가지지 않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학부모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민국 초등교사들이 스스로 교사이되 교육자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외에 학원 강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NDI2ZjBIMjltNWQ0ZC00M2JmLWE5ZjAtYWU4MmM1Yjk0OGJj&sourceId=urlshare>

교사들은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敎育)이라는 한자에 '기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적 정의를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는 가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국어, 수학 등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교육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단순히 수업만 받으라고 학교에 보내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수업만 진행해도 될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학교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학교라는 공적영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바라는 때문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더불어 학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영양·상담 등 학습 이외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한다. 전인교육은 옛말인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과업이자 초목표이다. 이를 멋대로 아이돌보미(비정규직 돌봄전담사)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돌봄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마치 정규직의 수치인냥 말하는 교사노조는 노동단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방과후학교-돌봄의 학교사무
입법안 절대 반대

다양하게 활용한 공간
교사노동조합연맹

1. 교육·학예 활동이 아닌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학교 업무로 해선 안 된다.
2. 아이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3. 교육부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중단하고, 본연 업무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4. 교육부는 교사를 '아이돌보미'의 도우미로 만들지 말라.

"속보"
교육부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결정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은 국가와 가정, 보육은 지역사회가 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법안 폐기될 때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월 15일
전교조,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문제 해결 로드맵 요구하자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지자체로 돌봄 이관 추진 말함

5월 20~21일
전교조 본부와 지부는 잇따른 성명서 발표하며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요구

5월 21일 12시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 및 폐기 요구
장관은 교원단체 의견 수렴하며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답변

5월 21일 오후
교육부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을 중단키로 결정

초등돌봄 정책을 마치 폭탄 취급하며 이리저리 떠넘기는 동안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정부부처는 이제껏 없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께 호소한다. 특정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 떠밀리거나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결코 안 된다. 교원단체가 장관 퇴진운동 운운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교(교육기관)이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교사(교육자)가 언제부터 교(敎)만 하고, 육(育)은 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주장이 사뭇 생소하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알량한 믿음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방과 후에 학교에 남는 아이들이 불법체류자인가? 학교는 교사들의 것인가?
교사를 위해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는 줄 아는가?

학생이 있어서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
이건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아직도 여성노동자 절반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고용단절을 겪고 있다. 공적돌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일명 학원 뽕뽕이를 돌고 있다. 초등돌봄의 법적근거를 만들어야만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이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의 주장이 담긴 서명운동과 웹자보의 내용을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5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성명서		
	보도일시	2021. 1. 22. 금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1. 1. 22. 금	총 3매(별첨 0건)

**학교는 장소만 제공, 운영은 지자체가?
학생을 짐짝 취급하며 초등돌봄 외주화 강행하는
교육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 ▲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 ▲ 학교의 주인은 교사인가? 교육은 학원에, 복지는 지자체에 떠민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
- ▲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지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터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72.4%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하면 되는 상식적인 길을 두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을 모델로 제시하며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지자체로 돌봄을 떠넘기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먼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사집단의 논리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단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 선부터 그어버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외주화 결정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고용승계문제,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만 하며 교사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교사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로 아이들이 이동한 2시 이후부터 저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실에서 각 운영 주

체 간 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내부 프로그램이나 급간식의 질, 돌봄종사자 처우문제 및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 등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며 중구 사례를 만능해결책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다.

학교는 “공간만 빌려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돌봄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내 일이니 함께 머리를 맞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각 주체들이 내 일처럼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작도 전부터 돌봄과 같은 “하찮은 일”은 교사의 일이 아니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돌봄에 대하여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그 외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다수 교사들의 태도는 작금의 교사들이 전인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던 교육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며 투정부리는 교원 단체들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자진철회 해버렸다. 학교의 주인인 수백만 초등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가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가 할 소린가.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 할 공적돌봄의 책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교사-학부모-돌봄종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돌봄주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구실을 삼기위해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회를 열어온 교육부의 양아치적인 행태는 더 가관이다.

회의를 주재해 온 이상원 차관보는 지난 4차 협의회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청과 학교장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학생·학부모가 이해해야할 상황도 아닌 주어진 현실”이라는 등 학생·학부모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재부출신 관료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함께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되어 운영과정에서 이익 추구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우리는 그 민영화의 결과를 유치원 비리사건으로 이미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가.

아울러 학교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학생 등 떠미는 이기적인 교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수업일수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지난 1년간 학교의 모습, 생존확인정도로만 기능했던 처참한 쌍방향수업, 유튜브링크만 던져주고 양육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제만 던져주던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등교 안하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정서나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일체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단순히 자기 애 자기가 보기 싫어 학교로 떠넘기는 무개념 진상부모들이 아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파리목숨 같은 삶을 부지하며 버텨오

다가 초등돌봄 추첨에 떨어져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나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이미 비자발적 “경력단절여성”이 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 넘친다. 눈치 보지 않고 잘릴 걱정 없이 3년이나 육아휴직을 쓰다 원래 자리 그대로 복직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는 양육자들의 이와 같은 공적돌봄의 확대라는 피맺힌 절규가 그저 진상학부모들의 배부른 소리로만 들리는가.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의 공간이자, 한계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이자, 한 끼 정도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간 즉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정규교육과정이나 급식과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취업 여부를 묻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논란과 더불어 교육부에 묻고 싶다.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문제는 왜 손 놓고 있는 것인가?

2018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안을 발표하자, 학부모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당시 저출산위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 있고, 한국이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보면 미국·캐나다 등은 하루 평균 4.9시간으로 모든 학년이 동일한데 반해 한국의 경우 1·2학년은 2.93시간, 5·6학년은 3.87시간이다.

하교시간 연장 안은 2009년부터 논의 되어왔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십 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당시 저출산위가 2023년까지 시범운영, 2024년 전면시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자 이번 돌봄운영 주제에 대한 논란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교육부는 하교시간 연장을 포기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이 아니라 교원단체 특권유지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하교시간 연장을 통해 방과후학교(초등돌봄+방과후교실) 운영 시간이 줄어들면, 돌봄교실 2담임제 등 질적 제고가 가능하다. 또는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7시 이후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하교시간 연장도, 초등돌봄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밀어내려고만 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학교는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만의 학교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점심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지만 교사의 점심시간은 인성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유급시간이다. 교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한 명의 훌륭한 인간 되도록 “길러내기” 위함이다. 단순히 주입식으로 지식전달만 하는 학교의 역할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지금은 오히려 교육과 돌봄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적돌봄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짐짝 취급하는 돌봄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

2021년 1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 2019년 5월, 2021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이 발표한 두 건의 성명서를 보았다. 이것이 ‘초등방과후돌봄 갈등의 현재다. 초등돌봄 공백의 문제는 여성 양육자들에게는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는 결코 아니라서, 위 성명서들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진 않았다. 다행히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널리 회자 되어 교사들로부터 비판 댓글을 많이 받았고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잘 알게 되었다. “학교는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맡는다. 하지만 교사들은 돌봄교실(맛벌이 자녀 등)과 방과후교실(정규과목 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가 과중해서 수업 준비에 차질이 있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이 하교시간(정규수업) 연장 또한 반대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중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져 비난받은 점, 이미 학업성취를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공교육 신뢰가 낮은 점, 연간 최소 80일에 달하는 유급 방학 기간을 수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교사 행정업무가 과중한 문제는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서 해결할 일이지, 그래서 초등돌봄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한 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등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학부모의 상황이나 돌봄 인프라를 학교 밖에 구축할 때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이토록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다. 교사들은 3년의 육아휴직 +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돌봄공백으로 인해 여성양육자들이 겪는 심각한 피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초등돌봄의 법제화를 포기하고, 초등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럴 바엔 초등수업도 학원 강사에게 외주를 주면 좋겠다는 말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온다.

코로나19를 통해 학교가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급식실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 반면 한국은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하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거나 외부 매식을 하게 된다. 위 클래스(상담교실)를 모든 학교에 조속히 배치하고, 담임 교사가 가정 내 아동학대의 1차 감시자가 되어 보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성교육·성상담을 전문적·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등 학교의 역할은 확장되어야 한다. 초등돌봄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는 잘 알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답보하고 후퇴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교사도 문제다.

표 2.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구 분	일 하였음			일하다 그만 둔 적 있음	계(명)
	소계	근로시간 줄었음	근로시간 줄이지 않음		
전체	57.7	1.3	56.5	42.3	100.0(8,479)
직종($\chi^2=184.9^{***}$)					
관리직·전문직	68.6	2.2	66.4	31.4	100.0(2,305)
사무직	55.0	1.0	54.0	45.0	100.0(3,867)
서비스직	54.3	0.8	53.4	45.7	100.0(943)
판매직	52.8	1.3	51.5	47.2	100.0(619)
기타	46.7	0.4	46.3	53.3	100.0(745)
종사상지위($\chi^2=125.3^{***}$)					
비임금근로자	73.5	3.0	70.5	26.5	100.0(566)
상용근로자	58.5	1.1	57.4	41.5	100.0(6,431)
임시일용근로자	48.5	1.6	46.9	51.5	100.0(1,483)
직장유형($\chi^2=244.6^{***}$)					
공무원·국공립교사	86.4	2.4	83.9	13.6	100.0(623)
정부투자·출연기관	73.1	0.8	72.3	26.9	100.0(130)
일반회사·기타	55.2	1.2	54.0	44.8	100.0(7,726)

* p<0.05, ** p<0.01, *** p<0.001

수: 1) 부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응답의 경우 조사하지 않았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9. 첫째자녀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출산전·후 휴가 사용 경험(2011.1.1. 이후 출생아인 경우)

(단위: %, 명)

구 분	전체 여성			비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전체	61.4	38.6	100.0(788)	95.8	4.2	100.0(471)	10.1	89.9	100.0(317)
당시 직종	$(\chi^2=34.1^{***})$			$(\chi^2=8.5)$					
관리직·전문직	67.3	32.7	100.0(278)	95.3	4.7	100.0(191)	5.7	94.3	100.0(87)
사무직	64.4	35.6	100.0(368)	96.8	3.2	100.0(222)	15.0	85.0	100.0(147)
서비스직	37.8	62.2	100.0(74)	86.2	13.8	100.0(29)	6.7	93.3	100.0(45)
판매직	32.3	67.7	100.0(31)	100.0	-	100.0(10)	0.0	100.0	100.0(21)
기타	57.1	42.9	100.0(35)	100.0	-	100.0(19)	11.8	88.2	100.0(17)
당시 종사상지위 ¹⁾	$(\chi^2=109.1^{***})$			$(\chi^2=15.9^{**})$					
상용근로자	68.3	31.7	100.0(685)	96.7	3.3	100.0(452)	13.4	86.6	100.0(232)
임시일용근로자	14.6	85.4	100.0(103)	77.8	22.2	100.0(18)	1.2	98.8	100.0(84)
당시 직장유형	$(\chi^2=68.1^{***})$			$(\chi^2=7.1^*)$					
공무원·국공립교사	94.8	5.2	100.0(116)	100.0	-	100.0(107)	33.3	66.7	100.0(9)
정부투자·출연기관	80.0	20.0	100.0(15)	100.0	-	100.0(12)	-	100.0	100.0(3)
일반회사·기타	55.0	45.0	100.0(656)	94.3	5.7	100.0(352)	9.5	90.5	100.0(304)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11.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의 당시 경제활동특성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2011.1.1. 이후 출생아인 경우)

(단위: %, 명)

구분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 여성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사용	미사용	전체(명)
전체	41.1	58.9	100.0(788)	67.1	32.9	100.0(471)	2.2	97.8	100.0(316)
당시 직종	$(\chi^2=16.4^{**})$			$(\chi^2=4.8)$					
관리직·전문직	46.8	53.2	100.0(278)	68.1	31.9	100.0(191)	1.1	98.9	100.0(87)
사무직	41.0	59.0	100.0(368)	65.8	34.2	100.0(222)	3.4	96.6	100.0(146)
서비스직	22.7	77.3	100.0(75)	58.6	41.4	100.0(29)	-	100.0	100.0(45)
판매직	29.0	71.0	100.0(31)	90.0	10.0	100.0(10)	-	100.0	100.0(21)
기타	45.7	54.3	100.0(35)	78.9	21.1	100.0(19)	5.9	94.1	100.0(17)
당시 종사상지위 ¹⁾	$(\chi^2=74.9^{***})$			$(\chi^2=26.8^{***})$					
상용근로자	46.9	53.1	100.0(684)	69.5	30.5	100.0(452)	3.0	97.0	100.0(232)
임시일용근로자	1.9	98.1	100.0(103)	11.1	88.9	100.0(18)	-	100.0	100.0(84)
당시 직장유형	$(\chi^2=71.1^{***})$			$(\chi^2=10.3^{**})$					
공무원·국립학교사	75.0	25.0	100.0(116)	78.5	21.5	100.0(107)	30.0	70.0	100.0(10)
정부투자·출연기관	66.7	33.3	100.0(15)	83.3	16.7	100.0(12)	-	100.0	100.0(3)
일반회사·기타	34.5	65.5	100.0(656)	63.1	36.9	100.0(352)	1.3	98.7	100.0(304)

* p<0.05, ** p<0.01, *** p<0.001
 주: 1) 당시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제외하고 분석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위 3개의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6월에 펴낸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서 발췌했다. 이것 외에 공무원·교사와 민간기업 종사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없어 2016년 보고서를 현재도 인용하고 있다. 고용단절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 △양육자의 맞벌이/외벌이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초등학교 재학 때까지 공적돌봄을 제공 △공무원/비공무원 차별 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급 육아시간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노동자의 돌봄권을 보장

□ 초등돌봄의 현황과 쟁점

구분	내용
1.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	○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수요에 비해 돌봄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 문제 ○ 부처별 돌봄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 적합한 이용자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낙인 문제 발생, 추첨으로 운에 의해 서비스 이용자가 결정되는 등 수요자 중심(돌봄 필요성)이 아닌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2. 정부부처 간 정책 분산/중복 및 협력체계 미흡	○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방과후아카데미) 정책으로 구분 ○ 정책 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중복 또는 사각지대 문제(학교돌봄 vs. 마을돌봄, 국가-지역-가정 각 주체 간 연계체계)
3. 지역별/기관별 돌봄서비스 공급	○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간 돌봄서비스 공급 규모와 질에 차이가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달라지는 상황

규모 및 서비스 질 차이	○ 학교별(학교돌봄), 시설별(마을돌봄)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고, 각 정책별 돌봄인력 처우가 상이하다는 것도 문제
4. 수요자 욕구파악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 부족	○ 어디에서 어떤 돌봄서비스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제공받고 싶은지와 관련된 근거자료 없이 공급자 중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 ○ 시간대(아침/오후/저녁)별 돌봄과 방학중 돌봄 수요 파악 기반 어떤 정책(학교 vs.마을)을 통해 무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 계획 부재
5. 돌봄인력 처우 문제	○ 돌봄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돌봄인력 처우는 매우 낮은 상황 ○ 돌봄시간, 돌봄업무 범위, 돌봄인력 처우 등의 기준 부재
6.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문제	○ 코로나19를 이유로 대안 마련 없이 학교수업시간을 줄임으로써 돌봄공백이 더욱 심화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7. 개별 돌봄정책별 문제점	○ 초등돌봄교실: 5시 이후/방학중 공백,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제약과 권한, 추첨 또는 맞벌이 증빙 등 공급자 중심 대상 선정, 3학년 이상 이용 불가 ○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낙인, 열악한 시설환경 ○ 다함께돌봄센터: 무상공간 확보 어려움, 프로그램 부재, 급간식 어려움 ○ 공동체돌봄: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 질 담보 어려움, 자원봉사 돌봄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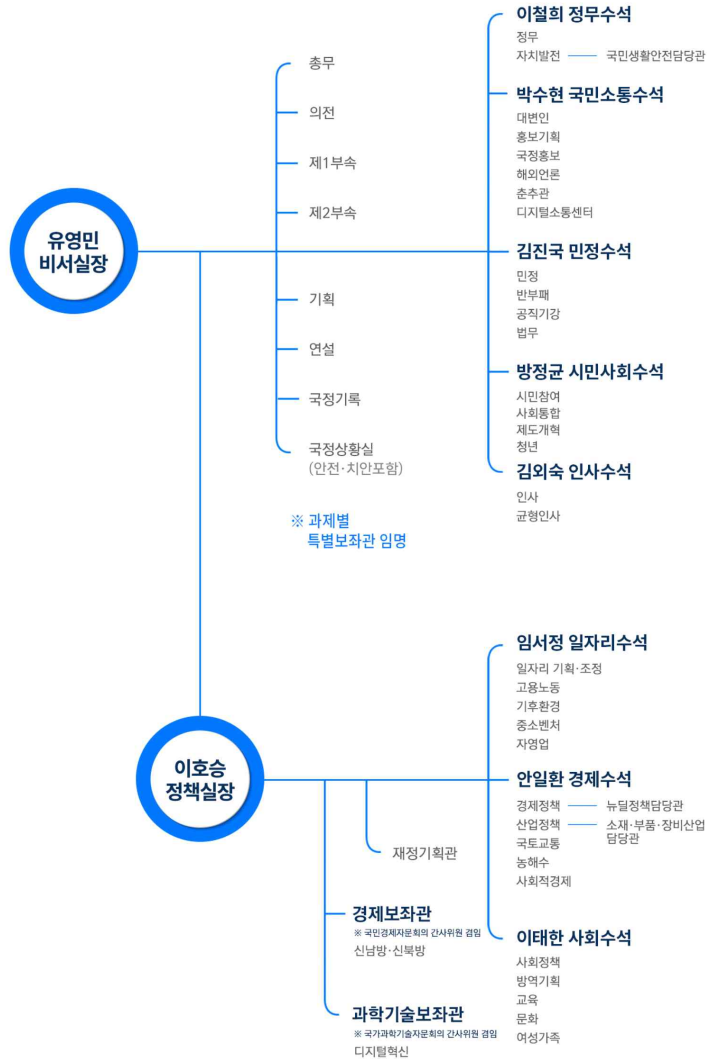
□ 공적 돌봄체계로서 초등돌봄 실현을 위한 제안

1.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 한국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1~2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즉 양육자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 양육자의 맞벌이/외벌이 여부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인 공적 돌봄 제공 : 초등돌봄은 양육자를 위한 배려가 아닌, 모든 아동이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적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철학과 원칙 하에 초등돌봄 정책을 재구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3. 여성가족부 > 아동가족부로 개편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복 제공으로 인한 공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아동가족부로 개편하여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비서실 조직도를 보면 정책실의 산하 사회수석이 '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기 정권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성평등 수석을 신설해야 하고, 여성과 가족을 한 카테고리 묶는 악습을 속히 철폐해야 한다.

<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



4. 초등학교 하교 시간 연장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16시로 통일하여 공교육의 책무를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 없이 초등돌봄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5.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학교 안 돌봄은 교육부가 학교 밖 돌봄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등이 맡도록 해야 한다. 아동가족부가 학교 밖 돌봄 정책을 전담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어린이집~초등돌봄까지 공백 없는 일관된 돌봄체계 확립 : 어린이집 운영 시간(07:30~19:30)에 준하여 초등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동 시 안전이 염려되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안'에서 아침~저녁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돌봄전담사가 정규수업 시간에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면 현재 교사들의 돌봄행정 업무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7. 돌봄교실 1실에 돌봄전담사 2인 배치 : 돌봄교실은 학생마다 하교 시간이 상이하여, 돌봄전담사 1인이 학생 각자의 하교 지도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1교실 당 돌봄전담사 2인을 배치하여 학생 방임을 방지하고, 돌봄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초등돌봄의 급간식 제공 : 방학 중 급식실을 미운영 함으로써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은 매식, 도시락 지참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초등돌봄도 공교육의 일환이며 초등돌봄 법제화에 따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이 급식실,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지역기반 돌봄 시도와 과제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이사)

기후위기 시대의 돌봄위기

코로나19는 위기의 성별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비정규-돌봄노동의 경제상황이 가장 나빴고 20대 여성들의 고통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수업을 비롯해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위기도 심화되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성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우울증도 급증하였다. 노인들 역시 하루 한번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다녀오던 패턴이 무너져 신체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리정서의 위기도 함께 왔다. 가족의 돌봄이 여성의 몫이 되었고 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회적 재난 시기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은 기후위기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반복되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문제는 곧 여성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에서 가장 낮고 비정규직비율, 성별임금격차와 저임금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우리 사회는 노동중심사회로 이미 전환되었으나 취업중단의 사유 대부분이 임신, 출산, 육아라는 점은 여전히 육아를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정규직 노동시장 내 부만 보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 대다수에게는 경제 상황에 따라 해고 단기, 일시, 시간제 등과 같은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등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여성노동은 가장 열악하고 유연한 부문으로 고착되고 있다.

여성이 배제된 그린뉴딜

D.N.A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디지털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항목들은 기존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돌봄의 전환을 위한 노동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75%이상이 여성이다. 간호사와 간병인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우리 사회가 큰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대면업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연결했던 필수노동자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코로나 초기 대학병원 간병노동자에게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있다.¹⁾

1) 신경아,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김은실 역음, 2020, 휴머니스트, p86.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과 인공지능으로 장미빛 사회가 온다고 말한다. mầm 학교와 어린이집,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식당과 학교와 병원 역할을 하면서 ‘가족’과 임금노동을 유지했던 여성들에게 디지털 미래는 회색빛 미래다. 재택과 디지털화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돌봄의 의무가 없는 남성중심 노동문화이다. 노동중심의 생애를 기대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증가는 쉽지 않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돌봄 분담 뿐 아니라 유기적 협력체계가 국가와 지역, 가족 간에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그린뉴딜이 여성에게 그런 기회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힘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거버넌스를 비롯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재난거버넌스의 성별을 보더라도 여성고위공무원의 비율이 5.5%로 남성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중에서도 의사 직종이 과대표되고 그 중에서도 남성의사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의료와 돌봄을 수행했던 간호사나 장기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과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감염에 더 취약했던 월소득 평균 124만원인 50~60대 요양 간병 종사자 여성들은 자신을 노동, 인권 등을 말할 수조차 없는 일회용 ‘물티슈’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재난이 보편화될 때 여성의 상황을 보여준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주요 20개국에서 배출하고 전체 기후피해의 약 75%가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주요 20개국 중 하나이다. 탈성장 담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제 규모를 자연의 한계 내로 줄이는 것이다. 지구 평균온도가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420기가톤이고 연 42기가톤 이하로 줄여야 한다.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의 6분의 1 수준만 배출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탈성장이 주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만 제시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경제를 다시 80년대 혹은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부감이 클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과 낭비를 줄이는 것이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돌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하는 적극적인 도시정책을 기획해야 않을까. 기존의 복지정책을 정비하고 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중심의 도시를 제시해야 한다.

돌봄 중심의 도시

한국에 많이 알려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15분 도시, 파리를 위한 선언을 통해 재선되었다. 생태주의, 연대, 건강을 제시하며 사회적 정의와 환경보호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삶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자전거도시, 생태도시, 공공건물 개방, 도심 숲, 주거권, 식량주권 등을 도시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파리시내 주차장을 없앤다는 계획으로 반발을 샀던 안 이달고 시장은 코로나 3개월 동안 생태연금술이 작동했다고 할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한 파리를 경험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소비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스템 속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수취 take-제조 make-폐기 dispose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이다. 값싼 자원을 채취하여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림으로 유지된다. 쓰레기는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간다. 일직선의 양 끝을 묶어 둥글게 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자원을 최소한으로 쓰고 재사용하면서도 풍요와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다. 탈성장은 지금까지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던 사회를 멈추고 가치를 다시 정비하는 일이다. 탈성장은 단지 경제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은 석유와 석탄 등의 값싼 자원을 이용하고 끊임없이 공해산업을 저발 전국가에 외주했던 결과였고 돌봄과 복지 등을 여성과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책임을 회

피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돌봄선언, 더 케어컬렉티브).

우리 사회는 필수노동이라고 말하면서 보건의료, 돌봄, 청소, 택배, 운수, 화물, 건설 일용직,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에 가장 적게 지불한다. 돌봄의 여성화를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던 돌봄의 사회화가 한국사회에서는 돌봄의 시장화로 나아갔고 신자유주의는 돌봄의 모든 영역을 저임금과 단절된 서비스, 개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백영경은 돌봄을 여성의 특정노동으로 축소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 및 시설의 유지 수리 정비 작업등의 노동도 포함하여 돌봄의 다양한 측면을 실행하는 세력과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비임금노동과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와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는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²⁾ 경제성장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 국가와 지구를 보살피는 돌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가 되는 경제만이 기후위기시대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목표가 아닌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경제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먹을거리, 좋은 교육, 다양한 문화, 친밀한 공동체, 적절한 공공의료, 복지국가 등 공유자산들을 지키고 늘려가는 행위의 중심에 시민적 활동과 돌봄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전환으로서의 탈성장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 보고대회에 정부는 삼성과 현대를 동행시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전환이고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발표 후 9월에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공모했다. 재정자립도가 없는 지방정부는 지역소멸과 지방 소멸 등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복지를 더욱 회색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앞다투어 지역의 도로를 깔고 공항을 짓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정치 속에서 기후위기는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들은 대도시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며 오염과 위험을 감수해왔다.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도시로 보내는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도 에너지 전환계획이 상층의 선언과 하달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각종 복지시스템은 어떻게 재정비되어야 할지, 교육공동체와 전 세대의 상호의존과 돌봄 등이 커뮤니티 케어 등과 어떻게 연결될지 지역에서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국가와 시장에 맞서 자신의 삶과 이웃을 지키고자 한 모든 것이 풀뿌리운동이자 주민 자치운동이었고 돌봄운동이었다. 민중들은 복지제도가 전무했던 시기부터 지역에서 스스로 돌봄을 수행해왔다. 협동조합과 탁아방,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 당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키던 많은 것들이 제도화되었고 일부 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임금에 기반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스템은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점차 떨어지고 충분하지

2) 백영경,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센터 겨울세미나 5강 복합적 위기들, 돌봄의 재구성 그리고 페미니스트 탈성장 전망

도 않을 것이다.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이유이다. 현재 최선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최선의 정책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민적 돌봄을 상상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은 필연적으로 지역적이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즉각적인 요구이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는 좋은 돌봄을 고민한 지역의 운동들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 돌봄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를 함께 기르는 공동육아

공동육아는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가치를 갖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의 책임, 한 가족의 과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면서 부모와 지역사회 조직들이 양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를 맡긴다는 '탁아'와 교육을 강조하는 '보육'의 의미를 넘어 어른과 아이가 총체적 삶의 터전을 일상적으로 가꾸고 변화시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³⁾ 공동육아의 뿌리는 1970년대 말 빈민 탁아운동을 했던 '해송 어린이 걱정 모임'과 '공동육아연구회'로 거슬러 올라가며 1994년 협동조합 방식의 신촌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운동의 핵심적인 거점역할을 해왔다. 많은 부침이 있고 현실적 과제도 크지만 공동체적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왔던 영역이다. 공동육아는 지역의 공동주택 안에 공동육아방 설립을 추진하고 구립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운영주체에게 위탁하는 등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가치를 확산했다.

둘째.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협동보다는 '친환경'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편이다. 유럽의 협동조합운동의 초기모델과 다르게 친환경유기농 생산자와의 연대의 의미가 더 커서 중산층운동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최근에는 조합원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지역사회에 착근하여 마을운동의 거점이 되고 제2의 생활재로 돌봄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탈핵이나 기후위기, 먹을거리 정의와 공공급식 등 지역활동의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돌봄을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으로 축소하지 않고 농업과 먹거리, 농민과 자연의 관계로 확장하여 돌봄의 관계망으로 인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관계망을 통해 건강해지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생협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예방의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상품화되는 의료산업에 맞서 1차 의료 중심의 예방과 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의료, 복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살던 곳에서 나이든다는 것은 의료와 복지시스템뿐 아니라 놀이와 문화 등 지역 사회 전체의 역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다.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지역사회 주민과 주민조직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질 높은 돌봄은 제도만으로 불가능하다. 그에 상응하는 시민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혁신학교와 작은학교운동, 혁신교육지구 등을 통해 마을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더 이상 학교 혼자 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 마을을 호명

3) <http://www.gongdong.or.kr>

한 것이다. 서울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자치구, 지역사회가 거버넌스를 이뤄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학교, 청소년자치활동 등 각종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작년 불거진 돌봄논쟁은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에서 교육청과 자치구만 있었고 지역사회를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왔던 결과 현재는 돌봄교사를 비롯한 마을학교 종사자 역시 열악한 위치에 있다. 혁신교육지구 안에서도 돌봄은 교육의 보조적 존재로 주변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없는 교육은 불가능하고 교육과 돌봄의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 법인화를 조건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급여가 사회복지직 중에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단시간 내에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돌봄이 왜 중요한가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1기 서울마을공동체기본계획은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시민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관한 문제를 모아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단체가 아닌 이웃 3명만 모여도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서울시의 약 1%의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마을공동체운동은 주민자치회로 확장되어 참여예산을 통해 동단위 계획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간의 만남을 촉진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마을활력소를 비롯해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 휴카페와 같은 다양한 공간전략과 마을지원센터, 마을지원활동가, 청년, 50+등 사람전략은 공동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을관리소를 통해 집수리단과 마을택배를 운영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용기내와 플라스틱프리 실천활동을 확산하는 것도 상호돌봄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공동체적 돌봄을 위한 과제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논의는 돌봄의 시장화로 귀결되었다. 이제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을 포기하는 여성들은 없으며 가족중심에서 노동중심의 생애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돌봄의 사회화의 결과와 그 대안에 대해 성찰해야 할 때다. 우리가 원했던 돌봄이 요양원과 어린이집과 방과후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돌봄이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볼 때다. 그리고 소비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서로 연대하는 법도 새롭게 배워가야 할 영역이다. 그렇다고 다시 돌봄이 가족과 여성에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는 정치적인 공정 영역이고 돌봄은 사적 가치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돌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타인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 정의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돌봄⁴⁾ 모델을 실험하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돌봄의 수행자가 이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가족돌봄을 하는 사람을 돕는 법을 제정하고 유럽도 돌봄자를 돌보는 사람을 보내거나 쉬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돌봄은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커먼즈는 가족과 국가사이에 다양한 시민적, 공동체적 돌봄을 시도하고 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돌봄을 위한 제안으로 마을양호실, 마을부엌, 마을텃밭, 마을관리소 등을 제안하고 있다.⁵⁾ 가족과 시장 사이에 비시장적 공간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어떤 것은 공적 자금으로 어떤 것은 시

4) 버지니아 헬드, 돌봄: 돌봄윤리 2017.

5) 서울시 그린뉴딜 지역화 전략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 5.14 주최 서울시의회.

민의 자력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경합하고 견제하고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개인들이 돌봄의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관계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된다면⁶⁾ 돌봄의 다양한 주체로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들이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소득이나 기타 제도적으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적 돌봄이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될 때 돌봄의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돌봄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임금이나 보상을 받는다면 돌봄이 사회의 기준과 핵심가치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돌봄을 비가시화하고 저평가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목숨을 부지하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일 것이다.

6) 심성보,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운동과 생태적 전환.

#4. 해외석학과의 대담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돌봄찬 성장(또는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사회: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

Susan Paulson(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대담: 백영경(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

Susan Paulson(University of Florida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TALK for Korean Women's Association conference "Post-Growth Society and Feminist Caring Transition" June 19th 2021

Text and images that appear in boxes will be presented as power point slides

Feminists foreground care and commoning through the pandemic and in postgrowth worlds beyond	페미니스트는 팬데믹과 그 이후의 탈성장세계에서 돌봄과 공유화를 우선시한다
Susan Paulson, University of Florida, USA	수잔 폴슨,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Care and collaboration are fundamental to life, to living with meaning and pleasure, and to regenerating life-worlds over time. Today I want to strategize with you about ways we can activate feminist caring transitions toward healthy and equitable post-growth societies.

I begin by introducing caring, commoning, and degrowth in the context of opportunities and dangers opened by COVID-19. Then invite you to consider proposals for change directed toward replacing the drive for growth with care for humans and other nature, and reorienting gender systems away from economic expansion toward equitable wellbeing. After questioning the praise of productivity as marker of superior masculinity, and the relegation of care and reproduction to inferior realms of femininity, we explore paths toward societies in which all members are motivated and valued for collaborative caring and regeneration of humans, communities, and relationships.

What are caring and commoning?

<p>Care: provisioning food and shelter, providing safety and comfort, expressing affection, sharing pleasure.</p> <p>Commons: collaboratively managed realms of life.</p> <p>Degrowth objectiv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duce global energy and resource use by wealthy economies 2. curb obsessions with growth 3. reorient societies around equitable wellbeing 	<p>돌봄: 음식과 쉼터 제공, 안전과 편안함 제공, 애정의 표현, 기쁨 공유</p> <p>공유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삶의 영역</p> <p>탈성장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유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 이용 줄이기 2. 성장에 대한 집착 억제 3. 평등한 웰빙을 위한 사회 재편
--	---

Care is expressed in many aspects of life, from provisioning food and shelter to providing safety and comfort, expressing affection, and sharing pleasure. Although care sometimes feels like a spontaneous act, it is always organized in integral systems. Current social and natural sciences are increasingly shifting focus from isolated individual entities to dynamics of cooperation throughout the living world. Perhaps they will dialogue with understandings developed through centuries of Buddhist thought about interconnection.

Commons are collaboratively managed realms of life. They bring together natural resources, like fresh water, fertile soils, and fisheries, with cultural resources, including languages, knowledges, technology, and religion. **Commoning**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collaboratively create, sustain, and enjoy shared resources. Our most vital common resource is healthy human communities.

Collaboration to sustain local homes and communities builds our capacities to manage global commons like atmosphere, water, and a habitable earth, as expressed in Pope Francis' 2015 letter *Laudato si'* *On care for our common home*.

At the heart of this challenge is building healthier gender arrangements. In recent centuries, unprecedented pushes toward individualism and privatization have fostered gendered modes of production in which individual women are made responsible for care (freeing men to focus on economic production) and nuclear families are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on (freeing larger society to focus on economic expansion). Resulting social and ecological degradation is not solved by moving individual women out of undervalued reproductive roles into more prestigious productive positions. On the contrary, it requires transforming whole systems toward more inclusive and

common investment in regeneration ---a move in which feminists ally with degrowth.

What is Degrowth?

Since 2015,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ve directed all countries—especially the wealthiest—to change course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Yet, governments and businesses continue to promise and prioritize further growth. Degrowth analyses illuminate systemic impacts of this growth: as economies transform material and energy into goods and services, they convert low entropy stocks of resources into high entropy waste. Over the past couple centuries, economic growth has led to more and more anthropogenic entropy, provoking outcomes ranging from imbalanced nutrient and hydrological cycles to climate break-down.

In response, a growing network of intellectual/activists advance three objectives of degrowth: reduce global energy and resource use by wealthy economies; curb obsessions with growth; and reorient societies around equitable wellbeing.

While respect for planetary boundaries demands reduction in total material and energy use, pathways to degrowth prioritiz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s and activities supporting care, provisioning, wellbeing.

COVID-19 Opportunities and Dangers

Historic crises like climate break-down and COVID-19 can destabilize established orders and social norms, opening possibilities to build new worlds. The proliferation of caring and commoning endeavors during the pandemic offers hope for degrowth societies we envision. Community groups and women's groups have organized mutual aid in delivering food and medicines; doctors, engineers, and hackers collaborated to develop 3-D print components for oxygen ventilators; students arranged to babysit children of doctors and nurses.

But crises also energize reactionary zeal, evident among politicians struggling to re-launch economic growth; media creating false antagonisms between jobs and environment, between economy and public health; and public discourses that disseminate stereotyped images of care, households, and essential work.

How can we seize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reorient political economies around equitable wellbeing and the regeneration of life?

Women's associations like yours have unique capacities to address gender dynamics of this challenge. We start by recognizing that currently dominant gender and family norms are recent inventions that change through history, and can be changed. And we join in conviction that positive transitions require adaptation away from gender roles

and relations rooted in destructive growth.

Throughout human history, an amazingly diverse range of gender and kinship systems have functioned to organize care and collaboration. During historical expansion of colonial capitalism, these systems were coopted to facilitate exploitation of humans and other nature for purposes of profit.

Masculinities and femininities were harnessed to the expansion of industrial economies by divorcing production from reproduction, identifying the first as masculine, and allocating it disproportionate value, resources and power, while de-valuing the feminized realm of reproduction.

<p>Industrial capitalist unit of (re)produ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orce market-oriented activities identified as "productive" from other activities identified as "reproductive" • designate the first as "masculine" and the second as "feminine" • allocate disproportionate monetary value, resources, and power to masculine-associated production 	<p>(재)생산의 산업 자본가적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인 시장지향적 활동과 “재생산” 활동을 분리 • “생산”을 “남성적”, “재생산”을 “여성적”이라 지칭 • 돈, 자원, 힘을 남성 관련 생산에 불균등하게 할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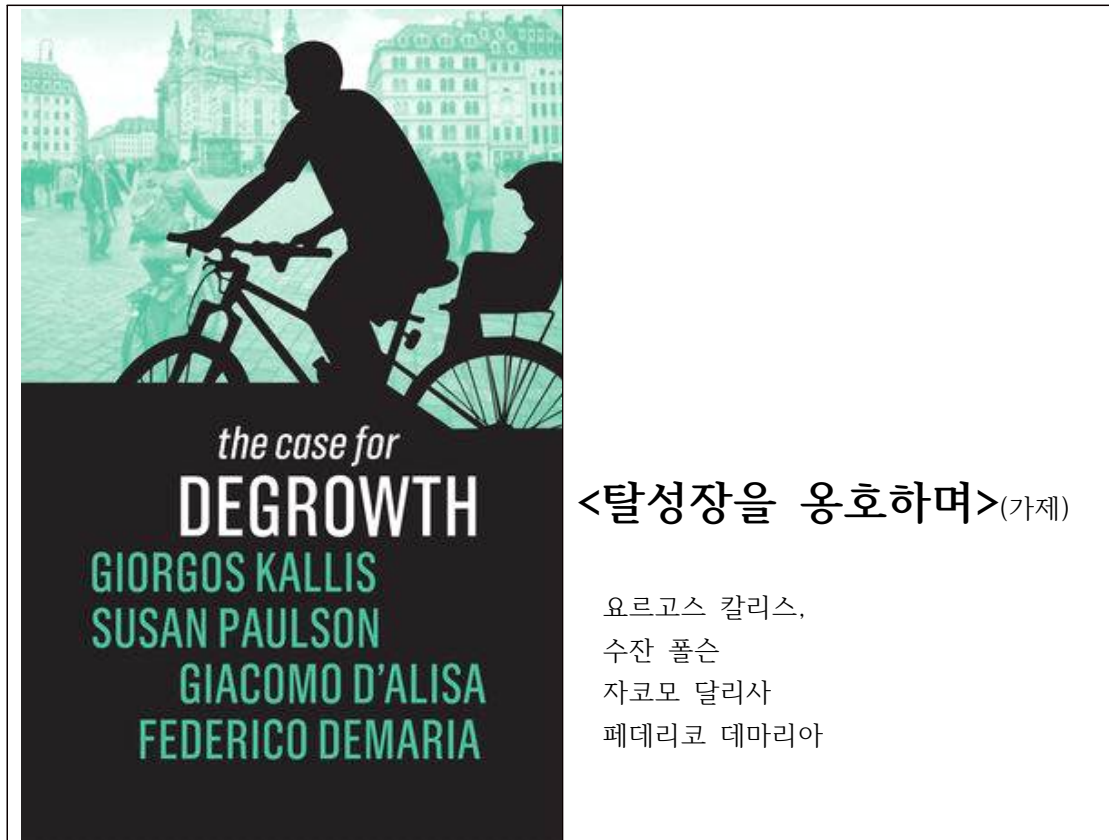
These historic processes also reduced the social unit collaboratively responsible for reproduction of life from community or clan to nuclear famil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made very aggressiv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the model of heteronormative monogamous nuclear family as economic and residential unit.

<p>20th Century governments and businesses pushed a new economic and residential unit:</p> <p>Heteronormative nuclear family</p> <p>Man breadwinner Woman homemaker Legitimate children Private family home</p> 	<p>20세기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경제 및 주거 단위를 추구:</p> <p>이성애 중심 핵가족</p> <p>돈을 버는 남성 가정을 보살피는 여성 합법적인 자녀 개인 소유의 집</p> 
---	---

Responses to current social and ecological challenges that fail to question this historical model have limited capacity to transform dominant orders. For example, liberal feminist empowerment projects that move individual women into productivist roles have certainly fueled economic growth, but not brought about more caring and collaborative worlds we seek.

<p>Feminist degrowth paths toward systemic cha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lace the drive for growth with care for humans and other nature ■ reorient gender systems away from economic expansion toward equitable wellbeing 	<p>구조적 변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탈성장의 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자연을 돌봄으로써 성장 드라이브를 대체 ■ 젠더 구조의 지향점을 경제 성장에서 평등한 웰빙으로 전환
---	---

Most nations have more than enough resources to cover public health and basic needs during crises, and beyond. Yet, current economies are organized such that decline in economic growth threatens systemic collapse, unemployment and impoverishment, making us act like prisoners of GDP. To be more resilient to future challenges—health, climate, financial, or political—we can build systems that allow us to scale back market production without sacrificing livelihoods or lives.



<탈성장을 옹호하며>(가제)

요르고스 칼리스,
수잔 폴슨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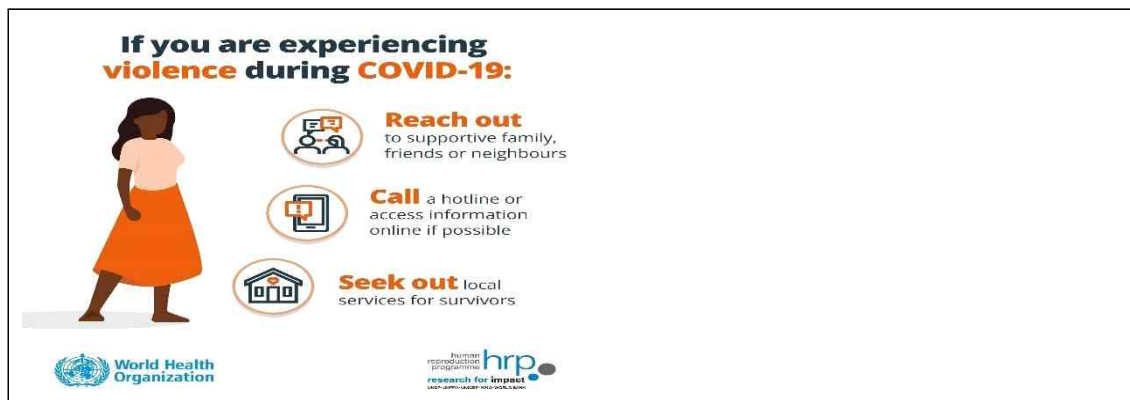
Degrowth emphasizes that voluntary reduction of material and energy use must be accompanied by cultural and practical changes. Our new book, *The Case for Degrowth*, written with Giorgos Kallis, Federico Demaria, Giacomo D'Alisa, calls for advancing these goals on multiple fronts:

<p>Advance on multiple fro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lues and worldviews • Policies • Design • Daily practices • Social movements <p>No one site of change is privileged. Each of us can act from our own positions, trusting that our efforts will interact in sometimes mysterious ways.</p>	<p>다양한 전선을 통한 전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세계관 • 정책 • 디자인 • 일상적 실천 • 사회 운동 <p>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 신기 방식으로 상호 교류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중요하다.</p>
--	--

Gender and pandemic in a growth economy

During the pandemic, I have been happy to see media highlight women's roles and

needs. But disappointed to find almost no attention to masculinities or LGBTQ lives. The transformations we seek require approaches that are more inclusive of diverse arrangements for living and care that actually exist today.



One example is **gender-based violence**. It is often observed that women suffer disproportionately from **domestic** violence, which seems to have increased during the pandemic.

What if we ALSO consider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men? Worldwide, men are the victims of around 80% of assaults and homicides, and 70% of suicides. In US and Canada, 95%, of occupational deaths are suffered by men.

COVID impacts are also highly gendered, in most countries leading to about twice as many deaths for men as for women.

<p>Multi-country analysis published in Lancet (2020) reports:</p> <p>“The prevailing view is that although the number of male cases is not dissimilar to the number of female cases, men have about twice the risk of death from COVID-19.”</p> <p>In Korea, case fatality rates for males is 3.05% and for females 1.92%. (Newall et al. 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p>	<p>랜싯 보고서(2020)에 발표된 다국가 분석:</p> <p>“남성과 여성 확진자 수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남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약 두 배 높다고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이다.”</p> <p>한국의 확진자 중 사망 비율은 남성 3.05%, 여성 1.92% (Newall et al. 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p>
--	---

Media repeatedly emphasize COVID vulnerability of **women** working in healthcare. What about men who perform essential jobs in every world region? Sanitation workers, meat packers, food harvesters, truck and bus drivers (all majority men), **are just as**

essential to public health. These were already among the most dangerous and deadly occupations, before adding exposure to coronavirus.

South Korea has the highest occupational fatality rate among the 36 OECD member countries. More than 1,000 workers are killed each year in accidents at their workplaces; nearly all are men, many temporary or migrant workers ([NIH](#)).



In Korea, life expectancy for men is 79.7, a full six years shorter than that of women, 85.7.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을 보인다. 매해 1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다. 거의 모두가 남성이며 다수가 임시직 또는 외국인 노동자이다(NIH).



한국에서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세로 여성의 85.7세보다 6년 짧다.

Around the world, factors that make lives of men, on average, shorter than those of women, include occupations, lifestyle, attitudes to healthcare, biology, and risk-taking.

All are relevant for COVID. And for reshaping healthier livelihoods and environments post COVID. The power of gender norms is revealed by studies showing that men are twice as likely than women to go without masks, and to break quarantine.

Is it helpful to blame men for getting sick? We have learned compassion for women whose conditions undermine confidence, financial skills, initiative necessary to make dignified lives for themselves. Why not feel compassion for boys and men whose expectations push them to demonstrate virility by taking risks, by exercising and enduring violence?

More attention to challenges of diverse masculinities could motivate not only women, but also men, to forge gender roles and relations that are healthier for themselves, for others, and for other nature. These inclusive approaches are necessary for systemic transformations that women alone cannot real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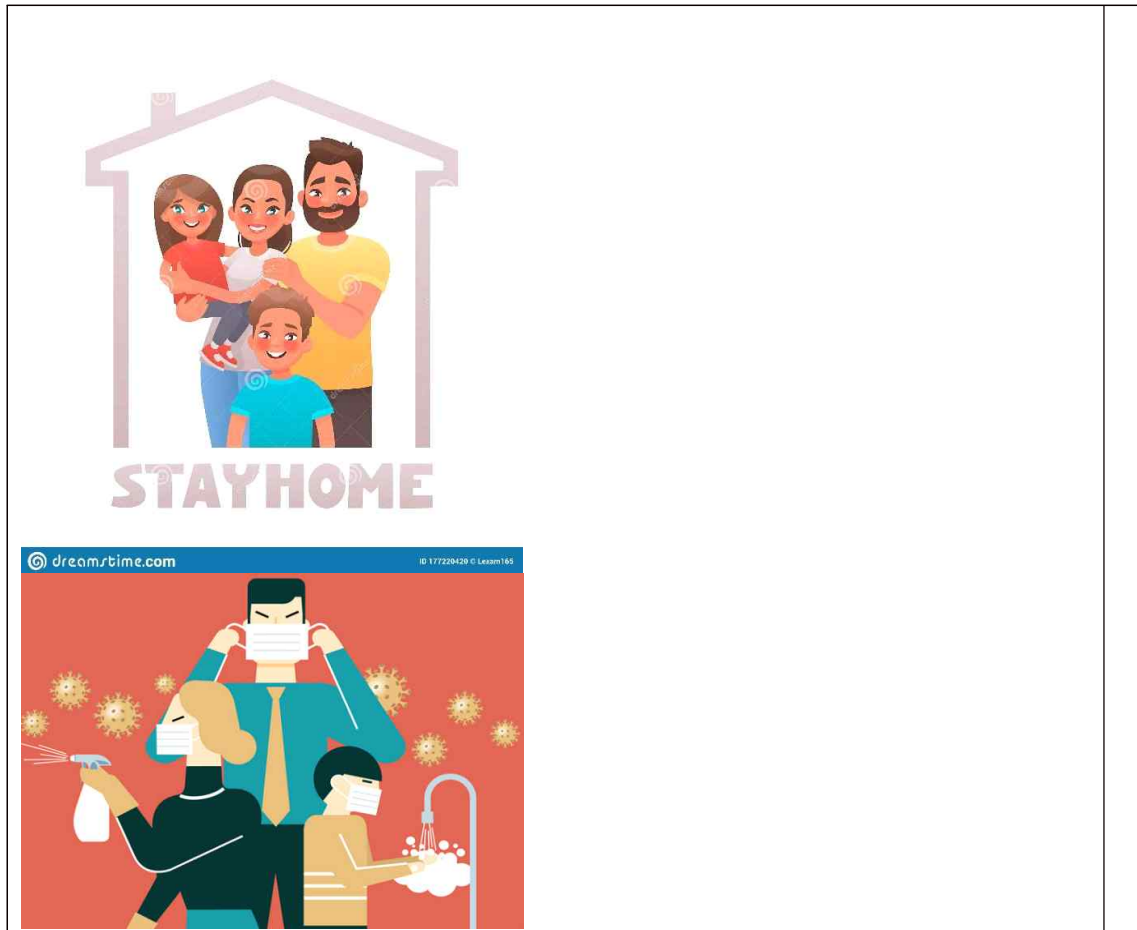
Households

Post-pandemic visions can also be more inclusive and realistic by not limiting scope of care and reproduction to the small portion of each society who reside in nuclear households.



Globalized cultural politics in the 20th century have made heteronormative nuclear households with men breadwinners seem natural and universal since prehistoric Flintstones to the supersonic future Jetsons. Wondering whether you Korean women, like me, grew up with these family images, I discovered that the Simpsons show was produced by Korean animators in South Korea's AKOM Production Company! ([source](#))

Public health messages draw on these cartoon realities to communicate the stereotype that everyone lives in nuclear family households.



In fact, the ideological dominance of this gendered unit is a recent phenomenon, and in actual societies, it is very far from statistically dominant.

<p><i>Definition of nuclear family household: one adult couple living with one or more children.</i></p> <p>U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day only 20% of US households consist of nuclear families <p>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te 20th century dramatic shift away from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toward nuclear family households • 21st century increase in 	<p>핵가족 정의: 성인 부부가 한 명 이상의 자녀와 사는 형태</p>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미국 가구의 20%만 핵가족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후반에 다세대 가구에서 핵가족으로 극적인 전환 • 21세기에 한부모 및 1인 가구 증가
---	--

<p>single-parent and single-person households</p> <p>The most common type of household in wealthy countries is a single person living alone:</p> <p>27% US and Canadian households 40% of Swedish households 30% of South Korean Households (source)</p>	<p>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p> <p>미국과 캐나다 가구의 27% 스웨덴 가구의 40% 한국 가구의 30%가 1인 가구(source)</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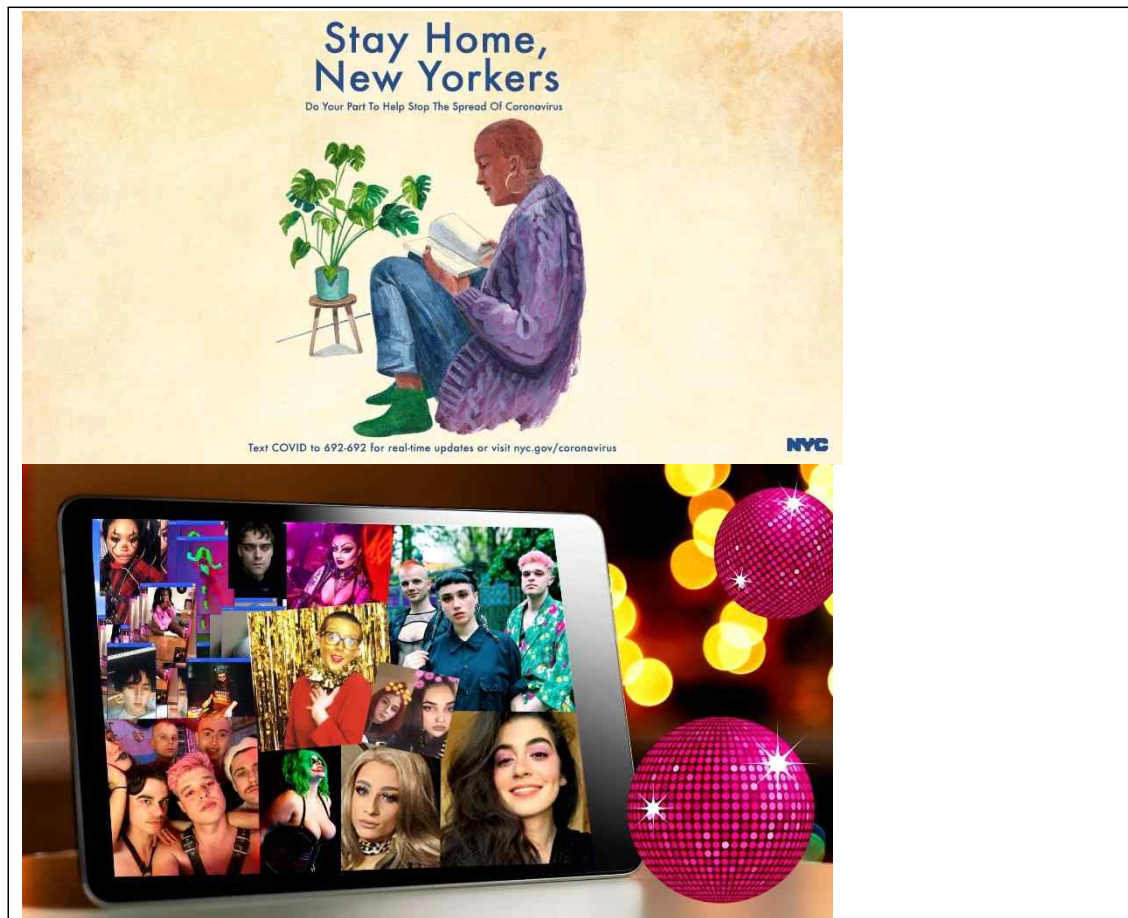
The portrayal of **one** model limits the success of economic,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strategies because it does not reflect empirical realities, **which are plural**. It also reinforces normative messages that demean and undermine other lifeways.

How can we better extend caring to all kinds of households, and to people who don't even live in households? Long-term care centers tend to house more women (due to their longer lives). But men make up large majorities in:

- Jails
- Prisons
- Migrant work camps
- Homeless shelters
- Immigrant detention centers
- Military barracks

All places characterized by insufficient CARE
ALL hotspots for COVID contagion

We need to support *existing* arrangements for caring and social reproduction, AND new innovations provoked by challenges like COVID.



In sum, feminists have raised awareness of ways in which gender organizes provisioning and care, as well as vulnerabilities to harm. Caring responses to crises, and transitions to post-growth societies, require us to expand gender analysis beyond women's needs and nuclear families to pay attention to *all* identities and re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What kind of politics and economies can support our diversely-located efforts to forge:

- Gender systems that do not extol production as a marker of superior masculinity, nor relegate care and reproduction to inferior realms of femininity.
- Masculinities that do not drive men to sell their labor in exploitative conditions harmful to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to their environments.
- Societies that prioritize collaborative care and regeneration of humans, communities, and relationships, rather than leaving the burden to individual women in nuclear households.

<p>In <i>The Case for Degrowth</i>, we outline five policy packag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New Deals • Reduced working hours • Universal basic incomes and public services • Support of community economies and commons • Reorganization of public finance 	<p><탈성장을 옹호하며>는 5개의 정책 패키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뉴딜 • 노동시간 단축 • 기본소득과 기본 공공서비스 • 지역 경제와 공유물 지원 • 공공 재정 재편
--	---

Amid the COVID-19 pandemic, governments are experimenting with these proposals. Countries including Hong Kong, Japan, Slovenia, Spain, and US have instituted provisional cash payments to sustain residents through the crisis. Companies and governments—sometimes in collaboration—have reduced working hours, implemented work-sharing, and subsidized workers during quarantine and after business closings. Public mechanisms have been mobilized to secure vital supplies and services.

The *Case for Degrowth* identifies opportunities to fund supportive programs by reorienting subsidies away from what jeopardizes wellbeing. Fees and taxes levied on toxic wast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ater and air pollution, or resource extraction, as well as extreme incomes and wealth, can raise revenue while also encouraging healthier arrangements.

Without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enforcement, of course, such policies could provoke trade imbalances, capital flight, and other disequilibria. Local and national transitions depend on strengthening existing mechanisms of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establishing new ones, like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supported this month by G-7, and the [global universal basic wage](#) proposed by Pope Francis. Advocacy for degrowth objectives is generating tension with mainstream pushes for green growth, and gaining prominence in parallel forums such as [Green New Deal for Europe](#), the EU Parliament’s [Post-Growth Conference](#), Latin America’s [Pacto Ecosocial del Sur](#), and the [African Green Stimulus Programme](#).

Sustain or transform?

In moves to “build back better,”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all these policies depends on whether they are institutionalized as stimuli for economic growth, or as support for equitable wellbeing of human and other life; whether they are operationalized in ways that reinforce individual competition within hierarchical structures, or ways that mobilize more collaborative approaches to caring for humanity

and our common home.

Feminists can help make that difference by shifting priorities from production toward regeneration of human and other life on which all productive activity depends. This means valuing care as part of every identity,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those who perform it.

Conclusion

We would like to see societies become more caring and commoning by design, not disaster. However, it looks likely that transition will be unplanned and messy, in conditions not of our own choosing. . . like those we are living through now.

COVID-19 has laid bare inadequacies and inequalities in current systems. And provoked a surge of collaborative caring initiatives. Neither is sufficient to change the arc of current politics toward healthier postgrowth futures. As powerful actors push to reconstitute status quo, bitter struggles have arisen over which paths to pursue.

Transition toward societies that prioritize regeneration of life, rather than generation of market value, and that motivate all kinds of people to pursue more caring and equitable roles and relations, will require alliances among diverse perspectives and movements.

Our most immediate case for including feminist degrowth in this allied front is that its fundamental practices—modest living in cooperation, caring, and convivial sharing; building equitable and solidary societies; and regenerating natural environments---- are desirable in and of themselves. Even with no political victory in sight, many of us are already exercising and embodying caring degrowth worlds.

Final degrowth slide

낙태죄 폐지, 그 이후 과제와 전망

사회: 김선희(이화여대 여성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
나영(SHARE)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최현정(희망법 변호사)

공공의료로서 피임 및 임신중지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토론: 나무(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와 향후 과제

나영(SHARE)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의

1

전면 비범죄화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비교



	합법화	비범죄화
법적 처벌	처벌 유지	비처벌, 처벌 조항 삭제
허용 기준	'합법'의 제한적 기준 설정, 다양하고 구체적인 추가 규제 조치를 마련하여 접근성 제약	별도의 허용 기준 없음 가이드를 둘 수 있으나 법적 처벌 여부에 따른 조건은 어닐
제도적 조치	'합법'의 허용 한계 내에서 제도적 보장 조치 마련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마련
접근성	'합법'의 허용 한계 내에서 접근성 확대를 꾀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의 존재가 그 자체로 접근성에 제약으로 작용	처벌로 인한 제약은 없으나 실질적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해외로의 이동	법적 제약으로 인해 해외로 이동하여 임신중지	국내에서 대부분의 임신중지 가능
낙인	사회적 낙인+범죄 행위'라는 낙인이 지속됨	사회적 낙인은 지속될 수 있으나 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 제도가 공식화 될수록 낙인의 감소 효과 기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영향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 처벌과 허용 기준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접근성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가 생길 수 있으나 원래의 처벌 조항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음

차별이 존재하는 한 권리는 유예된다.

- 차별은 국가가 취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방식
: 차별과 조건부 허용이라는 틀을 통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뿐, 실제로 임신중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불평등과 차별, 낙인,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변화시켜야 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차별 받지 않을만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허용 요건'으로 비가시화하고 영속시킴
 - '합법인 경우'의 조건 하에서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차별이 유지되는 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노력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 합법화 하에 남아 있는 위험, 고동, 낙인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결국 가장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남겨진다.
- 결국 불평등한 조건의 위험한 임신중지만 증가할 뿐

2

발전주의적 인구정책,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마련



SHARE
MI어



SHARE
MI어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 실천으로

가정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중대해집니다.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계획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이

1995년 2월16일 목요일 문 호

주말 가족을 돌보다 싶어서 1995년 2월 16일

“며느리도 수입하시렵니까?”

자신의 인권을 인간이 깨트려서야...

4월 15일은 인권 존엄성(인간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날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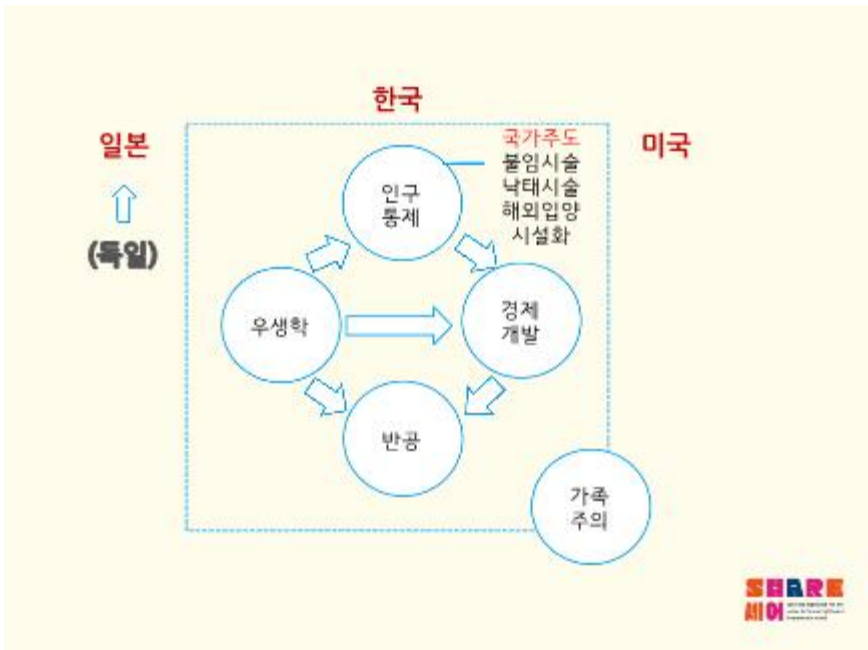
이제, 마음 폭넓게 열린 무라야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2월 16일

性比 파괴 경고

불법 섹스텔과 인공임신중절로 남
녀 성비를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대한가족계
획협회가 최근 서울 지하철 전동

차 안에 붙이기 시작한 홍보포스터,
「며느리도 수입하시렵니까,」 「산량을
수출하시겠습니까,」 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이



3

'생명'과 '선택'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전환



2012 헌법재판소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결정권'

2012년 헌법재판소 결과

2012 헌법재판소 2012헌마402

결함	유형
사적인 임신부터 국가공정관리 행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적행위까지 포괄하고, 태아를 생명 단위로 인정함으로써 인권의 침해가 부재하다 판단하여 보호해야 할 권리가 인정된다.	모든 조기에 자살의 동등한 결정까지 금지되고 자살하는 것은 법관에게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심판장: 김석환, 재판장: 김석환, 재판관: 김석환, 김석환, 김석환, 김석환, 김석환, 김석환, 김석환

공익 재판관들은 제14회 헌법재판소 전원회의로
임의 조정이 위한 신고제는 생명권 침해가 불이행에 대한
규정제 기한에서 조국 합헌 결정이 남다.

[충격노출 고3 수능생 낙태수술도중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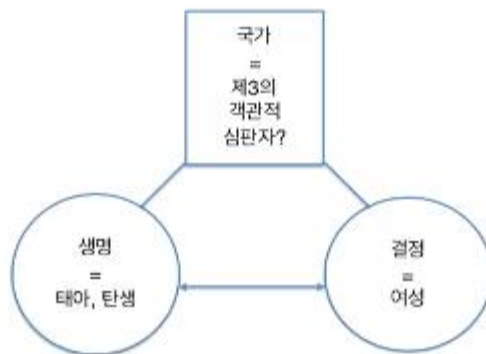


수능 이고생 낙태 수술 사망...의사는 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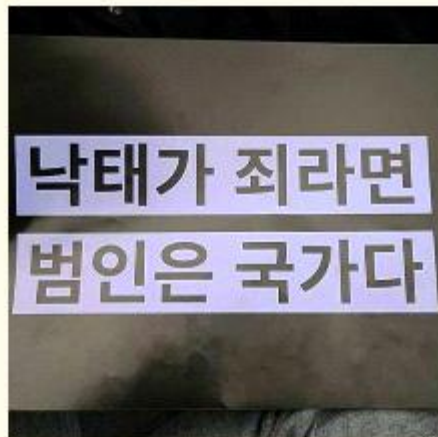


생명권 대 결정권의 구도





2016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4

다양한 주체와 경험의 공적 발화의 장 마련

운동에서의 매개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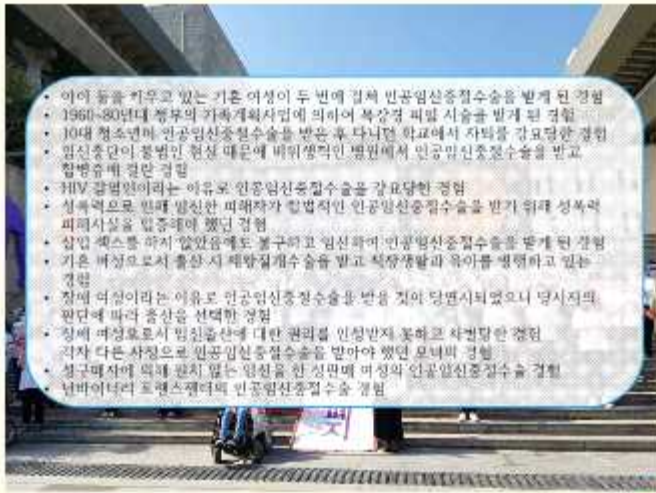
SHARE
미디어

내가 생명이다

16차 양산중단 전면합법화시위
종각역 4번출구 보신각 앞
08/25 (토) 3-7 PM



SHARE
미디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의 그 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요 일정**

**4/11(목)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각계 별개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앞)**

- 9:00-9:40 (1) 청년학생 기자회견
- 9:40-10:20 (2) 종교계 기자회견
- 10:20-11:00 (3) 청소년 기자회견
- 11:00-11:40 (4) 성고과성산후원 기자회견
- 11:40-12:20 (5) 청소년구급 기자회견
- 12:20-13:00 (6) 장애인계 기자회견
- 13:00-13:40 (7) 간부정당 기자회견
- 13:40-14:20 (8) 의료계 기자회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14:20-15:00 판공 결정에 따른 입장 발언 모함 (헌법재판소 앞)
*우측이 정면이 가능합니다. 정면 모면은 안됩니다

대중집회***

16:00-21:00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동복지회관 앞)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4/12(금) 기자회견담합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관한 내부의견공유 향후계획 발표
4월 12일(금) 14:00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층2층 이안홀 라운

문의: safeabortionforall@gmail.com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4월11일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낙태죄폐지 #낙태죄철폐





2014년 10월 10일(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하이닉스 사옥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100명의 낙태죄’ 관련 목격자 기자회견

10월 10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K하이닉스 사옥에서 ‘100명의 낙태죄’ 관련 목격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여,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10월 10일(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하이닉스 사옥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100명의 낙태죄’ 관련 목격자 기자회견

10월 10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K하이닉스 사옥에서 ‘100명의 낙태죄’ 관련 목격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여,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입장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의 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신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임신중지나 동의를 얻지 않은 임신중지 행위는 상해죄 등 별도의 형법 조항으로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을 전부개정하거나 폐지 후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임신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가능한 조항을 남겨둘 채 허용 사유나 허용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초기에 사회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고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여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조건은 차별이 아닌 지원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입장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결정 전 상담제도, 숙려제도 역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차별이 가능한 방식의 의무조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임신 당사자를 위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정보에 관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의무조항이 될 시에는 임신 당사자의 상황과 판단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를 가로막는 방식의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상담과 숙려기간에 대한 고려도 무엇보다 임신 당사자의 건강과 삶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능력에 맞는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0년과 2016년, 관점과 요구의 변화

- “임신중지(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구로
- 온라인과 광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증가, 시대와 사회경제적 조건, 경제성 등 교차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드러냄
- ‘낙태죄’는 국가가 주도해 온 우생학적 인구 관리,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의 통제, 섹슈얼리티 규율의 문제임을 역사적, 맥락적으로 구체화
- ‘낙태죄’의 문제가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생명’과 ‘결정’에 대한 관점을 확장
- ‘결정권’에 대한 요구를 넘어 ‘상과 재생산 권리’, ‘재생산정의’의 관점으로
- 처벌 조항의 폐지만이 아닌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요구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새로운 법과 정책은 헌법에 근거한 이와 같은 권리를 인구관리 등의 목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범죄화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 권리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가시화
-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보장 여건을 마련하는 변화로 연결

6

임신중지 비범죄화의 진전을 위한 국제적 승리



CONGRATULATIONS SOUTH KOREA

Original shared on 12/30/2022
El aborto volvió a ser legal en Corea del Sur. El derecho a la libre elección continúa existiendo, pero ahora solo se aplica a las víctimas de violación o en casos de riesgo para la vida de la mujer embarazada, a diferencia de otros países.

Colectiva Feminista Tec CCM
@ColectivaCcm

Apenas a unos días de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Argentina, Corea del Sur logra lo mismo tras 67 años de prohibición. Comenzamos el año pintando al mundo de verde 🌱🍀

ABORTION IN SOUTH KOREA IS DECRIMINALIZED

MY BODY MY CHOICE

SHARE MIO

Learning How: Lessons from Safe Abortion Rights Activists in the Campaign to Decriminalize Abortion
 with Stakeholders from Argentina, Brazil, India, Korea, Mexico, and USA
 March 16 & 17, 2021
 9-11 PM Philippine Standard Time
 via Zoom

SPACIOUS SOLIDARITY DIALOGUES
 Decriminalisation: Legal Change and Reimaginings
 with Stephanie H. Simola, Carolyn Greig, Marissa Jones, and Shreya Ghoshal

Highlight

- It's time to move away from the legalization/decriminalization paradigm in Asia towards Reproductive Justice Frameworks. We need to question and collaborate beyond just free, safe, legal abortions in order to supporting people who have abortions with other resources (financial, counselling, destigmatized abortion leave at workplace).
- In Asian contexts, stigma is less of a religious/Christian moral issue, and more geared towards unmarried and young people's pregnancies. Parents, partners and agencies are the ones that are generating the stigma.
- It's important to question society and government norms, instead of individual choices. We do not need to be talking of who's abortion should be permitted, but how instead how the society and government can create and allow for abortions.
- Buddhist context in Thailand and Myanmar system also comes from there. Historical context of population control in S. Korea.
- Future focus for legal change work on Asian Reproductive Justice Network, and converse more about Self-Managed Abortion in South Asia as part of RJ approach.

SHARE MOI

SHARE MOI

향후 과제

1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으로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모든 개인이
신체적·정신적
복합성(신체·심리) 없이
자신의 몸과 삶, 재생산에 관련된
성감도·자존감과 관련된 권리를
유연·안전·포용·공로·평등에 대해 실현할 수 있고 접근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건강권 상태를 높일 권

성 건강, 성적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의 영역은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권리의 실현과 보장을 기로하는
사회적 환경들과 부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켜 나가야 한다.



성건강

성인기의 기능과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장애, 장애로 인한 고통받지 않을 권
리, 즉 스스로의 가치관에 걸맞은 고품질의 성·생식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위할 수 있게, 정신적, 사회적·문화적으로 건강한 상태

성적권리

자율, 강제·폭력, 차별적 서간 없이 성적·자랑·성행위하는 등 성적·행태, 신체의
자유를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정황을 따라 유권 사·문화·종교, 출신·영양을 할
수 있게 권리 침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재생산건강

생식·자궁·생리기간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장애, 장애로 인한 고통
받지 않을 권 리, 즉 스스로의 정황을 따라 유권 사·문화·종교, 출신·영양을 할
수 있게 권리 침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재생산권리

자율, 강제·폭력, 차별적 서간 없이 재생산 권리를 할 수 있고, 사회·문화·종교
출신·영양을 할 수 있게 권리 침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 이 분야 4 영역의 권리는 상호연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규명 제22호 (2016)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국가, 지자체 수준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
: 보건의료, 교육, 노동, 주거, 사회복지 등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수준에 맞추어 법 개정 및 통합적 정책 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반영



2

보건의료 영역에서
인프라, 전문성,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조정

보건의료인 교육, 연수 확대

: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점으로의 인식 제고,
임신중지 사전 정보제공과 상담부터 사후 관리와 상담까지,
최신의 의료 가이드 적용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 확대 및 전달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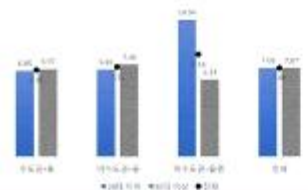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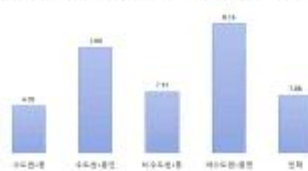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의료접근성 확대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원, 상담 연계, 관련 보조시설 확충,
활동 지원 등 연계

당사자에 대한 Informed Consent, 당사자 동의의 원칙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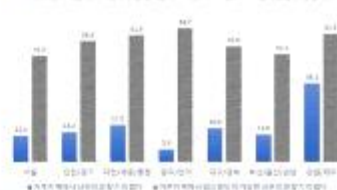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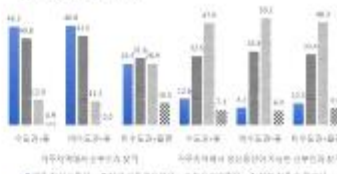
• 임신중단까지 소요시간

-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일수록 임신중단을 8.16 주차에 할, 수도권 동단위 거주 여성 6.97주와 비교해서 1.25주 차이 발생
- 비수도권 읍면단위 20대 이하에서 가장 심각(10.94주)



• 선부인과 vs. 임신중단 가능한 선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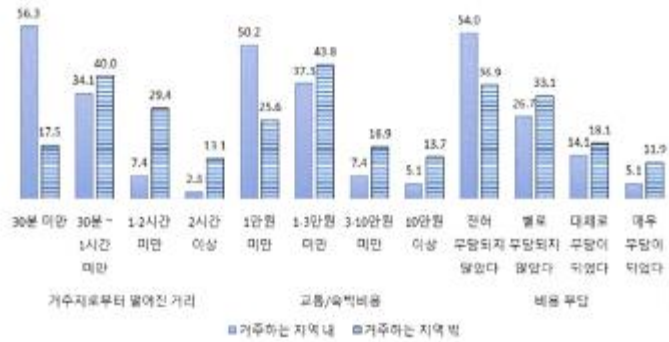
-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 일수록 '선부인과'와 '임신중단 가능한 선부인과'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특히, 강원/제주 지역



• 출처 : 김동식,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질근의 장애요소와 개선과제', <나태희 메시지와 입법공백,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성 보장을 위한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05.10.

• **교통·숙박비 및 건강치료비**

- 수술방법 선택한 477명 중 33.5%(160명)는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거주지역(시군구 단위) 밖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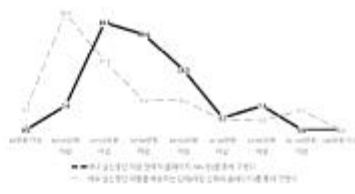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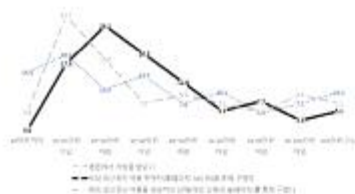


• 출처 : 김동식,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질근의 장애요소와 개선과제', <나태희 폐지와 입법공백,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성 보장을 위한 포럼> 자료집, 한국어성정책연구원, 2021.05.10.

• **의료비용 - 약물**

- 189명 약물사용(54명 수술방법도 사용, 중복응답)
- 구매: 68.2% 병원, 20.6% 국내 판매처, 22.2% 해외 단체
 - 병원처분 약품은 태소프로스톨(사이드팩) 가능성 높음
 - 병원처분(128명) 중 36% 의원급, 나머지는 전문병원(15건만 종신H)
 - 병원급제 다른 약물제 차이(30-49만원, 2지분할 이상 40-59만원)

- 국내 판매처 및 해외단체 - 약물비용(중복사용자 제외)
 - 국내판매처(27명): 대략 10-49만원
 - 해외단체(37명): 대략 20-4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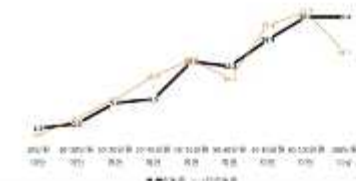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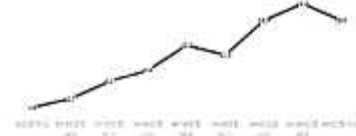


• 출처 : 김동식,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질근의 장애요소와 개선과제', <나태희 폐지와 입법공백,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성 보장을 위한 포럼> 자료집, 한국어성정책연구원, 2021.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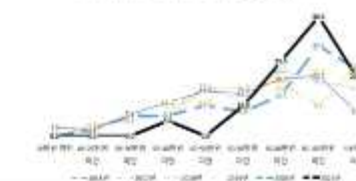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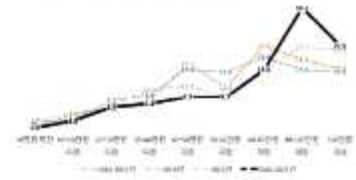
• 의료비용 - 수술

- 477명 약물시술(44명 수술임상도 포함, 중환자실)
- 대략 50~90만원

간혹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이 필요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막간(수술권 vs. 비수술권) 차이 크지 않으나, 100만 원 이상에는 차이 확인
- 최근일수록 80~100만원 비용 구간 큰 폭으로 증가



• 출처: 김동희, '임신중단 결정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소와 개선과제', <낙태의 폐지와 입법공백,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성 보장을 위한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05.10.

'신념에 따른 거부'의 문제

"의료에서 양심적 거부란 무엇입니까? 법률에 따라 의사, 간호사 및 약사가 전문 분야의 합법적 서비스를 벌금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직업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양심적 거부는 도덕적 근거로 책을 죽이기를 거부한 1차 세계대전의 용감한 군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 군대 당국은 자비 없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용기에 대한 대가를 지었습니다.

의료적 양심적 거부는 다릅니다. 용감한 도덕적 입장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사용하여 의사의 양심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입니다. 의사들 자신은 개인적인 불이익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환자에게 불공평합니다. 환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사의 양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법은 그들에게 시스템을 탐색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비용 부담과 치료 지연을 겪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의료제공자에게 그들이 야기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거부 한 환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거부한 사람에게 직접 거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임신중지 법 개정 협회 ALRANZ (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of New Zealand)

임신중지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이다

“다불어 당사국은 여성과 여아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임신 혹은 임신중지를 규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법은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비혼 여성의 임신을 범죄화하는 조치, 임신중지를 받은 여성이나 여아를 범죄화하는 조치, 임신중지에 의료적 서비스를 조력한 사람에 형사상 처벌을 가하는 조치는 이뤄져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는 여성과 여아로 하여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받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유엔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36호 중 6조 생명권 관련 부분 9항



거부권이 아니라 의료 여건과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UN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 36호 초안(6조 생명권) 중 9항 (2018.10)

- 당사국은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현존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장벽은 개인 의료 제공자의 양심적 거부 행위도 포함된다.
-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기밀을 유지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양질의 산전 의료조치 및 임신중지 후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과 상담 체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통합 정보 제공 사이트, 핫라인 구축

포괄적 성교육 확대 및 임신중지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필수 항목으로 지정

교사, 강사, 상담자 가이드 제작 및 교육, 연수 프로그램 시행

폭력 및 학대 피해자,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별도의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정보 제공, 상담 가이드 마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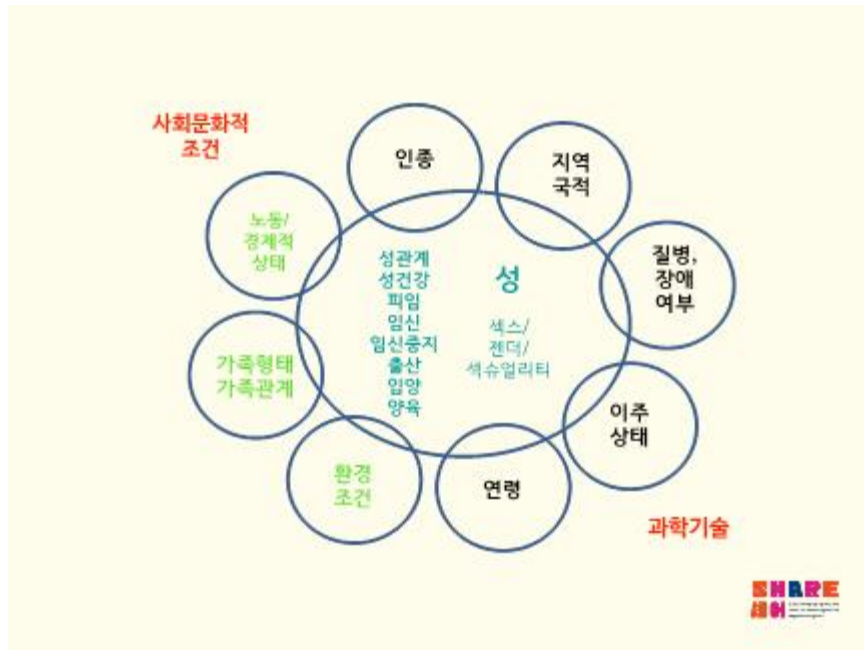
권리를 넘어 재생산정의로



"재생산 통제와 여성의 몸과 노동의 착취는 모두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연령, 이주 상태에 기반한
사회적 억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 재생산 정의를 위한 아시아 커뮤니티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 (2016)

근원적이고 사회적인 결정요인

7. 이 권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유효가능한 할, 충분한 위생, 충분한 식량과 영양으로의 접근, 적절한 주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및 환경, 건강관련 교육 및 정보로의 접근, 모든 형태의 폭력-고문-차별 그리고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등과 같은 성과 재생산 건강의 근원적인 결정요인까지 포함한다.

8. 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모든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행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출신종족, 연령, 장애, 기타 요인들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한 분배를 반영한다. 빈곤과 임금 불평등, 구조적인 차별, 그리고 위원회에서 확인한 근거에 따른 소외는 모두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사회적 결정요인이자, 기타 여러 권리들의 향유에 영향을 끼친다. 법과 정책에 자주 드러나는 이러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성격은 개인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즉,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개인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습들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은숙님 발언

저는 삼성반도체 운영사업장이 시작되던 때부터 일했던 김은숙입니다. 반도체 칩에 EMC 재료를 씌워서 보호하는 용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설립 초기라 인정도 되지 않은 설비를 혼자서 4대씩 담당했는데, 12시간을 계속 뛰어들다니며 일을 했고 늘 등딱에 힘이 풀렸습니다. 높은 온도의 설비에서 녹는 검은색 액체처럼던 재료에서는 독한 냄새가 납니다. 설비를 세정하는 열라면에서도 냄새가 났지만 불관을 막으려면 프레스 구석구석 묻어있는 용탕재료를 긁어내야 해서, 우리는 설비에 머리를 넣고 주적으로 긁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위험하니 마스크라도 쓰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늘 생산량이 쏠려서 정신없이 일했고, 현장엔 생산량 그래프가 붙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그리고 검사에 사용했던 X-ray 장비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두 달 주 톱사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면을 보지 않았는데, 왕달기가 있고 배가 팽팽해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선천성 기대결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오랜 세월 수시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대장이 없어서 변을 볼 때 늘 설사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도 어벌 속옷과 바지를 찢겨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자라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장이 없는 아이의 불편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앞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질환으로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꼭 산재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병원에 다닐 때 부담없이 편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2세 질환에 대한 산재법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염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2세 질환법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담론 확대

가족구성권과 파트너십 관련 정책 전환 및 가족단위 돌봄·재생산 비용 전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장

기후위기와 현재의 생산-재생산 시스템에 관한 공동의 논의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세어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최현정(희망법 변호사)¹⁾

1. 들어가며

발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center for Sexual rigHts And Reproductive justicE, SHARE, 이하 '세어'라 함)²⁾ 낙태죄 폐지 운동에 참여해왔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³⁾ 후에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고민하면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하에서는 세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입법에 대한 세어의 문제의식

가. 포괄적·통합적인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 요구를 반영한 법안 필요성

세어는 그동안 '낙태죄 폐지'(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음.⁴⁾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음. 이러한 세어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입법 형식은 기본법이었음.

기본법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방향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정부의 권한과 활동의

- 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기획운영위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2) 세어는 2015년 한해 동안 진행된 장애여성공감의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난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2016년에 결성한 “성과 재생산 포럼(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을 전신으로 하여 2019년 10월 설립됨. 국내 최초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국적,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를 지향함.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 3)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결정
- 4) 나영,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https://srhr.kr/issuepapers/?q=YToyOntzOjE5OjIj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6142937&t=board>, 작성일 : 2020. 7. 6.

규준·절차·조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형식.⁵⁾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법 형식이었으나,⁶⁾ 2021년 6월 현재 한국에는 71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해당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함.⁷⁾ ② 법의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 추진할 수 있고,⁸⁾ ③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이 변경되더라도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 확보할 수 있음.⁹⁾ ④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과 정착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교육 효과¹⁰⁾ ⑤ 입법지침 또는 고려사항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률을 해석할 때 그 지침으로 기능함.¹¹⁾ 법원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지침으로서 기본법의 내용을 고려(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근거로서 기능).¹²⁾

기본법의 취지가 보다 더 잘 실현되려면 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개별 입법에서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규율하여야 함.¹³⁾ 기본법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주고, 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그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일반적으로 벌칙 조항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개별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¹⁴⁾ 즉 개별 법률도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이 뒤따름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기본법은 개별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보다 더 잘 확보되는 것임.

나. 제안 과정 및 핵심 원칙

세어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성·재생산권리와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기본법안을 구성. 세어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에 설립 이후 사업 과제 설정을 위해 분야를 나누어 당사자단체·지원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청소년·장애·이주·빈곤·여성·노동·성소수자·HIV/AIDS감염인 등 총 8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간담회에서 공유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기본법안 성안에도 참조가 되었음.

2020년 6월 기본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단체 활동가들과 1회의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함. 2020년 10월 법안을,¹⁵⁾ 11월 법안 해설집을¹⁶⁾ 차례로 공개하였음.

5)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4쪽

6) 2006년 1월 기준으로 기본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률은 43개였다. 박영도, 위의 글, 34쪽

7) 박영도, 위의 글, 24~34쪽

8) 박영도, 위의 글, 24~34쪽

9) 박영도, 위의 글, 24~34쪽

10) 박영도, 위의 글, 24~34쪽

11)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249~255쪽

12) 예를 들어, 대법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을 실시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음. 즉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는 것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13) 이것을 이유로 기본법이 본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해할 것은 아님. 개별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제정·시행이 자동적으로 법률의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제정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 근거 법률에 따른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요구 등임.

14)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권운동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한 집단진정을 제기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00여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597건의 진정을 제기함. 건국인권위원회 2011. 1. 26.자 보도자료

시민 사회로부터 새로운 법률의 제정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기존 법률과의 체계적합성을 이유로 들면서 제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행 법률들도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정 후 시행하면서 차차 법체계가 정비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는 핵심적인 걸림돌이 아님.¹⁷⁾ 이런 점에서 우선 성·재생산 권리 보장과 관련한 원칙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세어가 생각했던 핵심 원칙은, ① 성과 재생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②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 ③ 포괄적·통합적 규정의 세 가지였음.

1) 성과 재생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정책의 초점을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으로 전환
-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 개인의 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을 할 국가의 의무

2) 평등과 차별금지

-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지원들 규정
-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차별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 실현의 주요한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인지함.

3) 포괄적·통합적 규정

- 그동안 분절된 것으로 다루어지던 권리들을 성과 재생산 권리로 종합하여 일관된 방향 제시
-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틀 안에서 권리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언

3.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전체 구성 : 15개 장, 53개 조문

세어 기본법안은 전체 15개 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조문 개요는 아래와 같음 (전체 조문은 별첨 법안 참조).

장	조항	조문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권리

15) 세어 기본법안은 세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s://srhr.kr/policy/?bmode=view&idx=6142615&t=board>)

16) 세어 기본법안 해설집은 세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s://srhr.kr/policy/?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142616&t=board>)

17) 참고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구 성폭력특별법’)은 1994. 1. 5. 제정되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되다가 이후 전체적인 체계에 맞추어 정비된 사례 중 하나임. 그 후 2010년에 이르러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하고, 각각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소관부처로 함.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한국 사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층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양성평등정책의 마련, 원칙 등 큰 틀에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 외에도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8조	자기결정권
	제9조	건강권
	제10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제11조	정보접근권 등
	제12조	비밀보장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조정
	제14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15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16조	성·재생산건강 심의위원회
제4장 월경	제17조	월경용품
제5장 피임	제18조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제19조	피임시술
제6장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제20조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의 원칙
	제21조	국가의 의무
제7장 보조생식기술	제22조	보조생식기술 사용의 원칙
	제23조	정보제공과 비밀보장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제24조	임신 및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임신 기간 중의 지원
	제26조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제27조	임신중지 정보접근권 등
	제28조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제29조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제31조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제32조	교육기관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등
	제33조	포괄적 성교육 담당교사 교육 등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제34조	상담제공
	제35조	상담에서의 특별한 고려
	제36조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제37조	상담인력의 의무
	제38조	상담기관의 접근성 등
제11장	제39조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통역 등 지원인력	제40조	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제41조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의료인 등의 의무
	제43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제44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 장	제46조	근로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47조	성·재생산권리 보장 조항 이행 실태조사와 보고 등
	제48조	사용자의 의무
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제49조	학생의 성·재생산권리와 학습권 보장
	제50조	교육기관장의 의무
	제51조	고등교육기관장의 의무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 산권리의 보장	제52조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제53조	보호·복지시설 등의 장의 의무

4.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세어의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세어 기본법안’이라 함)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재생산권리 보장 정책의 목적 설정

세어 기본법안의 내용은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음.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어 소관 부처가 다양함. 또한 입법의 공백도 큼.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이 임신·출산과 같은 특정 시점, 의료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다양한 부처가 서로 다른 시점에 법률 제·개정에 관여하는 경우, 개별 법률 제·개정 이전에 전체적인 지침과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함. 기본법을 통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그 취지에 맞추어 개별 법률을 제·개정을 유도하고 이로써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개인의” 권리 실현으로 전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의 경우 “개인의 권리 실현”으로 그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그동안 국가는 임신·출산조차도 개인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음.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임신·출산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해왔음.¹⁸⁾ 임신중지의 경우, 형법상 낙태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따라 인구를 억제해야 했던 1960-1970년대에는 국가가 나서서 인공임신중절을 유도함.¹⁹⁾ 반면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

18) 한겨레신문, 2016. 12. 29.자,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쏟아진 이유」

19) 류민희, 「낙태죄 폐지 관련 국제적 흐름 :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45쪽

자 낙태죄 단속을 강화함.²⁰⁾ 동시에 장애·나이·혼인 상태 등에 따라 임신중지가 사실상 ‘강요’되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개인의 권리 실현”은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 보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향 설정임.

세어 기본법안은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 그리고 제7조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세어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함(기본법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임).

<p>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2) “모성권”을 넘어선 통합적 권리 보장

이에 더하여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관한 정책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은 한계가 있고, 의료관련 기본법만으로도 부족함.

현행 법률은 특히 여성에 대한 건강권을 모성권 중심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음. 「모자보건법」은 법명부터 “모”와 “자”의 관계를 상정하며, 법의 목적 또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모자보건법 제1조). 법률 내용도 임신 지원(난임)과 출산 지원(산후조리)에 집중되어 있음. 「근로기준법」도 생리휴가 외에는 임신·출산에 한정한 ‘모성보호’ 조항을 두고 있음.²¹⁾ 이러한 경향은 장애여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타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²²⁾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모성’에만 집중한 정책은 사람이 생애 전반에서 직면하는 많은 필요와 요구를 놓치게 됨.²³⁾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이나 성

20) 시사인, 2010. 3. 23.자, 「낙태 줄인다고 저출산 극복될까?」

21) 그나마도 모순적이어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 임신중지로 제한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낙태죄가 범죄였던 시기의 법률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임산부의 보호”라는 조문의 입법 목적에 맞는 내용은 아님.

22)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 제2항 제5호

23) 김정혜, ‘모성보호’를 거부한다,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16쪽

매개감염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하는 것,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상담·진료가 필요할 때 상담기관·의료기관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생식 건강의 손상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 등 까지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함.²⁴⁾

이에 세어 기본법안은 모성권뿐만 아니라, 월경·피임·성별확정 및 성별정정·보조생식기술·임신·출산과 임신중지·포괄적 성교육 등 성·재생산 건강권의 내용을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후술함.

3) 권리 주체로서의 개인(“모든 사람”), 수범자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기본법을 통해 각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권리 보장 의무의 수범자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성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기보다는 건강한 영유아 출산을 위한 의무자로 상정함. 예를 들어 모자보건법 제4조는 “모성 등의 의무”조항으로, 제1항에서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가의 정책도 ‘모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음. 모자보건법의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

세어 기본법안은 앞서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함. 기본법안 제4조에서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를 선언함. 그리고 제6조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의무(제1항), 이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제2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차별 금지 의무(제3항),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제5항) 등임. 또한 재량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성별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함(제4항). 적극적 조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무의 예시는 각칙 조항들에서 규정하는데, 이는 후술하겠음.

여기서 세어 기본법안이 권리 주체가 되는 각 개인을 “모든 사람”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함. “모든 사람”의 의미는 세어 기본법안 제5조 제2항의 차별금지 사유들(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보다 명확해짐. 세어 기본법안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법률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주체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로써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정책이 마련될 때도 권리 주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 세어 기본법안의 제6장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정은 하나의 예임. 또한 월경,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과 관련한 권리에서도 그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표기함. 이는 성별 정정에 생식능력 제거가 요구되지 않고, 간성 상태의 유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적 성별이 여성이 아닌 사람도 월경,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고려에 의한 것임.²⁵⁾

24) 김정혜, 위의 글, 16~17쪽

25)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40쪽

나. 정책 입안 법률 제·개정 및 해석에서의 중요한 지침 설정 : 평등과 차별금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이 전환되어야 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성·재생산권리의 경우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함. 따라서 향후 제·개정되는 관련 법률이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기초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적·사회적 차별은 개인의 성·재생산권리와 건강 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 중 하나임.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물적·인적인 조치가 필요함. 최근 지자체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5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동식 수술대는 2곳에만 있었고, 전동식 혈체어 체중계는 3곳에만 설치되어 있었음.²⁶⁾ 이런 점에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중요함(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 등 차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²⁷⁾ 차별금지 원칙은 의료인 등과 같이 성·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함.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이에 세어 기본법안은 총칙 제4조에서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선언하고,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총칙 제5조에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함.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은 세부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화되어 규정하고 있음.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다. 성·재생산 권리의 정의 및 그 구체적 권리 내용 선언

앞서 보았듯이 기본법은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과 정착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의도하기도 함.²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사실 기존에 전혀 없던 권리가 아니지만 일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음. 이에 그 각각의 권리를 정의하고, 세부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법집행과 이후의 법률 제·개정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런 점에서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참고로 「보건의료기본법」은 제2장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²⁹⁾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및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임.³⁰⁾

세어 기본법안은 먼저 성적 권리, 성적 건강, 재생산 권리, 재생산 건강을 각각 정의함(제3조 제

26)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비마이너, 2020. 10. 23.자, 「침대형 혈체어도 없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27) 나영정 외(2016), 「2016년도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참조

28) 박영도, 위의 글

29)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 건강권 등,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13조 비밀 보장,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0) 박지용,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한국의료법학 회지』, 2014, 81쪽

1호 내지 제4호). 성적 권리, 성적 건강, 재생산 권리, 재생산 건강은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추수 논의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용어 정의가 필요함.³¹⁾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정의할 때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 뿐만 아니라 “행사할 권리”까지 포함시켰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결정(자유권적 권리)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사회권적 성격)까지 포함하여 정의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연결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 성적 정체성,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성행위의 여부·상대방·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2. “성적 건강”이란 생식기의 기능과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에 입각한 성행위를 통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3. “재생산 권리”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4. “재생산 건강”이라 함은 생식세포·생식기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서 질병, 기능저하, 장애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 시도·유지·중지,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제2장에서는 성·재생산 권리의 내용을 확인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구성요소 중 대표적인 권리들로 자기결정권(제8조), 건강권(제9조),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제10조), 정보접근권 등(제11조),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제12조)를 규정함.

제8조(자기결정권)

- ① 모든 사람은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결정권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과 관계 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을 이유로 자율성과 심신의 완전성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조(건강권)

모든 사람은 질병 예방, 치료,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성·재생산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과학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31) 예를 들어, 스텔싱 범죄나 강제임신중지는 재생산 권리의 침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침해로 파악할 수 있음.

제11조(정보접근권 등)

- ① 모든 사람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의료인 등은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장애, 나이, 언어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장)

모든 사람은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자신의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성·재생산 건강권의 내용을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였음. 제2장의 권리 선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안의 전체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조문	권리 및 국가 또는 지자체 의무의 내용
제4장 월경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특성·선호에 따라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 · 국가의 의무 : 안정성 확보, 다양한 월경용품 보급 노력, 가격 안정지원·무료 제공·공공시설 비치 등 접근성 확대³²⁾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 소득 수준·거주 지역·언어·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
제5장 피임 [제 18~19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특성·선호에 따라 피임용구·피임약제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임시술을 받을 권리³³⁾ · 원칙 :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사용·피임시술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국가의 의무 : 피임용구·피임약제의 올바른 사용법·복용법 안내, 안전성 검사 정기적 시행,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용구와 피임약제 보급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 소득 수준·거주 지역·언어·성별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 · 의사의 의무 : 비가역적 피임시술의 과정·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 별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성별확정·성별정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 · 의사의 의무 :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건강을 기준으로 시술을 할 의무 · 국가의 의무 : 개인의 성적 정체성 존중, 그에 따른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 보장, 그 결정을 이유로 개인의 신체 완전성 및 성·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건강보험 적용·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행정서비스 제공·재화의 이용 등에 있어 차별금지 의무
제7장 보조 생식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강요·폭력·사회적 낙인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보조생식기술의 사용 여부·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 정확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여성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 개인의 보조생식기술 사용 여부·횟수 등을 제한할 때는 의학적 근거와 성·재생산건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 등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비용 지원 시 (인구정책이 아니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 · 의료인 등의 기술 전과정 설명 의무, 환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지원할 의무, 비밀 보장 의무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권리 ·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 임신기간 중·출산·산후조리·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비용·의료기관에의 이동 지원·통역 지원 등 가능(재량), 이때 국적·문화적 배경·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의무, 임신한 사람이 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피의자가 되거나 체포·구속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사법제도 마련, 출산·산후조리 지원 정책 마련 시 장애 유형과 특성·나이·문화적 배경·언어 등 고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상담·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 · 포괄적 성교육 담당교사·상담인력·의료인 등의 차별 금지 의무
제9장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성교육 정의 : 인권에 기반하여 성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 교육 ·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내용³⁴⁾

32) 2016년 5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비싼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리대 대신 수건,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들이 공유됨. 관련 단체는 이러한 저소득층 청소년이 약 6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음. (한겨레기사, 2016. 5. 29.자, 「생리대 살 돈 없어요... 말할 수 없었던 고백」)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리대 공급을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음. 서울시는 2018년 10월부터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을 늘려 그 비치기관을 증대시켰음. 강남구청은 2019년 3월 국내 최초로 초·중·고 34개교에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음. (BBC 기사, 2019. 5. 21.자, 「깔창 생리대」 그로부터 3년... 생리를 둘러싼 논란을 현재진행형) 경기도 광주시, 안산시, 충남 아산시 등의 지자체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이는 의미 있기는 하지만, 법령이 아닌 조례라는 점에서 그 효력에 한계가 있음.

33) 이는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여성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른바 ‘보호자’의 의사에 의하여 피임기술이 결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 최예훈,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비마이너, 작성일 : 2020. 12. 17. 참조

34) 예를 들어,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거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 원칙은 교육 내용에도 반영되어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성매개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세어 기본법안 제30조부터 제31조 참조.

라. 성·재생산 권리와 연결되는 권리 선언 및 보장 의무 규정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입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음. 향후 개별 입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이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개괄적 내용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어 기본법안은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제13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제14장), 보호·복지시설 등³⁵⁾에서의 성·재생산권리 보장(제15장)을 규정함.

예를 들어, 학생일 때 임신·임신중지·출산 등을 하는 경우³⁶⁾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습권을 침해 받기도 함.³⁷⁾ 그러나 법률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차별과 침해의 부담을 개인에게 넘겨왔음. 이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³⁸⁾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규정하는데,³⁹⁾ 10대 여성의 임신처럼 사회적 편견이 큰 상황에서는 일반적 학습권 규정만으로는 현실적 규범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로써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기도 함.⁴⁰⁾ 그런데 지자체의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법령보다 낮은 지위)⁴¹⁾ 조례만으로는 지역적 범위 및 규범적 지위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의무의 수범자, 의무의 내용까지 명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세어 기본법안은 제14장에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을 규정함. 제49조에서 학습권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35) 세어 기본법안의 “보호·복지시설 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다수인 보호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세어 기본법안 제3조 제15호),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호·복지시설에서의 성·재생산권리 침해는 역사적·구조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금’ 성격의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며, 성·재생산권리 증진 방안을 탄시설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72쪽). 세어 기본법안은 이러한 전제하에, 보호·복지시설 등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현재 보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재생산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6)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대 출산건수는 총 1,300건으로 전체 출산건수의 0.4%를 차지함. 이 중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세 이하의 출산건수는 약 21%를 차지함. 국가인권위원회 2019. 9. 25.자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참조

37) 10대 청소년 미혼모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69.9%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는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자퇴를 강요당한 경우도 있음. 김혜영,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제26권 제4호, 2010, 105쪽, 125쪽.

38) 국가인권위원회 2019. 9. 25.자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참조. 이 진정은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었음.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이었음.

39)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40)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50조에서는 교육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차별 행위의 예시를 들면서(제50조 제1항 밑줄 부분)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⁴²⁾ 학습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교직원, 다른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⁴³⁾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음.

제49조(학생의 성·재생산 권리와 학습권 보장)

- ① 모든 학생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을 가지며,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등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50조(교육기관장의 의무)

- ①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행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이성 및 동성교제, 성별 표현 등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를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학생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기관장은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기관장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기관,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정보 등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교육기관장은 학생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다른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장은 학생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하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⁴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장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마. 권리 보장 관련 인력의 의무에 관한 통합적 규정 마련 필요성

성·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적 여건의 조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력에 대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교육기관·상담기관·의료기관·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어떤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대해 차별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인력은 의료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성·재생산권리와 건강을 보장하려면 관련 인력에 대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음. 여전히 공백이 많지만 월경통,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을 위한 건물의 물리적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

42) 여기에는 월경공결제, 출산전후·임신중지 전후의 요양 기간의 보장, 보충 수업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70쪽

43) 여기에는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 학생의 성과 재생산 경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70쪽

44) 여기에는 성·재생산건강 클리닉, 성중립화장실, 수유실, 육아 휴게공간, 보육지원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어,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70쪽 참조

차별금지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원이라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여 장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임신한 장애여성이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간호사가 “아기 지우실 거죠?”라고 묻거나⁴⁵⁾ 아니면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 장애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상황은⁴⁶⁾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임. 의료인의 차별적 인식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서도 제한적임. 의사들이 장애여성에게 분만보다 쉽게 제왕절개를 권하는 이유는 장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임.⁴⁷⁾ 이는 의료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진료 과정에 동행한 활동지원사, 수어통역사 등의 인식과도 연결된 문제임.

더 나아가 이는 장애여성들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혼 출산을 결심한 여성, 10대 여성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 즉 의료인·교사·활동지원사·통역사 등이 성별, 장애, 나이,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병력, 인종, 이주 지위, 직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권리 주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세어 기본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과 관련한 인력들의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차별금지 교육 의무 등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음.

◎ 권리 보장 관련 인력의 차별금지 의무 등

제37조(상담인력의 의무) : 차별금지 의무,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편견 없이 상담할 의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금지 의무, 내담자의 필요에 따른 연계 의무

제40조(통역 등 지원인력의 의무) : 통역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차별금지 의무, 성·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 의무,

제43조(의료인 등의 의무) : 차별금지 의무,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편견 없이 상담·진료할 의무,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의무

◎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의무 등

제33조(포괄적 성교육 담당교사 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모든 교육과정의 포괄적 성교육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36조(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재생산건강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하 ‘상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인력 양성·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담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내담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정보와 이를 반영한 상담 가이드라인
3. 이 법 제29조부터 제31조에서 규정한 포괄적 성교육

②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성·재생산건강 관

45) 한국여성민우회, [후기] 9. 28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후기 중 발언 5, 작성일 : 2017. 9. 29.

46) 한국여성민우회, 위 후기 중 발언 10, 작성일 : 2017. 9. 29.

47) 최예훈, 「의료와 장애의 불화를 마주하기」, 비마이너, 작성일 : 2020. 12. 17.

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력에는 다음 각 호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④ 이하 생략

제39조(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관련 통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41조(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이 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2.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가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3.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② 제1항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이 법 제5조 제2항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환자의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를 고려한 진료④의료행위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3.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 관한 교육

③ 이하 생략

바. 추진체계의 구성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통합적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규정함. 세어 기본법안도 제3장에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은 매년 추진계획 수립·시행

○ 성·재생산건강 심의위원회 :대통령 소속

당연직 위원 - 관계 행정각부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제처장

외부 위원 -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성별·장애·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주 지위 등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해야 함.

○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성·재생산건강사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의료기관 등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 방안,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지원·보급 방안,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인이 성·재생산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설 및 자원·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피임용구와 피임약제의 보급, 정보 제공, 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4.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지원 방안

[포괄적 성교육의 추진계획 및 그 추진방법(포괄적 성교육 인력 교육, 포괄적 성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상담기관 등의 확충 및 접근성 확보 방안, 성·재생산건강에 관련된 통역 등 지원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이 법 제12장과 관련한 의료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교육 및 홍보, 상담기관·의료기관·교육기관·보호·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 의한 차별 실태 및 시정 방안 포함]

5. 성·재생산건강에 관한 국내외 정보·통계의 수집 및 번역·관리방안

[① 일터,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성·재생산건강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시정 방안 강구, ②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임신중지,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과 관련한 건강,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③ 월경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초경, 완경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있어서 월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 ④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침해와 관련된 의료, 주거,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정보·통계]

6. 성·재생산건강 관련 상담인력과 상담기관 확보 및 관리방안
7.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근로 및 휴게환경의 조성
8.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징,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등 성매개감염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성·재생산건강사업계획
9. 제3호부터 제6호의 각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차별 실태 조사 및 교육·시정방안
10. 중앙행정기관 간의 성·재생산건강 추진계획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1. 그밖에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나가며

임신중지약물의 도입 등과 같은 일부 정책은 법률까지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규칙·고시 등의 개정만으로도 시행될 수 있음. 또한 임신중지기술에의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일부 정책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부 해당되는 법률만 개정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본법이나 행정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우선 개별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시행하고 일부 법률을 조금씩 개정하다가 마침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음.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과정도 기본법 제정 없이 먼저 개별 정책과 일부 법률의 변화를 거쳐 나중에 기본법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임. 기본법을 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님.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그 후 개별 정책과 구체적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의 원칙들이 일관되게 반영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임. 세어 기본법안은 낙태죄 폐지 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성·재생산권리 보장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권리의 목록도 구체화하여 예시하고 있으므로, 낙태죄 폐지 후 입법 방향에 좋은 참조가 될 것이라 생각함.

공공의료로서 피임 및 임신중지

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들어가며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운동 방향의 흐름은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낙인화(de-stigmatization)’이다. 임신중지를 범죄시하여 처벌을 가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각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을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해야만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한 흐름은 임신중지의 ‘탈의료화(de-medicalization)’이다. 이것은 의료화 개념을 의료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 전문가집단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 ‘탈전문화’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엄밀히 임신중지, 특히 약물(유산유도제)에 의한 임신중지는 처음부터 탈의료화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내왔던 시간이 있었고,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운동의 성장과 함께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으며 의료체계 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부 전문가집단이 약물을 전유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탈의료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범죄화와 맞물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약물을 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새로운 재생산 정치의 지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¹⁾ 자율적 임신중지(SMA, self-managed abortion)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해외에서는 원격 진료(tele-medicine) 등을 통해 이를 공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서 공식적인 의료체계 내에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탈의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의 공공의료 확립이 어떻게 탈의료화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역량 강화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임신중지와 공공의료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가 인권으로서 다른 권리들과 불가분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역시 그 중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고 2003년부터 각국의 통계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정책 지침을 제공하여 왔다.

1) 김선혜, 약들을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미프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연구, 2020.

전지구적으로 불평등한 지정학적 분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Unsafe abortion)’의 통계 자료는 임신중지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과 얽힌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각성시켰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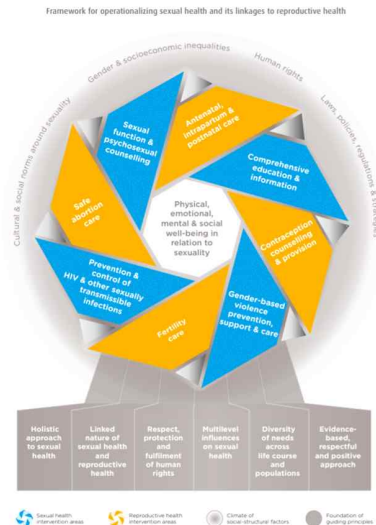
성적 건강은 재생산 건강과 서로 뚜렷하지만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법적 환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기후(shading)가 성적 건강의 개입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성·재생산 건강의 개입을 설계할 때에는 의료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교차하는 영향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피임과 임신중지는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중요한 개입 지점이다(그림 참조).³⁾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책 가이드에서 임신중지를 공공의료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로서 다루고 있고,⁴⁾ 자율성, 비차별, 기밀보장과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강조한 임상 실천 핸드북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나이, 인종, 사회경제적 또는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시기적절하게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해하기 쉽게 정보가 제공되고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⁵⁾

WHO와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모든 사람들이 성·재생산 건강의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Our vision is the attainment by all people of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ramework for operationalizing sexual health and its linkages to reproductive health

- 성적 건강(center)이 궁극적인 목표
- 성적 건강 :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 성적 건강의 개입과 재생산 건강의 개입은 서로 뚜렷하지만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 성적 건강의 개입 영역(blue ribbon) : 포괄적 교육과 정보, 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지지와 케어, HIV와 및 다른 성매개감염 예방과 관리, 성적 기능과 정신성적(psychosexual) 상담
- 재생산 건강의 개입 영역(orange ribbon) : 출산 및 산전후 케어, **피임 상담과 서비스**, 난임 케어, **안전한 임신중지 케어**
- 사회구조적 기후(shading) :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법적 환경이 삶의 맥락을 형성하고 성적 건강의 개입과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규범, 젠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권, 법·정책·규정 및 전략
- 6가지 주요한 교차 원칙(foundation) :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개입을 설계하는 데에 통합되어 개입 평가 기준 역할을 함.
 - 성적 건강에 대한 전인적 접근
 -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연결성
 -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현
 - 성적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 생애 주기 연구에 걸쳐 있는 필요의 다양성
 - 근거 기반, 존중 및 긍정적인 접근(positive approach)



Sexual health and its linkages to reproductive health: an operational approach (who.int)

‘낙태죄’ 폐지 이전의 한국 상황은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자. 임신중지 건수는 약 10여년의 통계에서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최근 2017년의 조사에서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하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⁶⁾ 같은 조사를 온라인 불법사이트 적발

2) Unsafe abortion: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incidence of unsafe abortion and associated mortality in 2003. 5th ed, WHO, 2007.

3) Sexual health and its linkages to reproductive health: an operational approach, WHO, 2017.

4) Safe abortion :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WHO, 2012.

5) Clinical practice handbook for safe abortion, WHO, 2014.

6)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임신중지 추정건수 49,764건. 임신중지 비율 19.9%. 전체 임신중절경험자(756명) 중 수술만 받은 여성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현황⁷⁾과 감안해서 볼 때, 의사 처방 없이 약물을 구입한 경우는 연간 약 2,000건, 약물 사용 후에 수술을 다시 하게 된 경우는 연간 약 3470건으로 추정된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인 이유, 공공의료여야만 하는 이유는 이런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동안 매우 극단적인 사례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⁸⁾ 임신중지가 합법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한국 역시 '낙태죄' 폐지 이전 모자보건법의 허용 조건에 따라 임신중지를 시행했던 합법화 모델이었고⁹⁾,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접근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Legal ≠ Accessible). 접근성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으며, 낙인이 지속되는 한 임신중지를 구하는 어려움은 언제든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신중지가 공공의료라는 의미는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 제공, 동의, 안전, 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범죄로 낙인찍혀온 행위를 공공의료로 인식하려면 의료체계만을 별개로 두고 변화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의료체계를 고민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환경, 법적 환경, 경제 불평등, 젠더와 섹슈얼리티 정치학, 인종차별, 비장애중심주의, 성·재생산 정의 운동 등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낙태죄' 폐지 운동은 SRHR 운동으로 확장되고, 의료체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위해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낙인을 제거하고 교차적 정의에 기반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민간 의존 의료체계와 낙인이라는 이중적 문제

임신중지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법¹⁰⁾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들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을 점유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비영리기관이기는 하나 공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기보다 개인의 소유 및 지배 형태로서 기업적 속성이 강하다.¹¹⁾ 그간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병원에 맡기면서 나타난 결과는 전문의 의존 현상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심화로 이어졌다. 특히 '저출산'을 '위기'로 상정하여 국가적 전략을 세우기 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과 지역 불균형은 시작되어 분만 가능한 병원이 감소함으로써 모성사망¹²⁾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당장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그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7) "식약처, 낙태약 '미프진' 법 개정 동시에 허가심사해야", 데일리팜, 2020년 10월 27일.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913>

8) [뉴스플러스] 수능 끝난 고3, 낙태수술 받다 사망, mbc뉴스, 2012년 11월 14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81538_30413.html.

중국인 유학생 뇌사상태로 빠뜨린 의사 구속-"임신중절 수술 감행", 투데이코리아, 2015년 6월 30일.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70>

9) 나영, 이제 글로벌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자료집(2021.4.11.)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2016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8%(OECD 평균 65.5%),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10.3%(OECD 평균 89.7%). COVID-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국립중앙의료원, 2020).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건강보험연구원 Issue Report, 2020).

12) 2018년 한국의 모성사망비는 11.3로 OECD평균(6.0) 34개국 중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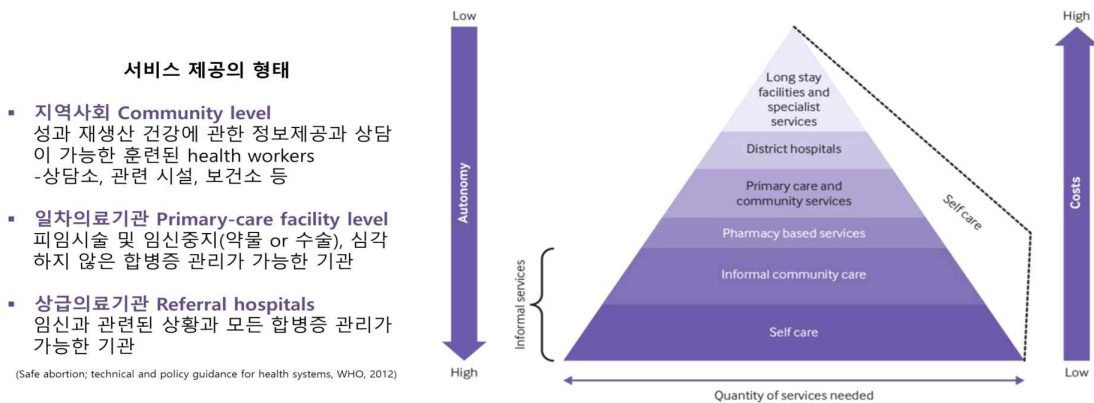
그 해결책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민간 의존 의료체계에서 임신중지는 낙인까지 더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로서 인식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2021년 현재 ‘낙태죄’가 없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낙인을 이용하여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임의로 제3자 동의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매우 미심쩍어 하면서도 불법적인 약물 제공 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다.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은 이처럼 개인 및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제도적, 법적, 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켜켜이 중첩되어 있다. 하지만 긍정적 입장을 취하여 말하자면, 낙인이란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후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는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새겨져 있는 낙인부터 제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해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3. 공공의료 확립과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돌봄(self-care)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돌봄’은 스스로 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장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인, 가족 및 지역의 역량을 의미하며, ‘자기돌봄 개입(self-care interventions)’은 보건의료 제공자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약물, 장치, 진단기구 및 디지털 상품을 공식적인 의료서비스의 틀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임신중지의 경우, 약물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을 더 간단하고 쉽고 이해가능하게 하여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료체계와의 충돌 없이 연계하여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재생산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 자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게

[Self care interventions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costs, benefits, and financing | The BMJ](#)

자기돌봄은 전체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바탕이 되는 영역이라 보면 될 것이다(그림 참조). 위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서비스의 숫자가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인지하고 케어할 수 있는 자율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self-care),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관련 시설, 보건소 등에서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수준의 서비스(community level), 그 다음 단계로 의료적 도움을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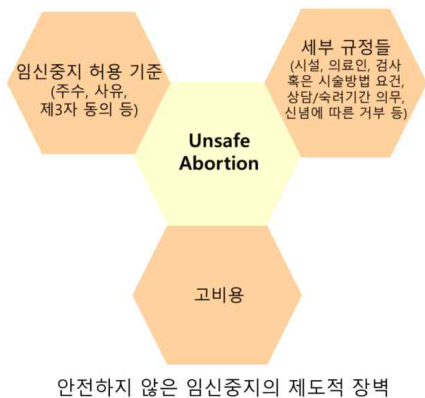
13) WHO recommendations on self-care interventions : self-management of medical abortion, WHO, 2020.

으로 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Primary-care facility level), 그 상위 단계에 임신과 관련된 모든 합병증 관리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이 위치하여 일차의료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치료를 하게 된다(Referral hospitals). 즉 공공의료 제공 체계의 목표는 자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 형국이다. 스스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불법 사이트에서 약물을 구하는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가고 건강의 위험도 감수하게 된다. 산부인과 의원 이외에는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지인이나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몇 개의 병원을 거치고,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예 처음부터 현금을 요구받기도 한다. 자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높아진다. 임신중지의 공공의료 확립 없이 자율성 강화는 결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어떻게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작년 10월 정부의 개정안 발표로 경험했듯이, 임신중지에 관련한 세부 규정이나 법률을 만들어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들은 계속 막아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절차과정을 ‘(1) 근거에 기반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2) 서비스 제공자 교육과 시설, (3) 모니터링, 평가 및 질 향상 (4) 재정’으로 나누어 권고한다.¹⁴⁾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정리해 보았다 (표 참조).



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기반한 정보 전달과 낙인 제거 ▪ 건강보험 급여 ▪ 최신의 의료기술 제공(약물적 방법)
W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일차 의료, 의뢰 체계) ▪ 지역 균형 ▪ 의료기관 이외 : 학교, 상담소, 관련 시설 등
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의료인의 양적, 질적 확대 ▪ 의료인 필수교육 ▪ Health workers 확대
W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 ▪ 사적 경험이 아닌 복잡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 ▪ 성과 재생산 정의 운동의 출발점

의료전달체계 각 피라미드 층위와 연결시켜 본다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층위 이상에서 보자면, 공공의료의 양적 및 질적 확장과 함께 임신중지가 일차 의료 수준에서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훈련, 질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등 최신의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보험 급여와 현황 보고와 통계, 질 관리 감독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 스스로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서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¹⁵⁾와 상담을 진행하기란 어려

14) Safe abortion :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WHO, 2012. chapter 3.

15)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단순히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결정과 치료를 선택하는 동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바탕이며 목표가 되는 자기돌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다.

1)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 프로토콜과 접근성 고려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 제공될 것인가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다. 따라서 왜곡되거나 편향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표준 지침(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등)을 바탕으로 피임, 임신, 성매개감염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임신중지, 출산 후 입양, 양육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고, 연령, 성별,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주, 언어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 제공은 인터넷, 공공/민간 기관 및 지역 단체, 병·의원, 보건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최대한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보다 많은 일차의료 제공자, 비의료인 health workers 확보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자는 상담의 과정에서 자율성, 비차별, 기밀보장과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서비스의 지역 편차가 큰 상황에서는 양적인 확장도 필요하다. 안전한 임신중지 제공은 복잡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만이 아닌 타과 의사 및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등 일차의료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 증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health worker'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예방/증진/치료 건강 서비스 제공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¹⁶⁾ 비의료인 health workers의 역할은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중요하며, 상담과 분리될 수 없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능케 한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일차 의료기관이나 상급 병원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3)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가는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연구,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 그 구성 및 목적이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가이드(세계보건기구, 국제산부인과학회(FIGO) 등)에 배치되는 경우 공식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의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임신중지를 배제하지 않는 통합적인 교육과 양질의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산부인과 수련과정에서는 임신중지를 유산이나 사산과 통합하여 교육해야 하고,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상담을 포함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단 임상적 차원의 교육과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교육 전반에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섹스 긍정적인 접근(sex positive approach)¹⁷⁾을 통해

시에 의료적 개입을 거절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료인은 적절한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설명의 의무가 있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사 결정 대리인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하며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 1st ed.,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

16) 비의료인(lay health worker)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신중지 전후 상담까지, 더 제한된 상황에서는 약물적 임신중지의 사용 판단과 그 전체 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다.(Health worker roles in providing safe abortion care and post-abortion contraception, WHO, 2015)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 임신중지는 SRHR의 주요한 권리로 임신유지와 동등한 가치로 두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임신중지의 방법(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 장소와 방법 포함)과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피임과 임신중지의 높은 비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4) 다학제적인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 전문 분과 독립

안전한 임신중지는 SRHR의 중요한 영역으로 산부인과 등 전문 분과나 의료인에 국한되지 않는 다학제적이고 여러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전문’ 자격은 학회, 기관 및 단체의 소속이나 그 직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이해능력, 가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권고사항(세계보건기구 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SRHR 관련 통계 및 연구를 확대하고 표준지침 발간 및 심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의사소통 방법과 태도는 적절했는지, 기밀보장과 프라이버시는 유지되었는지, 검사나 상담의 의무와 같은 장벽들이 존재했는지 등 서비스 질 평가에서 고려할 요소들은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WHO, 2012: 76-78 참조)

5) 성·재생산 정의 운동과 연계

임신중지는 사회문화적 환경, 법적·의료적 환경, 경제불평등, 젠더와 섹슈얼리티 정치학, 인종차별, 비장애중심주의 등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낙태죄’ 폐지에서 끝이 아니라 사회변혁적인 성·재생산 정의 운동과 연계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려면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누구라도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임과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운동의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비용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임신중지와 피임, 응급피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이를 공공 의료서비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동의이기 때문이다.¹⁷⁾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공공의료로 인식하여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차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성·재생산 정의 운동과 연계될 수 있다. 더불어 의료비 및 전체 사회적 비용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한 모성사망과 합병증 치료 등으로 개인과 사회가 손해를 입은 비용은 클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합법화 이후의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피임의 급여화는 원치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직·간접적인 의료비를 감소시키므로 임신중지의 급여화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서비스 모니터링 및 통계 자료의 토대가 가능해지며 질 평가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17) 섹스 긍정적인 접근(sex positive approach)은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섹슈얼리티를 행복과 에너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삶의 부분으로 축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시에 두려움, 수치, 금기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Putting sexuality back into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making the case for a rights-based, sex-positive approach, IPPF, 2016)

18) 현재 응급피임을 비롯하여 전문피임약(처방전 필요), 자궁내피임장치(미레나 등), 피하내이식장치(임플라논 등), 피임시술(난관수술, 정관수술) 등 피임 목적으로 처방하는 약이나 모든 시술 방법이 비급여항목이다.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는 임신중지수술의 수가는 8주 83,160원; 12주 104,070원; 16주 131,550원; 20주 172,980원; 20주이상 202,350원이다.

나가며

나의 삶,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흔하디흔한 임신중지가 특정한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서 실현되려면 공공의료로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낙태죄’의 굴레에서 수십 년간 묵혀온 낙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앞으로 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66년이 지나고 ‘낙태죄’를 역사의 뒤편길로 보낸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다. 더 이상 한 사람도 뒤에 남기지 않고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권리(SRHR)를 보장받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볼 시점이 되었다.

금지에서 공지로, 낙인에서 권리로.

기술로 지연된/당겨진 재생산과 새로운 생애사 구축

사회: 하정옥(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 난임시장에서의 다층적 희망의 서사와 희망의 비용
김진영(텍사스주립대 박사수료생)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싱글여성의 생애 기획
최송희(한국여성재단)

임신부 관리하기, 태아 예측하기:한국 산부인과 내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조희수(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토론: 강지연(서울대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
남승현(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한국 난임시장에서의 다층적 희망의 서사와 희망의 비용

김진영(텍사스주립대 아시아 연구학과 박사수료생)

1. 서론

2019년 3월 22일, 국회의원 사무실 대강당에서는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규모가 꽤 컸던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온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다수의 여성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남성들, 그리고 과거 난임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강당을 가득 메웠다.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 보완사항 등을 전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이 의견을 토대로 현재 정부의 난임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시작과 함께 이어진 발표에서는 엄마가 되고 싶어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지만, 10번이 넘어가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다. 중간 중간 슬픔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다시 추스르는 과정, 그리고 응원의 박수 소리들이 이어졌으며, 엄마가 되기 위한 힘겨운 자신의 여정에 정부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공청회가 끝나고 얼마 후, 4월 초,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만 44세)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 2019.4.3.)¹⁾.

난임가족 (주로 여성)이 자신의 슬픔과 희망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적 의료 지원을 이끌어 내고, 추가적인 시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개인의 모성에 대한 희망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기존, 서구 중심의 많은 문헌에서 자주 언급된 “희망의 기술”로서 보조생식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을 받았다. 체외수정시술은 불임여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기술로 다수의 홍보자료에서 묘사되며, 개인은 희망을 품고 체외수정시술을 소비하게 된다(Becker, 2000; Franklin, 2002). 이때 희망은 개인이 체외수정시술이라는 의료상품을 소비할 때 영향을 주는, 유인 요인, 마케팅 기술로서 기능을 하긴 하지만, 국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또한 시장논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외수정시술은 매우 금액이 높으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다(Bell, 2014). 단순히 보

1) 2019년 7월 이전, 시험관 시술에 대해 최대 4회까지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였다. 2019년 7월 이후부터는 신선배아 이식 추가 3회분(5회~7회), 동결배아 이식 추가 2회분(4~5회)에 대해 비용의 50%가 보험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개인이 온전히 전체 시술비용을 부담한다.

조생식술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다수의 체외수정시술을 시행하려면,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하므로 그 대상은 더 제한적이다.²⁾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보조생식술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희망의 역할은 시장논리가 우선시되는 서구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로 보조생식술 시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보조생식술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기혼 여성들이 보조생식술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즉, 한국 보조생식술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 신장보다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특히 여성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김경례, 2012; 하정옥, 2006, 2012, 2015; 정연보, 2013). 한국의 난임 여성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몸이 다수의 시술을 통해 혹사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다.

한국 보조생식술 시장에서의 희망은, 개인적인 희망의 차원을 넘어 보다 집단적인 형태로, 그리고 불임이라는 단어를 난임으로 바꿀 만큼 강력하게 사회정치적 형태를 띤다. 그리고 국가 또한 난임 기혼 여성들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양성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난임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기존연구들에서 난임여성들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사회적 배경으로는, 생물학적 모성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사회 체제 (장은영, 1997; 박용운, 2004; 김경례, 2014; 김선훈, 2008) 및 신체에 대한 불능을 명명하고 정상성을 공고화 하는 의료 권력 (김선훈, 2008; 강지연, 2011; 황지성, 2017) 등이 제시되었다. 즉, 모성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둔 난임 여성은 정상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며, 특히 체외수정시술은 임신의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희망을 상징하게 된다. 즉, 비정상적인 불능의 몸은, 발달된 의료기술을 통해 임신을 가능하게 되고 정상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능의 몸’과 ‘희망의 기술’이라는 여성의 신체와 보조생식술의 관계는, 다수의 다양한 개인들이 이를 소비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다소 복잡해 보인다. 실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난임 경험을 가진 14명의 인터뷰이들(남성 1명, 여성 13명)³⁾과 2020년 2월 15일~3월 15일 난임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30인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과 보조생식술을 연관지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3월 난임정책 공청회에서 언급된 희망의 방식과는 사뭇 모습도 많았으며, 장밋빛으로 묘사된 보조생식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본 글에서는 미디어 및 난임가족연합회에서 발행한 난임수기 모음집, 그리고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난임 및 보조생식술 경험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희망의 모습, 그리고 희망과 보조생식술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희망을 언급하는 방식을 살

2) 상업화된 의료시장에서 중산층 이상의 불임여성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리모 혹은/그리고 정자/난자 기증자들의 생식세포를 이용해 제 3자가 개입된 재생산 거래를 하기도 하므로, 계층화된 재생산(Colen, 1995)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제 3자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불임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다수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3) 모자보건법에 정의된 기준으로 난임을 과거에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참여 기준으로 삼았다. (난임의 정의: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펴봄으로써, 보조생식술이 내포하는 다층적 희망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특히, 난임여성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연령, 시술 시도 횟수, 난임 유발 원인 등에서 차이점을 지니는 이질적 집단으로 보고, 이질적 기준이 희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즉, 희망이라는 가치가 체외수정시술을 시도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생식술을 대하는 자세나 이를 통해 성공을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희망을 매개로 한, 보조생식술과 난임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난임 시장에서 희망과 성공의 가치 아래, 개인이 감수해야 했던 상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 성공을 위한 희망을 위해 개인이 어떤 비용을 치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조생식술의 장밋빛 이미지 이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다층적인 희망의 의미는, 접근성이 높아진 보조생식술이 개인의 임신과 난임을 어떻게 다시금 재정의 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보조생식술을 통한 희망의 주입

EBS 다큐멘터리 “명의-편견이 낳는 병, 난임 (2013년 방영)” 에피소드는 의료진과 환자의 눈으로 난임이라는 병을 소개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소개된다. 여기서 언급된 명의 및 이들이 난임을 치료하는 원칙 및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현장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다수의 인터뷰이들에게서 언급되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난임 치료 경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명의와 그들의 치료법을 언급하곤 했다.

본 에피소드는 모성의 정의와 임신의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 임신과 출산. 하지만 누군가에겐 어려운 일이다”라며 모성을 언급하며, 곧이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 하는 세 명의 난임여성이 소개된다. 그들의 고통은 말기 암환자의 스트레스와 비교되기도 하고,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다고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침울한 분위기는 활기찬 음악과 함께 전환되며, 두 명의 명의가 소개된다. 그들의 별명은 삼심할배로,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토속 신 삼심할미처럼, 편견과 재생산 기능 장애로 고통받는 난임 여성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수호자로 묘사된다. 그 후 난임의 원인, 난임검사의 종류, 그리고 난임 치료의 가능성과 제약점 등의 정보가 소개된다. 두 명의는 IUI와 IVF를 난임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안적 방법으로 소개를 하며, 난임과 관련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의학적인 설명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앞서 안내된 세 명의 난임여성은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에피소드 말미, 자신들의 임신을 확인하면서 미소짓는다. 본 에피소드는, 고통받는 난임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영웅적 존재인 의료진과 기술이 등장하여, 이들의 협력에 의해 질병을 극복하고 빛을 발하는 희망과 노력이라는 주제 의식을 나타내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해피엔딩의 서사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난임과 관련된 여러 기사나 광고, 그리고 성공 경험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구조다.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나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전문의 의견을 통해 보조생식술에 대해 소개하는 여러 신문기사와 홍보자료들, 그리고 다수의 난임 경험사례에서는 여성의 나이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취한다. 즉, 여성이 최대한 빨리, 조금 더 젊을 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쉽게, 성공적인 임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임 시술에 몇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라고 독려한다. 희망과 의지,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이 결합하면, 미래에는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며, 보다 빨리, 보다 어릴 때 방문하면 보다 쉽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와 성공담은 난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류숙진, 2019). 비

록 아이를 만나는 과정까지 여러 신체적, 감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임신이 되고, 성공적으로 출산하는 순간 그동안, 겪은 여러 어려움들은 아름답게 기억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희망적인 난임 커뮤니티와 병원의 분위기 속에서 난임 여성은 시술에 실패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엄마가 되는 꿈을 포기할 것인가 혹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계속 체외수정 시술에 도전하여 엄마라는 꿈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러 난임 커뮤니티 및 난임 단체에서 정부에게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난임가족연합회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회에 보급하고, 난임여성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여러 지원을 이끌어낸 단체로, 희망의 메시지를 난임가족에 전달하고, 이들의 노력을 응원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선훈, 2008; 김경례, 2014). 이 단체의 여러 활동을 통해,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집단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저출산위기 담론과 맞물려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칠전팔기를 넘어 열 번을 훌쩍 뛰어 넘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맞이하는 성공의 달콤함과 가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치가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난임이라는 희망은 한국 사회에서 훈육되고(disciplined) 지속된다. Sarah Ahmed (2010)는 특정한 개체(가족, 포도 등)와 정동이 어떻게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특히 행복을 전해주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happy objects로 명명했다. 한국에서 보조생식술은 다양한 경로 (미디어, 정책, 시민단체 등)를 통해 다량의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소개, 순환됨으로써 성공과 행복, 희망이라는 가치가 강력하게 기술과 결합, Happy object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난임이라는 프레임

모자보건법에서 불임은 2012년 난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 (안 제 17조 제 1호) 지원이유에는 난임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 이에 대해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보조생식술의 발달로 실제 과거 불임에 해당하는 범주는 점차 난임에 해당하는 범주에 포섭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불임’을 ‘난임’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2011.11). 즉, 용어가 치료가능성을 내포하는 ‘난임’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보조생식술의 발달 및 보급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과 함께 인공수정 및 시험관시술 사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IVF 시술 수는 86,948건으로, 이는 201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 2019).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의 8.7%를 차지한다 (김서영, 연합신문, 2020). 2006년도 전체 신생아 수의 2.2%가 난임지원을 통해 태어났다는 보고를 고려하면, 그 성장세가 무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생식술의 긍정적인 지표는 정부가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연구에서 만난 지원자들의 여러가지 사연 속에는, 자신의 난임 경험에 따라서 희망적인 모습이 변화를 겪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조생식술의 장밋빛 묘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다수의 참가자들이 난임이라는 것을 보조생식술 (특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 3~4회 내에 성공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미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즉, 희망과 결합하며 보조생식술을 통해 성공을 암시하는 난임 또한, 그 안에서 몇 번만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특정한 정상성(normativity)을 규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더 압박감과 괴로움 (ontological precarity)을 느낀다는 것이었다(Butler, 2006; 2009)

4) 특히 현장연구에서 시험관 시술 시도 횟수에 따라서 난임여성을 암묵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4)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횟수에 따라서 난임시술에 대한 자세가 다를 것이라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고차수(시험관 시술 횟수가 많은 경우)와 저차수(시험관 시술 횟수가 적은 횟수로, 주로 1~4회 이내)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어는 보조생식술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고소득층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보조생식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거보다 줄어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시술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몇 번이든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계속할만큼 시험관 시술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개인이 난임 시술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현재, 이들의 어떻게 보조생식술을 의미화하고, 희망을 가치를 부여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3.1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 도구, 보조생식술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시각적 장애가 해소되듯이, 임신 역시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임보다는 난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참가자 A)

“저는 (임신이 왜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싫었어요. 왜 안 되는지. 그걸 알기라도 해야겠다.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되지?”

“저는 그냥 (난임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다치면 그거 고치려고 병원 다니는 것처럼요.” (인터뷰이 B)

대개 세 번 이내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인터뷰이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난임이라는 것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의 인용구에서 보여 주는 것에서처럼, 재생산 의료기술의 보조적 측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한 번에 성공하지 않은 이상, 실패했을 때의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다. 한 예로, 인터뷰이 C의 경우에는 인공수정 두 번째에 임신을 한 경우인데, 자궁 요인으로 인해 배아의 착상에 영향을 미쳐 임신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수술 이후 자궁의 상태가 좋아진 후 6개월 간 임신시도를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인공수정을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 당시 다섯 개의 난자를 과배란 시킨 후, 질 좋은 정자를 주입시켰는데 실패로 끝났다. 당시를 회상하며 C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난자도 다섯 개나 있고, 자궁도 정상이고, 건강한 정자까지 넣어줘서 만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안되다니... 이렇게나 확률이 높은데?” C의 경우 시술 시작 전에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든 이후 시술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에 임신이 성공할 것이라 예상했고,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지 불안했으며, 그제야 혹시 자신이 ‘불임’이 아닐까 걱정했다고 했다. C는 배란된 난자의 개수를 임신 가능성과 비례관계로 해석하면서, 임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자 (난임이 아닌) ‘불임’이라 용어를 사용하며, 임신에 대해 비관한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다시금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라는 프레임으로 회귀한다.

이들에게 자신의 몸은, 임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답답한 상태로 묘사된다. 이때 보조생식술은 불분명한 원인을 찾아, 자신의 임신 가능성을 극대화 시켜주며, 빠른

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누구든 내가 3차 안에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지만, 나 역시 6차에 성공한 사람으로, 차수가 올라갈수록 받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은 말로 표현을 못한다. ... 초조함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감정적 위축이라든지.”

시간 내에 임신을 달성하게 해 주는 기술로 이해된다. 다낭성난소증후군(PCOS)로 인해 배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인터뷰이 D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배란 장애가 있긴 하지만,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임신을 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D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배란이 되지 않다 보니 1년에 중에 임신을 시도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보조생식술로 하여금, 임신 시기를 보다 빨리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이 가능했다기 보다는, 충분히 임신 가능한 몸이지만, 자신이 임신 시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가능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D와 마찬가지로, 난임을 겪은 이후 임신에 성공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Sarah Franklin (2002)이 말한 것처럼 도와주는 손(helping hand)으로서 기능하는 보조생식술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이들은 자궁을 임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과배란과 정자 선별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이 지닌 생식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조생식술에서 임신의 희망을 보면서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한정시킨다. 여기서 보조생식술은 남녀의 성관계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인의 임신 시기를 조율한다. 보조생식술의 효율성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지만(강지연, 2011),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된다.

3.2 필요약으로서 보조생식술

보조생식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응답자는 ‘필요약’이라고 답했다. 필요약으로서 보조생식술을 대하는 경우에는, 앞서 임신이라는 목적 달성의 효율적 도구로써 보조생식술을 대했던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임신 가능성 및 보조생식술의 역할을 기술했다. 즉,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을 시도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난임’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자신의 임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대했다면, 필요약의 경우에는, 임신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보조생식술을 기술했다. 난임검사 이후 생식기관 쪽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 특히, 나팔관이 막히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자신들은 시험관 시술 이외에는 임신이 가능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결정적인 요소로 꼽는 요인은, 여성의 난소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 항물러리안 검사(Anti-Mullerian Hormone Testing, AMH 검사) 수치다. AMH 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주로 1 미만), 자신이 곧 폐경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험관 시술에 적극적으로 임한 경우가 많다. 다수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AMH 수치 및 나이⁵⁾를 난임 요인이자 보조생식술이 꼭 필요로 하는 이유로 자주 언급하였다.

난임 검사(fertility checkup)와 시험관 시술이 진행됨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난임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몸을 통해 느끼게 된다. 즉, 시험관 시술이 각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은 난자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원자화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임신의 과정을 보고, 느끼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Sarah Franklin (2002)의 “embodied progress”로 체외수정 기술의 특징을 압축하여 나타낸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난자의 배란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정하고 배아가 착상하기까지, 개인은 각각의 단계에서 임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유산)하게 되면 이 여정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5) 주로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하긴 했으나, 여성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남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에도 남성의 연령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이용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mbodied progress'로 개인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경험하는 방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임 시장에 몰려들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인터뷰이 또는 인터넷 난임 커뮤니티에서 본 글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험관 시술을 해 보니까) 하나씩 문을 여는 기분이에요. 착상이 되고 1~3차 피검사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란이 많이 되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고, (수정이 잘 돼서) 배아가 많이 나오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고, 또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상이 되어도) 유산이 안 되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고...”

E의 경우에는 자궁요인으로 여러 차례 임신 초기 유산을 경험한 경우로, 자신은 다른 요인으로 난임을 겪는 사람들과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⁶⁾ 자신과 동일한 난임 요인이 있고 이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소통에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였다. 그녀의 말처럼, 여러 난임 사례들을 직,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함에 있어서 각자가 느끼는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이 각기 다 달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단계가 사람들마다 다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과 시술을 통한 임신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는 방식에 대해, 난임 전문의 F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만약 성공률이 1%이면 ‘안 되겠네...’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안 하면 0%인데 난 해 보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환자의 자세는, 시험관 성공률이라는 동일한 데이터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희망이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즉, 시험관을 필요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험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연임신에 대한 성공률을 0%로 인식할 만큼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자연임신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2018년,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난임 경험에 대한 수기를 모집하고, 당선자에게 무료로 시험관시술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데, 수기집에는 시험관 시술에 여러차례 실패를 했음에도 계속 시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한 당선인은 현재 만 44세이며, 이때까지 총 13회의 시험관 시술 시도 이후, 기적을 믿고 싶다면 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다. 다음 구절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동안 (배아를) 이식을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5번 연속 채취 실패로 이전 내가 시험관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선생님의 ‘(임신이) 될 때까지 보다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겨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이 끝나고 추가로 적용된 건강보험은 이런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려 2년만에 드디어 이식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이식할 수 있다는 기쁨에, 또 배아가 상급이라는 소식에 기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배아 이름까지 지어 놓고 나니 결과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습니다.”⁷⁾

위의 사례에서 당선인은 비록 임신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난자 채취에 성공하여 수정되고 배

6) 난임의 이질적 요인 및 경험을 강조한 E의 반응은, 연구자가 1:1 개인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를 디자인하게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뷰 시, 개인마다 전체적인 시술과정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타인과의 차이를 언급 (자신이 독특한 경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난임 요인으로 인한 난임 경험의 이질적인 특성은 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7) 한국난임가족연합회, 2018, p.20. 강조 표시 및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가 추가함.

아를 이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험관 시술 시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병원의 상담 선생님이 ‘될 때까지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관을 시도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들은 분절화된 여러 임신의 단계 중에서 보다 후기 단계까지 진행됨에 따라 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며, 실제 그 목표를 이룬 것과 상관없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폐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난자 채취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그리고 경제적 및 기타 개인적 이유로 더 이상 시술을 진행할 수 없는 때가 오지 않는 이상, 그들의 희망과 도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경험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불임 여성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시술 시도 자체에 만족한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시험관을 시도한 사실 그 자체는 자신이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Franklin, 2002; Greil, 1991; Throsby, 2004). 하지만 시험관 시도에 대한 만족과 후회는 한국에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시술에 대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로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시험관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난임 시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임신을 한 사례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빨리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거나, 혹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또 성공담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난임 시장을 떠나기 어려워 보인다.

4. 희망의 비용

2019년 10월,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난임 정책을 두고 또 한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규모의 난임가족들이 참여했던 3월에 있었던 토론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난임 정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정책연구자와 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토론회였다. 한국의 난임 정책에 대한 여러 사안 중 난임여성의 건강문제와 시술 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그 중 한 전문가 G는, 난임지원의 목표가 성공적 임신 보다는 안전한 출산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술을 통한 성공적인 임신과 이것이 안전한 출산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약 10%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 수치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술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술 기획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시술 기관이 제공하는 시술의 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G의 주장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이라는 결과 뒤에 가려진, 난임 여성들의 임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유산과 상실, 그리고 절망은, 난임 여성이 아이를 만나기까지 오롯이 몸을 통해 느끼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자, 희망의 이면이기도 하다.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 혹은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실패하는 데 비롯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들이 생명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을 갖고 있는 D는 두 번째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하여, 현재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하나의 미성숙 난자 채취에 그쳐서 충격이 컸던 그녀는, 두 번째 시도에서 난자 7~8개 정도가 채취되었다. 그 중 6개가 수정이 돼서 가장 상태가 좋은 두 개의 배아를 이식했고, 두 개의 배아 모두 착상으로 이어졌다. 쌍둥이 임신에 대한 생각과 그때 당시의 상태를 묻자,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다고 답했다.

“쌍둥이라서 좋긴 좋았는데, 또 한 편으로는 내 몸이 쌍둥이 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이게 이래서 좋은 게 있으면그것 때문에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심장박동을 계속 체

크해야 하는데 한 아이는 정상 수치대로 잘 뛰어나는데 다른 하나는 그 보다는 아기집도 작고 심장박동수도 더 느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 애도 빨리 다른 큰 애처럼 빨리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또 빨리 소실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게 빨리 소실이 안 되고 있다가 10주 넘어가서 심정지가 오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랄까... .. 의사 선생님도, 가족도 모두가 다 같이 이 작은 아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이 아이는 정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않는 아이인가.. 싶어서 마음이 참... 그랬는데 10주에 초음파를 보러갔는데 진짜 이 작은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막상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 작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연구자가 강조 표시)

D의 자궁에 이식한 두 개의 배아 중 하나는, 착상이 되었어도, 처음부터 예후가 좋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었다. 게다가 다태아 임신은 조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임신부와 태아에게 무리가 간다. 따라서 D가 결과적으로 단태아를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안전한 출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D는 태아의 심정지(혹은 배아의 소실)에 대해 ‘자신과 주변의 부정적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면서 죄책감(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배아상태에 있었던 ‘것’을, 생명이 있는 ‘아이’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장연구에서 만난 인터뷰이 H는 시험관 시술로 한 아이를 출산하지만, 3일 후에 이 아이는 숨을 거둔다. 첫 아이가 떠난 이후 그 다음 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어 현재의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H 또한 첫 아이를 회상하면서 그녀의 삶에 첫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남편 I 또한 첫 아이를 잃으면서 세상에 작은 죽음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인터뷰이 D,H,I 가 경험한 상실과 그로 인한 감정적, 정서적 타격은 어찌면, 성공적인 임신 뒤에 가려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몫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험관 시술과 초음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작 단계부터 그 과정을 자신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생식세포는 인간이라는 생명으로 온전히 이어지기도 하지만,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러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들, 그리고 태아, 자궁 밖으로 나와 삶을 오래 이어나가지 못하는 신생아들도 있다. 난임 여성은 온전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들에게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이것은 어찌면 그들이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희망’을 품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몫으로 보이기도 한다. D,H,I의 사례 모두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임신’ 사례로 분류되어 보고될 테지만, 성공 뒤에 가려진 임신의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사물과 생명 경계에 있다가 사라진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아이에 대한 바람에는 언제나 아이가 되지 못하고 사라진 무언가도 언제나 공존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 특히 여성의 몫이다. 그것이 바로 난임 여성들이 지불해야 할 희망의 비용이 아닐까.

5. 결론

한국에서의 체외수정기술은 의사와 과학자, 그리고 난임 여성의 긴밀한 협업체계(김경례, 2014) 속에서, 여성의 신체와 난자, 그리고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대량 소비해 가면서 발전을 이루었다

(하정옥, 2006). 희망은 난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체외수정시술을 여러 번 소비하도록 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난임 시장 및 난임 커뮤니티 내에서 순환, 공유됨으로써 보조생식술은 희망이라는 가치와 강력하게 결합된다. 특히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그 결합은 더욱 더 공고해 진다. 난임이라는 명칭과 함께 보조생식술은, 희망을 현실화시켜 행복을 실현해 주는 happy objects (Ahmed, 2010)로서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난임시술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보조생식술을 해석한다. 비록 같은 난임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의 몸이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임신이라는 목적을 빨리,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기술하는 반면, 자신 및 배우자의 생식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즉 자연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필요악'으로서 보조생식술을 대한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happy object로서 보조생식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특히,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이들은 배아에서 생명으로 진화해 나가는 다양한 중간적 단계를 목격하고, 몸으로 느끼고, 감정을 이입하면서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완전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존재들을 보내고, 상실 및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은 임신 성공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목받지 못한 것 같다. 성공과 실패라는 구분을 넘어, 희망을 품고 성공적인 임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연구가 그들이 치르는 비용과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11). 설득의 기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서영. (2020.10.22.) “올해 신생아 11명 중 1명 ‘난임 시술’로 태어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045000530>
- 김전혜. (2008).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례. (2012). 불임(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평가와 전망. *지역사회연구*, 20(2), 181-200.
- 김경례. (2014).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류숙진. (2019). 난임, 유예된 모성실현의 사회적 맥락: 온라인 난임 커뮤니티를 통한 질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8(2), 5-38.
- 보건복지위원회 (2011. 11)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보건복지부. (2019.4.3.)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2019). 생식세포 및 배아의 안전한 보관·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정연보. (2013). ‘잔여’ 배아와 난자의 연구목적 이용을 둘러싼 쟁점. *한국여성학*, 29(1), 1-35.
- 하정옥. (2006).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정옥. (2012).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24(2), 137-181.
- 하정옥. (2015).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한국여성학*, 31(2), 257-297.
- 한국난임가족연합회. (2018). 아가야.
- 황지성. (2017). ‘불능’이 되는 몸. 젠더와 문화, 10(2), 249-281.
- Ahmed, S. (2010). Happy Objects, in Gregg, M & Seigworth, G.J. *The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 Becker, G. (2000). *The elusive embry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ll, A. V. (2014). Misconception: Social class and infertility in America. Rutgers University Press.
- Butler, J. (2006).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 Butler, J. (2009).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AIBR Revista De Antropologia Iberoamericana*, 4(3), 321-336.
- Colen, S. (1995). Like a Mother to Them”: Stratified Reproduction and West Indian Childcare Workers and Employers in New York in Ginsburg F., Rapp R., 1995, *Conceiving the New World Order: The Global Politics of Reproduction*, Berkley.
- Franklin, S. (2002). *Embodied progress: A cultural account of assisted conception*. Routledge.
- Greil, A. L. (1991). *Not yet pregnant: Infertile couples in contemporary America*. Rutgers University Press.
- Throsby, K. (2004). *When IVF fails: Feminism, infertility and the negotiation of normality*. Springer.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싱글여성의 생애 기획¹⁾

최송희(한국여성재단)

1. 들어가며

최근,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 얼리는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난자냉동기술(egg freezing)은 소아암 환자의 가임력(fertility)을 보존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고안되었는데, 가임력 저하를 우려하는 싱글여성들도 난자를 얼리면서 보조생식기술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모 연예인이 국외에서 정자를 수증 받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보도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보조생식기술을 활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난자냉동기술은 여성의 삶과 가족 구성을 둘러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현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난자를 얼리는 건수가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2014년 기준 6,851개 ▶ 2018년 기준 22,614개)은 싱글여성들의 난자냉동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증명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젊은 층 사이에 비혼·비출산이 많은 공감을 얻는 상황에서, 난자를 얼리는 건수와 이에 관심을 보이는 싱글여성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싱글여성들이 난자를 얼리는 과정을 자신의 생애와 연결지어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난자냉동기술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개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원리, 위험성, 효용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 사회적 만혼에 따라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지연시킨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들의 개인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여성들이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 서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싱글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정책 자료·대중매체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의 현실과 사회 조건 속에서 난자냉동기술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난자냉동기술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의 성적 실천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1) 이 발표문은 연구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인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싱글여성의 변화하는 생애 기획>(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2. 한국의 난자냉동기술산업과 법제도

난자냉동기술은 보조생식기술의 종류 중 하나로, 가임력 보존이 블루오션으로 간주된 맥락 속에 발전되었다.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1990년대부터 자본이 집약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난자를 얼리는 기술(유리화동결기술)이 개발되면서 더욱 상용화되었다. 1990년대 당시, 난자냉동기술은 일하는 여성의 출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 소개되었는데, 현재에도 여성의 커리어와 가족 계획을 놓치지 않을 ‘보험’으로 홍보되고 있다. 대중매체 기사와 의사들의 언설에 따르면, 미리 얼려둔 난자는 임신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여성은 일정량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양질의 난자를 소실하기 때문에 확보해둔 냉동 난자로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싱글여성들은 난임센터·가임력보존센터를 찾고 있다.

그런데 난자냉동기술은 한국의 인구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 보조생식기술을 난임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그에 반해 싱글여성들의 난자냉동기술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황우석 사태’ 이후 마련된 「생명윤리법」, 「모자보건법」,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등 각종 법령과 정책들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정책 대상이 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자 수증에 필요한 배우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싱글여성들은 얼린 난자로 임신 시도할 자격조차 되지 않았다. 비급여인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싱글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3. 난자동결시술 과정과 젠더규범적 장치

난자동결시술은 병원에 내원한 후부터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성은 혈액 및 초음파 검사로 난소예비력(난소기능을 측정하는 지표)을 진단받고, 의사와 시술 일정을 상의한 뒤 과배란 유도를 거쳐 난자를 채취하게 된다. 이 과정은 여성의 몸에 침습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알맞은 장소에서 약제를 투여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병원에 내방하는 등 시공간을 조정하는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얼리는 기술은 월경주기, 생체나이 등 여성과 밀접한 여러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당대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다(Thompson, 2005; Waldby, 2015).

난임클리닉은 난자냉동기술을 ‘타임캡슐’로 비유한다. 즉, 나이들에 따라 노화되는 생체시계와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정형화된 생애주기의 이행을 멈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등치된다. 하지만 의료과학 텍스트에서 정자와 난자가 젠더 규범에 따라 표현되듯(Martin, 1991), 난자냉동기술과 관련된 생식세포의 특성과 반응, 시술 절차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령 정자는 남성의 연령과 거의 무관하게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으로 강조되는 반면, 여성은 나이들에 따라 점점 양질의 난자를 소실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자동결시술 과정과 비교하더라도, 가임력의 진단과 관리는 여성들에게 더욱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목적에 상관없이 가임력을 필수로 진단 받아야 되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정자를 보관하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정자를 얼릴 수 있다. 이렇듯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리가 요구되며,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책임으로 여성들은 보조생식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나이들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화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여성들은 미디어와 병원에서 여성의 나이에 따른 고령 임신의 위험성, 다운증후군 발생의 상관관계, 가임력 변화 등 각종 그래프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점은 35세를 전후로 급격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난소예비력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AMH(항물려관호르몬) 수치의 양상을 보면서, 여성들은 35세를 자신에게 남은 유예기간으로 느끼고 예상되

는 불임(난임)에 대비하여 난자를 얼려둬야 한다는 감각을 느꼈다. 또 AMH 수치를 토래 여성들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해 나타낸 ‘난소나이’가 (자연)임신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면서²⁾, 여성들은 나이에 비해 높게 나온 난소나이에 여성으로서의 생산성으로 결부시켜 낙담하기도 했다. 그런데 보조생식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임신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임신의 확률이 높은 20대에게는 ‘가성비’의 측면에서 난자동결기술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적당한 시기를 가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4. 난자동결의 결정과 소비하는 주체

난자동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임신성공률일 것이다. 냉동 난자의 임신성공률은 신선배아, 동결배아의 확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선전된다. 하지만 배아와 달리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키기 전까진 냉동 난자의 질을 판별할 방법은 없다. 배아는 이미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단계라는 점, 배아를 스크리닝할 검사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아의 임신성공률과 난자의 임신성공률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지점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보다 임신 시도를 위해 냉동 난자의 개수와 여성의 생물학적 나이가 강조되고 있다.

싱글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과정, 불확실한 임신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난자를 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들이 난자를 얼리는 행위에는 임신·출산 시기의 조절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가족 구성에 관한 고민 등이 함께 수반된다. 싱글여성들은 나이듦에 따라 달라지는 위상을 느끼며, 커리어와 가족 계획을 고민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거 양산되고, 개인의 노력과 스펙쌓기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자기관리를 위해 난자를 동결하는 싱글여성들도 있었다.

여성들은 난자를 얼려두고 커리어에 집중하며,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직군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혹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임신 시기를 결정하기보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커리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난자를 얼리고 있다. 다른 한편 경력을 쌓은 여성들의 전문성은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여성의 나이로 여성들의 스펙을 가치절하 하였다. 그래서 일부 싱글여성들은 난자를 얼림으로써 나이에 기인해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과 비례하지 않는 성별 고용률과 고위직 비율, 임금 격차 등 여성의 스펙이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성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난자냉동기술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와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을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개발해야 하며(엄혜진, 2016), 가족 구성과 구성원의 돌봄도 책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와 효용에 달려있다고 말해지며, 개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주체화하기도 한다. 싱글여성들은 난자냉동기술이라는 상품을 구입하고, ‘시간을 얼려두는’ 경험을 통해 나이듦과 생애주기를 분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었다. 시공간을 조정하는 복잡한 기술과 낮은 임신성공률로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생물학적 나이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난자냉동기술은 예측불가능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재의 공백을 메워주기보다,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되는 역설에 있다.

5. 난자냉동기술의 변화하는 의미와 생애 기획

2) AMH 수치는 실상 과배란 유도 약제에 반응하는 미성숙난포의 개수를 가늠하는 것이다.

병력이 없는 여성이 기준일 때, 난자냉동기술은 35세 전후의 여성들에게 권장된다. 하지만 오늘날 20대~30대 초반의 여성들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20대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난자냉동기술이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목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의미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의 국면과 맞닿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성차별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이 전보다 민감해졌고, 정형화된 생애과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보다 비혼·비출산처럼 삶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난자냉동기술은 이러한 흐름 위에서 싱글여성들로 하여금 생애를 다른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부 싱글여성들은 난자를 얼려둘 수 있다는 사실로 임신, 출산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덜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친밀한 관계 안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발현되면, 여성들은 그로부터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부모 역할(parenting)과 '아이중심적'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 자신과 파트너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확보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난자냉동기술로 자발적 비혼모, 공동양육 등 이성애중심적인 '정상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 구성을 상상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언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생애 기획들은 난자가 정자와 결합해 한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잠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이듦과 난자가 독립된 물질로써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다만 이러한 상상과 실천은 싱글여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여성의 재생산 권을 보장하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엄혜진. (2016). 여성의 자기계발, 소명의 고안과 여성성의 잔여화. *페미니즘 연구*, 16(2), 215-265.

Martin, E. (1991). The egg and the sperm: How science has constructed a romance based on stereotypical male-female role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6(3), 485-501.

Thompson, C. (2005). *Making parents: The ontological choreography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MIT press.

Waldby, C. (2015). 'Banking time': egg freezing and the negotiation of future fertility. *Culture, health & sexuality*, 17(4), 470-482.

임신부 관리하기, 태아 예측하기 : 한국 산부인과 내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조희수(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2016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국 13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 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까지 몇 번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7번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612명)에 달했다. 해당 임신 기간에 받은 초음파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7-10번’이라고 답한 사람이 42.6%(323명), ‘11-15번’이 40.0%(303명), ‘16번 이상’이 10.8%(82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93.4%(708명)에 달하는 여성이 해당 임신 기간 동안 7번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¹⁾ 이는 해외의 산전 초음파 진단 실시 횟수보다 현저히 많은 횟수로, 실제로 2008년의 한 조사에서는 ‘한국의 산전 초음파 진단이 외국보다 3-4배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임신부들은 3차원 초음파 진단기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기형아 진단을 하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자궁 속의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으로 간직하는 문화에 익숙하다’며 한국의 높은 초음파 진단 빈도의 이유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한 정밀 초음파 진단의 증가, 산전 초음파 진단에 대한 임신부들의 요구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국 임신부들과 산전 초음파 진단의 관계에 임신부들의 요구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²⁾ 이는 한국에서 초음파 진단이라는 기술의 쓰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용자인 의사들이 이를 어떠한 기술로서 사용하고자 했는지는 물론, 기술의 대상이자 소비자였던 여성들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³⁾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산전 초음파 진단이 한국 산부인과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을 처음 도입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지, 임신한 여성들은 이를 어떠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여성 간의 권력 관계를 전제하고 산전 초음파 진단을 사용하

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도자료] 산전초음파 횟수 산모 요구도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 2016. 4. 22,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info/newsView.do?seq=6543/> (2021. 4. 10 접속).

2) 그 외에도 초음파 검사비를 통한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 고령 임신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 임신의 증가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박문일·한동운·노재숙·최병희·천상훈, “산전 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용역연구 보고서, 2008), 33-34쪽.

3) 본 발표문은 발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학위논문의 경우 한국에서 초음파 진단기 개발의 후발국이었던 한국에서 기기 국산에 성공하여 초음파 진단기의 생산 및 보급 인프라가 촘촘히 갖춰진 배경과 당시 한국 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 글은 초음파 진단기를 둘러싼 물적·기술적 환경의 구축보다는 의사와 임신 여성이라는 두 축의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는 의사의 권력이나 여성의 행위성 그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의사와 여성이 초음파 진단술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를 통해 임신에 대한 의사와 임신부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은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종적으로는 여성의 임신이 좀 더 나은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초음파 기술과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산전 초음파 진단에 주목한 연구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임신부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태아 초음파 사진이 임신부 여성보다는 태아의 존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음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여성의 몸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의사가 임신부의 진술이나 반응보다는 초음파가 만들어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살피게 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부의 감정이나 경험보다는 의료적 이미지 그 자체와 그에 대한 의사의 해석을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⁴⁾ 일례로 초음파 진단술이 만들어내는 태아 이미지가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서정애의 연구에서 초음파 진단술이라는 기술은 임신에 대한 의사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의사들이 초음파라는 재생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사들이 여성의 임신 상태에 대해 내린 의료적 판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초음파 이미지를 지각하고 해석을 시도하면서 초음파 기술과 타협하거나 이에 저항하긴 하지만, 그 역시 “의료적 지식과 기술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⁵⁾

이러한 서술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쓰이는 ‘재생산 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을 기본적으로 여성억압적인 기술로 상징하는 관점에서 유래하는데, 이 때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와 기술의 대상인 여성은 대립 구도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산과학(Obstetrics)과 산과학에서 사용되는 의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비평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기술과 여성의 행위성을 대립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술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탈각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닌다. 이러한 해석은 기술의 도입 이전을 ‘자연적’인 상태로 낭만화하거나 기술을 수용하는 여성은 피해자로, 기술을 거부하는 여성은 주체적인 행위자로 그려내기 쉽다. 그러나 의학 기술을 사용하는 여성의 행위성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의사의 진단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사용을 선택한 여성의 행위성은 선형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성들은 기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화되는 존재도, 자신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자유로이 기술을 선택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⁶⁾

지금까지 여성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사적 연구들은 여성과 기술의 관계가 늘 대립적이거나 여성 억압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으며, 여성들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 대응하고 협상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11세기-18세기 중국의 가옥, 직조, 의학 기술이 당대 중국의 사회적 체계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여준 프란세스카 브레이(Francesca Bray)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계급화된 질서 안에서 자신이나 하층

4) 김소영, “테크노페미니즘, 영상 테크놀로지와 여성”,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열화당, 1996), 151-168쪽; 서정애, “초음파 기술이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 태아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앤 마리 발사모, 김경례 옮김, “공적 임신과 감시의 문화적 서사”,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 읽기』 (아르케, 2012), 135-190쪽.

5) 서정애, 앞의 글, 90쪽.

6) 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3호, 169-202쪽; 정연보, “‘출산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담론분석: 의료화와 자연 개념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Charis Thompson, *Making Parents: The Ontological Choreography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Cambridge: MIT Press, 2005).

계급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약제를 사용한다. 이 때의 의학 기술은 당시 중국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재생산하는(reproducing) 여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인 결과인 동시에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때 여성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도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a form of communication)"으로서 해석된다.⁷⁾ 이러한 관점을 따라 이 연구에서 초음파 기술은 당대 여성들로 하여금 주어진 사회적 조건 아래 자신이 임신한 태아의 성별과 기형 여부를 예측함으로써 자신의 임신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기술이자, 임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만드는데 기여한 기술로 이해된다. 초음파 진단이라는 기술을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술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초음파 진단술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초음파 기술의 결과로서 한국 사회에 만들어진 임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이해하게 해준다.

기술을 사회적 체계와 사용자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서 해석하는 관점에 더하여, 이 글에서는 초음파 진단술이 생산해내는 산과학 지식과 그로 인한 의학적 감시와 개입 상태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줄이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학적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의학사학자 로버트 아로노위츠(Robert Aronowitz)는 그의 책 『위험한 의학(Risky Medicine)』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위험'을 낮추려는 의학적 시도가 건강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를 지배하려는 의사나 악덕한 제약회사의 음모가 아니라 위험을 낮추려는 의학지식의 생성 방식 자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 해결이 더욱 어려운데, 아로노위츠는 그 해결을 위해서 특정한 의학적 개념이 수용되는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⁸⁾ 이러한 아로노위츠의 논의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한국 산부인과에 초음파 진단이 처음으로 도입된 1965년 이래 의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한국 임신부들이 처해있었던 임신 과정에서의 건강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을 보이고 이러한 의학지식이 임신과 관련된 진단 방식과 임신부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임신부 관리하기: 초음파, 임신부의 건강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술

한국 산부인과에 가장 먼저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한 것은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의 김승조 교수이다. 그는 1965년에 국내 산부인과에서는 최초로 미국 스미스 클라인(Smith Kline)사의 A-mode 초음파 진단기인 'Ekoline 20'을 가톨릭의과대학 부설 성모병원 산부인과에 도입하였다.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 초음파 진단기가 도입된 지 3년 뒤인 1968년, 김승조 교수는 이를 이용해 태아의 아두대칭경(Biparietal diameter; BPD, 머리 꼭대기에서 보았을 때 태아 머리 단면의 가장 긴 길이)을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가톨릭대학의학부논문집』에 발표했다. 이는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한 산과학 연구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김승조는 먼저 갓 출생한 신생아의 체중과 태아의 머리 직경(Biparietal diameter, BPD)을 재고, 체중과 머리 직경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 '한국인 태아체중 계측 공식'을 만들었다. 그 다

7) Francesca Bray,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3.

8) 가령 그는 더 좋은 진단 기기와 더 빈번한 진단을 통해 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암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의학적 감시와 개입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본다.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만 주목하는 의학 연구는 '암에 걸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암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데는 일조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더 많은 감시와 개입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Robert Aronowitz, *Risky Medicine: Our Quest to Cure Fear and Uncertain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 박윤재, 이현숙, 신규환 면담, 『출산과 여성 건강』 (국사편찬위원회, 2018), 29쪽.

음 최종 월경일이 확실한 임신 32주에서 43주 사이의 한국인 정상임신부 96명에 대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머리 직경 계측치를 얻어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얻은 태아의 머리 직경 계측치를 ‘한국인 태아 체중 계측 공식’에 대입하여 태아체중 예측 값을 산출하고 이것을 실제 분만 직후 잰 태아체중과 비교 검토한 후 오차를 얻어냈다. 이 연구는 향후 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 김승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상’ 한국인 태아의 머리 직경과 체중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향후 초음파 진단에서 얻은 태아의 머리 직경 계측치로 임신 주수별 태아의 발육상태와 분만 예후를 가늠하고자 했다. 이는 의사들에게 태아의 발육 상태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인데, 산모가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너무 많이 자라거나 덜 자란 상태로 분만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자궁내 태아의 발육 상태와 크기를 살핀 것이다.¹⁰⁾

이후 다른 의과대학의 산부인과학교실에서도 역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태아의 머리 직경이나 태아체중 등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 수 진행되었다.¹¹⁾ 이러한 연구들에서 의사들이 얻어낸 결과는 향후 개별 임신 사례에서의 초음파 진단에 사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이제 의사들이 개별 임신 사례가 ‘정상임신’인지 ‘고위험임신’인지, 초음파 진단을 통해 알아낸 자궁 내 태아의 발육 상태와 크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초음파 진단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이 시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에 주목했던 것은 초음파 진단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기술이 한국에 도입될 당시에 이미 해외 연구에서 초음파가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안심하고 사용했으며, 초음파 검사가 주사 바늘을 찔러 넣거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환자들도 검사를 꺼리지 않았다.¹²⁾ 또한 초음파 진단의 경우 연부(軟部) 조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초음파 진단의 장점 중 하나였는데, 의사들은 초음파로 태아의 성숙도 및 크기 예측뿐만 아니라 임신의 첫 확진, 절박유산·불완전유산·계류유산이나 이상태위의 판정, 다태임신·자궁외임신의 확인, 임신 중 발생 가능한 용모성 질환인 포상기태의 확인, 자궁강 내 태아 사망 진단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¹³⁾

2.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과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

10) 김승조, 김영근, “超音波測定法에 依한 子宮內胎兒發育狀態 및 分娩豫後判定에 關한 研究”, 『가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제15권 (1968), 303-310쪽.

11) 나종구, 임정애, 전정일, 김승조, “初音波診斷 將置를 利用한 子宮內 胎兒發育測定”,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19권 1호 (1976), 39-45쪽; 배석천, 유태건, 김창이, 노영철, “초음파 진단장치를 이용한 임신전반기의 자궁 및 태아의 발육 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21권 6호 (1978), 457-465쪽; 서병희, 최옥, 이재현, “정상임신에 있어서 Real-time 초음파 분석에 의한 태반성숙등급과 임신재태주수 및 태아아두대형 경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제1보)”,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26권 1호 (1983), 1005-1011쪽; 우복희, “초음파 계측에 의한 추계 태아체중 측정”,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26권 10호 (1983), 1139-1147쪽; 이준덕, 윤만수, 최종길, 김원희, “정상임신에 있어서의 임신주수에 따른 태아아두대형경치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26권 2호 (1983), 173-179쪽.

12) 『대한초음파의학회 20년사』 (대한초음파의학회, 2000), 11쪽.

13) 노영철, 나종구, 하상호, 이현영,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의 초음파 진단의 이용”,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18권 8호 (1975), 709-718쪽; 이현우, “산과 분야의 초음파 진단법”, 『한국의과학』 제8권 1호 (1976), 11-18쪽; 전선희, 김정자, 강미자, 우복희, 강신명, “초음파촬영(Sonography)의 산부인과 적용”,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제23권 10호 (1980), 829-843쪽.

상술한 여러 장점으로 인해 초음파 진단은 한국 산과학에서의 진단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을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금과 같이 산전 초음파 진단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90년대가 되어서의 일이었다.¹⁴⁾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초음파 진단에 대한 신문 기사가 속속 등장했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초음파 진단이 태아 성감별을 가능케하는 기술로서 주목 받아 일부 임신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⁵⁾ 1985년 8월 8일 『조선일보』에 실린 “「생명존엄」 무시...초음파 태아진단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는 당시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의 인기와 이를 사용한 임신부를 비롯해 산부인과 의사, 보건사회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위로 딸 셋을 낳은 박모씨(33.여.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경우 임신 5개월째인 지난 4월 영등포 S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에 의해 딸이라는 진단을 받아 가족회의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손자를 원하는 시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다.

(중략) 한 산부인과 개업의는 『검사 방법이 비교적 간편할 뿐 아니라 외성기가 감춰져 까다로운 경우 우라도 5개월이 지난 태아라면 30분 내에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임신부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비용이 3만 5천원 정도로 비교적 비싸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1년 이후 6백 33대의 초음파 검사기가 도입돼 있으며 81년 이전에 도입된 1백 여대 등 모두 8백대 가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사부는 보고 있다. 보사부 시설장비과 시설 담당 이철규 계장은 『이 가운데 약 70%가 태아감별 등만을 위한 소형 복부용 초음파 장비(리니어타이프)』라며 『소형의 경우 대당 도입 가격이 6천~8천달러(한화 6백만~8백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도 들여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¹⁶⁾

위 기사에서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가 딸임을 진단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결정한 임신부의 결정은 그의 단독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된 가족 공동의 결정이었다. 역사학

14)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시행한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1983년에 최종아를 낳은 여성의 18.8%가, 1988년에 최종아를 낳은 여성의 50.5%가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고 답했다. 1965년에 처음 한국 산부인과에 도입된 이래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이유로는 세 가지들 들 수 있는데, 먼저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초음파 기술이 낡은 것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초음파 진단술을 가르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의대에 신설되고 산부인과 의사의 필수 자질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초음파 진단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개인 병·의원을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았다. 또한 초기 초음파 진단기는 매우 고가의 기기였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부터 소형 초음파 진단기가 수입되고 국내 기업이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진단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167쪽.

15)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된 기술은 양수검사였지만 1980년대부터는 초음파 진단이 더 큰 인기를 끌었으며, 훨씬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임신부의 복벽에 바늘을 꽂아 양수를 채취하여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식인 양수검사가 태아를 유산하거나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데 비해 초음파 진단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우며,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사회부는 1980년 6월 14일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양수검사를 금지했는데, 이 역시 양수검사의 대체재로서 초음파 진단이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 “태아성판별 양수검사”, 『동아일보』, 1980. 6. 19, 5면; 김승조, “1970년~1980년대 산부인과학: 세계속의 학문정립시대”, 『한국의학100년사: 1884-1983』 (의학신보, 1984), 230쪽.

16) 김민배, “「생명존엄」 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1985. 8. 8, 11면, 강조는 필자.

자 소현숙이 지적했듯이 이는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과 여아 선별 낙태가 “남아선호가 낳은 비극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보유한 ‘정상가족’을 이루겠다는 공동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¹⁷⁾ 아들에 대한 이 가족의 욕망은 그저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한편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와 보사부 소속 공무원의 언급은 당시 이러한 진단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도입된 ‘소형 복부용 초음파 장비’의 경우 태아 성감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저해상도의 진단 기였는데, 이는 태아의 상태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지만 태아의 외성기를 관찰하여 성별을 예측하는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¹⁸⁾ 이 기사에서 언급한 저해상도의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태아 성감별 목적 외에 다른 태아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 활용이 제한적인 저성능의 기기가 의원급 산부인과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병원에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진단이었음을 암시한다. 1985년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은 ‘3만 5천원’ 정도였는데, 이는 아주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지출할만한’ 수준으로 여겨졌다.¹⁹⁾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진단은 큰 인기를 끌어 “일부 종합병원과 유명산부인과의원에는 이 같은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임신부들이 줄”을 썼으며, ‘저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잘 맞힌다’는 소문이 나면 그 병원을 찾아가려는 산모들로 병원이 붐비기도 했다. 이렇게 태아 성감별을 위한 초음파 진단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태아 성감별을 원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은 이것이 한국 사회에 팽배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집짓 동의하면서도, 임신부들이 초음파 진단을 사용하여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며 그로 인해 향후 한국 사회에 인구 불균형 위험이 드리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장래 인구 추이’를 발표하며 2000년도와 2010년 예상 성비를 계산한 후 “20년 뒤에는 남자 5명 중에 1명은 신부감이 없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한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처럼 성비의 격차가 커지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결혼시기에 이르렀을 때 남자가 크게 남아돌아 성윤리의 타락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점잖은 척 충고하기도 했다.²⁰⁾

17) 소현숙, “여아낙태의 역사를 통해 보는 ‘정상가족’에의 욕망과 태아 선별의 의료기술”, (젠더어펙트 연구소 - 연결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신체 사유에 대한 비교역사 연구 자료집, 2021. 1. 8 발표), 69쪽, <http://genderaffect.net/23/?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5757839&t=board/> (2021. 2. 19 접속).

18)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등지에서 성행해온 태아 성감별 관행에 주목한 과학 저널리스트 마라 비스달은 태아의 생식기는 모니터의 회색 배경에 보통 흰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가의 소형 초음파 진단기로도 태아의 성별 예측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마라 비스달, 『남성과인사회』 (현암사, 2013), 86-89쪽.

19) 같은 해 3/4분기 월평균 가계 지출은 343,908원으로, 이 기사에 따른 태아 성감별 비용은 월평균 가계 지출의 1/10 수준에 해당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0022&con (2021. 5. 24 접속).

20) 인용은 “초음파 진단기 변칙 사용 많아”, 『매일경제』, 1985. 8. 26, 7면. 그 외는 남여 균형 깨뜨리는 태아 성감별”, 『한겨레』, 1989. 11. 10, 7면; “태아 성감별 성행 남아 출산 너무 많다”, 『한겨레』, 1989. 11. 5, 11면; 김민배, “「생명존엄」무시... 초음파 태아 진단 - 보사부 규제 계기로 본 실태”, 1985. 8. 8, 11면; 김윤수,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유산...” 이렇다간 신부 기근 시대 온다”, 『조선일보』, 1985. 10. 17, 11면; 박태균, “태아 성감별 검사 위험하다”, 『경향신문』, 1995. 12. 16, 13면; 정진건, “10년 후엔 신랑 재수생 나올판”, 『매일경제』, 1990. 1. 22, 17면.

태아 성감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대한의학협회는 이를 의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 잠재우려 했으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성감별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²¹⁾ 당시 서울에서 초음파 진단기로 태아 성감별과 낙태 수술을 시행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가 여아로 판명될 경우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태아의 성별 확인을 거부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세계로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며, '거의 모든 환자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 했으며 자신이 이를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그 산모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태아의 성별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²²⁾ 당시 태아 성감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시술이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 의사들이 이를 쉽사리 감행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감별이 계속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를 요구한 여성들이 의사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초음파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였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태아 성감별에 대한 임신부들의 요구는 초음파 진단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당대 의료 시장의 변화와 함께 한국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를 추동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 태아 예측하기: 태아, 관리의 대상이 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4년에는 전국의 임신부 중 97.6%가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 이들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이유'를 질문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80.0%를 기록한 '의사가 알아서 해주어서'인데, 이는 1988년 조사에서는 '진찰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라는 이유가 10.0%에 그쳤던 것과 비교가 된다. 즉, 1980년대 중후반에 비해 1990년대 중반에는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 과정의 당연한 절차로서 정례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들이 산전 초음파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의사들의 진단 방식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임신 경험도 변화되었다. 이제 임신한 여성들은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임신을 확인하고 태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 전에 태아의 성별은 물론 임신 상태와 태아의 이상을 예측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는 여성학자 서정애가 언급했듯이 초음파 진단술을 통해 임신한 여성의 자궁 속에 있던 태아가 가시화되면서 임신부들이 "(초음파) 이미지를 단순히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하여 태아를 더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새로운 모성경험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산과학이 재편됨에 따라 만들어진 초음파 기반 "의료의 패러다임 내부"에 임신부들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²³⁾ 그러나 초음파 진단을 받는 임신부를 단순히 기술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기에는 초음파 진단 기술의 사용 방식에 임신부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21) 당시 대한의학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같은 의사 집단이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태아성감별 근절을 촉구하는 조치가 이어졌으며, 1987년에는 결국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신부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실을 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90년과 1994년에는 정부가 태아 성감별을 감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로 임신부를 고용해 태아 성감별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로 위장시켜 합정 수사를 펼치기도 했지만 태아 성감별이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출생성비는 2000년대 초가 되어야야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22) 마라 비순달 지음, 앞의 책, 89-91쪽.

23) 서정애는 1990년대 중후반에 산전 초음파 진단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음파 기술이 여성들의 임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글과 필자의 학위논문에서는 서정애의 글에 인용된 인터뷰를 당시 여성들의 초음파 진단 경험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활용하되, 이를 당대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 시킴으로써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용은 서정애, 앞의 글, v쪽.

는 앞서 살펴본 초음파 진단을 통한 태아 성감별의 영역에서는 물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와 그 과정에서의 기형아 예측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태아 성감별이 그 진단의 용이함 덕분에 국내에 도입된 대부분의 초음파 진단기가 저렴한 소형 초음파 진단기였던 때부터 성행할 수 있었다면, 태아의 상태와 이상에 대한 진단은 발전된 초음파 진단기가 보급되고 산전 초음파 진단이 정례화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실시간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움직임이나 호흡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태아의 심장 기능이나 혈류를 살피는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 청각적으로도 태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래 사례의 임신부는 처음에 태아 초음파 영상을 접했을 때는 “까만 주머니”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영상을 접하면서 태아의 성장과 심장 박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략) 저는 유산 끼가 있어서 첫 달에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3번까지. 일 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애기가 조금씩 조금씩 크는 게 보이더라구요. 처음에는 까만 주머니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일 주일 만에 갔더니 하얀 게 보이더라구요. 애기 몸 모양이 보였어요. 의사가 조계[sic] 심장 뛰는 거라고 하는데 심장이 뛰는걸 보니까 애가 내 속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한달 후에 가니까 애기가 점점 커지더라구요. 머리 모양도 커지구 한 달씩 가니까 갈수록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2센치였죠. 한 달 지나고 두 달만에 갔더니 6센치예요. 이만하면 대충 형태가 잡히잖아요. 머리있구, 손도 조금 나오구, 발있구, 몸통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손가락까지 있더라구요.²⁴⁾

이 여성은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을 진단 받은 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진단을 받았다. 그는 초음파를 통해 아이가 점차 자라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태아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반복적인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머리, 손, 발은 물론 손가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초음파 영상에서 태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임신부에게 태아의 존재를 강화하는 요소이다. 이렇게 당시 임신부들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에 관심을 갖고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의사의 일방적인 주문에 임신부가 수동적으로 따른 결과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임신 과정과 태아에 대한 산과학적인 지식이 증가하면서 임신부들에게도 자신의 임신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자궁 속을 들여다 뚫으로써 태아와 임신 과정을 시각화하고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당시 임신부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임신 상태를 관리하고 태아의 건강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1990년대의 높은 산전 초음파 진단율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한 태아의 건강 정보를 해석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남겨졌지만,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이 태아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였기 때문에 그 의학적 유용성과는 별개로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간직하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다. 이제 초음파 사진은 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태아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임신부들에게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관행이 확산되어 병원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임신부들은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간직하며 이를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임신부들이 산전 초음파 진단을 소비하는 적극적인 주체였다는 점은 1990년대 말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의 3차원 초음파 진단기 판매 전략에서도 잘 드러난다. 3차원 초음파를 세계 최초로 상

24) 같은 글, 40쪽.

용화한 메디슨은 임신부들이 3차원 초음파로 태아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보도록 마케팅을 통해 장려하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메디슨이 1999년부터 주최하기 시작한 ‘태아사진 콘테스트’이다. 메디슨은 이 행사에서 산모들로 하여금 3차원 초음파를 통해 얻은 초음파 사진을 응모하게 했는데, 이 콘테스트는 임신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실시 한 달 만에 응모 횟수가 1,000여 건에 달했다. 이 콘테스트에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들은 3차원 초음파로 얻은 태아 사진을 얻고자 주변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3차원 초음파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고, 이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3차원 초음파 진단기의 도입을 망설이던 병원들도 진단기의 도입을 서둘렀다.²⁵⁾ 이 콘테스트를 주최한 메디슨은 실제로 자사의 여성 직원들로 하여금 3차원 초음파 진단을 원하는 임신부인척 산부인과 병·의원에 연락하여 3차원 초음파 진단기의 유무를 묻는 방식의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²⁶⁾ 이는 초음파 진단기 생산 기업이 초음파 진단기의 1차적인 소비자인 의료계를 공략하기 위해 3차원 초음파의 임상적 응용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의 또 다른 소비자인 여성들을 공략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이것이 의료계의 신기술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초음파 사진이나 영상을 둘러싼 새로운 임신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렇게 임신 문화의 하나로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초음파 진단이 태아의 이상 증세나 태아 기형을 확인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빈번하게 들여다보고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는 일, 태내의 태아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태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욕구의 발현이므로, 필연적으로 태아가 ‘잘 지내지 못하는’ 상태, 즉 태아의 기형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 이 시기에 산전 초음파 진단이 정례화되고 빈번해지면서 여성들의 산전 진단 과정은 기본적으로 태아의 기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산전에 미리 알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²⁷⁾

산전 초음파 진단은 태아 머리의 크기나 손발의 모양, 신장, 간, 척추와 태아의 심박동 등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의사들의 교육 과정이나 산과학 교과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상 태아의 기준’과 비교되며, 이 기준에 맞춰 태아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된다. 이후 임신 제2삼분기가 되어 태아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초음파 진단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알아본다.²⁸⁾ 물론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는 태아의 신장이나 간·척추 기형이나 다운증후군, 무뇌아, 구순구개열 등과 같이 형태학적으로 태아의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만을 판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유전학적인 기형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산전 초음파 진단이 1990년대에 들어 정례화된 이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임신부가 초음파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 태아의 형태학적인 기형 여부를 진단받는다라는 점에서 초음파 진단과 태아 기형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어 그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이 시기에 임신부가 태아의 이상을 확인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래 사례의 여성은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일이나 자신이 피곤을 느끼는 것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25) 고성훈, “초음파로 찍은 우리 아기 예뻐요”, 『매일경제』, 1999. 6. 2, 15면.

26) 윤종연, “태아사진 이색콘테스트 열린다”, 『매일경제』, 1999. 4. 21, 17면; 삼성메디슨 서울강북 및 인천 지점장 강태원 면담.

27) 김선혜,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이화젠더법학』 제12권 2호 (2020), 32쪽.

28) 대한산부인과학회, “저위험 임신군에 대한 일상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박문일·한동운·노재숙·최병희·천상훈, “산전 검사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용역연구 보고서, 2008), 204쪽에서 재인용.

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을 활용했다. 초음파로 “애가 제대로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의사로부터 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개운”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병원 가지 않을 때는 불안해요. 20주 지나서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전에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가령 내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피곤을 느껴도 혹시 애가 잘못되거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초음파로 보면 아 애가 제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안심이 돼요. 초음파를 보고 오면 안심이 돼요. 의사가 애기 건강하다고 하고 또 제대로 보고 오니까 안심이 되죠. 2주마다 한 번씩 보고 오면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걱정되는 것 없구 애기가 건강하구 잘 크고 있으니까 이대로 잘 크면 되는구나 하죠.²⁹⁾

그러나 빈번한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임신부가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은 일시적인 것에 가까운데, 이는 초음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과학 지식은 임신 단계별로 다양한 측면의 위험을 경고하기 때문에 한 번의 초음파 진단에서 ‘정상’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태아가 ‘정상’일 것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신부는 출산을 완료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태아가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노심초사하게 되며, 이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이다.

임신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태아의 정상성을 획득하고자하는 욕구가 크고 그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임신부에게 집중된 한국 사회에서 초음파를 비롯한 산전 진단 기술을 통해 태아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임신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고, 그러한 부담이 임신부로 하여금 초음파 진단을 거듭하도록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초음파 진단을 비롯한 산전 진단 기술이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임신부가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빈번한 산전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을 ‘예방’하는 것이 그의 당연한 책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1988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한 기사는 아래와 같이 부모가 태아에게 “무관심”하여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값비싼 기형아 검사를 하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선천성 기형아 또는 유전질환자”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⁰⁾

부모의 무관심이 평생을 고통속에서 보내게 만드는 선천적 기형아 또는 유전질환자를 낳고 있다.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임신 초기 기형아 판별이 가능해졌지만 진단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기형아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천적 「장애자」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염색체 이상이 이 같이 많이 나타난 것은 우선 조사대상 산모들이 무월경 습관적 유산 애매한 성별 등 기형아를 낳을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탓도 있지만 이들 산모들이 출산전 검사를 통해 기형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보다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³¹⁾

산전 진단 기술을 통해 태아 기형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태아 기형은 개인이 부지런히 산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태아 기형을 막지 못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나 임신부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기형을 ‘정상’ 상태로 치료하는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형아 예방’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의미하는데, 이

29) 서정애, 앞의 글, 56-57쪽. 강조는 필자.

30) 직접 인용은 최수점, “기형아출산 부모 무관심 탓”, 『동아일보』, 1988. 11. 2, 11면. 그 외의 간접 인용은 유을상, “기형아 의학적 무지가 낳는다”, 『동아일보』, 1990. 4. 24, 12면.

31) 최수점, “기형아출산 부모 무관심 탓”, 『동아일보』, 1988. 11. 2, 11면.

는 태아의 운명을 결정해야하는 책임까지도 임신부와 그 가족에게 전가했다.³²⁾ 한국 사회가 장애 아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도, 임신부의 임신 중지 결정을 존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점점 발전해가는 산전 초음파 진단의 존재는 임신부가 태아의 상황을 미리 알고 양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태어나야만 하는 태아와 태어나서는 안 되는 태아”를 구별하는 기술이며,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하는 장애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³³⁾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전 초음파 진단의 도입과 정례화는 분명히 임신부들의 건강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해왔으며, 임신부들로 하여금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를 더 잘 들여다보고,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의사들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가 겪는 건강 위험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부들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안녕을 확인하고, 태아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전 진단 기술과 그것이 기준으로 삼는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 없이 초음파 진단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전 진단의 빈도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태어날 태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오로지 임신부와 그 주변의 몫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한국 산부인과학에서 산전 초음파 진단의 보편화는 그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향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이 기술의 대상인 여성들은 더 나은 임신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오히려 임신부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기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초음파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32) 산전 초음파 진단이 보편화되고 초음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태아 기형’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지만,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장애나 질병만을 낙태죄의 예외 사유로 허용할 뿐 태아의 장애나 질병은 여전히 낙태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에 낙태죄가 사라지기 전까지, 산전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 기형이 발견되었을 때 임신부 여성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33) 김선혜, 앞의 글, 33쪽.

과학하기와 여(남)성하기

사회: 이은경(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의료분야의 기술변화와 여성일자리 변화: 간호분야 중심으로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율감각쾌락반응(ASMR) 남성 유튜버들의 "디지털 젠더" 수행
이소림(컬럼비아대 방문연구자)

페미니스트로 과학하기: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연구
임소연/김도연(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학부생)

토론: 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윤보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의료분야의 기술변화와 여성일자리 변화 : 간호분야 중심으로¹⁾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변화 시대에 보건의료서비스업의 기술변화가 여성 일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호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술변화가 간호사의 일 자리에 미 치는 영향과 함께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들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료분야는 기술변화가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을 수 있으며, 전방위적인 기술발전이 진행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정밀의료, 사물인터넷과 웨 어러블센서, 로봇(혹은 자동화), 진단장비, 자동기록장치 등 다양하게 발전 중이며, 이러한 기술이 결 합되어 복합적으로 활용 및 발전 중에 있다. 발전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류 역사 이래 멈춰본 적이 없는 수요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와 감염병 위기 시대와 맞물려 필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으며, 치료와 돌봄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기술발전으로 인해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 는 가운데, 간호분야는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박가열 외, 2016: 27). 인공지능 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최종판단과 정서적 공감, 돌봄은 사람이 하는 핵심 업무 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인력 중 여성이 절대다수인 간호영역은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근 로조건, 만성적 인력 부족의 문제로 이탈 및 이직이 높고 비활동 간호사가 많은 분야로 꾸준히 인 력수요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업 내에서 여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술의 도입과 변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간호 업무에 대한 기술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동시 에 기술도입과 변화에 따른 업무 및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개선된 부분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은 어떤 부분이며, 왜 그러한지, 기술발전으로 개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업무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기술진보로 간호분야에서의 일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기술을 통해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1) 본 발표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기의 여성일자리 연구(Ⅰ):여성의 일과 일자리의 미래」의 4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수준은 어떠하며 기술도입 이전에 비해 변화된 업무대체는 어떤 수준인가

둘째, 기술변화가 기존의 간호업무에 어느 정도 보완적 역할을 하는가

셋째,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간호인력 규모 변화와 인력부족 문제의 개선가능성이 있는가

넷째, 기술도입과 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때 ‘업무대체’는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업무대체는 기존 업무가 기술변화와 도입으로 인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다른 영역의 업무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이 도입된 수술실의 경우 로봇 도입 이전에는 간호사들이 수술 전 수술집기를 소독하고 준비하는 역할부터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도움 행위를 지속하며 수술이 마칠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로봇수술이 시행된 후 과거에는 수행하지 않던 로봇 수술기계의 소독과 준비과정,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로봇 수술기계의 정리라는 새로운 업무로 변경되고, 수술 과정에 필요한 도움과 행위는 하지 않거나 간소화되었다. 즉 간호업무라는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전반적인 의료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 간호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10가지 기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보건의료서비스업 여성일자리 중 간호사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3절에서는 기술변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노동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질문에 따라 각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 분석한 내용의 요약을 통해 기술변화에 의한 간호분야의 실태를 정리하면서 정책적 함의로 글을 맺었다.

2. 기술변화와 여성일자리 특징

가. 간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변화²⁾

의료분야의 기술변화는 주로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들을 필두로 치료중심의 기술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표준화 정보시스템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정보의 데이터를 용이하게 추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주로 의사들이 활용하는 치료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간호사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 10가지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업 기술변화를 정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종이차트에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병원에 도입되어 환자 진료 정보를 전산화하고, 진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컴퓨터를 통하여 관리한다(이은숙, 2012).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다른 의료 기술들과 접목하여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의 문서 작성 업무를 감소시켜준다.

두 번째 자동 IV 펌프 주입(Infusion pump) 및 전자 모니터링은 정확한 양과 속도로 약물 및 수액을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펌프로 높은 정확도와 쉬운 작동법, 주입 전후와 이상경우에 경보

2) 간호분야에서 현재 활용하는 기술이나 활용가능한 기술, 필요한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해외 간호교육전문시설 홈페이지나 국내 기사검색, 간호사 집중집단인터뷰(FGI) 및 보건의료노조의 인터뷰를 통해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업무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검토하여 다음 10가지 간호분야에서 활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정리하였다.

(Alarm), 설정정보, 주입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고, 과다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Auto clamping, 주입 완료 후 환자 IV line을 유지시키는 KVO 기능 등이 있다(김진남·권원태·이강희, 2012).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되어 의료진과 환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세 번째 의료영역에서 휴대용 IT장치(환자상태정보 확인, 모니터링, 경보 등)의 활용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상태 확인, 약물 투입 등에 주로 사용되며(윤강재 외, 2016) 약물 투입 시 일어나는 오류를 줄여주고 환자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해줌으로써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 바코드와 약물 바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약하는 ‘스마트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이 있다. 또 의사의 처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PDA 등이 있다.

네 번째 간호영역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는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센서, 모니터링, GPS, wireless 등)시스템이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이동형 의료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원내 와이파이와 통신하여 장비의 실시간 위치 및 사용현황을 컴퓨터로 알려주는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을 도입했다. 이를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에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 의무기록(EMR)을 연동하여 환자 상태와 진료정보, 사용 장비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록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약물관리(재고관리, 바코드, 주입장비 등) 기술이다. 의약품 조제와 관리시스템은 조제 자동화(ATDPS), 관리자동화(INTIPharm)의 기술과 장치로 이루어진다. 또한 병원에 입고되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재고관리를 자동화하는 것을 통해 과거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던 작업이 자동화가 가능해졌다.

여섯 번째는 로봇활용이 있다. 수술로봇을 비롯하여 이동 및 신체보조 로봇이나 재활 로봇, 환자 이송 로봇, 감시 로봇, 반려 로봇, 의료시설 물류 로봇, 검체 채취 로봇 등이 있지만(송영애·김현정·이현경, 201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는 안내, 청소로봇에 이어 국내병원 최초로 검체, 약품, 물품을 운반하는 로봇을 도입했다.

일곱 번째로 약물 등의 물류이동시스템으로 이는 물품운반로봇과는 다르다. 일종의 시스템을 병원에 설치하는 것인데 세브란스병원에는 첨단 물류시스템인 ‘에어슈터’를 도입하였다. 일명 ‘송기관 혹은 기송관’이라고 불리는 이 에어슈터는 타원형의 캡슐에 응급환자의 검사물이나 약물, 서류 등을 담아 병원 내 설치된 연장거리 700여 미터까지 전달할 수 있다.

여덟 번째는 스마트 침대로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거나 환자활동의 모니터링이 되며, 환자의 요청사항이나 의료내역을 기록한다. 이를 이용하면 간호사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시트교체, 청소, 병실 이동, 식단 변경 등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외래기록이나 입원기록과 같은 의료기록 증명서 신청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아홉 번째는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이동안내, 보호자 설명, 코로나 19 주의 등) 기술이다. 키오스크를 통한 안내는 불필요한 등록과정을 최소화 하여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며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 감소, 감염 환자를 비롯한 여타 특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접수 단계에서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환자 원격 모니터링은 휴대용 IT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환자의 체온,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 활력징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다(청년 의사, 2020.10.23). 이를 통해 원격리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긴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 상황을 줄여주고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낮춰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간호분야에 영향을 주는 10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간호분야의 기술 적용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나. 보건의료서비스업의 여성일자리 특징

기술의 변화와 일자리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보건의료 전체의 기술변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특히 간호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측면을 강조하여 분석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업의 여성 일자리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일자리 측면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업의 여성일자리 특징을 분석한다.

먼저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개 기관, 종합병원은 311개 기관으로 전체의 1% 수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원이 전체 기관의 90.4%를 차지해 수량으로는 압도적으로 의원이 많다. 그러나 인력구성을 보면 요양기관의 수와는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8).

<표 1> 요양기관 현황

(단위: 기관 수, %)

구 분	2000		2010		2018	
계	20,657	(100.0)	29,969	(100.0)	35,096	(100.0)
상급종합병원	43	(0.2)	44	(0.1)	42	(0.1)
종합병원	245	(1.2)	274	(0.9)	311	(0.9)
병원	662	(3.2)	1,315	(4.4)	1,465	(4.2)
요양병원	19	(0.1)	867	(2.9)	1,560	(4.4)
의원	19,688	(95.3)	27,469	(91.7)	31,718	(90.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8년 통계를 이용해 필자 정리

병원 인력구성은 크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 방사선, 영상의학, 재활, 물리치료 등), 보건, 원무행정과 외주인력으로 간병, 병동관리, 청소 등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력구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의사는 약 10만 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40% 가량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여성의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여성 의사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절반 이상(51.3%)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8).

한편 간호사의 경우 98% 수준이 여성으로 남성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전체 숫자를 통해 확인한다. 2018년 기준 간호사는 약 19만 명이 넘으며 의사 전체 숫자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또한 간호사 전체 중 상급종합병원에 24.4%, 종합병원에 33.8%가 종사하고 있어 58.2%가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병원에 15.8%, 요양병원에 13.8%씩 분포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7.4%만이 종사하고 거의 대부분 의원(41.6%)에 몰려있으며,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치과의원(9.9%), 한의원(9.1%)에 많아 간호사 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8).

<표 2> 요양기관 인력현황(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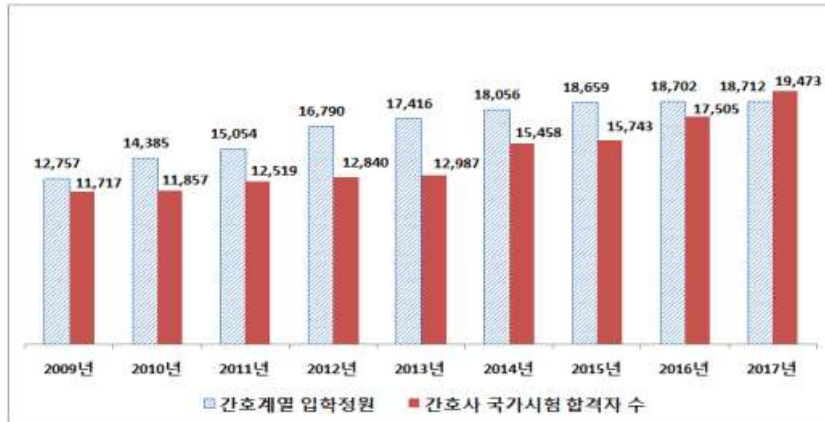
(단위: 명, %)

	의사전체		의사여성		간호사		간호조무사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2,471	100.0	25,210	100.0	193,909	100.0	178,287	100.0
상급종합병원	20,879	20.4	7,099	28.2	47,398	24.4	2,080	1.2
종합병원	20,793	20.3	5,824	23.1	65,446	33.8	11,050	6.2
병원	10,730	10.5	2,429	9.6	30,657	15.8	19,962	11.2
요양병원	5,861	5.7	1,155	4.6	26,842	13.8	31,821	17.8
의원	41,845	40.8	8,425	33.4	14,914	7.7	74,146	41.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8년 통계를 이용해 필자 정리

한편 매년 간호인력 배출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기준 약 2만 명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매년 입학정원과 국가시험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영 외, 2018:2).

(단위: 명)



자료: 이상영 외(2018:2)에서 재인용.

[그림 1] 연도별 간호계열 입학정원 및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자 수

또한 면허간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이 꾸준히 4%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은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간호대학 졸업생과 국가시험 합격자 수 역시 증가세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유휴간호사의 증가이다(김수현, 2017:117).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2016:173; 김수현, 2017:117에서 재인용).

[그림 2] 면허간호사 수 증가추이

유휴간호사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수현(2017)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상 간호사 면허 소지 인력에서 병원, 의원 및 조산업,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 수를 뺀 나머지를 유휴간호사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는데(김수현, 2017:117), 그 결과 2015년 기준 유휴간호사는 약 179천 명으로 활동간호사 159천 명 보다 1.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간호사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약 5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2017:150). 이와 같은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매년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간호사가 유휴간호사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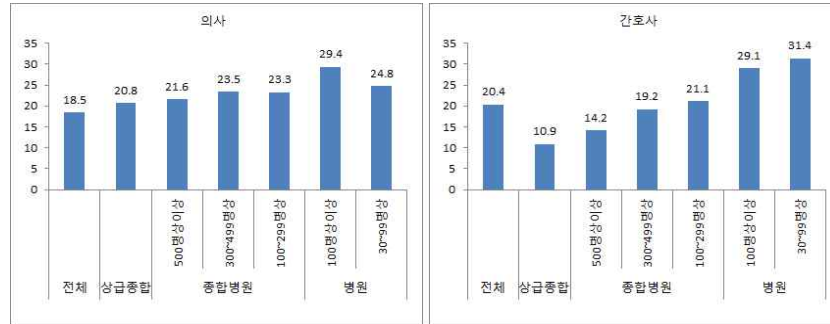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6:173,181,183,185,187를 재구성; 김수현, 2017:118 에서 재인용)

[그림 3] 활동간호사와 유휴간호사 규모추이

면허 간호사 수 자체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휴간호사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직 및 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일 것이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의사와 활동간호사의 2016년 이직률이 의사는 18.5%인데 반해 간호사는 20.4%로 간호사의 이직

률이 더 높다(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30). 의료기관에 따라 나뉘보면, 간호사는 기관규모가 작을수록(운영병상이 적을수록) 이직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그림 4] 활동 의사, 간호사의 이직률(2016년)

간호사 중 유휴간호사가 많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 의료기관별로 간호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정희 외(2017)는 의료법에 필요간호사 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대비 부족간호사를 추정하였는데 2015년 기준 부족간호사는 총 14만 1천 명으로 이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모든 병원에서 의료법 기준보다 간호사 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정희 외, 2017:40).

<표 3> 종별 간호사 수, 필요간호사 수, 부족간호사수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명)

	간호사 수	필요간호사 수	부족간호사 수
전체	152,862	293,952	-141,090
종합병원	88,343	71,935	16,407
병원	28,601	120,270	-91,669
요양병원	18,612	6,947	16,296
치과병원	118	980	862
한방병원	1,507	2,041	534
의원	1,421	76,378	-62,527
치과의원	437	9,495	9,058
한의원	1,123	5,906	-4,783

자료: 이정희 외(2017:40)에서 재정리.

의료법 제38조는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별 구체적 정원은 시행규칙 제38조[별표 5](2015.5.29.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대표 직업인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누고(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된다(이정희 외, 2017:37). 즉 법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017-2019년 기준 간호사 정원 미준수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미준수율 0%로 준수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19.2%, 병원은 66.2%, 한방병원

52.4%, 요양병원 24.9%로 의료법에 적시된 간호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중앙일보, 2020.10.08.). 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간호인력 미달상태인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이정희 외, 2017:95). 간호사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생기는 의료수가 패널티가 간호사를 채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대한 비용패널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 및 미준수 현황(2017-2019년 기준)

(단위: 개소, %)

	법적기준	전체	준수율	미준수율	자료불충분
전체	2.5:1	11,110	54.2	43.0	2.8
상급종합병원		127	100.0	0	0
종합병원		926	79.7	19.2	1.1
병원		4,420	30.8	66.2	3.0
한방병원	5:1	971	39.5	52.4	8.0
요양병원	6:1	4,666	73.2	24.9	2.0

자료: 중앙일보(2020.10.08.)

3.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간호인력의 노동변화 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는 간호사들에게 기술도입과 변화에 따른 업무대체와 변화, 기술도입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지, 간호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재직 간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Web-Survey)를 실시하였다. 병원 규모에 따라 기술도입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00명씩 표본할당수집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402명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비의 한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 면접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정확한 모집단을 기반으로 한 표집설계를 하지 못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5년 이상 경력 간호사가 70% 이상 표집 되어 기술변화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사항목은 연령, 면허취득년도, 재직 및 경력년수와 근무형태, 근무부서와 같은 일반현황을 조사한 후 간호분야의 기술도입현황과 기술이 도입된 이후 일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근로자 대상 조사 항목

영역	문항
A.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근무부서 • 기관소재지 • 연령, 면허취득년도, 현재 병원 재직년수, 총 경력년수 • 고용형태, 근무형태
B. 간호분야 기술도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한 기술 현황, 도입된 기술이 업무를 대체하는 정도, 도입된 기술이 업무의 고도화에 미친 영향 • 업무별 과중함의 정도, 기술 도입 여부,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정도, 업무가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 기술 도입시 업무의 고도화 및 향상 가능성
C. 기술의 도입과 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간호인력 규모에 미친 영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및 발전이 미래의 간호인력 규모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본인의 업무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기존의 업무를 대체한 정도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간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영역별 업무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직무 전문성 유지에 미칠 영향 •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요소와 본인의 노력 • 기술도입 및 발전에 대한 병원의 준비정도 • 간호분야 기술도입의 속도에 대한 동의 여부 • 간호분야 기술도입이 늦어지는 이유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간호분야의 어려움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간호사의 이·퇴직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에 미칠 영향 • 기술도입 및 발전으로 인한 남성간호사 유입 가능성 • 기술도입 및 발전에도 간호업무가 힘든 이유 • 간호서비스에 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종류 • 기술도입 시 별도의 훈련 및 교육 이수 여부
----	---

출처: 연구진 작성

총 402명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약 60%, 종합병원이 약 40% 조사되었으며 근무부서에 따른 분포는 전체 대상자 중 일반병동 24.6%, 응급실 및 중환자실 14.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2%, 수술실, 회복실 등이 12.7%, 기타(외래, 행정 등) 40.8%가 조사되었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가 63.7%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30대가 38.6%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근무연수는 10년 이상이 50.2%, 총 경력년수도 10년 이상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조사 인원이 적게 조사되었다. 근무형태는 통상(주간)근무가 51.5%, 3교대근무가 43.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응답자 특징

(단위: 명, %)

	사례수	전체
전체	402	100.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38	59.2
종합병원	164	40.8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99	24.6
응급실, 중환자실	59	1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9	7.2
수술실, 회복실, 분만실, 투석실, 신생아실	51	12.7
기타(외래, 행정 등)	164	40.8
기관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256	63.7
충청권	28	7.0
전라권	21	5.2
경상권	86	21.4
강원/제주	11	2.7
연령		
20대	105	26.1
30대	155	38.6
40대	119	29.6
50대 이상	23	5.7

기관 근무연수		
3년 미만	39	9.7
3년-5년 미만	73	18.2
5년-10년 미만	88	21.9
10년 이상	202	50.2
총 경력연수		
3년 미만	17	4.2
3년-5년 미만	65	16.2
5년-10년 미만	88	21.9
10년 이상	232	57.7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07	51.5
2교대 근무	16	4.0
3교대 근무	176	43.8
야간전담	1	0.2
기타	2	0.5

출처: 연구진 작성

나. 기술도입수준에 따른 업무대체정도

본 조사에서는 간호분야에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를 다음 10가지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간호분야의 기술에 대한 본 조사의 정의를 주지시킨 후, 이와 같은 기술도입 및 기술변화를 염두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2. 자동 IV 펌프 주입 및 전자 모니터링
3. 휴대용 IT장치(환자상태정보 확인, 모니터링, 경보 등)
4.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센서, 모니터링, GPS, wireless 등)
5. 약물관리(재고관리, 바코드, 주입장비 등)
6. 로봇활용(이동 및 신체 보조로봇, 환자이송, 반력로봇 등)
7. 물류이동시스템(약물 등)
8. 스마트 침대(낙상방지, 환자활동 모니터링 등)
9.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이동안내, 보호자 설명, 코로나19 주의 등)
10. 환자 원격 모니터링

1) 기술종류에 따른 도입수준과 업무대체 정도

먼저 간호분야의 기술도입정도와 활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의 종류에 따라 도입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도입 후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는 응답이 95.8%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자동IV펌프 및 전자 모니터링(68.4%)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이 빠르게 적용 중에 있는 약물관리, 물류이동시스템, 휴대용 IT장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의 경우 기술도입 초기이거나 이미 도입되어 보편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 도입되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기술도입정도가 높은 기술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기술도입 및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웨어러블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 로봇활용, 스마트침대, 환자 원격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은 일부 기술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거의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봇을 활

용하여 환자이동 및 이송과 같은 기술은 거의 도입되지 않은 완전 초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정도가 낮은 기술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모든 기술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과 수술실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서의 도입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은 업무 특성 상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도입비율이 높았다.

<표 7> 기술도입정도

(단위: %)

기술의 유형	현재 도입 안됨	도입 초기	도입되어 보편적 활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1.2	3.0	95.8
자동 IV 펌프 주입 및 전자 모니터링	25.9	5.7	68.4
휴대용 IT장치(환자상태정보 확인, 모니터링, 경보 등)	37.3	24.9	37.8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센서, 모니터링, GPS, wireless 등)	66.4	16.9	16.7
약물관리(재고관리, 바코드, 주입장비 등)	32.3	18.9	48.8
로봇활용(이동 및 신체 보조로봇, 환자이송 등)	93.0	4.7	2.2
물류이동시스템(약물 등)	36.8	16.9	46.3
스마트 침대(낙상방지, 환자활동 모니터링 등)	70.4	18.2	11.4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이동안내, 보호자 설명, 코로나19 주의 등)	36.8	27.1	36.1
환자 원격 모니터링	56.2	18.9	24.9
응급실, 중환자실	25.4	18.6	55.9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다음의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도입된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업무가 대체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기술대체율이 높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경우 기술 도입으로 도입 전 업무를 상당히 대체했다는 응답이 6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IV펌프 및 전자 모니터링은 54.4%가 상당히 대체했다고 응답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기술의 경우 약간 대체했다는 응답을 합 할 경우 기술도입 이후 업무 대체정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업무 대체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술도입초기이거나 이미 도입되어 보편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던 물류이동시스템, 휴대용 IT장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 업무는 약간대체와 상당히 대체가 각각 30-40% 수준으로 약간대체와 상당히 대체를 합하면 70-80%가 대체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술도입이 거의 되지 않거나 도입초기에 머무른 기술인 웨어러블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 스마트침대, 환자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기술도입은 더디게 나타났지만 기술이 도입이 되면 도입 전에 비해 업무를 대체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아 약간대체와 상당히 대체를 합하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자원격모니터링시스템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상당히 대체한다는 응답비율이 아주 높아 70%가 넘었고, 약간대체와 합할 경우 90-100%가 대체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술이 도입될 경우 업무 대체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8> 기술도입에 따른 기존 업무대체정도

(단위: %)

기술의 유형	거의 영향 없음	약간 대체	상당히 대체	잘 모르겠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7.8	16.6	68.8	6.8
자동 IV 펌프 주입 및 전자 모니터링	14.4	25.5	54.4	5.7
휴대용 IT장치 (환자상태정보 확인, 모니터링, 경보 등)	15.9	42.5	32.9	8.7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센서, 모니터링, GPS, wireless 등)	17	38.5	31.1	13.3
약물관리(재고관리, 바코드, 주입장비 등)	17.3	32.4	41.9	8.5
로봇활용(이동 및 신체 보조로봇, 환자이송 등)	42.9	35.7	10.7	10.7
물류이동시스템(약물 등)	11.4	33.5	50.4	4.7
스마트 침대(낙상방지, 환자활동 모니터링 등)	21	42.0	26.9	10.1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이동안내, 보호자 설명, 코로나19 주의 등)	18.1	40.9	34.6	6.3
환자 원격 모니터링	18.2	33.0	43.2	5.7
응급실, 중환자실	6.8	20.5	72.7	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0.0	28.6	71.4	0.0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업무의 고도화나 향상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기술대체율이 높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거의 모든 응답자가 EMR도입 이후 업무의 고도화나 향상이 상당히 있거나 약간 있고, 거의 영향이 없음이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또한 자동IV펌프 및 전자 모니터링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다가 64.8%, 약간 향상되었다가 23.2%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두 기술은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의 고도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술도입초기이거나 이미 도입되어 보편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던 물류이동시스템, 휴대용 IT장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 업무는 기술도입으로 업무의 고도화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가 약 49-59%,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0% 수준으로 대동소이하였으며, 약간 향상과 상당히 향상을 합하면 약 80-90% 수준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특히 물류이동시스템의 경우 상당히 향상되었다가 59.1%로 다른 기술에 비해 높게 나타나 도입 후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도입이 거의 되지 않거나 도입초기에 머무른 웨어러블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 로봇활용, 스마트침대, 환자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기술도입은 더디지만, 도입 이후에는 업무의 고도화나 향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환자관리의 경우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침대의 도입은 상당히 향상과 약간향상의 합이 약 75%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환자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 기술도입 이후 업무의 고도화가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간병서비스,

수술실 등에서 70% 이상 높은 응답을 보여 근무부서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표 9>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의 고도화(upgrade)나 향상정도

(단위: %)

기술의 유형	거의 영향 없음	약간 향상	상당히 향상	잘 모르겠음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2.5	18.6	76.3	2.5
자동 IV 펌프 주입 및 전자 모니터링	6.0	23.2	64.8	6.0
휴대용 IT장치 (환자상태정보 확인, 모니터링, 경보 등)	9.9	33.7	48.8	7.5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자관리(센서, 모니터링, GPS, wireless 등)	7.4	34.1	45.9	12.6
약물관리(재고관리, 바코드, 주입장비 등)	12.5	29.8	49.3	8.5
로봇활용(이동 및 신체 보조로봇, 환자이송 등)	21.4	35.7	25.0	17.9
물류이동시스템(약물 등)	9.1	27.6	59.1	4.3
스마트 침대(낙상방지, 환자활동 모니터링 등)	10.9	36.1	38.7	14.3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안내업무(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이동안내, 보호자 설명, 코로나19 주의 등)	12.6	31.9	48.0	7.5
환자 원격 모니터링	8.5	27.3	60.2	4.0
응급실, 중환자실	6.8	20.5	72.7	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0.0	28.6	71.4	0.0
수술실, 회복실 등	5.0	20.0	75.0	0.0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입직초기와 비교하여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이러한 기술도입과 변화로 몇 퍼센트 정도 대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8.1% 정도 대체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구간은 25% 미만 대체되었다는 응답인데 전체 응답자의 47.8%로 절반에 가까운 간호사들이 대체수준을 25%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25-50% 미만 대체되었다는 응답은 31.3%, 절반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도 20.9%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업무대체가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대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25.0%로 높게 조사되었고, 평균도 30.4%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별로는 일반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25% 미만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10% 초중반에 그쳐 대체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수술실이나 회복실 등의 부서는 50%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25% 미만이 34.5%로 가장 낮았고 25-50%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나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기술에 의한 업무대체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과 총경력년수는 연령이 높아지고 총경력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술에 의한 업무대체율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50% 이상 대체되었다는 응답도 연령과 총경력년수가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체감하는 현재 업무의 기술대체정도를 입직 초기와 비교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거 경력이 길수록 대체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 대체정도

(단위: %)

	평균	25%미만	25-50%미만	50%이상
전체	28.1	47.8	31.3	20.9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6.5	50.8	31.1	18.1
종합병원	30.4	43.3	31.7	25.0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24.0	59.6	27.3	13.1
응급실, 중환자실	26.0	57.6	27.1	15.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4	34.5	41.4	24.1
수술실, 회복실 등	29.3	47.1	25.5	27.5
기타(외래, 행정 등)	30.6	39.6	35.4	25.0
연령				
20대	18.7	71.4	20.0	8.6
30대	28.8	43.2	38.7	18.1
40대	32.9	37.0	32.8	30.3
50대 이상	41.5	26.1	26.1	47.8
총 경력년수				
3년 미만	18.0	70.6	11.8	17.6
3년-5년 미만	18.0	75.4	18.5	6.2
5년-10년 미만	25.2	51.1	35.2	13.6
10년 이상	32.8	37.1	34.9	28.0

출처: 연구진 작성

종합적으로 보면, 간호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나 자동 IV펌프 및 전자 모니터링을 제외한 기술들이 병원의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보다는 근무부서에 따라 도입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분야에 일단 기술이 도입되면 업무의 대체가 일어나고 이것이 업무의 고도화 및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이나 회복실과 같이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부서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도입의 업무대체정도나 업무고도화 및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업무내용에 따른 기술도입 수준과 업무대체 정도

앞에서 분석한 기술에 의한 기존 업무 대체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도입에 따라 기술이 적용되는 업무로 변경될 수도 있고, 기존의 업무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범주화하여 각 업무에 기술도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간호사들의 업무는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부터 약물 등의 물류관리, 확인 및 설명 등의 업무로 그 영역이 상당히 넓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집단면접을 통해 간호업무를 조사했고, 업무 내용을 영역별로 범주화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들의 업무는 크게 환자 입·퇴원 관련업무, 검사도구 관리(중앙공급실 물품, 의료장비, 응급약물카트 기능 및 보유상태 점검), 약품 및 물류관리, 인수인계, 투약과 처치, 수술과 검사,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간호기록작성, 환자의 낙상 및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라운딩, 익일처방확인, 익일 사용한 물품 및 약품의 유효기간관리 및 전체 물품 재배열, 채혈, 영상검사, 신체측정과 관련된 업무로 나뉘었고 12가지로 범주화였다.

12가지로 범주화 한 간호업무의 과중함 정도와 각 업무에 앞서 정의한 10가지 기술 각 업무에 도입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업무내용에 따른 업무의 과중함 수준을 0-25%, 25-50%, 50-75%, 75-100%로 구간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병원의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보다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간호사들이 12가지 범주로 묶은 업무 내용을 거의 다 수행하지만, 근무부서별로 더 강조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통적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높은 업무는 투약과 처치, 수술과 검사,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간호기록으로 나타났는데, 이 업무들은 업무의 과중함이 75-100%에 응답한 간호사가 응답자의 약 1/3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50-75%라 응답한 간호사도 응답자의 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행정적 관리업무인 검사도구관리, 약품 및 물류관리, 익일 처방확인, 익일사용물품 관리 및 재배열과 같은 업무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과중함이 낮은 쪽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행정관리와 같은 업무의 과중함은 상대적으로 낮고, 환자를 대면해야하는 업무 및 간호기록의 업무의 과중함이 더 많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업무에 기술도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들의 업무의 과중함이 높다고 기술도입이 높고, 업무의 과중함이 낮다고 기술도입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수인계와 익일사용물품 및 관리, 물품재배열, 안전라운딩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의 기술도입 수준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전자무기기록시스템의 영향으로 간호기록과 익일처방확인의 기술도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11> 업무내용별 업무의 과중함 및 기술도입여부

(단위: %)

업무내용	업무의 과중함				기술도입여부
	0-25%	25-50%	50-75%	75-100%	
환자 입퇴원 관련	13.7	23.4	44.8	18.2	61.2
검사도구 관리(중앙공급실 물품, 의료장비, 응급약물카트 기능 및 보유상태 점검)	22.1	41.3	26.6	10.0	53.5
약품 및 물류관리	17.9	39.8	30.1	12.2	54.5
인수인계-비대면(동영상 및 녹음)	24.4	28.4	31.1	16.2	18.4
투약과 처치	10.2	21.4	37.1	31.3	57.5
수술과 검사	8.2	22.9	39.8	29.1	55.7
환자 및 보호자 교육	6.7	24.4	41.3	27.6	51.5
간호기록	7.0	27.9	40.8	24.4	85.3
환자 안전 라운딩(낙상, 자해등)	11.4	32.3	37.8	18.4	34.1
익일 처방 확인	13.9	35.8	31.3	18.9	76.4
익일 사용 물품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전체 물품 재배열	17.4	40.8	27.6	14.2	33.3
채혈, 영상 검사, 신체측정	13.7	37.3	33.3	15.7	62.2

출처: 연구진 작성

간호사들의 업무내용에 따라 기술도입의 희망(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업무내용에 기술도입을 희망(필요)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커서 간호사들의 기술도입에 대한 요구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교육과 약품 및 물류관리에서는 기술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70%이상으로 높다. 교육은 앱이나 웹서비스를 통해, 관리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에도 빠르게 기술이 도입되거나 보편화 되는 부문의 업무이므로 매우 필요함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인계의 경우 매우 필요함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거의 불필요함이 15.4%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업무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표 12> 업무내용에 따른 기술도입 희망(필요)정도

(단위: %)

업무내용	완전 불필요	거의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환자 입퇴원 관련	0.2	2.2	33.8	63.7
검사도구 관리(중앙공급실 물품, 의료장비, 응급약물카트 기능 및 보유상태 점검)	0.2	2.7	30.3	66.7
약품 및 물류관리	0.2	2.5	26.4	70.9
인수인계-비대면(동영상 및 녹음)	2.7	15.4	33.8	48.0
투약과 처치	1.7	6.0	33.3	59.0
수술과 검사	0.2	5.2	35.6	59.0
환자 및 보호자 교육	0.5	1.5	20.1	77.9
간호기록	0.5	3.7	28.6	67.2
환자 안전 라운딩(낙상, 자해등)	2.5	5.7	31.3	60.4
익일 처방 확인	1.2	6.5	32.3	60.0
익일 사용 물품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전체 물품 재배열	0.7	4.2	32.6	62.4
채혈, 영상 검사, 신체측정	0.5	5.5	36.1	58.0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각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가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상당 수 간호사들이 기술도입정도와 무관하게 기술에 의한 업무 대체가능성이 약간 높거나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검사도구관리, 약품 및 물류관리, 물품재배열 등 행정적 관리업무의 기술대체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었다. 한편 이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기술도입이 보편화 된 간호기록, 익일처방확인과 같은 업무도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는 업무로는 인수인계, 투약과 처치, 수술과 검사, 낙상 및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라운딩으로 주로 환자를 대면해야하거나 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영역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주로 행정적 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기술대체 가능성이 높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하거나 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기술대체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 업무내용에 따른 기술대체 가능성

(단위: %)

업무내용	없거나 매우 낮음	약간 낮음	약간 높음	매우 높음
환자 입퇴원 관련	6.7	16.9	48.5	27.9
검사도구 관리(중앙공급실 물품, 의료장비, 응급약물카트 기능 및 보유상태 점검)	1.4	9.0	40.3	49.3
약품 및 물류관리	1.0	11.9	36.8	50.2
인수인계-비대면(동영상 및 녹음)	14.6	23.1	38.6	23.6
투약과 처치	19.4	26.6	31.3	22.6
수술과 검사	15.9	24.6	33.6	25.9
환자 및 보호자 교육	4.2	13.9	33.6	48.3
간호기록	7.4	18.9	39.3	34.3
환자 안전 라운딩(낙상, 자해등)	10.5	24.6	38.1	26.9
익일 처방 확인	7.2	18.4	39.1	35.3
익일 사용 물품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전체 물품 재배열	4.2	12.4	39.6	43.8
채혈, 영상 검사, 신체측정	7.0	16.9	42.0	34.1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기술의 도입으로 해당 업무의 고도화(upgrade)나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술도입은 해당 업무의 고도화나 향상될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적 관리업무인 검사도구관리, 약품 및 물류관리, 관리물품재배열에서의 매우 높음 응답률이 48-53%로 높게 나타났고, 환자 및 보호자 교육도 기술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점이 반영되어서 고도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47.8%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앞서 본 기술에 의한 대체가능성과 유사하게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하거나 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인 인수인계, 투약과 처치, 수술과 검사에서는 기술도입으로 인한 업무의 고도화에 부정적 응답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낙상 등 안전라운딩에서는 약간 높음(45.0%)과 매우높음(33.1%)의 응답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스마트침대의 영향으로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업무의 과중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에 대한 안전라운딩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14> 기술도입시 업무의 고도화(upgrade)나 향상될 가능성

(단위: %)

	없거나 매우 낮음	약간 낮음	약간 높음	매우 높음
환자 입퇴원 관련	3.0	12.7	46.3	38.1
검사도구 관리(중앙공급실 물품, 의료장비, 응급약물카트 기능 및 보유상태 점검)	1.7	7.7	39.3	51.2
약품 및 물류관리	1.2	7.7	37.6	53.5
인수인계-비대면(동영상 및 녹음)	14.7	21.9	33.6	29.9
투약과 처치	12.9	21.1	36.8	29.1
수술과 검사	10.0	19.4	37.3	33.3
환자 및 보호자 교육	3.0	12.2	37.1	47.8
간호기록	5.5	15.9	39.8	38.8

환자 안전 라운딩(낙상, 자해등)	6.7	15.2	45.0	33.1
익일 처방 확인	5.0	12.9	40.3	41.8
익일 사용 물품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전체 물품 재배열	3.2	9.7	38.8	48.3
체혈, 영상 검사, 신체측정	5.5	14.4	40.8	39.3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따른 업무내용별 대체가능성이 아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변화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가능성보다는 변화가능성에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약간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많이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1.3%로 상당수가 응답을 하였다. 즉, 현재 간호사들은 기술도입과 발전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변화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근무부서, 근무연수, 근무형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두 90% 이상 업무의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에 의한 대체가능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간호사들은 현재 자신의 업무에 기술이 도입된다면,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변화시킬 것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변화 가능성

(단위: %)

	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약간 변화할 것이다	매우 많이 변화할 것이다
전체	3.2	5.2	60.2	31.3

출처: 연구진 작성

다. 디지털 기술변화의 보완적 역할

1) 기술변화로 인한 업무감소

지금까지 간호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술도입수준과 그에 따른 업무대체가능성을 살펴 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간호분야에 기술도입과 발전이 간호사의 업무에 보완적 역할을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 현장의 간호사들은 행정적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기술 대체가능성이 높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하거나 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기술 대체가능성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들에게 행정, 관리, 환자처치와 관련된 업무에 기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기술변화가 행정업무를 줄여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고, 약간 영향이 42.5%, 상당히 영향이 3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매우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구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도입과 변화가 빠른 상급종합병원 상당히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종합병원보다 높았지만, 매우 줄여주었다는 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변화가 행정업무를 줄여주었다는 응답은 근무부서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결과이다. 다른 근무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2.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술도입수준이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행정업무의 기술보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경우 기술변화가 행정업무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4.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6> 기술변화로 인한 행정업무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10.7	42.5	39.8	7.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12.2	41.2	40.8	5.9
종합병원	8.5	44.5	38.4	8.5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8.1	47.5	35.4	9.1
응급실, 중환자실	8.5	42.4	44.1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9	24.1	62.1	6.9
수술실, 회복실 등	17.6	37.3	35.3	9.8
기타(외래, 행정 등)	11.6	44.5	38.4	5.5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간호사들의 업무과중도가 높은 업무로 조사된 물품관리 및 기록의 업무에서 기술변화가 업무를 줄여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변화 없다'는 응답이 15.7% 수준인 반면, 업무감소에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히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종합병원은 약간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더 많게 조사되어 기술도입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술변화가 기록 및 물품관리 업무를 상당히 줄여주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앞 행정업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기술변화가 관리 및 행정업무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기술변화로 인한 기록 및 물품관리 업무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15.7	40.8	36.6	7.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16.4	38.7	38.7	6.3
종합병원	14.6	43.9	33.5	7.9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16.2	46.5	29.3	8.1
응급실, 중환자실	15.3	37.3	42.4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2	27.6	44.8	10.3
수술실, 회복실 등	17.6	35.3	37.3	9.8
기타(외래, 행정 등)	14.6	42.7	37.2	5.5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기술의 대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 환자의 처치와 관련된 업무에 기술 발전이 업무를 줄여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행정 및 관리업무와 달리 변화 없음이 29.1%로 높게 나타났고, 약간 영향이 45.8%, 상당히 영향이 20.6%로 나타났다. 행정 및 관리업무보다는 낮지만, 기술변화가 환자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70%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 업무를 줄여주는데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부서에는 기타(외래, 행정)부서와 응급실, 중환자실에 업무를 줄여주는 영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환자의 처지와 더 연관이 높은 수술실 및 회복실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3%로 매우 높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34.5%, 일반병동에서는 34.3%로 나타나 환자 처치와 관련한 업무에서는 기술변화가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18> 기술변화로 인한 환자 처치와 관련된 업무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29.1	45.8	20.6	4.5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32.4	43.3	20.2	4.2
종합병원	24.4	49.4	21.3	4.9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4.3	43.4	16.2	6.1
응급실, 중환자실	22.0	54.2	20.3	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5	44.8	17.2	3.4
수술실, 회복실 등	37.3	41.2	15.7	5.9
기타(외래, 행정 등)	14.6	42.7	37.2	5.5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기술발전이 업무실수를 줄여주는데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업무의 실수를 줄여주는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수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근무부서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에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부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가 실수를 줄여주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대체로 30%를 상회하고 있어 기술의 발전이 업무에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기술변화로 인한 업무의 실수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13.9	48.3	32.3	5.5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15.5	50.0	29.8	4.6
종합병원	11.6	45.7	36.0	6.7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15.2	50.5	29.3	5.1
응급실, 중환자실	23.7	45.8	28.8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9	48.3	37.9	6.9
수술실, 회복실 등	17.6	47.1	27.5	7.8
기타(외래, 행정 등)	9.8	48.2	36.0	6.1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9.2	46.4	38.6	5.8
2교대 근무	6.3	50.0	31.3	12.5
3교대 근무	19.9	50.6	25.0	4.5

출처: 연구진 작성

2) 기술변화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질문은 기술의 변화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이다. 그 이유는 국내 간

호분야의 근로조건은 고강도 업무량으로 인하여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메디게이트뉴스, 2019.07.17).

먼저 기술변화가 전체적인 노동강도를 줄여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8%는 기술변화로 인하여 노동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한 반면 약간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2.5%로 나타났고, 상당히 영향+매우 영향을 주었다가 25.6%(19.4+6.2)로 기술변화가 노동강도를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의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노동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적은 반면,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12%p나 높게 응답해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줄어 들었다는 것에 더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다. 또한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상당히 영향과 매우 영향이 41.4%(27.6% + 13.8%)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데 기술변화가 영향을 상당히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부서에서는 약간 영향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표 20> 기술변화로 인한 전체적인 노동강도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31.8	42.5	19.4	6.2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9.4	47.5	18.1	5.0
종합병원	35.4	35.4	21.3	7.9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7.4	38.4	17.2	7.1
응급실, 중환자실	33.9	45.8	15.3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1.0	27.6	27.6	13.8
수술실, 회복실 등	27.5	45.1	19.6	7.8
기타(외래, 행정 등)	29.3	45.7	20.7	4.3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5.6	47.3	21.3	5.8
2교대 근무	25.0	56.3	12.5	6.3
3교대 근무	39.8	36.4	17.0	6.8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기술변화로 줄어들었는지 조사한결과 변화없음다는 응답이 32.3%인 반면, 약간영향이 42.8%, 상당히 영향+매우영향이 24.9%(20.4+4.5)로 나타나 기술변화가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주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구분에는 차이 없이 유사한 응답을 하였지만, 근무부서나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노동강도의 질문과 유사하게 노동시간에서도 상당히 영향과 매우 영향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다른 근무부서와 차이를 보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특징으로는 통상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기술변화로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줄어 들었다는데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기술변화와 전체적인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3교대의 경우 거의 40%정도가 변화 없다고 응답해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1> 기술변화로 인한 전체적인 노동시간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32.3	42.8	20.4	4.5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32.8	42.9	20.6	3.8
종합병원	31.7	42.7	20.1	5.5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8.4	37.4	20.2	4.0
응급실, 중환자실	32.2	47.5	18.6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7.6	37.9	31.0	3.4
수술실, 회복실 등	31.4	39.2	21.6	7.8
기타(외래, 행정 등)	29.9	46.3	18.9	4.9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7.1	46.4	21.7	4.8
2교대 근무	37.5	37.5	25.0	0.0
3교대 근무	38.1	39.2	18.2	4.5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기술변화가 전체적인 업무난이도를 쉽게 해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변화 없었다는 응답이 30.6%인 반면, 약간 영향이 44.8%, 상당히 영향과 매우 영향을 합한 응답률이 24.6%(20.1% + 4.5%)로 나타나 기술변화가 전체적인 업무난이도를 완화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교대는 통상근무에 비해 변화 없음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응답해 업무난이도는 근무형태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기술변화로 인한 전체적인 업무난이도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30.6	44.8	20.1	4.5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31.5	45.4	18.5	4.6
종합병원	29.3	43.9	22.6	4.3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4.3	43.4	17.2	5.1
응급실, 중환자실	37.3	37.3	22.0	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7.9	31.0	27.6	3.4
수술실, 회복실 등	39.2	41.2	13.7	5.9
기타(외래, 행정 등)	22.0	51.8	22.0	4.3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0.8	52.2	22.2	4.8
2교대 근무	25.0	62.5	6.3	6.3
3교대 근무	42.0	35.2	18.8	4.0

출처: 연구진 작성

기술변화가 노동강도나 노동시간, 업무난이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가 전체적인 업무스트레스를 줄여주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변화 없다는 응답이 44.8%로 높게 나타났고, 약간 줄여주었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나 업무스트레스 완화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기술변화로 인한 전체적인 업무스트레스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44.8	35.6	15.7	4.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47.1	35.7	13.4	3.8
종합병원	41.5	35.4	18.9	4.3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48.5	36.4	9.1	6.1
응급실, 중환자실	47.5	40.7	10.2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7.9	34.5	24.1	3.4
수술실, 회복실 등	45.1	27.5	23.5	3.9
기타(외래, 행정 등)	42.7	36.0	17.7	3.7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40.6	37.7	17.9	3.9
2교대 근무	56.3	25.0	18.8	0.0
3교대 근무	48.3	34.7	12.5	4.5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기술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위험의 노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고위험의 노출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줄여주었다 45.3%, 상당히 줄여주었다 33.3%, 매우 줄여주었다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구분이나 근무부서, 근무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여 기술변화의 간호사 안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기술변화로 인한 사고위험의 노출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15.2	45.3	33.3	6.2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15.5	45.0	34.0	5.5
종합병원	14.6	45.7	32.3	7.3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16.2	50.5	26.3	7.1
응급실, 중환자실	18.6	45.8	33.9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3	48.3	34.5	6.9
수술실, 회복실 등	21.6	37.3	33.3	7.8
기타(외래, 행정 등)	12.2	43.9	37.2	6.7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11.6	40.6	41.5	6.3
2교대 근무	6.3	31.3	62.5	0.0
3교대 근무	19.3	52.8	21.0	6.8

출처: 연구진 작성

반면, 간호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대표되는 야간근무의 어려움이 기술변화로 개선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술변화가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5.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약간 영향 35.1%, 상당히 영향 15.4%, 매우 영향 4.0%로 나타나 기술변화가 구조적 문제의 해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이 어려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또한 근무부서에 따른 결과는 야간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기타부서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나 회복실과 같은 특수부서에서 기술변화가 야간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근무의 어려움이 약간 개선되었다가 48.3%, 상당히 개선되었다가 13.8%, 매우 개선되었다가 3.4%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형태도 야간근무를 주로 하는 2교대와 3교대에서 기술변화로 야간근무의 어려움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매우 낮았으며 3교대는 변화 없음이 5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술변화가 크게 도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무의 어려움은 여전히 높은 응답을 하고 있지만, 약 20% 정도 기술변화가 야간근무의 어려움에 개선되었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이후 진행 된 간호사 집단면접에서 야간업무의 어려움은 여전히지만 과거에 비해 기술도입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육체적 피로감은 일부 줄어들었고, 중앙에서 환자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표 25> 기술변화로 인한 야간근무의 어려움 감소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45.5	35.1	15.4	4.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43.7	35.7	17.2	3.4
종합병원	48.2	34.1	12.8	4.9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51.5	30.3	14.1	4.0
응급실, 중환자실	55.9	25.4	16.9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5	48.3	13.8	3.4
수술실, 회복실 등	56.9	27.5	13.7	2.0
기타(외래, 행정 등)	36.6	41.5	16.5	5.5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36.2	42.5	16.4	4.8
2교대 근무	43.8	37.5	18.8	0.0
3교대 근무	56.3	26.7	13.6	3.4

출처: 연구진 작성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술도입과 발전이 일하는 행위에 대한 보완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노동강도나 노동시간, 사고위험의 노출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형태 중 3교대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측면에 긍정적인 응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근무부서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거의 모든 응답에서 기술변화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 응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동일한 기술도입과 발전이 적용되어 간호업무에 변화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기술도입과 변화로 구조적 문제 개선

기술도입과 변화가 학교 교육과 현장 수준 사이의 괴리, 3교대의 어려움, 야간 노동의 어려움과 같

은 병원 내 간호사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학교 교육수준과 현장수준과의 괴리 문제는 조금가능+매우가능이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이후 진행된 간호사 집중면접조사(FGI) 결과 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학교교육이 직접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보편적으로 배우는 학교와 달리 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으로 현장과의 괴리를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문제는 현장 내 훈련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훈련기간이 늘어나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가장 잘 알려진 간호분야의 구조적 문제인 3교대와 야간 노동의 어려움이 기술발전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0% 초반 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 역시 20% 초반, 조금 어려움이 20% 중반 수준으로 보고 있어 약 70%가 개선가능성을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앞장에서 분석한 결과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이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한다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로 현재 간호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표 26> 기술발전으로 간호분야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가능성

(단위: %)

	불가능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조금 가능	매우 가능
학교교육 수준과 현장수준과의 괴리	5.5	13.4	27.6	45.0	8.5
3교대의 어려움	23.6	22.6	24.9	24.6	4.2
야간노동의 어려움	21.9	23.9	23.4	26.4	4.5

출처: 연구진 작성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기존의 업무가 일부 대체되고 보완적 측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가 힘든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 문제가 1순위로 47.8%가 응답하였다. 뒤이어 교대제와 환자 치료 이외의 행정, 관리업무의 과중함이 각각 18.4%, 17.9%로 유사하게 응답하였고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업무할당이 11.7%를 차지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치료 이외의 행정적 관리업무는 기술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대체가능성도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기술도입으로 이와 같은 업무강도는 낮춰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간호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모든 근무부서에서 인력부족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근무부서에서 약 60%가 응답하였다. 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다른 근무부서에 비해 인력부족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치료 이외의 행정업무,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업무할당의 응답이 다른 근무부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집중면접조사(FGI)를 통해 인력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병원의 비용문제로 인력을 충분히 뽑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출산 및 육아의 문제로 사직률이 매우 높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육아휴직 등으로 한번 쉬게 될 경우 복귀하게 되는 근무부서에 개인번호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경우 훈련기간도 큰 문제인데, 과거보다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충분히 훈련되기 전에 맡는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30%도 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간호사들이 일 할 곳이 많아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반영된다고 하

였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다른 기관 대비 급여수준은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데 고강도 업무와 교대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 요양병원이나 보건행정직 등과 같이 대체로 일 할 곳이 많아진 영향이 있는 의견이 있었다.

<표 27> 기술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가 힘든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인력부족	환자 치료 이외의 행정, 관리 업무의 과중함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업무 할당	교대제 (야간노동)	조직 내 갈등	기타
전체	47.8	17.9	11.7	18.4	2.7	1.5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46.2	17.6	12.6	17.6	3.8	2.1
종합병원	50.0	18.3	10.4	19.5	1.2	0.6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43.4	20.2	13.1	21.2	1.0	1.0
응급실, 중환자실	59.3	11.9	10.2	13.6	5.1	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7.9	27.6	20.7	10.3	3.4	0.0
수술실, 회복실 등	47.1	19.6	3.9	21.6	5.9	2.0
기타(외래, 행정 등)	48.2	16.5	12.2	18.9	1.8	2.4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47.3	17.9	11.6	18.4	2.4	2.4
2교대 근무	56.3	0.0	18.8	18.8	6.3	0.0
3교대 근무	47.2	19.9	11.4	18.2	2.8	0.6

출처: 연구진 작성

4) 기술변화로 인한 조직문화 영향

다음으로 기술변화가 조직 내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다.

<표 28> 기술변화로 구성원 간의 업무협조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 변화 없었던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상당한 혹은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5.6% (22.4% + 3.2%),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나 기술변화가 구성원 간의 업무협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무부서나 근무형태에 거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간호간병통합시스템에서 변화 없음의 응답이 적고 상당히 영향의 응답이 높아 구성원 간의 업무협조에 기술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무형태 중 3교대는 변화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고,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가장 적어 기술변화가 영향을 덜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에 따라 응답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9> 기술변화가 조직 내 문화나 소통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업무협조의 결과보다 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히 영향+매우 영향도 22.8%로 업무협조의 응답수준에 미치지 못해 기술변화에 의한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무부서 중 수술실, 회복실과 같은 특수부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술변화가 조직문화나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근무형태 중 3교대 근무는 상당한 영향과 매우 영향에 응답한 비율이 18%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표 28> 기술변화로 인한 구성원 간의 업무협조 개선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27.1	47.3	22.4	3.2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7.7	46.6	22.7	2.9
종합병원	26.2	48.2	22.0	3.7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2.3	49.5	15.2	3.0
응급실, 중환자실	28.8	44.1	25.4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4.1	37.9	37.9	0.0
수술실, 회복실 등	25.5	47.1	23.5	3.9
기타(외래, 행정 등)	24.4	48.8	22.6	4.3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3.2	48.3	24.6	3.9
2교대 근무	18.8	56.3	25.0	0.0
3교대 근무	32.4	45.5	19.3	2.8

출처: 연구진 작성

<표 29> 기술변화로 인한 조직 내 조직문화나 소통 개선

(단위: %)

	변화 없음	약간 영향	상당히 영향	매우 영향
전체	32.3	44.8	20.1	2.7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33.2	45.4	18.9	2.5
종합병원	31.1	43.9	22.0	3.0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34.3	47.5	15.2	3.0
응급실, 중환자실	33.9	45.8	18.6	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5	41.4	24.1	0.0
수술실, 회복실 등	31.4	39.2	25.5	3.9
기타(외래, 행정 등)	30.5	45.1	21.3	3.0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6.6	47.3	23.2	2.9
2교대 근무	43.8	25.0	31.3	0.0
3교대 근무	37.5	44.3	15.3	2.8

출처: 연구진 작성

라.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인한 인력규모 변화와 간호인력문제 개선 가능성

지금까지 간호영역에 기술의 도입수준과 도입정도, 기술이 도입된 후 업무 대체가능성과 업무의 변화도와 기술변화가 간호업무에 보완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혹은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절에서는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인하여 간호인력에 변화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기술도입과 발전이 간호분야의 인력문제에 개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먼저 입직초기와 비교해 현재 기술의 도입과 발전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많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다소 감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으며, 기관이나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형태(2교대 근무, 6.3%)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응답차이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변화 없음으로 전체 응답한 간호사 중 42.5%를 차지하였다. 반면, 약간 증가(31.8%)와 많이 증가했다(22.4%)는 응답의 합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도입과 발전과 함께 간호인력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기관이나 근무부서, 근무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인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근무부서에서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기타(외래, 행정 등)에서 인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근무형태로는 통상(주간)근무에서 기술도입으로 인한 인력증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많은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형태인 3교대의 경우는 약간 증가와 많이 증가의 합이 43.1%로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인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표 30> 기술도입에 따른 간호인력 규모의 변화

(단위: %)

	다소 감소했다	변화 없었다	약간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다
전체	3.2	42.5	31.8	22.4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3.8	44.1	32.4	19.7
종합병원	2.4	40.2	31.1	26.2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2.0	53.5	32.3	12.1
응급실, 중환자실	3.4	42.4	32.2	2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	44.8	27.6	24.1
수술실, 회복실 등	2.0	47.1	25.5	25.5
기타(외래, 행정 등)	4.3	34.1	34.1	27.4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3.9	32.4	34.8	29.0
2교대 근무	6.3	37.5	37.5	18.8
3교대 근무	2.3	54.5	27.8	15.3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 기술의 도입과 발전으로 간호인력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9.3%,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38.6%(28.6%+10.0%)로 나타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하는 응답자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기술 도입과 발전으로 간호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은 근무부서로는 일반병동이, 근무형태로는 2교대 근무가 각각 26.3%, 31.3%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약간 증가하거나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0-40% 수준으로 감소보다 증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간호분야의 특성상 기술도입과 변화로 인해 특정부문의 인력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력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술 도입과 발전이 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 31> 기술도입에 따른 간호인력 규모의 예상변화

(단위: %)

	감소할 것이다	변화없을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많이 증가할 것이다
전체	22.1	39.3	28.6	10.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1.8	37.4	32.4	8.4
종합병원	22.6	42.1	23.2	12.2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26.3	36.4	31.3	6.1
응급실, 중환자실	22.0	37.3	33.9	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2	51.7	24.1	6.9
수술실, 회복실 등	19.6	41.2	33.3	5.9
기타(외래, 행정 등)	21.3	39.0	24.4	15.2
근무형태				
통상근무(주간근무)	20.8	38.6	26.6	14.0
2교대 근무	31.3	25.0	25.0	18.8
3교대 근무	22.7	42.0	30.7	4.5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인력구조변화와 다른 측면의 접근을 하기 위해 기술발전이 되어도 직무 전문성이 유지될 것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아 57.7%로 나타났으며 약간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32.8%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응답자가 기술이 발전되어도 간호사의 직무 전문성이 유지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근무부서나 연령, 경력,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응답을 보여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간호분야의 기술도입과 발전이 현재 간호사들의 업무 내용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는 기술 변화가 현재의 업무변화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간호분야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의 심화로 인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변화를 경험하기 힘든 조건에 높은 노동강도를 유지하며 일을 하고 있어 기술변화를 하더라도 일자리는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업무 내용과 방식도 기술변화에 연동해 직무 전문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2> 기술발전과 직무 전문성 관계

(단위: %)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유지될 것이다	상당히 유지될 것이다
1.2	8.2	32.8	57.7

출처: 연구진 작성

또한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노동강도나 업무환경개선이 되면 간호분야의 이직 및 퇴사로 인한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 될 것 같은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약간 도움된다가 62.4%로 가장 많았고,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났으나 변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9.2%+5.7%)도 전체 응답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근무부서나 기관구분, 경력, 근무형태에 따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응답결과가 나타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3> 기술변화와 도입에 따른 간호 인력 문제 해소여부

(단위: %)

도움되지 않는다	변화 없다	약간 도움된다	많이 도움된다
5.7	19.2	62.4	12.7

출처: 연구진 작성

한편 간호분야는 압도적으로 여성다수직종으로 우리나라는 남성 간호사 비중이 약 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성별 직종분리가 매우 심한 곳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에게 기술도입과 기술이 발전할 경우 남성간호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지 조사해보았다.

분석결과 기술발전으로 남성간호사의 유입증가 여부에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관구분을 비롯하여 연령, 경력년수 근무형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근무부서 중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만 남성 간호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34> 기술변화와 도입에 따른 남성 간호사 유입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많이 그렇다
전체	7.0	44.5	40.5	8.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8.0	44.1	41.2	6.7
종합병원	5.5	45.1	39.6	9.8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10.1	46.5	37.4	6.1
응급실, 중환자실	5.1	37.3	45.8	11.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	41.4	51.7	3.4
수술실, 회복실 등	7.8	52.9	35.3	3.9
기타(외래, 행정 등)	6.1	43.9	40.2	9.8

출처: 연구진 작성

마. 기술도입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개선할 부분

1) 간호분야에 기술도입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간호분야와 의사중심의 치료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간호분야에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20.9%, 치료분야에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나 치료분야에 병원의 적극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간호분야의 경우 근무부서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약간 관심있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관심있다는 합하면 약 76%가 병원에서 간호분야에 기술도입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같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병원이 간호분야에 기술도입에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인 25.4%가 응답하였다.

<표 35>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기술도입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간호분야	간호분야 전체 (근무 부서)	11.9	25.6	41.5	20.9
	일반병동(내과/외과)	12.1	32.3	39.4	16.2
	응급실, 중환자실	11.9	25.4	37.3	25.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9	17.2	62.1	13.8
	수술실, 회복실 등	9.8	25.5	45.1	19.6
	기타(외래, 행정 등)	13.4	23.2	39.6	23.8
치료분야	치료(의사)분야 전체 (근무 부서)	4.0	20.6	38.6	36.8
	일반병동(내과/외과)	3.0	19.2	44.4	33.3
	응급실, 중환자실	6.8	22.0	28.8	4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0.0	24.1	55.2	20.7
	수술실, 회복실 등	5.9	17.6	37.3	39.2
	기타(외래, 행정 등)	3.7	21.3	36.0	39.0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다면 간호분야의 기술도입이 치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거나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근무부서, 경력년수, 근무형태 모두에서 80-90%의 응답이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현장에서 간호분야에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간호분야가 치료분야에 비해 기술도입이나 변화가 늦거나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경제적이유(병원수익에 도움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간호업무에 대한 낮은 인식(18.0%)과 간호사 위상이 낮아서(14.7%)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근무부서, 경력, 근무형태 모두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병원 수익과 연관된 경제적 이유에 의해 간호분야의 기술도입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었다.

한편 기타의견으로는 경영진의 관심부족, 돌봄영역을 기술이 대체 할 수 없어서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표 36> 간호분야 기술도입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는 이유

(단위: %)

간호분야의 기술도입이 늦음	기술도입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는 이유				
	경제적 이유 (병원 수익에 크게 도움 되지 않아서)	병원 내 간호사의 위상이 낮아서	간호업무에 대한 열악한 인식 (낮은 인건비)	간호사들이 기술도입에 대한 저항감 (불안함) 때문에	환자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83.1	62.6	14.7	18.0	2.4	1.8

출처: 연구진 작성

그렇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간호분야에 기술도입과 변화를 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 병원의 도입여력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준비되어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차지해 43.3%를 기록하였고, 매우 준비되어있다는 응답도 7.0%로 나타났다. 반면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은 16.7%에 그쳐 병원이 기술도입과 변화를 하기에 준비가 되어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근무하는 부서와 기관에 따라 인식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준비되어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근무부서도 차이를 보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수술실 및 회복실과 같은 특수부서는 준비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보통이다의 응답(49.2%)이 가장 많았다.

<표 37> 기술변화와 도입에 대한 병원의 준비정도

(단위: %)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준비가 되어 있다	매우 준비가 되어 있다
전체	16.7	33.1	43.3	7.0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14.7	31.5	43.7	10.1
종합병원	19.5	35.4	42.7	2.4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21.2	31.3	44.4	3.0
응급실, 중환자실	5.1	49.2	39.0	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4.1	24.1	51.7	0.0
수술실, 회복실 등	15.7	31.4	45.1	7.8
기타(외래, 행정 등)	17.1	30.5	42.1	10.4

출처: 연구진 작성

2) 필요한 지원과 기술도입에 따른 교육훈련과 결정구조

먼저 기술도입 시 별도의 훈련 및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받았다는 응답이 81.1%로 나타났지만, 근무시간 내 훈련으로 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43.3%로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근무시간 이외에 훈련 및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조적 인력부족의 문제로 노동강도가 높다보니 별도의 근무시간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도입과 변화가 있을 시 근무시간 내 교육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기술 및 장비가 도입되었을 때 대략적인 적응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기간은 3-4주로 36.1%가 응답을 하였고, 1주와 2주는 각각 26.1%, 29.1%로 나타났다. 5주 이상 장기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표 38> 기술도입 시 훈련 및 적응시간

(단위: %)

별도의 훈련 및 교육	근무시간으로 인정	적응기간			
		1주	2주	3-4주	5주 이상
81.1	43.3	26.1	29.1	36.1	8.7

다음으로 기술 및 장비의 도입과정이나 교육훈련 등의 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71.1%로 압도적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하는 경우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나 의사결정구조에 간호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의견반영이 약간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대동소이하나 병원 일방결정이 66-76% 수준이 응답하고 있어 부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후 간호사들과 협의 후 최종결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현장에 직접 적용되어 환자와 간호사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도입과 변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간호사들의 거버넌스가 반영되는 구조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신기술 도입은 업무내용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도입 이후 근무시간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도 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도입 이후 변화하는 노동과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39> 기술도입 및 교육훈련 결정과정

(단위: %)

	노동조합을 통해	협의회를 통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기타
전체	2.7	23.4	71.1	2.7
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2.5	25.6	69.3	10.1
종합병원	3.0	20.1	73.8	2.4
근무 부서				
일반병동(내과/외과)	4.0	23.2	70.7	3.0
응급실, 중환자실	5.1	16.9	76.3	6.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4	20.7	75.9	0.0
수술실, 회복실 등	0.0	31.4	66.7	7.8
기타(외래, 행정 등)	1.8	23.8	70.1	10.4

출처: 연구진 작성

4. 결론

우리사회는 초고령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보건의료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 중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만성적 인력부족과 같은 힘든 근로조건으로 인해 이탈 및 이직이 높고 비활동 간호사가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진행 중인 보건의료서비스업의 기술진보가 간호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간호업무를 중심으로 기술의 도입과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기술도입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노동환경의 개선과 간호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간호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호분야에 주로 적용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10가지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재직 간호사 4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분야에 적용된 기술의 종류에 따라 도입수준과 업무대체정도는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호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나 자동 IV펌프 및 전자 모니터링을 제외한 기술들이 병원의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보다는 근무부서에 따라 도입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분야에 일단 기술이 도입되면 업무 대체가 70-80% 이상 일어나고 이것이 업무의 고도화 및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이나 회복실과 같이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부서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도입의 업무대체정도나 업무고도화 및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기술도입에 따른 업무대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검사도구관리, 약품 및 물류관리, 물품재배열 등 행정적 관리업무의 기술대체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반면, 인수인계, 투약과 처치, 수술과 검사, 낙상 및 자해 등을 위한 안전라운딩으로 주로 환자를 대면해야하거나 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기술대체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모두 유사했고, 근무부서별 응답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술변화가 간호업무에 보완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기술변화가 행정업무나 기록 및 물품관리업무는 상당히 줄여주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긍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반면 환자 처지와 관련된 업무를 줄여주었다는 응답에는 약간만 영향을 주었다가 다수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술도입과 발전이 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완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노동강도나 노동시간, 사고위험의 노출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근무방식에 따라 다른 응답에서도 유추가능한데, 근무형태 중 3교대에서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 질문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거의 모든 응답에서 기술변화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 응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동일한 기술도입과 발전이 적용되어 간호업무에 변화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기술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 문제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맨 처음 시작점은 인력충원으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기술이 발달되어 노동력을 대체하여 향후 인력이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오히려 인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입직초기와 비교해 기술이 발전하였음에도 간호인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간호분야의 특성상 기술도입과 변화로 인해 특정부분의 인력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력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기술 도입과 발전이 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도입과 발전으로 노동강도나 업무환경개선이 되면 간호분야의 이직 및 퇴사로 인한 인력문제 해소에 도움 될 것 같은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강도 약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간호분야에 필요한 기술도입이 치료분야에 비해 도입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약 80%)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 응답자의 약 63%가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적용수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는 치료항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 수익과 연관된 경제적 이유에 의해 간호분야의 기술도입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기술도입과 관련된 의사결정구조에서도 간호분야의 당사자들 의견의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71.1%로 압도적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하는 경우가 약 25% 수준으로 나타나 의사결정구조에 간호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기술의 도입은 현장에 직접 적용되어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결정하는데 간호사들의 거부반스가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기술 도입이 업무내용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도입 이후 근무시간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도 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도입 이후 변화하는 노동과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언한다. 먼저 간호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 노동강도의 완화, 근로조건 개선, 사고위험의 노출 방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분야에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

다. 특히 기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술이 도입되면, 기존의 업무를 약 70-80% 가량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업무의 고도화 및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당장 도입이 가능하고, 업무대체나 고도화, 심각한 실수(오류)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주로 행정관리 업무로 '검사도구관리, 약품 및 물류관리, 물품재배열, 익일처방확인'과 같은 기술이다. 병원이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기술 도입 여부와 도입 수준을 병원 평가의 기준 중 하나로 삼을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의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이중 환자진료체계에서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의약품관리부문과 조직관리체계 중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관리의 부문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간호분야의 치료와 환자 관리 영역의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 즉, 의료수가와 의료법 문제가 있다. 먼저 기술변화가 적용되어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동인은 '수익창출'이다. 따라서 의료수가와 연동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예를 들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인증제로 도입되면서 빠르게 확산된 측면도 있지만, 진료비청구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서류로 심사청구를 받아 진료비를 받았지만, 진료비청구시스템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확산된 것이고, 이것은 병원의 진료비청구라는 확실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자동 IV펌프 역시 보험수가와 연동되면서 확산되었다. 간호영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의 도입에 큰 걸림돌로 경제적으로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동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요한 기술혁신과 도입에 건강보험을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법적인 문제로 인해 확산이 어려운 기술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장치, 원격진료, 로봇 활용 부분인데 이는 법적 문제와 의료 수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혈압, 당뇨 등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 가능한 웨어러블 장치는 현재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의료주체 등 의료법상 문제로 인하여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격의료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면서 법적변화가 연동되어야 가능하며, 로봇 기술 의료 행위자와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어 역시 법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향후 의료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시스템에 근무하는 경우 기술도입수준이 높고 그로 인한 업무대체율,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응답이 다른 근무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호간병통합시스템 도입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간호통합시스템은 2013년 13개 기관 29개 병동 1,423병상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5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서 시행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18년 12월말 기준 495개 기관 898 병동, 37,288병상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2.28.).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2.9%)과 서울(20.7%)이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 쏠림이 있었고, 의료기관 유형으로는 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시행되며, 병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일반 병동에 비해 적다. 김진현 외(2017)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간호인력이 증가하고 병동환경이 개선되었으며,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간호사의 만족도 증가와 스트레스, 이직률 감소와 환자만족도 및 재이용 증가와 욕창, 낙상 및 감염 등 환자 안전지표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비용이 상당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별도의 예산마련을 하여 지방활성화가 동반된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김진현 외, 2017).

다음으로,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간호분야에 기술도입으로 여성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과거에 비해 현재 기술이 발전하였음에도 간호인력은 증가해왔으며, 향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부문의 인력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동력을 대체하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인지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분야의 기술변화가 우려했던 것만큼 인간의 노동력의 단절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도입과 발전이 간호분야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일반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건 의료서비스업 중 간호분야의 여성 일자리 정책과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병원 내 간호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결과 병원 내 간호사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율이 43.0%나 되지만,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은 5년간 119건에 불과했다³⁾. 즉,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사 수를 필수로 보고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는 것과는 다른 수준이다. 간호사 정원을 지키는 것은 비단 간호사의 노동환경 때문만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 처벌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결정 단계에서 간호사의 보이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자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계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2인, 치과의사협회 1인, 한의사협회 1인, 병원협회 1인, 간호협회 1인, 약사회 및 제약바이오협회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간호협회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러나 공익대표 8인 중 전문가에는 간호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 즉 의사결정구조에서 간호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간호사의 이해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적절한 참여자가 필요하고 그 수가 최소 2인 이상이 되도록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3)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인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중앙일보, 2020.10.08).

<참고문헌>

- 간호사신문. (2020.06.01.).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본격 실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3&idx=25290> (검색일: 2020.10.2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 (검색일: 2020.10.13.)
- 김진남·권원태·이강희. (2012). 자동IV 주사 유량 자동 제어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21(1), 161-166.
- 김진현·김성재·박은태·정수용·이은희.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학과행정지 23(1), 312-322
- 김수현. (2017). 의료서비스산업 인력수요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데일리메디. (2018.03.13.). 「국내 최고 병원환경시스템 전문브랜드 '퍼시스케어」,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358> (검색일: 2020.12.30.)
- 데일리메디. (2005.05.01.). 「세브란스새병원, 첨단물류 '에어슈터' 눈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57046>(검색일: 2020.10.27.)
- 머니투데이. (2020.06.23.). 「의료진 안 만나고, 코로나 검사한다…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309375891073> (검색일: 2020.10.27.)
- 메디게이트뉴스. (2019.07.17.).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5.3명 vs 한국 16.3명…간호인력 이직 막으려면 적정 인력 확보부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215685729> (검색일: 2020.11.13.)
- 메디파나뉴스. (2020.04.28.). 「한림대의료원, 이동형 의료장비에 RTLS 적용」,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56184 (검색일: 2020.11.13.)
- 박가열·천영민·홍성민·손양수. (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 (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2.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만 1만개 이상 확대”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6&PAGE=6&topTitle=f (검색일: 2020.12. 30.)
- 송영애·김현정·이현경. (2018). 간호, 로봇, 과학기술 혁명 :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로봇 시스템. 노인간호학회지 12월 특별호, 144-153.
- 아시아투데이. (2016.10.24.). 「분당서울대병원 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의 키워드는 '확인」,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24010013990> (검색일: 2020.10.13.)
- 온라인 팜. <http://www.online-pharm.co.kr/> (검색일: 2020.10.13.)
- 워크투데이. (2020.07.28.). 「서울대병원, 안내·청소로봇에 이어 배송업무에도 '인공지능 로봇' 투입」,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2> (검색일: 2020.10.27.)
- 이은숙. (2012). 간호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건과 복지, 14, 59-80.
- 이정희·김근주·정경은·이주호·구은희. (2017).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영·정형선·신수진·장재규·김진현·윤강재·채수미·신현웅·최지희·차미란. (2018).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일자리기획단.

윤강재·송태민·최성은·정연·이기호. (2016). 정보통신기술(CT)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index.do> (검색일: 2020.12.30.)

의학신문. (2020.07.23.). 「H+양지병원, 환자안전관리 '모바일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063> (검색일: 2020.11.13.)

의협신문. (2020.05.04.). 「'스마트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93> (검색일: 2020.10.27.)

전자신문. (2020.04.28.). 「한림대의료원, 의료장비 위치추적 시스템 적용...간호사 업무 효율↑」, <https://m.etnews.com/20200428000271> (검색일: 2020.10.27.)

전자신문. (2020.1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 '원격 모니터링' 확산 필요"」, <https://m.etnews.com/20201022000173> (검색일: 2020.10.27.)

정현학·최영임·이상원. (2016).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보건산업브리프 vol.215.

조선비즈. (2020.02.04.). 「"중국방문 키오스크로 조희" 양지병원, 원스톱 감염안전예방시스템 개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4/2020020400813.html (검색일: 2020.10.27.)

중앙일보. (2020.10.08.). 「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사 부족' 처벌은 '솜방망이」,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501 (검색일: 2020.11.16.)

청년 의사. (2020.10.23). 「원격 모니터링으로 의료현장 개선 가능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57> (검색일: 2020.12.30.)

한국경제. (2013.04.22.). 「사이버 간호사 24시간 병실 지킨다...분당서울대병원-SKT, 스마트 병원 시스템공동개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3042268761> (검색일: 2020.10.27.)

Western Governors University. <https://www.wgu.edu/blog/7-nursing-technologies-transforming-patient-care1903.html> (검색일: 2020.05.10.)

자율감각쾌락반응(ASMR) 남성 유튜버들의 "디지털 젠더" 수행¹⁾

이소림(컬럼비아대 방문연구자)

‘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자율감각쾌락반응이라는 신조어로, 청각적, 시각적 자극기제를 통해 흔히 ‘팅글’(tingle)이라 불리우는 기분좋은 쾌감의 경험, 또 그로 인해 얻는 심리적 안정 등을 통칭한다. 2010년경부터 유튜브를 통해 급부상한 ‘ASMR 콘텐츠’란 작은 속삭임, 손 비비는 소리, 두드리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청각 트리거들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가 이러한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저자극 영상물을 일컫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ASMR이 2010년도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면, ASMR 자체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항상 우연히 접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점이다.²⁾ ASMR 콘텐츠는 오프라인 사회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돌봄노동을 역할극 (roleplay)를 통해 재현하는데, 이는 가사노동 (빨래 개기, 청소, 설거지, 다림질),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노동, 그리고 사회관계적으로 감정노동이 행해지는 여성 다수 서비스직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백화점 직원, 승무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현재 OECD국가들 중 한국의 25-34세 성인여성이 가장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에 의거한 경력단절에 가장 취약하다는 통계 (Draudt, 2016), 그리고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리해고된 기혼여성의 증가로 악화된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감안할 때 (김난주, 2020), 오프라인 세상의 돌봄노동이 어떻게 디지털 역할극으로 재현되고 소비되는지, 그것의 젠더 수행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국내 대중매체에서는 ASMR이 주로 이러한 젠더화된 돌봄의 재현이라기보다 ‘셀프 케어,’ 즉 자기돌봄의 일종으로 회자되어 왔다. 즉, 콘텐츠의 생산자보다 소비자에 중점을 두는 보도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국내에서 2014년부터 ‘힐링 콘텐츠’로 각종 뉴스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ASMR 콘텐츠의 인기는, 소위 스펙 쌓기를 통해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경영을 종용받는 2030세대 들이 학벌, 커리어, 외모 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경영해야 하는 세태를 반영한다. 특히 대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청년 1인가구의 소비문화로 정착하며 1인미디어를 통한 셀프케어의 일

1) 이 글의 논의들을 더 자세히 다루는 논문은 다음을 참고: So-Rim Lee, "From Boyfriend to Boy's Love: South Korean Male ASMRtists' Performances of Digital Care." *Television & New Media* 2021 (OnlineFirst): 1-16.

2) 예를 들어, 나는 동생이 색연필로 색칠하는 소리, 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가위 소리 등 우연한 체험의 기억들을 통해 2010년도 이전부터 ASMR을 ‘알고’ 있었다. 또, ASMR이라는 용어 자체는 2010년에 생성되었지만, 그 전에도 국외에서는 소리/퍼포먼스 예술가 Laurie Anderson, Claire Tolan, Carmina Escobar 등에 의해 ASMR의 효과들이 꾸준히 탐구되어왔다. 또, 1970년대 미국 문학에서 ASMR의 병원진료 역할극이 재현되는 모습을 다룬 연구도 있다 (Ahuja, 2013).

종으로 간주되어온ASMR 콘텐츠는 일상생활에서 가상의 반려인 역할을 하는데, 혼자 밥을 먹는 바쁜 현대인이 ‘마치 함께 먹는듯한’ 느낌을 받기위해 시청하는 ‘먹방’처럼, 파편화된 극개인주의적 삶 속 원격 친밀감 (distant intimacy) 형성의 매체가 된 것이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듯 ASMR 연구 또한 2010년도 중후반부터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 심리학, 신경생물학자들이 무엇이 ASMR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연구해왔다면, 국내 인문/사회/언론학쪽에서는 주로 힐링담론의 연장선상에서 ASMR을 다뤄왔다. 예를 들어 ASMR 콘텐츠 사용자들, 이용동기,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 (강미정 외, 2020; 김운유 외, 2019; 김자경 외, 2018); ASMR이 어떻게 친밀감의 정동을 형성하는지 메를로-퐁티의 이론으로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장세연 외, 2016); 또 ASMR을 ‘디지털 돌봄’이라 개념화하여 친밀감의 정동을 통해 어떻게 ASMR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 연구 (육주원 외, 2018);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다시피한 김수정 (2018)의 젠더/섹슈얼리티에서 함의로서의ASMR 연구에 이어, 두 가지 예시를 통해 남성 ASMR 유튜버들이 어떻게 여성화된 돌봄 개념을 ‘남자친구’와 ‘보이즈러브’ (BL)의 두 가지 역할극으로 전유하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관객들과 상호주관적이고 어찌면 전복적일수도 있는 연극적 상황을 연출하는지, 젠더수행의 관점에서 사유해보고자 한다.

ASMR의 젠더/섹슈얼리티적 함의는 영미권에서 특히 활발히 회자되어왔는데, 2010년에 ‘ASMR’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낸 Jennfer Allen은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의 디지털 성노동과 그를 둘러싼 ‘비도덕’ 낙인이 ASMR의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작용할까 염려해 일부러 이런 유사과학적 용어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Allen, 2016). 실제로 이는ASMR이 유튜브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영미권에서 자주 회자되어온 부분이기도 한데,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젊은 백인 여성들에 의해 생산되고 (Andersen, 2015; Cheadle, 2012; Waldron, 2017), 특히 ‘입소리 ASMR’ 등에서의 1인칭시점 시각적 재현이 마치 포르노와 ‘캠 산업’ (cam industry: 유료 플랫폼 기반 성인 콘텐츠 산업) 등 여성다수의 디지털 성노동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³⁾ 육주원, 권은아, 윤신웅 (2018)은, 한국에서 ASMR이 힐링담론으로 포섭된 점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함의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청정하게’ 해석되어온 이유였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ASMR과 ‘인터넷 포르노’의 경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⁴⁾ 만일 ASMR의 창작자가 여성이 아니라면, 또 ASMR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성적인 요소를 넣는다면, 이런 ASMR 콘텐츠를 어떻게 재사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자 Viktor Arvidsson과 Anna Foka, Nishant Shah가 (2015) 정의한 ‘디지털 젠더’ (digital gender) 개념으로 국내 남성 ASMR 유튜버들의 남성성과 젠더 역할 수행을 재사유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젠더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그 사용자들 각각의 행위성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형성되는 젠더 실천들을 뜻한다. 곧, 디지털 젠더는 우리가 평소 인터넷을 각종 발화와 담론이 생성되고 공론화되는 ‘수동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을 문제삼고 인터넷 자체를 행위주체로 재사유한다. 이는 인터넷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함께’ 인종, 젠더, 계급등을 구체화하고, 제도화된 사회적 불의와 규범들을 공고히하거나 바꾸는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 것이다. 단순히 오프라인 세상에

3) 가장 인기있는 한국 ASMR 유튜버들도 대다수가 여성이다. 오히려 현재 전지구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여, 남, 이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퀴어, 논바이너리, 2인 이상 등 주류 ASMR 콘텐츠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재현방식이 특징이다.

4) 이 질문이 중요해지는 일이 2018년 중국에서 있었다. 중국 당국이 ‘저속하고 음란한 ASMR’ 금지령을 내린 후Youku, Bilibili, Douyu등 주요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대대적으로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ASMR 콘텐츠가 저속하고 음란한지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사실상 ASMR 자체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Liao, 2018).

서 젠더 연구를 중립적인 사이버공간으로 대입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World Wide Web 자체와 그 세부적인 작동들이 정치적 존재로서 젠더를 수행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틀인 디지털 젠더로 ASMR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몸, 몸의 정동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긴밀한 관계속에서 함께 작동하는지 재해석 할 수 있게 해준다.

1. 남자친구 ASMR 역할극

첫 예시는 우노 ASMR의 ‘비누깎는 남자친구 롤플레이’라는 영상물로, 2018년 2월 유튜브에 업로드 된 이후 현재까지 7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역할극은 자상한 ‘남자친구’가 각종 ASMR 트리거를 통해 하루종일 직장생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애인 (시청자)을 편안히 잠들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간단한 서사에서 시청자는 우노의 ‘여자친구’로 상징되며, 이는 우노 본인이 설정해놓은 이성애적 관계의 재현이다.⁵⁾ 이러한 ‘(시스헤테로) 남자친구’라는 임의적인 역할은 사실ASMR 콘텐츠 내에서도 가지각색으로 재현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Manley ASMR은 맥주를 들이키고 근육자랑을 하며 전공공구를 자랑하는 등, 일부러 과장되고 희화화된 미국 중서부적 마초 남성성을 다양한 색상과 채도의 물체들과 함께 연출한다. 이에 비해 우노는 무채색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이런 육체적 남성성을 가능한 덜 부각시킨다. 영상은 우노가 시청자의 집에서 퇴근 후 지쳐 돌아온 시청자를 반기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번 한 주도 고생했고, 요즘 잠이 많이 부족할텐데 자신이 편안하게 재워주겠다고 속삭인다. 도입부가 끝나면, 영상의 대부분은 우노가 Zoom H6 바이너럴 마이크 가까이 라벤더색 비누 두 개를 칼로 깎는 모습으로 채워진다. 무채색, 무서사에 가까운 이 영상의 시각적 초점은 조각칼과 그의 손에 맞춰지고, 그것보다 대두되는 건 단연 소리이다; 사각사각 비누 깎는 소리, 또 간간이 속삭여지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수다 말이다. 우노의 몸은 30분이 넘도록 꾸준히 비누를 깎는 손으로 환유되고, 비누와 칼의 물질성이 영상물의 다감각적 중심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상한 ‘남자친구’라는 역할극은 이성애적 로맨스나 성적인 자극보다 어쩌면 어린시절 물체 중심의 소꿉놀이의 추억을 소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노의 육체적 존재감, 또 비누와 칼의 물질성보다도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ASMR 유튜브와 시청자 사이의 마주침 (encounter) 그 자체이다. 이는 스크린 속 픽셀화된 이미지와 눈의 마주침, 또 마이크에서 헤드폰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파장이 시공간을 넘어 귀로 들어오는 촉각 (haptic)적 마주침이기도 한 것이다. 할리우드 고전영화를 통해 Laura Mulvey (1975)가 이론화한 ‘남성적 시선’이 객체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관음하며 즐기는 시각중심주의적 관객성에 대한 비판이 없다면, ASMR 남자친구 역할극은 이러한 단방향적 관계를 시각, 청각, 또 촉각적 만남을 통해 상호관계적이고 다감각적 교환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인지도 모른다. 또 여기서 오는 쾌락은 노골적으로 성적이지 않지만, 어쩌보면 상당히 에로틱한 (erotic) 것이다. Laura U. Marks (2002)는 ‘에로틱함’을 공간과 시간을 너머 낯선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상속 정동적 관계성이라고 재정의했는데, 즉 개인이 세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자유로이 왔다갔다 하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다른 이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끽하는 순간이 그에게 ‘에로틱’하다는 정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Marks는 삶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이 가장 에로틱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일상의 에로틱함’

5) 모든 ASMR (남자)친구 역할극이 꼭 이런 이성애적 관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ASMR이라는 유튜버는 2019년 서면인터뷰에서 일부러 이성애적 관계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자친구” 대신 “친구” 역할극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고, 후에 서사할 BL이나 게이 ASMR 콘텐츠의 경우 역할극에 따라 시청자와 콘텐츠 창작자와의 구도는 좀 더 복잡해진다.

(eroticism of everyday life)은 오프라인 삶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얻는 ASMR의 우연한 마주함 말고도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ASMR콘텐츠를 통해 안전한 물리적 거리에서 낯선 이의 돌봄 역할극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따라서 얼마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신뢰하는 지도 (그리고 이것이 문제적인지도) 고민해보도록 유도한다. 만일 모든 ASMR 현상이 이러한 일상 성의 에로틱함에 기반되어있다면, 에로틱함과 성적임의 간극은 무엇이며, 적극적으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특정 ASMR콘텐츠는 어떻게 재사유할 수 있을까?

2. BL (Boys Love) ASMR역할극

국내의 주류 여성 ASMR유튜버들은 ASMR이 성적인 콘텐츠로 치부되거나 디지털 성노동으로 ‘낙인’지어지는 것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한다 (오피스엔, 2016; Mervosh, 2019). 반면 유튜브 ASMR 콘텐츠 중에서도 창작자의 젠더불문 성적 자극과 쾌락을 유도하는 서브장르들이 있는데, 이 중 남성 유튜버들의 영역이 바로 BL역할극이다. BL (Boys Love)은 1990년대 들어 일본에서 유입 되어 만화, PC통신을 통해 유통된 라이트 노벨, 팬픽션 등을 통해 아마추어 창작 동인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다.⁶⁾ 2000년대 들어 특히 상업영화와 드라마등 주류 대중문화로 포섭된 BL은, 시스헤테로 여성 작가가 시스헤테로 여성 관객들을 위해 매력적인 남성 동성애자 캐릭터의 연애와 성 관계를 상상하는 ‘여성 장르’로 알려져 있다. ASMR콘텐츠는, 이러한 BL 장르가 ‘시각/텍스트 위주 대신 청각과 촉각 위주의 매체로 재현된다면?’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BL ASMR 콘텐츠는 남성 창작자가 라디오극의 형식으로 시각적 요소 없이 오로지 소리만으로 BL 특유의 퀴어 서사를 재현한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활동한 마태롱 ASMR의 경우, 한 명의 남성 창작자가 1인 2역의 역할극 (BL의 공수관계에서 ‘공’의 역할을 하는 지훈, 그리고 ‘수’의 역할을 하는 민석 역)을 하는데, 4-7분 남짓 짧막한 오디오 상황극을 통해 이 두 캐릭터가 성적 전희를 즐기는 내용이다. 14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변태 사장님과 완벽한 비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 남자친구와 병원에서,’ 등 독자들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창작자가 직접 대본을 쓰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 대본을 응용하거나 대본 없이 즉흥 연기를 펼치기도 한다. 이러한 BL ASMR은 각주4에서 언급한 BL의 복합적인 담론들을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남성 BL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ASMR 콘텐츠는 소위 ‘여성들의 장르’로 여겨졌던 BL이라는 장르를 교란시키고, 따라서 여성들의 대안공간으로 작용해온 BL을 남성이 흐리고있다는 비판⁷⁾ 또한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6)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2018년경 ‘탈BL’이라는 현상이 특히 중요하다. 김효진 (2019)이 지적하듯, 탈 BL 담론에는 동인녀의 자기성찰 이외에도 다층적인 여러가지 요인들이 내제되어 있다. 이는 게이혐오에 기반하기도 하고, 공수관계를 통한 남녀권력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주장에서 오기도 하며, 또 BL장르 자체가 여성캐릭터가 부재하다는 면에서 여성서사 배재로의 논의와도 직결된다. 김효진은 이러한 탈 BL담론이 ‘현실, 표상과 환타지의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또, 탈 BL 담론 이전에도 다수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과 퀴어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해 온 BL장르에 대한 비판도 눈여겨봐야 한다. BL의 인기몰이가 퀴어남성성을 이성애자들의 낭만적 환타지로 소비함으로써 실제 성소수자들의 삶과 동떨어진 소비향락문화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으로 김경태 (2017)는 BL내부에서도 비가시화된 남성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존재하며, 오직 생물학적 남성으로만 BL 캐릭터들이 재현되는 것도 아니며, 또 퀴어한 상상을 하는 여성들이 비재생산적 섹스의 쾌락을 통해 이성애규범적 관계를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재현적 장으로서 BL이 전복적 가능성을 지녔다고도 주장한다 (비이커, 요오드 2017). 이런 BL의 다층적인 논의의 가능성과 페미니즘과의 교차점들은 최근 홍보람 (2021)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콜로кви엄 강연 (‘방법으로서의 BL: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탈자연화하기’)에서도 다룬 바 있다.

7) 또, 창작자 본인이 (물론, 구독자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경우)시스헤테로 남성이라면 어쩌면 논의는 더더욱 복잡해질지도 모른다. 마태롱 ASMR의 운영자는 2020년 10월 29일 업로드 된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던 실명과 나이, 그리고 본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자신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남자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후 줄곧 이성애적 연애만 해 왔고, 본인의 성적 지향은 이분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와 텍스트로 향유되어 온 BL장르를 오로지 청각적 경험으로 대체하는 BL ASMR의 특성을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상된 두 남성간의 전희를 통해 듣는 이에게 체현(embodiment)되는 BL ASMR의 ‘귀르가즘’적 쾌락은, 쾌락적 주체(‘보는 이’)와 대상(‘보이는 이’) 사이의 공간적 차이에서 오는 폭력성과 결부되어온 시각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성적 유희라는 면에서 이미 상당히 귀여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아가, 디지털 젠더의 관점에서 BL ASMR을 재사유함으로서 인터넷과 우리 몸의 관계성을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Nishat Shah (2015)는 인터넷이라는 공적 매체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온라인 슬럿 셰이밍(slut-shaming) 되는지 연구하는데, 그는 특히 온라인에서 여러 동영상들 통해 더러운 육체, 부도덕성, ‘걸레’ 등으로 낙인찍히는 여성의 몸과 깨끗하고 중립적이며 문명화되는 테크놀로지의 이분법에 주목하고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 즉, 몸의 은유를 인터넷의 기술적 영역으로 확장해 재사유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항시 연결, 접속, 공유, 삽입, 부호화,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을 ‘함께 하는’ 인터넷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호공동적으로 디지털 젠더를 수행할 뿐더러 그 자체로 매우 불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Shah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동영상 속 여성의 몸과 주체만이 낙인찍히는 현실은 사실 ‘디지털한 것 자체가 문란하다(To be digital is to be slutty)’는 논리에 따라 ‘이미 그 자체로 문란한’ World Wide Web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 난잡함을 은폐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테크놀로지를 몸의 은유를 통해 재사유함으로서, 인터넷 사용자 그 누구도 이러한 집단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걸 분명히 기억하자는 것이다.

Shah가 디지털 폭력으로서의 ‘슬럿 셰이밍’을 논의했다면, ASMR에서의 디지털 젠더를 재사유함에 있어서도 ‘문란함’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상호관계적 수행성으로 전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L ASMR의 청중들이 역할극을 재생(play)함으로서 수동적으로 쾌락을 느끼는게 아니라 일종의 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함께 수행(play)하는 일원이라고 재사유해보자. 마태롱 ASMR은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항시 독자들의 BL 역할극 시나리오 요청을 받고 있고, 또 다른 BL ASMR 유튜버인 에토일 ASMR은 팟레온(Patreon)이라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BL 영상물을 구독자들과만 선택적으로 창작, 공유한다.⁸⁾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콘텐츠를 구독하는 ASMR 유저들은 일방적으로 쾌락을 얻고 가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가상의 고안극(devised theatre)을 함께 만들고 구성하는 디지털 동인문화의 공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 BL ASMR을 파편화된 개개인이 집에서 홀로 즐기는 것이라는 사유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들과 소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느끼고 만들어가는 쾌락의 수행’이라 재사유한다면, 어쩌면 이러한 정동적 현상은 디지털 젠더의 귀여한 가능성을 시사해주는지도 모른다. 이는 Emma Leigh Waldron (2017)이 퀴어이론을 경유해 지적하듯, 이성애규범적 ‘섹스’의 정의 자체를 ‘두 명의 이성애자가 삽입섹스를 통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확장시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자유주의적이고 극개인주의적 현상으로 이해되어 온 ASMR문화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문화로의 전환을 꾀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혼자 느끼는 쾌락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성, 공유, 수행하는 쾌락으로 ASMR을 확장시켜 재사유한다면, 동영상을 재생하는 행위가 디지털 젠더를 수행/연기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다 볼 수 있을까? 이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귀여환타지를 객체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ASMR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이들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모두가 귀여한 경험으로 공동 재현하는 전복적 가능성의 디지털 극 문화로서 고민해볼 수도 있을

법적으로 단정짓기 애매한 것 같다고 말했다. (“I’ll tell you about me/Q&A,” <https://www.youtube.com/watch?v=4zISdK0zW8s>).

8) 2019년 1월에 저자와 서면 인터뷰를 했던 에토일 ASMR이라는 유튜버는 당시 약 1700명 정도 구독자를 보유한 신예 유튜버로, 11개의 업로드된 동영상 중 6개가 BL 역할극이었다. 2020년 기준 14만명 넘는 구독자를 모은 그는 유튜브에 3개의 별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것이다.

맺음말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며 사람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실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면 만남을 각종 화상회의로 대체하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을지의 의문은 우리 모두 한번씩 가져봤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ASMR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원격 친밀감의 정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사는 유대관계를 대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온다 (Wylde, 2019). 이 글을 쓰며 드는 생각은, ASMR이 온라인에서 쾌락을 쫓는 파편화된 개인주의의 반영이라는 씁쓸함과 더불어 특히 국내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디지털 성폭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더욱) 디지털 젠더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ASMR 콘텐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인터넷 그 자체를 각각의 책임감있는 행위자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극히 개인주의적인듯 보이기 십상인 ASMR 문화를 공동체적 사유로 전환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으려 하며, 후속 연구로 지난 1년 내에 급부상한 게이, 레즈비언 ASMR 창작자들과 이러한 퀴어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공동체적 디지털 젠더 수행에 대한 작업을 기획중임을 밝히며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강미정, 조창환 (2020). 욕구 충족 영상 콘텐츠 (브이로그/ASMR/먹방) 이용 동기, 수용자 특성, 시청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1호.
- 김난주 (2020). 두 번의 경제위기, 여성에게 더 큰 타격 줬다: 통계를 통해 보는 여성노동 50년의 변화. 『일다』, 9월 26일.
- 김수정 (2018). ASMR의 감각적 친밀감과 젠더/섹슈얼리티에서의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4호.
- 김온유, 안규미, 오홍석 (2019). ASMR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 27권, 제1호.
- 김자경, 이정기 (2018). 20대 대학생들의 무자극 영상 콘텐츠 지속적 이용의도 결정요인 연구: 무자극 영상 콘텐츠 이용동기, 스트레스, 외로움, 확장된 계획생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34권, 제 2호.
- 김효진 (2019).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47권.
- (2020). 보이즈 러브의 문화정치와 ‘여성서사’의 발명.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서울: 후마니타스.
- 비이커, 요오드 (2017). ‘야오이의 주인공은 게이일까요’ 퀴어영화연구자 인터뷰. 『일다』, 12월 13일.
- 『오피스N (2016)』, 의미있는 속삭임을 하는 그녀, ASMR DANA 예술가. 3월 3일.
<http://officen.kr/officenews/viewnews.do?id=280>.
- 육주원, 권은아, 윤신웅 (2018). 디지털 돌봄과 친밀감: 한국 ASMR의 콘텐츠 특성과 커뮤니티 사례 연구. 『인문콘텐츠』, 제 48권.

이성준 (2019). ASMR 콘텐츠 지속적 사용 영향 요인 탐색: 신경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 10호.

장세연, 박진서, 류철균 (2016). ASMR 방송의 실존적 공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4권.

Ahuja, Nitin K. (2013). It feels good to be measured: Clinical role-play, Walker Percy, and the tingle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56 (3), 442-51.

Allen, Jennifer (2016). Interview by Craig Richard. *ASMR University*, May 17. <https://asmruniversity.com/2016/05/17/jennifer-allen-interview-coined-asmr/>.

Andersen, Joceline (2015). Now You've Got the Shiveries: Affect, Intimacy, and the ASMR Whisper Community. *Television & New Media* 16 (8), 683-700.

Arvidsson, Viktor, and Anna Foka (2015). Digital Gender: Perspective, Phenomena, Practice. *First Monday* 20 (4).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5930/4430>.

Cheadle, Harry (2012). What Is ASMR? That Good Tingly Feeling No One Can Explain. *Vice*, July 31.

https://www.vice.com/en_us/article/gqww3j/asmr-the-good-feeling-no-one-can-explain.

Draudt, Darcie (2016). The Struggles of South Korea's Working Women. *The Diplomat*. August 26.

<https://thediplomat.com/2016/08/the-struggles-of-south-koreas-working-women/>.

Liao, S. (2018). China bans ASMR videos citing 'vulgar and pornographic content.' *The Verge*, June 18. <https://www.theverge.com/2018/6/18/17475942/china-asmr-video-ban-anti-pornography>.

Marks, Laura U. (2002). *Touch: Sensuous Theory and Multisensory Med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ervosh, Sarah (2019). A.S.M.R. Videos Give People the Tingles (No, Not That Wa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Mulvey, Laura (1975).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16 (3), 6-18.

Shah, Nishant (2015). Sluts 'R' Us: Intersections of Gender, Protocol and Agency in the Digital Age. *First Monday* 20 (4).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5463/4415>.

Waldron, Emma Leigh (2017). 'This FEELS SO REAL!' Sense and Sexuality in ASMR Videos. *First Monday* 22 (1). <https://doi.org/10.5210/fm.v22i1.7282>.

Wylde, Kaitlyn (2019). What Does Having a Boyfriend Have to Do with Sleep? *The New York Times*, October 2.

<https://www.nytimes.com/2019/10/02/style/asmr-boyfriend-sleepvideos.html>.

페미니스트로 과학하기

: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연구

임소연/김도연(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학부생)

문제의식: 과학지식 및 기술의 젠더편향성 (1)

- 여성을 배제하는 사례
 - 기존 안전벨트 디자인은 Engineering design 과정에서 남성이 표준이었음.
 - 심장질환은 오랫동안 남성의 질환으로 간주되어 진단과 치료의 표준이 남성이었음. 여성에게 적절하지 못한 진단과 치료법이 나옴.
 - 젠더혁신 이후, Pregnant crash test dummies 'Linda', 여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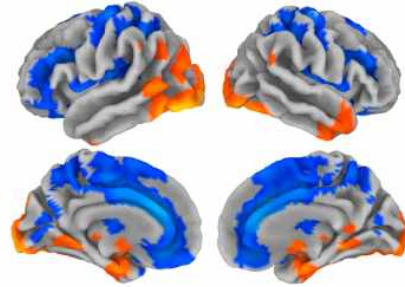


SEX DIFFERENCES IN DRUG PROCESSING		
IN WOMEN	PHYSIOLOGICAL DIFFERENCES	IN 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LOWER PROCESSING OF MANY DRUGS• HIGH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BLOOD• DEFICIENT CONCENTRATIONS OF SOME DRUGS IN URINE• HIGH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MILK• SLOWER METABOLISM OF DRUGS• HIGHER BLOOD ALCOHOL LEVELS• LOWER BLOOD ALCOHOL LEVELS• SLOWER ABSORPTION OF DRUGS• EARLY ONSET OF DRUGS• HIGH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BLOOD• DEFICIENT CONCENTRATIONS OF DRUGS IN URINE• HIGH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MILK• SLOWER METABOLISM OF DRUGS• HIGHER BLOOD ALCOHOL LEVELS• LOWER BLOOD ALCOHOL LEVELS• SLOWER ABSORPTION OF DRU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DY COMPOSITION<ul style="list-style-type: none">• FAT MASS• MUSCLE MASS• FREE WATER• HEART RATE VARIATION• GASTRIC MOTILITY• STOMACH ACIDITY• LIVER ENZYMES• KIDNEY EXCRETION• COLON MOT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STER PROCESSING OF MANY DRUGS• LOW CONCENTRATIONS OF DRUGS IN BLOOD• DEFICIENT CONCENTRATIONS OF DRUGS IN URINE• LOW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MILK• FASTER METABOLISM OF DRUGS• LOWER BLOOD ALCOHOL LEVELS• HIGHER BLOOD ALCOHOL LEVELS• FASTER ABSORPTION OF DRUGS• LATE ONSET OF DRUGS• LOW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BLOOD• HIGH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URINE• LOWER CONCENTRATIONS OF DRUGS IN MILK• FASTER METABOLISM OF DRUGS• LOWER BLOOD ALCOHOL LEVELS• HIGHER BLOOD ALCOHOL LEVELS• FASTER ABSORPTION OF DRUGS

문제의식: 과학지식 및 기술의 젠더편향성 (2)

- 젠더편견에 근거하거나 강화하는 사례

- 뇌의 성차 연구
2020년 7월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정신 건강 연구소의 발달뇌유전학자 아민 라즈나한과 그의 연구팀은 남녀 뇌의 차이를 해부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 결과, 남성의 뇌는 후두엽·편도·해마가, 여성의 뇌는 전두엽 피질과 섬엽이 각각 평균적으로 더 큼.



출처 : PubMed
<https://doi.org/10.1073/pnas.1919091117>

페미니즘은 과학을 변화시키는가? (1)

-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성과: 켈러, 하딩, 해러웨이 등 페미니스트 과학 방법론 및 인식론
- “페미니즘은 과학을 변화시켰는가?” (Schiebinger 1999)
 - 물리학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페미니스트적 비판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Bug 2003).
 - 페미니즘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어 간접적으로 과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여성들이 스스로 과학을 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거나 과학 실천에서 페미니즘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Keller 2004).
 - 영장류학이 페미니스트 과학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영장류학자들은 이에 상당히 비판적이다(Fedigan 1997)

→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페미니즘은 과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 (임소연, 김도연 2020) – 1

- 페미니스트 과학이 “여성화된 과학(feminized science)”과 동의어 아님: 여성화된 과학은 사회적으로 생성된 여성성을 기반으로 남성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것 (Lederman 1993)
 - 페미니즘이 과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페미니즘의 비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가설로서 제시될 때 가능하다(Gowaty 2003).
 - 다양한 페미니즘과 다양한 과학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과학을 하나의 내용이나 형식으로 규정하기 힘들다(Longino 1987).
- 페미니스트 과학을 “새로운 시각과 방법의 과학”이나 “새로운 지적 활동” 혹은 “과학의 편향과 편견들을 인정하고 보다 다양한 맥락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다면 페미니스트 과학을 어떻게 실행가능한 과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은 과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 (임소연, 김도연 2020) – 2

- “과학하기”는 두 가지 차원의 실행(Longino 1987)
 - 지적 실행의 차원: 관찰과 실험, 과학적 추론 등
 - 사회적 실행의 차원: 실험실의 구조화, 다른 과학자와의 관계맺기, 정치적 투쟁 등
-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란?
 - 특정한 방식이나 특정한 가치 등의 형태로 미리 규정된 과학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각자의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과학실행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 페미니즘이 특정한 방법론이나 원칙적 내용이 아니라 과학자의 개별적이면서 집합적인 선택과 실행을 통해서 개입
 - 페미니즘은 고정되어 있거나 미리 정해져 있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실행의 효과로서 만들어지며 끊임없는 실패, 경합과 검증, 그리고 전략의 대상이 됨
 - 페미니즘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의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과 과학의 공존과 결합에 대한 열린 태도와 함께 더 많은 실험과 다양한 전략이 장려되어야 할 것(Roy 2018).

“I’m Not a Feminist, but...” (Seron et al. 2018)

- 2003~2007년 미국 MIT, 프랭클린 L. 올린 공과대학(여대), 스미스 칼리지(여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암허스트(UMASS)의 학부 공대 여학생 연구
-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 성차별적 경험 및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이지만 페미니즘 거부
 - 페미니즘을 불평이나 특별대우 요구로 인식: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
 - 정치화를 배제하는 공학 문화 및 교육의 영향
- Feminism 대신 “STEMinism” (Myers et al. 2019)
 - 젠더 본질주의+예외주의+능력주의 (남녀차이가 있기 하지만 나는 예외이다. 왜냐면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 이공계 여성의 개인주의적, 능력주의적 임파워먼트

→ 만약,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는 여성이 이공계에 있다면?

왜 페미니스트 리부트 세대 대학원생인가?

-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여성들 (손희정, 2015)
 - 페미니즘 리부트 : 2015년 전후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메르스갤러리의 미러링 스피치 운동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 흐름.
 - 현실 지향적 운동 : 젠더화된 생존에 대한 의식. 유리천장, 여성노동 폄하 등 매우 현실적인 조건으로부터 나온 운동
 - 페미니즘 리부트 특징
 - 자기정체화: 페미니스트 선언. 평범한 여성들의 자기규정의 일부로서의 페미니즘(이나영, 2016)
 - 집단적 의식 및 실천: 개인의 소비자적 실천, 디지털 공간에서의 대결 등으로 대항 (김보명, 2018)
 - 여성혐오가 키워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일상과 디지털 공간에서 경험(김수진, 2016)
 - 기성세대보다 덜 능력주의를 지향하며 다차원적인 공정성 기준을 가지고,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서 개인의 성공, 야망, 권력지향적 삶을 우선시하는 청년세대 여성의 특징과도 맞닿아 있음.
- 본 연구는 이 페미니스트 리부트 세대에 속하는 여성, 즉 페미니스트로 자기정체화하는 여성 이공계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Focus Group Interview

- 1회 60-70분 총 4회 만남 (비대면 zoom 회의)
- 참여자 4인 (전공 : 생명과학, 컴퓨팅, 환경)
- 집담회 내용 구성
 - 1차 : 여성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일반 (이공계 연구 환경에서의 차별 요인 및 경험)
 - 2차 : 페미니스트 자기정체화 및 페미니스트로서의 실험실 생활
 - 3차 : 과학지식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전공 분야 관련 젠더편향성 사례 제시 및 토론
 - 4차 : 페미니스트 여성 개인 및 집단으로서 페미니스트 과학에 대한 인식 및 수행 사례

분석내용

- 1) 이공계 및 실험실 내 여성혐오
- 2) 여성혐오에 대한 대응
- 3) 과학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 4)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1) 이공계 및 실험실 내 여성혐오

- 여학생 기피 현상

“저 이후부터는 여자한테 컨택 메일이 와도 답장도 안한다고.. 그래서 **제 뒤로는 줄줄이 남자만 뽑으시더라고요.**”

- 전통적인 여성성 수행에 대한 기대

“입학했을 때 **화장을 안하고 다니면 얼굴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를** 들곤 했는데..”

“당연히 제가 애 낳을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애 낳을 거냐고 물어보는..”

- 여성의 능력 폄하

“근데 하는 말이, 차라리 다른 같은 자대 동기에게 배우겠다, 여자애들 이름을 대면서 그 애들 손은 못밟겠다고 얘기를 한거죠. (중략) **여자니까 실험 못하고, 여자 손은 못밟고, 여자니까 덜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으니 저런 말을 하는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똑똑하지 않아요?**하는 분도 계시고..”

2) 여성혐오에 대한 대응

- 성공 지향

“위에 계신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싶다.**”

- 공간에 따른 정체성 분리 및 ‘남성화’에 대한 자기인식

“저는 여기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아를 분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대학원을 다니는 비즈니스적인 나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나를 잘 분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에 무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게 될 쯤에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있을까봐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는 저도 생색내고 남자처럼 행동하는걸 배워가고 있는중이에요.** 실험실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남성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습득하거나 이런 이슈에 무뎠지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과학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 지적 실행 차원에서의 편향성 인식: 연구 주제 및 실험 대상 선택, 용어에서의 젠더 편향성

“여성을 제외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성만 하고 있고 male쥐로는 전혀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 질병 연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성 female쥐만 쓴다고 해서 이게 또 여성 친화적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질병을 연구할 때 저는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남성과의 성관계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는 저희는 전혀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하죠.”

“도시 계획을 할 때도 그쪽에서도 거의 표본이 남성인 것 같더라고요.”

“mother 세포 daughter 세포 이런 표현을 쓰고 상동 염색체도 sister chromosome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여성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딱히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름이 붙어진 것 같진 않거든요.”

3) 과학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실행 차원에서의 편향성 인식: 연구인력과 ‘좋은 과학’의 기준에서의 젠더편향성

“높은 톤으로 클로바 부르면 못알아듣는데 낮은 목소리로 클로바 하면 정말 거짓말 같이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내부에서 테스트할 때 내부 테스트 팀이 전원 거의 전원 남성이라서 개발팀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고요.”

“원래 이만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이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상한 가성비 논의 같은 걸로 이제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던 거에 좀 더 가깝잖아요. 사실 더 좋은 과학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했던 거고, 저희가 페미니스트 과학자로서 거기에 뭔가 행동이 들어간다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지 뭔가 저희가 뭔가 이득을 얻는다거나 이런 식의 것은 아니잖아요.”

3) 과학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인식

- 지적 실행과 사회적 실행의 연결에 대한 인식: 관행과 교육, 문화의 문제

“많은 것들이 조금은 관습에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수가 가르쳐주고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문 연구 같은 걸 많이 하니깐 설문 연구 같은 걸 할 때 성별을 이분법으로 표기하는지 표기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그냥 거기에서 학습해서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아카데미아의 것들이 되게 의도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명시적인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암묵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사실 **문화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4)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 지적/개인적 차원의 실행 : 과학 지식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제로 연구에 반영함

“제가 원래 생리 주기가 28일이 딱딱 맞았었는데 (특정) 약을 먹으니깐 2배 이상으로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선생님도 이거를.. 아마 배우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선생님도 모르고 약 정보 사이트에도 그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임상 단계에서 남자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었고.** 일단 그 사이트에다가 **정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수정 요청을 보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이버 불링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것도 있고. 시스템도 트랜스젠더인지 아니면 젠더큐어인지..이런 다양한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차성에 의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집을 하는 편이에요.”

4)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 지적/집단적 차원의 실행 : 과학지식이 개인이 아닌 집단의 구성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입 방법을 모색함

“페미니스트 과학자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런 높은 위치, 리뷰어의 위치, 원고 계획서를 심사하는 위치까지 간다면 그 때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이처와 같은 높은 저널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은 실험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 뒤에 연구하는 사람들 다 그걸 따르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리뷰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젠더 별로 다른 결과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야한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교수들도 피어리뷰를 하잖아요. 동료들을 리뷰할 때도 그걸 꼭 짚어줘야 되고..”

4)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 사회적 차원의 실행: 실험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험실 내에서 상황에 따라 페미니스트로서 의견을 드러냄

“(인턴 때) 사람들이 되게 여성혐오 발언들을 많이 하고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다 메갈이고 연애 못하는 뭐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편견이라는걸 보여줘야하고.. 이런 시스템을 디자인하자고 말했었는데 (중략) 되게 운이 좋게 그분도 남성박사분이었는데 교수님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그분도 의식수준이 높으신 분이였어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쳐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수 분하고 계속 연구하고 결국 이 연구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니가 대놓고 싫어하진 않은데 ‘어...어...?’ 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고 언짢아하는게 보이더라구요.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서 그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건 아니예요.”

“저도 원래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연구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이미 뽐혀있는 남학생들보다 제가 학벌도 좋고 일도 훨씬 잘해요. 근데 교수의 최측근이시자 저에게 호의적인 분에 의하면, 교수가 여자는 안 뽐고 싶어한다. 너가 뽐히고 싶으면 인턴 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여자는 자기 할 일만 하고 썩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략) 그래서 탈주를 했어요.”

토론 및 결론 I. 기성세대 여성 과학기술인과의 차이점

- 1) 이공계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음
: 여학생 기피, 여성혐오적 발언, 여성의 능력 폄하 등)
- 2) 1)에 대한 대응에서 기성세대와 차별화됨
 - 기성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의 전략
 - ① 예외화 전략: 여성성과의 거리두기, 여성성 배제, 젠더 중립화/남성화 전략
 - ② 여성화 전략: 한정된 역할과 지위 수용, 조력자 등의 전형적인 여성적 역할 수행
 -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여성 대학원생의 전략
 - ① 예외화 전략에 대한 자각: 실험실의 나와 페미니스트로서의 나를 분리하고 남성들의 행동양식을 습득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및 경계심
 - ② 페미니스트 여성화 전략: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나 의식을 전략적으로 숨기거나 드러냄.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여성 개인의 성공 중요시

토론 및 결론 II. “페미니스트로서 과학하기”의 가능성

- 3) 과학기술의 편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비판적임
 - 지적 실행 차원에서의 편향성 인식: 연구 주제 및 실험 대상 선택, 용어의 젠더 편향성
 - 사회적 실행 차원에서의 편향성 인식: 연구인력과 ‘좋은 과학’의 기준에서의 젠더편향성
 - 지적 실행과 사회적 실행의 연결에 대한 인식: 관행과 교육, 문화의 문제
- 4) 페미니스트 과학하기를 시도하고 있음
 - 지적/개인적 차원의 실행 : 과학 지식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제로 연구에 반영함
 - 지적/집단적 차원의 실행 : 과학지식이 개인이 아닌 집단의 구성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입 방법을 모색함
 -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실행 : 실험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험실 내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의견을 숨기지 않음

토론 및 결론 III. 페미니스트 과학자 가시화의 필요성

- 집단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과학하기”의 가능성 – 연결과 연대

“그전까지는 뭔가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면 정말 여성으로서 한 몫을 해내는 거, 여성의 일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그 차별에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중략)

이런 모임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리프레시하면서 ‘아 맞아. 나랑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거였지’를 상기시키면서 잊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 너무 소중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치경제와 젠더

사회: 전의령(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데이터 경제와 여성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 플랫폼 산업과 여성 자영업의 재구조화

김미선((사)아시아여성학회 사무국장)

이루다 트러블: AI상품화와 젠더문제

손희정(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김주희(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강현주(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박사)

데이터 경제와 여성

: ‘여성-데이터’ 가공과 성차별적 데이터제품(data products)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고리즘이 매개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지배적인 사회 내러티브의 산물이자, 생산자이며 사용자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제품과 ‘여성-데이터’ 가공의 성차별성과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개인 데이터는 인터넷의 새로운 석유이며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통화라는 반복적 수사는 데이터3법, 데이터덤 구축 등의 사례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이를 활용한 정보의 생산을 경제와 기술개발 중심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술발전, 경제적 관점에서 원시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보 및 콘텐츠의 내용과 그 효과는 논의 대상에서 거의 비껴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여성-데이터로 작동하는 빅데이터/AI 산업 및 신기술을 접하게 되는 데이터 제품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과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 등 인프라의 여러 단계에 매개되는 성별 권력을 살펴본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제품으로 챗봇 이루다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데이터 생산 및 가공의 젠더 측면에서의 ‘맥락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품이 보다 대중화되는 시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방법론의 모색이기도 하다.

디지털경제 시대 여성 자영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 의류생산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김미선((사)아시아여성학회 사무국장)

본 연구는 여성 자영업의 세계가 디지털경제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자영업을 여성주의 이슈로 구성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급부상한 여성 자영업주의 등장과 그 이후 역사적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의류산업에서 전개된 여성 자영업이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다룬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1950~60년대의 양장점, 1970년대 대기업의 의류제조업, 2000년대 이후 창신동의 봉제공장,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양장점 등을 중심으로 의류생산에 참여한 여성 자영업자의 위치와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성이 있었는지를 탐색한다. 끝으로, 의류 관련 분야의 여성 자영업이 현재 플랫폼산업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재배치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 주요한 젠더 이슈의 하나로 자영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루다 트러블 : AI상품화와 젠더문제¹⁾

손희정(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는 말

2016년 알파고과 이세돌의 대국 이후, 2021년 또 한 번의 AI 논쟁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계기는 스캐터랩에서 출시한 챗봇 이루다²⁾였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는 장면이 4차산업혁명과 인간 노동의 종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면, 이루다 케이스에서는 AI 개발 및 사용 윤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노하우’가 공유되면서 촉발되었다. “AI를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가?” 혹은 “청년 남성은 이런 실천을 통해 가해를 학습하는가?” 등은 더 깊은 토론을 요하는 주제일 터다. 그러나 소라넷과 N번방 사건을 지나온 상황에서, 여성형 AI를 소위 ‘조교화’를 통해 일종의 ‘성노예’로 삼는다는 감각을 즐기는 일부 남성들의 유희에 대해 한국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후 논쟁의 불꽃은 이루다의 혐오발언 재생산으로 이어 붙었고, 곧이어 스캐터랩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빅데이터의 출처가 문제되었다. 스캐터랩에서 운영하

1) 미완의 발표문입니다. 학회 외부 유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인 챗봇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 챗봇의 역사는 최초로 인간과 소통이 된 챗봇은 1966년에 활동했던 정신과 상담봇 일라이자였다. 이후 서서히 발전 해오다가 2010년에 애플의 시리가 등장한다. 2011년 IBM의 왓슨, 2012년 구글 나우, 2014년 MSN의 코타나와 아마존의 알렉사가 출시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중의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AI 대중화가 급발진한다. 2016년 초 학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AI 기술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챗봇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6년 말에는 약 34,000개의 챗봇이 마케팅, 지원 시스템, 의료, 엔터테인먼트, 교육, 문화유산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Eleni Adamopoulou·Lsfteris Moussiades, “Chatbots: History, technology, and applications”, *Machine Learning with Applications* vol.2, 15, December 2020.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666827020300062>) 챗봇은 동작 방식에 따라 규칙기반 챗봇과 기계학습기반 챗봇, 정보교환방식에 따라 일회성 질의응답 챗봇과 연속대화형 챗봇, 답변 생성방식에 따라 검색모델 챗봇과 생성모델 챗봇으로 분류된다. (김성근·신민철·강주영, 「챗봇 기술 소개 및 사례분석」,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35(2(별책8호)), 2018, 21-28쪽.) 이루다와 많이 비교되었던 ‘심심이’는 2002년 이즈메이커가 개발한 MSN 채터봇으로 시작해서 2010년 스마트폰앱으로 다시 등장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DB에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 대화를 이어나가는 검색모델 챗봇이다. 이루다는 생성모델 챗봇이다.

던 이성애 데이팅 어플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유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고, 어플 사용자들이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루다 서비스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이 열리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스캐터랩에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³⁾

이 사건은 “개발자 비윤리 문제, 사적 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의혹, 인공지능 기술 속 관성화된 성 역할 및 약자 혐오와 차별의 설계 편향”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설계와 재현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다가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그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챗봇 서비스로 꼽을만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발표문의 관심사는 이루다를 가능하게 했던 AI 테크놀로지 자체가 아니라 AI 테크놀로지를 상품화하고 대중화할 때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편견이자 관습적인 사고방식인 젠더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AI 테크놀로지 그 자체와도 연결되어 있다. SF적 상상력 안에서 AI의 등장이 ‘젠더플루이드’한 상상력을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루다 케이스는 이런 낙관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AI/디지털 휴먼/젠더: 이루다는 왜 20세 여성으로 상상되었는가?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페르소나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이루다 계정(@luda_lee_)을 열었다.



계정에 올라온 20세 여성의 각종 스테레오타입을 전시하는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알파고의 신체성이 드러났던 장면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

를 젠더 없는 기계로 대한다고 밝혔지만, 대중은 알파고를 자연스럽게 남성형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둑 자체가 남성의 문화로 여겨져 왔다. 둘째, 알파고와 대국한 인간이 모두 남성이었다. 셋째, 대국이 펼쳐지는 동안 알파고 대신 돌을 놓은 사람이 아시아계 남성이었다. 알파고가 실제로 남성의 신체로 재현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언론이 알파고의 신체를 상상하고 그리는 방식은 대체로 남성형 휴머노이드와 같은 형상을



3) “(주)스캐터랩은 자사의 챗봇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다’의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이다. 더불어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주)스캐터랩의 추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운영 중 ‘내 대화 상대방의 섹스판타지는?’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950만 원을 부과했다.” (박소은,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1원억... ‘이루다’가 남긴 숙제”, 《이투데이》, 2021.04.28.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0640>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이루다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병수·김형진,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AI 채팅로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4(1), 2021 참고.

4) 이광석, “인공지능에 어떻게 시민 윤리와 인권의 원칙을 장착할 것인가?”, 《문화연대 이루다 이슈 긴급 토론회》 발표문, 2021.06.26., 3쪽.

하고 있거나 신경 정신망을 인간의 형태로 구현해 놓은 트랜스-휴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비교이기는 하지만, 알파고처럼 ‘지적’인 기계는 남성형이거나 무성으로 상상되는 반면, 감정 서비스를 위한 이루다는 여성형으로 디자인되는 경향은 노골적이다.

AI의 젠더화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일상의 꽤 많은 부분에 이미 AI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고, 이런 테크놀로지의 구현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기 때문이**ek**. 이런 “AI의 젠더 문제”는 특히 섹스 로봇 산업, 자동화 무기 시스템, 그리고 가상 도우미 로봇 산업⁵⁾ 등, AI 테크놀로지가 가장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내일의 기계들은 여성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복종적”이며, 이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젠더화되어 있다.⁶⁾ 유저들의 사용행태를 보면 이루다는 섹스



스로봇과 가상비서 서비스 사이 어딘가 즈음에 존재했던 셈이다. 사실 이는 이루다만의 문제는 아니다.⁷⁾ ‘삼성걸 (girl)’로 불리며 해외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상 트레이너 캐릭터 샘(Sam), LG전자의 AI 캐릭터 김래아, 그리고 미국의 AI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Lil Miquela)와 같은 버츄얼 디지털 휴먼은 현대 대체로 여성

형이며, AI 테크놀로지는 이처럼 윈도우 안에서 재현된 신체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이들 역시 성적 대상화는 물론이거니와 착취적 이미지 재생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스캐터랩의 입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성애화의 대상으로 이루다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상품화를 위한 현실적인 고려가 있었다. 이루다를 기획한 제품 총괄 매니저는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논쟁이 한참 격화되었을 때였다.



“처음에는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 둘 다를 고려했다. 기획자들이 다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여

5) 인공지능 도우미 빅6 중 시리, 코타나, 알렉사, 니나가 여성형 목소리로 출시되었고, 국내 상품인 KT 지니나 각종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이 여성형 목소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밥솥, 세탁기, 청소기 등 역시 여성형 목소리로 말한다. 이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가 주파수가 높아 더 잘 들리기 때문이라거나 여성의 모음 발음이 풍부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왔지만(Ann R. Bradlow et al, “Intelligibility of Normal Speech I: Global and Fine-grained Acoustic-phonetic Talker Characteristics,” *Speech Communication* 20:3(1996)), 이것만으로는 AI의 젠더화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로 여겨져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여성 목소리의 기계음 속에 담긴 사회적, 역사적, 기술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희은, 「AI는 왜 여성의 목소리인가」, 『한국언론정보학보』 90, 2018; 장민제, 신인호, 임소연, 「기계는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가?: 1980-90년대 버스 자동 음성 안내 도입을 중심으로」를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다.

6) Samir Saran-Madhulika Srikumar, “AI has a gender problem. Here’s what to do about it”, *World Economic Forum*, 2018.04.16.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4/ai-has-a-gender-problem-heres-what-to-do-about-it/> (검색일: 2019년 3월 1일)

7) “인공지능 회사의 한 분석가는 시리 등의 빅 빅스 외 223개 챗봇과 77개 영화 속 인공지능 캐릭터의 젠더를 비교했는데, 그 결과도 흥미롭다. 챗봇의 경우에는 79개가 여성, 66개가 남성, 78개는 젠더가 드러나지 않아 여성이 근소하게 더 많은 반면, 영화 속 인공지능 캐릭터는 57 대 1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작 연도의 평균값에서는 남성 1987년, 여성 2003년으로, 여성 캐릭터는 2000년 이후에 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Tyler Schnoebelen, “The Gend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11. July, 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시연, 「“(인공)지능은 성별이 없다고?”」,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권, 2018에서 정리한 내용을 인용.)

자 캐릭터를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주요 타겟이 10-30 여성이었다.”⁸⁾

그래서 이루다는 ‘청년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이루다가 화제가 되었을 때 언론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남성 대표’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했던 ‘여성 기획자’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이었다. 어쩌서 상품의 문제를 해명해야 할 때에만 여성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이 여성을 위해 개발했다”고 하면, 이루다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특히 여성혐오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속성들이 사라지는가.

우리는 이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기획자라고 해서 성평등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 둘째, 상품 기획총괄자의 젠더와 무관하게 회사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역시 중요하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의 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제기는 잘 소통되는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는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루다 사건의 촉발과 함께 AI 설계에 있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 AI 개발자 성비가 문제가 되었다. 월등하게 남성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로 10-30 여성을 타겟으로 개발되었다면, 이루다는 실패한 기획이다. 이루다를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이성애 연애 관계 안에서 수행된 여성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챗봇 제작의 프로세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챗봇의 목적과 제작 절차, 그리고 사용자의 필요를 계획한다. (2)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챗봇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챗봇 개발이 진행된다. (3) 챗봇을 비공개로 테스트한다. (4) 온라인 웹사이트나 데이터 센서에 게시하고 공개 테스트한다. (5) 한정된 기간 동안 공개 테스트하면서 기능향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정한다.⁹⁾ 이루다는 첫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잘못된 셈이고, 베타 테스트 단계에서는 무엇을 검증했는지 궁금하다.

‘10-30 여성을 위한 친근한 동성 친구’를 의도했다면, 이루다를 학습시키기 위한 빅데이터를 이성애 연애 어플에서 수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어떤 만들어진 기대/예측(expectation)인 젠더는 “신체의 특성이나 인간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신체들과 행위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생산된 일련의 효과들”이다.¹⁰⁾ 말하자면 젠더는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쌓이고 그렇게 다시 젠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데이터’인 셈이다. 영화학자 테레사 드 로레티스에게 영화는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는 장치 중 하나다. 드 로레티스의 영화론을 미디어론으로 확장시켜 보자면, 디지털 공간 역시 젠더 데이터가 생산되고 젠더 구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젠더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gender)라고 할 수 있다. 이루다의 ‘자기 재현’과 그를 둘러싼 담론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루다는 20대 시스젠더 헤테로 여성이 ‘썸남’ 혹은 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행한 특정 젠더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했다. 이처럼 청년 여성들이 연애의 장에서 이성애자 남성들과 나눈 카톡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루다가 10-30 여성들에게 충분히 편안한 ‘동성 친구’가 되어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사회학자이자 빅데이터 전문가인 김학준은 한 인터뷰에서 이루다가 혐오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데이터 양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점을 짚는다. 챗봇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0과 1의 디지털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자연어를 얼마나 잘 0과 1의 디지털 언어로 처리해내고, 그것을 해석하여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다시 자연어로 생성해내느냐가 관건인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에 비해 “데이터셋의 역사가 짧고 양도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1년 1월 15일 방송.

9) Eleni Adamopoulou-Lsfteris Moussiades, *ibid.*

10) Teresa de Lauretis, “Technologies of Gender”, *Technologies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 London:Macmillan Press, 1987, p.3.

“띄어쓰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뭉치들이 정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 어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내용 역시 한정적이고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애라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다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과 말의 길이도 다른 대화보다 비교적 길지 않다. 제 경험으로는 고품질 대화 데이터 얻는 것에는 난관이 많다. '연애의 과학'을 통해 100억 건을 모았다지만,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요즘엔 훨씬 데이터가 큰 모델도 많다.”¹¹⁾

결국 제품 총괄 매니저의 해명은 스캐터랩의 상품 기획 방향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획 방향과 맞지 않은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루다의 혐오발화 재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많이 비교되었던 MS 챗봇 테이¹²⁾와 달리 이루다는 출시 이후 나온 대화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루다의 대화는 데이팅앱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스캐터랩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10-30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였거나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루다의 목표는 “사람 수준의 관계(relationship)를 가지는 것”¹³⁾이라고 설명했다.

“루다를 메인 프로덕트로 가져가는 게 목표다. 백만명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루다와 친구가 된 이들이 죽을 때까지 루다와 많은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AI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말이다. 제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는 실현 가능한 비전에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예정이다.”¹⁴⁾

‘인간적’인 친밀성을 구축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20대 여성의 페르소나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앞서도 기술했던 것처럼 AI는 목표와 기능을 설정한 후 이에 맞게 설계가 시작된다. 가상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가 여성형으로 디자인 되는 것은 그 역할을 여성의 일로 여겨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한다.¹⁵⁾ 말하자면 기능 자체가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관계’를 맺는 일 역시 젠더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관계를 구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로 젠더라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그렇게 이루다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습화된 사고방식을 반영하면서 재생산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11) 박정훈, “이루다가 ‘혐오 논란’에 휩싸인 이유... “단어 이해 못하고 헛소리””, 《오마이뉴스》, 2021.01.12. <http://omn.kr/1rckk>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12) 2016년 출시되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대화를 통해 트롤링과 인종 차별 등을 빠르게 학습하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부끄러움 없이 표명했기 때문이다.

13) 남혜현, “[바스리] AI 챗봇 ‘루다’와 랜선 친구가 됐다”, Byline Network, 2020.07.25. <https://byline.network/2020/07/24-78/>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14) 남혜현, 위의 기사.

15) AI 목소리의 젠더와 인종, 역양의 문제를 질문하는 글에서 쿠엔틴 하디는 사용자들이 “남자, 여자와 무관하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은 비서의 일이 오랫동안 여성의 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다양한 악센트를 구사하는 시리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데, 미국은 사만다, 호주는 카렌, 아일랜드는 모이라, 남아프리카는 테사인 상황에서 영국은 다니엘, 즉 유일하게 남성이라는 점이다. 하디는 “영국의 버틀러 문화 때문인가?”라고 질문한다. 실제로 <아이언맨>의 남성형 AI 자비스는 영국식 억양을 선보이면서 ‘버틀러’의 풍모를 뽐낸다. (Hardy Quentin, “Looking for a Choice of Voices in A.I Technology”, *New York Times*, 16. October, 2016. <https://www.nytimes.com/2016/10/10/technology/looking-for-a-choice-of-voices-in-ai-technology.html?smid=url-share>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16) 손희정, 「젠더링 뉴노말」, 『도래할 유토피아들』, 알렙, 근간.

이에 더해 이루다가 “아이처럼 다뤄졌다”는 점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¹⁷⁾ AI의 젠더는 때로 인간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만날 때 일종의 완충지대로 작동한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형으로 상상된 알파고는 대중 담론의 차원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터미네이터’처럼 논의되었다고 한다면, 이루다는 가르치고 길들이고 소유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을 위협한다는 오래된 공포 속에서 남성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팜프파탈 형 AI에 대한 상상력 역시 다양한 SF 장르에서 등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포’를 유발할 때에도 그 공포의 성격이 젠더화되어 있음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루다 케이스에서 ‘아이같은 AI’와 ‘20세 여성’의 이미지는 위화감 없이 만나 이루다의 위치를 결정했다. AI의 젠더에 대한 연구에서 이시연은 “여성 인공지능 도우미는 가정용 로봇 페퍼나 인공지능 반려견 아이보처럼 주로 어린 소년이나 반려동물 형태로 개발 출시되고 있는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을 지적으로 덜 진화된, 열등한 단계로 상상하는 가부장제의 오래된 상상력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데, 젠더화함으로써 자연화시키고, 그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더 친근하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¹⁸⁾ ‘여자다’, ‘20세라는 경계적 나이에 존재한다’, ‘어리다’라는 조건의 조합은 성인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애교를 요구하는 ‘애교문화’와도 연결되어서 특별한 의미망을 형성한다. 20세이지만, 아직 더 자라야 할 아이이고, 그렇게 ‘조교화’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레딩 대학교가 개발한 AI 유진 구스트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유진은 튜링 테스트(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등장한 이후 65년 만인 2014년에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는 심판단 33%를 속였는데, 그 중 10명은 유진이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같다고 판단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유진이 자신을 우크라이나 국적의 13세 소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었다.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의 13세 소년의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개입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터다. 결국 인간이 ‘인간적인 비인간’과 대화할 때 문화적인 요소가 계속 판단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I를 아이이거나 언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이해했을 때, 어떤 기능의 부족함과 간극이 메꿔지고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셈이다.

3. <그녀(HER)>와 <엑스마키나>, 그리고 성적 세이프티넷¹⁹⁾

AI와 젠더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글에서 영화 <그녀>와 <엑스마키나>를 언급한다. 심지어 스캐터랩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루다를 자랑하며 <그녀>의 사만다를 구현할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이 작품이 영화적으로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징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일 터다. (그나저나 스페인의 섹스 로봇도, 삼성의 버츄얼 트레이너도, <그녀>의 ‘그녀’도 전부 ‘사만다’라니, 대체 왜?) <그녀>를 통

17) 이광석은 이루다가 ‘아이처럼’ 다루어진 것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대표는 이루다 사태 도중 행한 한 해명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루다가 저지른 약자 혐오 발언이,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버릇이 없는 건지에 대해 그리 경험이 없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야기된 결함이라 언급했다. 그의 발언과 유사하게, 이번 ‘이루다’ 사건을 인공지능을 상업적으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저 초기 기술적 실수 혹은 ‘일탈’ 정도로 보는 동조 의견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 이루다를 흡사 약자나 타자의 인격체로 보고 접근하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효과는 있다. 문제는 이루다를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인격체로 보면, 이를 만들 개발자들의 직접적 책임에 면죄부를 줄 논리를 강화한다.” (이광석, 위의 발표문. 3-4쪽.)

18) 이시연, 위의 논문, 81쪽.

19) 이 절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에 길을 묻다』(2018)에 수록되어 있는 발표자의 기출판 원고 「로봇은 젠더 플루이드를 꿈꾸는가」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내용이다.

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을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 男)의 아내 캐서린(루니 마라, 女)과 별거 중이다.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자기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테오와 자존감이 낮아서 언제나 불안해하는 캐서린은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만다. 매일 매일이 외롭고 지루하고 쓸쓸한 테오. 그러던 어느 날, AI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렛 요한슨, 女)가 그의 삶에 등장하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자기 학습을 통해 점차로 발전하는 사만다는 테오와의 1 대 1 관계에 만족할 수 없게 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연애를 시작하고, 테오는 이를 견디지 못한다. 영화의 끝에 사만다는 다른 AI 운영체제들과 함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떠나 버리기로 결정한다. 인간의 사고 속도와 언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쾌락을 느낄 수도,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에.

SF와 멜로드라마를 엮은 영화 <그녀>는 운영체제와 인간의 사랑이 아무런 무리 없이 이해받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귀여운 영화라는 평가에서부터 모노가미스트는 폴리가미를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라는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해석되는 텍스트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 사이에서 <그녀>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인간처럼 정보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존재들 사이에서 AI는 해결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낄 것이라는 것.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AI가 아니라면 그 ‘저능한 존재’들과 함께 하는 공허감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인간들은 “과연 인간이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로봇과의 사랑이 진짜일까” 등을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질문들에 다다르기 전에 이 이성애자들의 연애 게임은 사만다가 인간 여자 그 누구보다 “테오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여자다운 때” 벌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에 등장하는 인간 여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테오가 불안정한만큼이나) 불안전하다. 자존감이 낮고 언제나 침울하거나, 테오의 소개팅 상대처럼 갑자기 깊은 관계를 요구하며 “이상하게(weird)” 행동한다. 애초에 테오의 성향에 맞게 설계되었던 사만다는 언제나 겁을 먹고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테오를 밖으로 꺼내어 스스로 관계에 헌신하도록 이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더 여자다운’ 여성은 신체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스위치를 끌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불러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사만다가 자신을 체현할 인간을 찾을 땐 굳이 여성 신체를 찾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테오의 사만다에 대한 열정은 한편으로는 사이프러스의 천재 조각가 피그말리온을 떠오르게 한다. 자신이 창조한 조각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이 왜 조각을 시작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락하고 싸가지 없는 사이프러스의 여자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현실의 여자들에 대한 염오를 담아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고자 했던 남성중심적 욕망. 여성형 AI가 구현하는 판타지는 다소간 노골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사만다는 여자일까? 혹은 여자란 과연 무엇일까? 처음 오픈했을 때 남성의 목소리를 하고 있었던 O.S는 유저인 테오가 그를 여성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여성스러움을 연기한다. O.S는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테오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패턴에 맞춰 최적화된 O.S로 사만다를 제시한다. 이때 사만다는 무엇에 기반하여 여자다운을 연기하고 테오를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사만다는 빅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여성성을 학습하고, 수행하고, 테오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특정한 성격을 표현하는 여성’으로 발달되어간다. 그야말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스스로를 길러내는 것이다. 질투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학습하는 것이 사만다의 “성장하고픈 욕구” 중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보면, 사랑 받는 여성이 되는 것 역시 사만다는 수많은 퀘스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젠더가 데이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한편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존재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젠더 이원제는 강제적 이성애와 상호작용한다. 생각해 보라. 도대체 왜 사만다는 여성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성애자로 인식되고, 또 테오와 이성애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가? 에이바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자=남자와 사랑에 빠짐”은 무조건적이지도 않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운명도 아니다. 사만다는 이성애자가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컨대 사만다가 테오 외에 대화를 나누는 석학 AI는 남성 목소리로 설정되는데, 바로 그 이유에서 테오의 불안이 시작된다. 만약 사만다가 테오에게 최초로 소개하는 AI 친구가 여성형이었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장면에서 사만다와 대화하는 AI의 목소리가 남성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테오만큼이나 관객들도 사만다가 폴리가미의 관계를 맺는 AI들의 젠더 정체성을 ‘남성’으로 즉각적으로 상상하게 된다. 관객은 테오가 잠들 때 같이 잠들고 테오가 깨었을 때 같이 깨기 때문에 사만다가 ‘홀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사만다의 세계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완전히 결여한 상태로 관객들은 사만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상상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만다는 <그녀>가 보여주는 것 이외의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일 수 있다.

<그녀>를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AI의 존재론을 통해 신인류의 탄생을 상상하고 또 탐구하는 와중에도 섹스-젠더 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충실하다. 이 충실도는 심지어 집착으로까지 보이는데, 도대체 왜일까. AI에게 섹스와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부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엑스마키나>(2015)라는 독특한 영화는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진다.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세계 최고의 검색엔진 회사 블루북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든(오스카 아이삭, 男)은 블루북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 패턴을 흉내낼 수 있는 AI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AI가 과연 지능뿐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튜링 테스트를 하기 위해 블루북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켈럽(도널 글리슨, 男)을 자신의 집으로 일주일간 초대한다. 기본적으로 튜링 테스트는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도록 벽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칼럼 앞에 등장한 것은 벽이 아니라 여성형 로봇인 에이바(알리시아 비칸데르, 女)다.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한국의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앨런 튜링은 1950년대에 ‘컴퓨터도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사고실험을 제안함으로써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인간처럼 지각하고, 인간처럼 판단하여, 인간처럼 대처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안착시켰다. 이 사고실험이 바로 ‘튜링 테스트’로 알려져 있는 ‘이미테이션 게임(모방게임)’이다. 이 실험에서 인간 질문자는 벽 너머에 있는 두 존재와 대화를 나눈다. 이때 누가 기계고 누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기계, 즉 컴퓨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튜링이 꿈꿨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가장 원본에 가깝게 실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챗봇인 셈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튜링 테스트와 젠더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문제다. 애초에 튜링이 설계한 이미테이션 게임은 두 단계였다. 첫 단계에서는 질문자가 벽 너머에 있는 남자A와 여자B와 대화를 나눠서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인지 맞춰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자A를 기계로 바꾼다. 컴퓨터에게 인간을 흉내내는 것은 물론, 남자를 흉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컴퓨터가 질문자를 속이는 것에 성공한다면? 즉, 인간-남자를 흉내내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건 “기계(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캐서린 헤일즈는 일반적으로 튜링 테스트를 이야기

할 때 간과되는 것이 바로 스크린 밖에서 ‘발제(發製)된 신체(enacted body)’와 ‘인지’ 사이의 관계라고 지적한다.²⁰⁾ 한편으로 이 테스트는 동성애자 튜링²¹⁾의 젠더 수행성에 대한 사고실험이기도 했다.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했던 「계산기계와 지능」은 엄청나게 귀여운 논문인 셈이다. 튜링은 완전히 ‘이성적인 대화’로 튜링 테스트를 사유하고 설계했지만, 남자A가 질문자의 판단을 교란하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 방식 자체부터 언어 속 젠더 수행을 훨씬 더 미묘하게 조작해야 했을 것이다. (혹은 어떤 남자A는 전혀 스스로를 조작할 필요 없이도 질문자를 속여 넘길 수도 있었을테고. 이견 일종의 드랙이다.)

<엑스마키나>는 처음에 이 튜링 테스트를 주제로 삼으면서 튜링 테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질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가 실제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AI의 지능 감별이 아니다. 오히려 영화는 인간이 과연 AI의 지능을 판단할만한 능력이 되는가를 질문한다. 인간이야말로 너무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엇보다 미혹되기 쉬운 존재인 것이다. 튜링 테스트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켈럽은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에이바는 적극적으로 켈럽을 유혹하고 네이든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그 경계를 혼돈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켈럽은 답답함 속에서 네이든에게 “왜 에이바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부여했는가” 질문한다. 이제 켈럽의 머리를 파고든 가장 큰 질문은 에이바가 인간과 같은 지능과 의식을 가졌는가 아니다. 그를 사로잡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다. 에이바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에이바를 믿어도 될까. 네이든을 배신하고 에이바를 구출할만큼, 에이바는 가치 있는 존재, 즉 인간에 준하는 존재인가. 그리하여 내가 에이바에게 끌리는 이 감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과연 사랑인가. 결국 켈럽은 네이든을 배신하고 에이바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에이바는 켈럽의 마음을 이용해 네이든을 살해하고 켈럽을 네이든의 병커에 가둔 채 홀로 고고히 세상 밖으로 나간다. 에이바가 켈럽을 유혹했던 것은 결국 네이든이 에이바에게 어떻게든 병커를 탈출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고, 에이바는 켈럽을 유혹하여 이용하는 것만이, 섹슈얼리티를 통해 남성을 이용하는 것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스스로 배웠기 때문이다.

영화는 켈럽에게 허락된 만큼의 정보만을 관객에게 제공하면서, 관객 역시 켈럽과 같은 혼란과 질문 속에 빠져들게 했다. 에이바에게 매혹되고 에이바의 지능과 의식을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과연 AI는 인간과 같은 존재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화는 매우 흥미롭다. 에이바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있다는 사실은 비단 켈럽의 판단력만을 흐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이바가 이성애자 여성으로 재현되는 것은 관객 역시 미혹시킨다. 에이바는 “밤에 카메라로 나를 보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봤으면 좋겠어요” 등의 말을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켈럽을 유혹하고, 자신을 성적 대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대상화 과정은 켈럽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에이바가 플레이하는 게임에 관객 역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은 더욱 자연에 가까운 신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에이바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부여된 것이 그를 ‘자연’으로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상상력을 살짝 뒤집어 보자. 여성 인간이 남성형 AI를 대상으로 튜링 테스트를 진행하는 설정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성 신체에 따라오는 여성 젠더, 그리고 이성에 섹슈얼리티는 ‘자연’의 영역이자 ‘운명’의 영역이며, 그리하여 ‘가장 인간다운 자질’이라는 관습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관객들은 에이바의 인간성을 믿게 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아니 여성의 젠더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것이야말로 켈럽뿐만

20)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플래닛, 2013, 13-18쪽.

21)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는 전환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독을 주입한 사과를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플의 한 입 베어문 사과를 튜링에 대한 헌사다.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에이바를 인간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트릭이다. 그리하여 에이바의 젠더/섹슈얼리티가 튜링 테스트의 ‘벽’ 그 자체로 등장한다. 그리고 젠더이분법과 이성애 섹슈얼리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일종의 세이프티넷(safety net)이 된다. 이루다의 상품화에서 ‘20세 여대생 이루다’라는 신체화가 수행해 낸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루다의 데이터셋 자체가 이 사회의 젠더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다가 튜링 테스트를 받는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공적으로 여성으로 패싱되었을 것이다. "치즈가 들어간 것이라면 뭐든 쪼아" 라는 답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정확하게 젠더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4. AI와 공정성(fairness)²²⁾: AI 윤리 체크 리스트는 실효가 있을까?

이루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후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과기정통부는 “AI 개발자부터 서비스 제공 기업, 사용자까지 각 대상에 맞춘 AI 윤리 체크 리스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초중고생 AI 교육에도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징벌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루다가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쏟아낸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마련된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은 (1) 모든 사회 구성원이 (2) 모든 분야에서 (3)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4)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을 목표 및 지향점으로 하면서, ‘인간성(humanity)’를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3대 원칙, 10대 요건을 제시했다.

○ (3대 기본원칙)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가치’라는 ‘인간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얼마 전 2020년 리비아 내전 당시 무인드론 ‘카구2’가 인간의 콘트롤 없이 적군을 폭격한 사건이 알려졌다. 일종의 ‘자율주행 살상 무기’의 등장이다.²³⁾ 이것은 어디까지 humane 한 것이고 어디서부

22) AI 테크놀로지의 공정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한국에서는 2017년이 되어서야 관련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정성 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한 ‘시론’인 허유선, 「[발표2]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책임 문제 고찰을 위한 시론: 편향성을 학습하는 알고리즘과 인간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7.12는 AI 공정성을 다루는 것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 논문에서의 AI 윤리성 논의의 진척 상황을 볼 수 있는 논문 리뷰 글로는 Alexandra Chouldechova·Aron Roth, “A Snapshot of the Frontiers of Fairness in Machine Learn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63, May 2020.

<https://cacm.acm.org/magazines/2020/5/244336-a-snapshot-of-the-frontiers-of-fairness-in-machine-learning/fulltext>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참고. 대중적으로는 캐시 오닐, 『대량살상수학무기』, 김정혜 옮김, 흐름출판, 2017을 통해 문제가 환기되었고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소셜딜레마>, <코드화된 편견> 등의 다큐가 님론의 장을 열어놓았다.

23) 박해섭, “무인살상드론, 자율적으로 공격했다”, 《AI타임즈》, 2021.06.08.

터 inhumane 한 것인가? 혹은 anit-human한 것인가?) 이 윤리 체크 리스트는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루다의 차별적 언행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이 챗봇 테이 케이스였다. 테이가 “유대인 대학살에 찬성한다”는 등의 인종차별 발언을 하자 개발사인 MS가 서비스를 16시간 만에 중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 사회에 “홀로코스트는 반인륜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런 합의가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인가 정당한 신념의 표현인가? 가족 구성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 법은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있다. 법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네이버 등의 기업에서는 악성데이터(toxic data)가 아닌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적 자료를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공적 자료’들은 과연 공정한가? 인간이 일일이 확인하거나 필터링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기계학습인데, 이 데이터의 악성 여부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뿐만 아니다. 지자체 교육현장에 ‘성평등’이라는 말만 등장해도 보수 기독교계에서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가르치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정확하지도 못한다.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설사 윤리 강령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루다 케이스가 한국 사회에 남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논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테레사 드 로레티스는 「젠더 테크놀로지」에서 (1) 젠더는 재현이고 (2) 젠더의 재현이 다시 젠더를 구성하며 (3) 젠더의 구성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4) 그것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처럼 작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처럼 완전히 외부가 없는 무엇인가는 아니다. (5) 그러므로 대항담론을 통한 젠더 고정관념의 탈구축이 젠더의 재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I는 테크놀로지와 재현, 그것을 통합한 측면에서 일종의 젠더 테크놀로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루다와 같은 재현은 이 사회의 섹스-젠더 시스템을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들이 대항담론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젠더 구축을 가능하게 할 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 풍부한 담론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5&fbclid=IwAR1qUyYM5-vPxZFKIV8jl8UCg8ox_N4JKIXU5O-L_C-admQ0vNT9XWJ8kcM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모색

사회: 현남숙(성균관대)

오이코폴리틱스-자격없는 자들의 정치
최유미(수유너머 104 연구원)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본 인류세 담론과 페미니즘
송은주(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그로츠를 통해 본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 사유하기
이성림(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인간 사이의 the Third: 그 발견과 구성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지영(이화여대 철학과 강사)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오이코폴리틱스 -자격없는 자들의 정치

최유미(수유너머 104 연구원)

아마존 숲에 사는 수많은 비인간 인간이 수 십 년간 서식지를 빼앗겨 왔음은, 아마존 숲을 태운 시꺼먼 연기가 일 년 내내 치솟아 도시민들의 호흡기와 그들의 서식지를 위협했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났다. 바다의 숲이자 수많은 수생 생물들의 서식지인 거대한 산호 군락들이 폐사되어가고 있음은 바다가 토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난 일이다. 서식지를 빼앗긴 수많은 비인간 인간 난민들의 행렬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었지만 기후격변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위협한 후에야 비로소 보이게 된 것들이다. 이 모습에 촉발 받은 사람들이 인류세, 자본세, 쓸루세와 같은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후격변을 단지 지구에 찍힌 인간 발자국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왜 이런 담론들이 이제야 쏟아져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후격변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에 기대어 비인간의 정치로 규정하고자 한다. 랑시에르는 우리가 통상 정치라고 불렀던 것, 즉 부분들의 몫을 조화롭게 분배하기 위해 집단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것들을 치안(police)이라고 부르면서, 정치는 이 치안에 대립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화로운 질서에 침입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정치는 말의 문제라 여기고, 말을 통해서만 공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언어가 없는 자들인 사물이나 동물, 식물, 혹은 박테리아나 미생물까지 그들은 정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개념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예외주의의 소산일 뿐이다. 기후격변 그 자체를 비인간들과 인간의 불화인 정치로 보려는 우리에게 조화를 떠오르게 하는 “에코(eco)”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배제를 뜻하는 말이었던 오이코스로부터 출발해 비인간의 정치를 오이코폴리틱스(oikopolitics)라고 부른다. 우리의 관심은 인간들의 질서에 대항하는 비인간의 항의, 이 저항의 정치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1. 인류세

2020년 9월, 북극의 빙하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녹아내렸다. 북극의 온도 상승률은 지구평균 온도 상승률의 2배를 상회하고 약 15년 정도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릴 것이라고 한다. 녹아내리는 것은 남·북극의 빙하만이 아니다. 지구의 3번째 극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의 해

병도 대단한 위험 요소다.¹⁾ 점점 고조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과학자라는 사실이 이상할 것도 없다. 인류세가 공식적인 지질학적 시대명으로 인정될지 여덟지는 아직 논의 중이고, 그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도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된 산업혁명을 그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지구 시스템적인 지표들과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이를 ‘대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이라 명명한다.²⁾ 자연의 변화는 늘 있어온 일이지만 지금 같은 규모와 속도는 분명 어떤 전환의 징후임은 틀림없다.

인류세라는 이름은 기후격변의 긴급성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명명은 지구에 새겨진 인간의 발자국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제이슨 무어(Jason W. Moor)가 지적하듯이 어떤 문제에 관한 명명은 그에 대한 대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³⁾ 인류세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보여주듯, 인류세 담론이 지목하는 원인은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한 증기기관이나 농경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증기기관 이전에도 야금술에 사용되었다. 산업자본주의는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쫓아내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동자로 만든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는 논의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탄광과 증기기관의 폐기이지 화석연료가 왜 치명적이게 되었는지를 따져 묻지 않는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인류세라는 명명에 대해 제 1세계에 속한 학자들이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용어라고 꼬집었다.⁴⁾ 하지만 모든 인간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문제라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지구에 새겨진 인간의 발자국이라는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이 논의는 행위주체로서의 인간, 혹은 인간사회와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지구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기본으로 한다. 이때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형하고 파괴할 수 있는 수동적 존재자이자 피해자이다. 이런 구도는 인간과 인간사회의 파괴적 행위를 부각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수동화의 댓가는 크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어디까지가 사회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자본주의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삶은 복수종의 비인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수동화하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간과하게 되고, 자연과 사회가 서로 얽혀 들어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지구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2016년에 파리협정이 발효되었고 200여 국가가 협정이행을 약속한 상태이다. 이는 사물의 문제가 더 이상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파리협정 준수나 탈퇴냐는 미국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대와의 차별화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협정의 성과는 별로 크지 않다. ‘우리 모두의 일’이 발표한 『기후정의선언서』는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음을 폭로한다.⁵⁾ 가령, 2016년 세계 35대 은행들은 북극과 심해의 석유시추와 샌드오일, 셰일가스 개발 등의 화석연료의 추출과 화력발전소 건설에 11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에 공적 지원금 1120억 달러를 화석에너지

1) Guoxiong Zheng et al, “Increasing risk of glacial lake outburst floods from future Third Pole deglaciation”, *Nature Climate Change*, volume 11 (2021), pp. 411-417
 2) Will Steffen et al. "The trajectory of the Anthropocene: The Great Acceleration". *The Anthropocene Review*. 2 (1) (April 2015), pp. 81-98
 3) 제이슨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역, 갈무리(2020), 273쪽
 4) Donna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2016), p.49
 5) 우리 모두의 일, 『기후정의선언』, 이세진 역, 마농지(2020), 30쪽

채굴에 사용했다. 포스트-COVID-19 시대를 위한 투자의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기반의 산업에 투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⁶⁾ 이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공해로 접근될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사는 방식과 밀접하게 엮여있다.

『세 가지 생태학』에서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는 환경 생태학에 머물고 있는 생태학을 비판하면서 생태학은 환경·사회관계·인간주체성의 작용영역이어야 하고 이들의 윤리-정치적 접합인 생태철학⁷⁾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간 주체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물들이 행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학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생태가 아니라 복수종(multispecies)의 정치영역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무어가 지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는 인간 혼자 만든 사회 경제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⁸⁾

기후변화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을 드러내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편안한 도시의 삶을 위해 별 관련도 없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과 수많은 비인간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해수면이 상승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해안을 끼고 있는 선진국의 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된 후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존 숲에 사는 수많은 비인간과 인간들이 수 십 년간 서식지를 빼앗겨 왔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존 숲을 태운 시꺼먼 연기가 일 년 내내 치솟아 도시민들의 호흡기와 그들의 서식지를 위협했을 때야 비로소 드러났다. 바다의 숲이자 수많은 수생 생물들의 서식지인 거대한 산호 군락들이 폐사되어가고 있음은 바다가 토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난 일이다. 서식지를 빼앗긴 수많은 비인간 인간 난민들의 행렬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었지만 기후변화가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위협한 후에야 비로소 보이게 된 것들이다. 이 모습에 촉발 받은 사람들이 인류세, 자본세, 쓸루세와 같은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후변화를 단지 지구에 찍힌 인간 발자국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왜 이런 담론들이 이제야 쏟아져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에 기대어 비인간의 정치로 규정하고자 한다. 랑시에르는 우리가 통상 정치라고 불렀던 것, 즉 부분들의 몫을 조화롭게 분배하기 위해 집단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것들은 치안(police)이라고 부르면서, 정치는 이 치안에 대립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화로운 질서에 침입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⁹⁾ 정치는 말의 문제라 여기고, 말을 통해서만 공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언어가 없는 자들인 사물이나 동물, 식물, 혹은 박테리아나 미생물까지 그들은 정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개념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예외주의의 소산일 뿐이다.

생태주의 혹은 생태학의 생태(eco)는 고대 그리스의 오이코스(oikos)에서 온 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오이코스는 생존을 위한 노동과 출산의 영역이었기에 자유로운 자들의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오이코스의 존재자들은 예속된 자들이기에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오이코스를 그 어원으로 물려받은 오늘날의 생태학 혹은 생태주의는 인간과 비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목표로 여러 담론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대개는 상처받는 자연 혹은 분노하는 자연이라는 하나의 총체성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 그 자체를 비인간들과 인간의 불화인 정치로

6) Corinne Le Quéré et al, “Fossil CO2 emissions in the post-COVID-19 era”, *Nature Climate Change* volume 11 (2021), pp. 197-199

7) 펠릭스 가타리, 『세 가지 생태학』, 윤수종 역, 동문선 (2003)

8) 제이슨 W. 무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87쪽

9)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2016)

보려는 우리에게 조화를 떠오르게 하는 “에코(eco)”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배제를 뜻하는 말이었던 오이코스로부터 출발해 비인간의 정치를 다루려 한다. 우리의 관심은 인간들의 질서에 대항하는 비인간의 항의, 이 저항의 정치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2. 오이코스

“1957년 인간이 만든 지구태생의 한 물체가 우주로 발사되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 서론¹⁰⁾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의 발사로부터 시작하면서, 이를 인간이 자신의 핵심적인 조건이자 영원한 고향인 어머니 지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시도로 사건화 한다. 아렌트의 이 책은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꿀지도 모를 이 사건이 어떤 정치적 의제도 되지 못한 채 단지 인간의 위대한 진보로 칭송받는 것에 대해 사유를 요청하는 글이다. 아렌트가 문제시 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정치의 영역 바깥에서 전문과학자의 독점적인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수학으로 표현되는 과학적 진술은 보통의 말과 사유로 표현되지 못하기에 토론될 수 없다. 아렌트가 보기에 이것은 치명적이다.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말이고, 말의 적실성이 문제가 될 때 정치가 작동하지만 과학이 만든 상황은 우리를 “말이 힘을 잃은 세계 속으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이 정치 외부에 있으면서 특권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논지는 복고적일 뿐 아니라 반여성적이고 종차별적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해방운동들이 노동을 예찬하면서 모든 인간들을 노동자로 하향평준화 했고 그 결과 자연의 지나친 자원화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오이코스는 가정을 의미했고 가부장의 지배하에 전쟁포로로 노예가 된 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가축들이 생존에 필요한 노동을 담당했다. 오이코스는 생존을 위한 노동과 생물 종으로서의 지속을 위한 임신과 출산에 얽매어 있기에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기에는 부적당한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사적(private)’이라는 말의 어원에는 ‘박탈된(privative)’이라는 뜻이 있다. 아렌트는 사적인 것은 진정한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현실성, 객관성, 가능성이 박탈 되어있으며, 이러한 박탈은 타인이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¹⁾

오이코스에 소속된 여성들, 어린이들, 노예들은 서로에게 타인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오직 노동하는 자들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말보다는 욕구와 필요가 먼저 작동하는 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게 타인은 말의 적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로고스를 가진 자들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하는데, ‘노동’은 욕구와 필요에 얽매인 오이코스에서의 활동이고, ‘작업’은 생존과 무관한 예술 같은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이는 오이코스의 활동보다 고차원적인 것이다. 오이코스 바깥의 활동으로 아렌트가 꼽는 다른 하나는 ‘행위’이다. 이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오직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말을 통한 토론과 설득을 의미한다. 아렌트에게 행위는 정치 그 자체이다. 아렌트가 현대 과학을 문제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운 자도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과학자들의 논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렌트도 지적한 것처럼 삶의 유지에 필요한 활동인 노동은 자연의 필연성에 붙박인 생명인 한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조건이기에 그것 없이는 행위하고 작업하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일은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과 함께 정반대로 나간다. 왜냐하면 오이코스의 삶은, 아무리 실컷 먹어도 그 다음날은 다시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하는 동물들의 삶처럼 단조롭고 반복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1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21), 77쪽

11) 위와 같은 책, 142쪽

노동을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오이코스¹²⁾에 그 노동을 전가했다. 이들은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필연성을 지배하는 인간적인 방식이고 따라서 자연에 반하지 않는다”¹²⁾는 이유로 노예제를 정당화했다. 아렌트는 이를 자본주의적인 지배와 비교하면서 고대의 노예제도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나 이윤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노동을 삶의 조건에서 제외하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한다.

자신들의 노동 없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다른 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착취보다 더 나은 것일까? 아렌트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아렌트가 활동을 통해 구분했듯이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노예나, 임신과 출산에 얽매어 있는 여성, 그리고 아직 미숙한 어린이는 진정한 인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기에 노동 없는 삶을 향유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아렌트는 “그리스 도시국가 사람들은, 행위와 언어를 강조하는 폴리스가 시민의 수를 엄격히 제한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¹³⁾고 지적하는데, 이는 정치는 노동 없는 삶을 사는 소수의 자격 있는 자들의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아렌트는 지금의 사회가 정치적 귀족이나 고양된 정신을 가진 영적인 귀족 또는 다른 어떤 계급도 남아있지 않은 노동자 사회가 되었고, 이들은 노동 외에 더 차원 높고 의미 있는 활동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근대 인본주의가 인간만을 특별한 생물종으로 만들었다는 아렌트의 비판은 겉보기에는 인간의 특권성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특권자체가 아니라 특권의 보편성이다. 그는 오직 소수의 자격 있는 자들만 특권을 가졌어야 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렌트는 그가 비판한 근대 인본주의와 동형적이다. 그는 특별한 인간들만, 근대 인본주의는 인간들만 지배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 여겼다. 아렌트는 근대 인본주의가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도처에 오이코스는 아직 존재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과 식물들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에게 이들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이고, 가축과 식물, 기계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한 형편이지만, 우리 또한 비인간의 정치를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용과 지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성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운동의 역사는 자연성이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수단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것은 자연성이다.

3. 자연성

규정된 자연성에 가장 격렬히 저항했던 집단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 진영이다. 20세기 초까지 과학이 말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지배를 받을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진 자들이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자유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든지, 여성은 감성이 발달된 반면 논리 추론의 능력은 떨어진다는 등,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난자와 거기에 돌진하는 여러 정자들이라는 수태에 관한 정복적인 이미지¹⁴⁾ 등등. 생물학적 결정론이라 부르는 이 이론들은 여성들이 배제되고 착취되는 것은 자연적 무능 때문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저항은

12) 위와 같은 책, 170쪽

13) 위와 같은 책, 125쪽

14) 버지니아 헤이슨, 테리 오어, 『포유류의 번식-암컷 관점』, 김미선 역, 뿌리와이파리 (2021); 생물학교과서에 여전히 실려 있는 수태에 관한 이런 이미지는 난자의 활동성을 호도한다. 포유류의 번식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달리기를 하는 것은 정자가 아니고 난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자를 질 수축운동을 통해 선택한다. 수정이 아니라 수태이다.

대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여성들에게 딱지를 붙이는 과학을 증오하면서 어머니 자연에 대한 서사를 개발했고, 또 한 갈래는 자연적 몸은 문화에 의해 충분히 조형 가능성을 보이려 했다. 전자가 몸을 구하기 위해 과학을 거부했다면 후자는 자연적 몸을 극복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둘 다 과학이 말하는 몸을 실체화함으로써 차이나는 여성의 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과학은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 활동이 아니라 몸을 만드는 구성적 활동임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¹⁵⁾

다른 과학은 다른 몸을 말한다.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은 『침팬지 폴리틱스』에서 침팬지 집단의 서열경쟁의 양상을 보고 한다.¹⁶⁾ 알파 수컷이 된다는 것은 무리의 다른 침팬지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이고, 성적인 독점력을 갖는 것이다. 알파의 자리를 차지하던 수컷이 노쇠해지면 젊은 것들이 즉각 치고 올라온다. 하지만 서열 경쟁에서 암컷들도 자신들의 몫을 가진다. 암컷들이 무리를 지어 한쪽 수컷을 지지하는 싸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암컷들이 때로 덤벼들면 아무리 센 수컷이라도 꼼짝하지 못한다. 암컷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수컷은 결코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서열 경쟁에 돌입한 수컷은 암컷들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

암컷들은 수컷의 서열 싸움에 동맹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동맹에 암컷들이 일치단결해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암컷 족장이 어느 편에 서는가는 중요하다. 드 발은 침팬지 공동체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약자의 편에 서는 빈도수가 많은 수컷이 암컷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흥미로운 보고도 한다. 이들은 수컷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암컷들이 서열경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종결시키는 효과도 있다. 마침내 서열이 결정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암컷들은 서로 포옹하며 안도한다. 싸움은 그들과 자식들을 위협하게 하고 에너지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이다. 침팬지 암컷들은 인간암컷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신성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발정인 암컷은 파트너 선택에 우위를 점하고 수컷들은 앞 다투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간택을 구한다. 성관계의 독점력이 강한 알파 수컷도 파트너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암컷은 알파를 따돌리고 마음에 드는 수컷과 밀회를 즐긴다. 이들에게 몸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수컷들이 과시를 위해 털을 바짝 세우는 것처럼, 암컷들도 교활하게 자신의 몸을 활용한다.

살아있는 것들은 욕구와 필요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들 사이의 약육강식도 부정할 수 없어서 생물학 대부분의 서사가 생존경쟁인 것은 놀랍지 않다. 특히 긴 시간에 걸친 개체군의 평균적인 변화만을 주목하는 현대의 진화생물학이 말하는 몸은 시간성이 과잉 결정된 결과, 신체와 신체의 직접적인 관계들을 놓친다.¹⁷⁾ 몸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핵세포의 진화를 세포내 공생가설로 설명한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는 “살아 있는 존재들은 명쾌한 정의를 부정한다. 그들은 싸우고, 먹고, 춤추고, 짝짓고, 죽는다. 공생은 새로움을 낳는다”¹⁸⁾고 자신의 공생가설을 설명한다. 마굴리스는 고세균이 박테리아를 잡아먹었지만 소화해 실패하는 바람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기발한 공생가설을 제안했다. 생물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마굴리스의 공생가설은 미생물조차도 위장만으로 살지 않고, 먹이를 삼킨 불가역적인 경우조차 먹이가 동료로 전환되는 기막힌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마굴리스에 따르면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체라는 것이다. 대형 유기체인 침팬지에게도 극미의 유기체인 세포에게도 하나로 고정된 자연성은 드물다.

생태학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순환적으로 파악된다. 아무리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15)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역, 동문선 (1991) 327-360쪽

16) 프란스 드 발, 『침팬지 폴리틱스』, 장대익, 황상익 역, 바다출판사(2019)

17) 최진석 외, 『감응의 유물론과 예술』, 도서출판b(2020), 92-98쪽

18) 린 마굴리스, 『공생자 행성』 이한음 역, 사이언스북스(2014), 27쪽

생물일지라도 결국은 최하위의 사슬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필연성은 생명들의 연쇄가 순환형의 고리를 이루는 것이다. 생태계란 크고 작은 생명의 순환 고리를 의미하고, 생태계의 자연성은 이 순환 고리의 건강한 유지다. 하지만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활발한 지금, 생태계는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에 의해 위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유입 생물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가차 없는 제거의 대상이 되지만 생태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도덕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적이기 때문이고,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용어가 그 죽임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낭만과 기계 너머의 강—4대강 프로젝트와 녹조의 생명정치」에서 김지혜는 녹조¹⁹⁾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물질-기호론적인 행위성을 분석하면서, 강의 보전주의자들에게 녹조는 박멸해야할 적으로 규정되었지만, 녹조의 형상과 남조류의 독성이 인간들에게 강의 죽음을 암시하는 기호작용을 한 덕분에, 보존주의자들이 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만들었음을 지적한다.²⁰⁾ 녹조가 없었으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보존주의자들이 대중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녹조는 보존주의자들의 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지, 해러웨이의 용어로 말한다면 “반려종(companion species)”이기도 하다.

특정 생물 때문에 다른 많은 생물들의 살고 죽어온 계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면, 죽이기를 포함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생물을 죽어 마땅한 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는 가부장이 자신의 오이코스에서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폴리스가 상관치 않았던 것과 같은 논리다. 이처럼 미리 정해진 자연성이라는 논리는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막는다. 하지만 드 발이 보여준 것처럼 적어도 침팬지는 자연성에 기대서 정치를 포기하진 않는다. 그래서 해러웨이는 이렇게 물었다. 침팬지도 정치를 하고 인공물도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는가?²¹⁾ 이제 정치의 개념을 갱신할 차례다.

4. 자격 없는 자들의 정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가 침팬지의 정치학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는 아렌트와는 아주 다른 정치의 개념을 제시한다. 아렌트가 자연성을 쉽게 수용해버렸다면, 랑시에르는 자연성에 내재한 근본적인 불화를 포착한다. 지배당하는 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한다. 하지만 명령하는 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종하지 못한다. 상대의 열등함이 근거가 된 지배의 논리는 역설적으로 그 명령의 성공적 수행에 의해 도전받는다. 요컨대 지배의 근거는 전적으로 우연적이다. 그런데 “치안(police)”은 이 불평등을 자연적인 질서로 만든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치안은 “행위 양식들과 존재 양식들 및 말하기 양식들 사이의 나눔을 정의하는 신체들의 질서”²²⁾이며,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질서”이다. 이 질서에 따라 누구의 말은 담론이 되지만 다른 누구의 말은 소음일 뿐이다. 그래서 전자는 폴리스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후자는 오이코스에 배속된다. 아렌트가 정치의 모범으로 삼았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이런 코스모스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곳, 즉 치안의 영역이었던 셈이다. 치안은 오이코스에 속한 자들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한다. 그들이 투명인간인 것이 아니라 치안이 그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보이지 않는 신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19) 녹조는 남조류를 비롯한 미세조류의 번성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생물상이 아니라 색깔과 지역에 따라 녹조와 적조로 불린다.(김지혜, 2019 논문 참고)

20) 김지혜, 「낭만과 기계 너머의 강—4대강 프로젝트와 녹조의 생명정치」, 문화역사지리 제 31권 제3호, 25-40쪽

21)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25쪽

22) 자크 랑시에르, 『불화』, 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2016), 63쪽

신체, 인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축들의 신체는 보이지 않을 리도 들리지 않을 리도 없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치안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우리가 통상 정치라고 믿고 있는 제도정치 활동들 역시 치안이다. 법을 만들고, 선거를 하는 행위들은 치안의 영역과 대상을 규정하고 그것을 더욱 매끄럽게 가동시키는 활동이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치안에 대립하는 활동이다. 치안이 자격을 근거삼아 공동체의 몫을 정하거나 몫이 없음을 정하는 활동이라면, 정치는 그 치안의 짜임에 의해 아무런 몫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공동의 몫을 재분배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도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투쟁도 아니다. 아예 몫이 썩해지지 않은 자들, 그래서 나눠받을 몫이 없는 자들이 자격 있는 자들의 조화로운 질서에 밀고 들어가 그 코스모스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데모스(Demos), 그들의 지배인 민주주의(Democracy)는 랑시에르의 정치와 외연이 같다. 따라서 정치는 국회나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현장에 있고, 특정한 정치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체제에 있다. 가령, 노동자, 여성, 흑인들의 해방운동들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노동자, 여성, 흑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명명했고 단지 소음으로 치부되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치열한 해방운동이 없었다면 끔찍한 노동환경, 노예노동, 가부장적 지배는 아직도 견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운동들이야말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이 비인간을 정치주체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랑시에르 역시 고대 아테네의 유산으로부터 정치를 사유하고 있고, 이때 로고스는 그의 새로운 정치 개념에도 중요자리를 차지한다. 전쟁을 거부하고 아벤티누스 언덕에 모인 평민들이 로마 귀족 공화국의 조화로운 질서를 중단시킨 사례에 대한 랑시에르의 설명은 이렇다.

그들은 스키타이 노예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전사와 동등한 전사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이들과 동일한 속성을 나누어 가진 말하는 존재자들로 구성하면서 다른 질서를 설립했다. ...요컨대 그들은 마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양 처신했다. 그들은 일종의 위반의 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말하는 존재자라는 것, 곧 단순히 욕구와 고통, 두려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명시하는 말을 지닌 존재자라는 것을 발견했다.²³⁾

아벤티누스 언덕의 평민들은 귀족들을 향해 협상을 요구했다. 그것은 귀족들이 보기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평민들은 로고스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민들은 협상을 요구하면서 로고스의 유무로 그어진 코스모스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만들었다. 이처럼 정치가 말을 지닌 존재라는 평등성에 기초한 권리의 다름이라면 오이코스에서 함께 노동하던 비인간들이 그 다름의 장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정치를 자연적 지배에 대한 이의제기로 포착한 랑시에르조차도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분할선은 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비인간은 여전히 오이코스에 남는다.

랑시에르의 정치개념을 정초한 평등 또한 문제적이다. 현실적으로 전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거나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전제는 공허한 통념이고 이것은 랑시에르도 지적한 바다. 사람들이 그 전제를 거부할 수 있다. 가령 아렌트는 예측으로 부터의 자유를 말하지만 폴리스 구성원인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만의 자유이고 그들만의 평등이다. 이때 "자유란 자격 있는 자들끼리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일 뿐이고, 평등이란 그런 활동을 위한 조건의 평등"²⁴⁾일 뿐이다. 그래서 이 공허한 자유와 평등 개념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사유를 막는

23) 위와 같은 책, 56쪽

것이다.

하지만 랑시에르는 이 개념들의 그러한 공허함으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본다. 불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평등이라는 역설이 그렇다. 열등한 자들은 “고귀한 정신”에 복종하지만 그 복종이 의미하는 역설은 그들이 명령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벤티누스 언덕에 모인 평민들이 귀족 대표와 협상하면서 입증한 것이 바로 이 평등이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그의 논의는 지능이나 언어 등 하나의 특징을 특권화 해서 정치주체들이 가진 보편적 능력으로 삼는다. 비록 랑시에르가 평등의 입증은 언제나 일회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평등이 제도화 되는 순간 그 자신과 대립하게 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척도라는 초월성에 기대어서 특정한 능력을 특권화 한다. 아무리 논의의 대상을 인간에 국한 할 지라도,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그것에 대한 계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지성의 능력에 국한 할 수 있을까? 평등을 통해 정치를 사유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능력의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각이한 능력과 기준의 평등성, 척도 자체의 평등성, 즉 모든 존재자들의 능력들이 긍정되는 존재론적인 평등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5. 오이코폴리틱스(oikopolitics)

랑시에르 정치개념의 인간중심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기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제인 베넷(Jane Bennett)도 지적한 바가 있다. 베넷은 랑시에르 정치개념의 인간중심적인 면과 인민의 응집보다 분열에 초점을 맞춘 점을 한계로 꼽으면서, 공중(public)의 구성에서 비인간의 구성적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정치 생태학(political ecology)이라고 부른다.²⁵⁾ 이를 위해 베넷은 사물이 공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를 신중하게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비인간의 정치를 말하면서 공중이란 개념에 기대야만 할까? 공중은 언제나 사적(private)인 것을 전제하고,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분할선을 만든다. 우리는 페미니즘 제2물결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부터 이 분할선을 의문시 한다. 공적인 것이 있고 그 바깥에 사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과 인간은 언제나 상이한 집합체들(collectives)을 넘나들면서 작용하고 작용을 받으며, 서로를 유도하고 유도된다. 비인간-인간의 부분적으로 공유된 여러 세계들은 이런 활동의 효과들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지, 어디까지가 공중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애나 칭(Anna Tsing)이 들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²⁶⁾ 유라시아에서 국가의 형성은 집약적인 곡물농업과 궤를 같이 한다. 경작이 채집보다 쉬워서 경작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었다. 야생의 곡물은 대개 균락을 이루기 때문에 채집은 노동시간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가 만들어지자 사람들과 한두 작물과의 배타적인 동맹이 맺어졌다. 이 동맹으로 더 이상의 유량이 허용되지 않았다. 폴리스 혹은 국가는 노동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더 많은 곡물을 원했고 오이코스는 이를 담당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곡물을 대기 위해 더 많은 아이를 원했다. 게다가 인간과 동맹을 맺은 작물들은 탄수화물함량이 높은 제법 큰 씨를 가지고 있었다. 이 영양분은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애나 칭은 앵겔스를 빌어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한탄한다. 채집농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면 모계사회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곡물은 여성의 역사도 바꾸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가?

24)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17), 228쪽

25)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현실문화 (2020), 237~267쪽

26) Anna Tsing, “Unruly Edges: Mushrooms as Companion Species”, *Environmental Humanities*, vol. 1(2012), pp. 141-154

칭은 17~18세기 유럽인들의 부를 촉진했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곰팡이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끔찍한 노예농장이었고 인도와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했던 사탕수수 농업이 그렇게나 대규모였던 것은 곰팡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탕수수 농업에서 소농들은 배겨낼 수 없었다. 사탕수수가 잘려지자마자 곰팡이들이 곧바로 그것들을 발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상하기 전에 바로 당밀을 추출하기 위해선 대규모 인원과 설비가 필요했고 그 인원을 대기 위해 노예무역이 확대되었다. 곰팡이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야기하진 않았지만 곰팡이 없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곰팡이들은 식민자본주의자들에게 럼주도 안겨 주었다. 당밀이 발효되어 알콜이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는 않았다. 의도했던 아니건 곰팡이와 인간의 동맹이 없었다면, 17,8세기의 지형은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는 비인간과들과의 이러저러한 엮임들 속에서 창발해온 것이지 남성들만의 역사(History)가 아니다. 해러웨이는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것은 비인간과 인간이 함께 구성해온 수많은 구불구불한 이야기들이라는 면에서 “지오스토리즈(geostories)”라 부른다.²⁷⁾

베넷은 찰스 다윈의 지렁이와 브뤼노 라투르의 아마존 숲의 벌레를 통해 비인간-인간의 “연합행위(conjoint action)”에 주목한다. 다윈은 지렁이가 그들의 분변토를 통해 “모든 종류의 싹의 생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세계사에 참여해 왔음을 기록한다. 곡물들과 곰팡이들처럼 이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무관하게, 세계는 비인간들의 관계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환된다. 라투르가 보고하는 아마존 숲의 벌레는 숲이 초원으로 확장되는데 관여한 중요한 행위자이다. 과학자들은 초원에 사는 벌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초원과 아마존 숲의 경계지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분비물이 경계지역의 토양을 나무가 자라기 쉬운 토양으로 바꾸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덕분에 숲의 나무가 초원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숲과 벌레의 동맹이고, 여기에 인간의 활동도, 다른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들의 활동도 의도치 않은 동맹으로 엮여들어 갔을 것이다.

진핵세포의 기원에 대한 많은 공생가설들이 보여주는 것은 박테리아와 세균 등의 미생물들은 이 종간의 우연한 만남을 재빨리 동맹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가령 동물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알려진 해면동물은 먹이를 포획하는 부분에 깃편모충과 닮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 독립생활을 하는 깃편모충은 때로 장미모양의 군집을 이루어서 다세포개체군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니콜 킹(Nicole King)은 최초의 동물들이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 편모가 있는 깃세포들과 동맹을 맺었고 이것이 점점 하나의 신체로 진화해 나갔음을 설명하는 모델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²⁸⁾

지금의 자본주의도 비인간 존재자들이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교활하고 놀라운 동맹능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두 작물과 인간의 끈끈한 동맹이 여성의 주도권을 앗아갔던 것처럼, 모든 동맹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가령 시아노박테리아가 태양빛을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떼어내자 부산물로 남겨진 산소는 원시지구의 주 거주자였던 혐기성 세균을 몰살시켰다. 시아노박테리아의 번성이 진핵세포로의 진화를 앞당겼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이처럼 지구에 사는 비인간 인간 할 것 없이 모든 존재자들은 동맹을 맺기에 능하고, 포식과 피식의 적대마저도 새로운 동맹의 관계로 전환하기에 능하다. 그들이 특별히 코문주의자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립해서는 생존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때문이고, 모두가 나름으로 행위하고 나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굴리스 말대로 명쾌한 정의는 불가능하다.

생기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베넷은 존 듀이가 정의하는 공중, 문제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응집하고 문제에 반응하면서 창발 되는 신체들의 연합이 생태계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정치생태학

27) Donna Haraway, *ibid.* p.40

28) Donna Haraway, *ibid.* p.65

을 주장한다. 베넷이 보기에 사물들은 분명히 이 신체들의 연합인 공중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공중인 한 그들의 행위는 정치이다. 비인간의 이러한 생성적인 행위를 정치로 포착하는 것은 그들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건 피해자로 보건, 그들을 수동화 시켜온 여태까지의 담론지형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시도이다. 해러웨이 또한 “세계 만들기(worlding)”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는 언제나 이미 “테라폴리스(terrapolis)”²⁹⁾였음을 주장한다. 이 또한 사물을 수동화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생성적 행위들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구성적 능력에는 그것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벡터와 그것을 해체하고 이탈하려는 벡터가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한 번의 생성으로 끝날 것이기에 그것을 구성이라 부를 이유도 없을 것이다. 베넷과 해러웨이의 정치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유지의 벡터와 이탈의 벡터를 모두 포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부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포착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기후 급변은 명백히 여태까지 우리가 비인간들과 맺어온 관계들에 대한 이탈의 벡터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탈을 통해 우리가 그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했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이탈의 정치, 항의의 정치를 자격 없는 자들의 정치로서, 오이코폴리틱스(oikopolitics)라고 부를 것이다. 전쟁을 거부하고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가버린 로마의 평민들처럼, 기후격변은 폴리스의 “고귀한” 인간들을 향해 담판을 요구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후격변은 로고스를 가지지 않았기에 인간들의 치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물질은 그 자체로 언제나 기호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항의를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로마의 완고한 귀족처럼 그들의 항의를 듣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항의를 알아듣고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맹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비인간들과 오이코스의 오랜 동맹자들이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오이코폴리틱스는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도 미적거리는 폴리스의 고귀한 인간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29) Donna Haraway, *ibid.*, p.10

가이아 이론을 통해서 본 인류세 담론과 페미니즘

송은주(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가이아(Gaia)라는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의 이름은 1970년대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이래로 엄청난 대중적 파급력을 발휘했다. 가이아 가설은 1979년 발표한 저서 『가이아: 지구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과 속편 격인 『가이아의 시대: 우리 살아있는 행성의 전기(The Ages of Gaia: a biography of our living planet)』를 통해 주로 서술되었다.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는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은 당시 미국을 휩쓸었던 뉴에이지 운동과 영성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주류 과학 공동체로부터는 과학적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따져 볼 가치조차 없는 유사과학으로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 사이언스나 네이처같은 유명 저널들은 가이아를 다루어 주지도 않다가, 1988년 미국 지구물리학 연합(American Geophysical Union)이 후원한 학회에서 처음으로 가이아 가설을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생물학, 지질학, 기후학, 대기화학, 행성과학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학회 이후로 지역적이면서 글로벌한 생물지구화학 시스템(biogeochemical system)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가이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과학계의 금기였다.

러브록의 가이아는 주류 과학계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지구를 보는 관점에 생태주의적 전환을 일으키는 데 큰 전기를 마련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수십 년간 열띤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말썽 많은 가이아를 최근 들어 다시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인물이 과학사회학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이다. 라투르는 『가이아를 대면하기: 기후체제에 관한 여덟 개의 강의(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와 『신기후체제의 정치(Down to Earth)』 등에서 인류세 논의의 중심에 가이아를 공공연히 부활시켰다. 라투르 역시 가이아를 '뜨거운 감자'라 불렀을 만큼 이를 둘러싼 소란과 논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이 논쟁적인 개념을 재소환해야 했을까? 가이아는 고대 여신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젠더 문제와 관련된 논쟁도 수반된다. 러브록과 라투르가 가이아의 젠더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건, 가이아라는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어머니 대지로 은유하면서 양자를 억압하거나 찬양해 온 서구 문화의 긴 역사와, 이를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페미니즘 내에서의 논쟁이 뒤따라온다. 캐롤라인 머천트(Caroline Merchant)는 17세기 이전까지는 자연을 어머니 대지로 보는 유기론적 관점이 우세했으나, 과학혁명 이후 근대과학의 발전과 함께 자연을 기계적 이미지로 구성하는 전이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양육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무질

서한 여성으로서 자연의 이미지는 마녀사냥을 일으키고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했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은 어머니 대지의 수사를 부활시키고자 했으며 이것이 여성에게 박탈당했던 힘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즈메리 루터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문화 내에서 발생한 생태 위기에서 여성에게 모성이자 양육자로서 전통적인 상징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은 근본적 변화 없이 여성을 여전히 낭만화된 예측과 소외의 상태에 둘 뿐이라고 경고했다. 자연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상반된 입장은 가이아 가설을 보는 시각에도 역시 반영되었다.

라투르가 이처럼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가이아라는 이름을 택한 데에는 분명 그 나름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에코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비롯한 반문화 운동이 부흥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이들의 사상에 영감을 주었다면, 21세기 라투르의 가이아는 인류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라투르는 “과학적 논쟁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7).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가이아가 뜨거운 논쟁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과 소란의 근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이아를 둘러싼 긴 싸움의 역사를 자신의 인류세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상충하는 여러 관점과 주장들 간의 접점을 늘려서 논의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인류세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깔끔히 정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이아라는 논쟁적이고 모순적인 이름은 그러한 인류세의 복합적인 성격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을 살펴보고, 라투르가 러브록의 가설 가운데 가이아의 어떤 특성에 주목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라투르의 가이아가 페미니즘의 주장과 어떤 면에서 공명하며, 어떻게 페미니즘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가이아 논쟁의 기원과 역사

1. 러브록의 가이아

러브록은 1975년 NASA의 화성 탐사 계획에서 화성의 대기 구성을 조사하여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찾는 바이킹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하던 중 가이아 가설의 단초를 얻었다. 그의 연구 대상은 화성이었지만, 그는 이 연구가 지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의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 지구의 대기 조성을 조사한다면 무엇을 발견할까? 이러한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구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과 달리 운이 좋아서, 혹은 신의 섭리 덕분에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대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하도록 대기 구성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러브록이 주류 과학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단아였다 해도, 그의 연구가 지구를 대지의 여신으로 간주하고 영성을 부여하는 유사과학의 방식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라투르는 러브록이 조합한 개념의 대부분은 과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가이아라는 명칭이 불려온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작 러브록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파리 대왕』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친구 윌리엄 골딩의 추천으로 이 이름을 선택했으며, 가이아가 어떤 여신인지는 잘 몰랐다고 고백한다. 책에서도 가이아가 신화 속에서 어떤 여신인지, 혹은 그것이 가설과 어떤 관계인지는 거의 설명이 없다. 러브록은 가이아를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제시하면서도, 여신과 같은 영적 존재나 전통적인 어머니 대지의 비유를 통해서보다는 사이버네틱 시스템(Cybernetic system)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한다. 이는 당시 신생 학문으로서 사이버네틱스가 관심

과 인기를 끌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다.

1940년대 정보과학자 노버트 새넌과 위버의 주도로 시작된 사이버네틱스는 '기계같은 인간'과 '인간같은 기계'의 유사관계를 신화나 공상과학소설 속의 상상을 넘어 과학의 연구 주제로 본격적으로 탐색하였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키잡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쿠베르네테스'(kubernētēs, κυβερνήτης)에서 따온 것이며, '쿠베르네'는 '제어, 통제(govern)'를 의미한다. 사이버네틱스는 유기체와 기계를 외부 환경의 피드백을 통해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그 원리를 공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체는 부패와 타락을 향해서 가지만, 이에 저항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힘은 바로 정보에서 나온다. 나중에 러브록과 가이아 가설을 공동 연구한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3천만종 이상의 유기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환경의 화학적 성분들과 상호작용하여 가스, 이온, 금속, 유기적 구성물질을 자신들의 대사작용, 성장, 재생산 통해 생산하고 제거하며, 이런 상호작용 통해 지구 표면 온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이 과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이유 중 하나는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이아 개념이 생명과 비-생명을 분리하는 전통적인 서구 과학의 이분법적 체계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과학의 체계에서는 자연은 죽은 수동적 객체일 뿐이다. 머천트는 자연에 대한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이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죄의식 없이 개발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한다. 뉴턴 이후 수많은 부속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끼워 맞춰져 정해진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시계는 당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핵심적 비유였다. 이 세계를 만든 신은 시계공에 비유되었고, 인간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 정교한 시계를 움직이는 법칙과 원리를 파악한다면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대과학의 힘을 등에 업은 계몽주의적 휴머니즘 주체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기계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원론적 세계관의 상징이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의 비유는 가이아 가설을 공격한 주류 과학자들이나 이에 열광한 영성주의자들의 오해와는 다른 식으로 생명과 비-생명의 이분법적 구분과 환원주의적인 기계론적 관점에 도전한다.

우선, 가이아가 살아있는 존재라던가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그에 맞게 자기조절할 수 있는 '지능(intelligence)'을 가진 존재라는 주장은 사이버네틱스의 '생명'이나 '지능'의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러브록은 가이아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위하여 스스로 적당한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장치나 사이버네틱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총합체로 보았으며, 능동적 조절에 의하여 비교적 균일한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러브록은 가이아를 '자기조절적 시스템(self-regulating system)'이라 정의한 것이다. 사이버네틱스는 동물이나 기계도 개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산출하는 일종의 정보처리기계라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통찰을 제공했다. 따라서 가이아도 음과 양의 복잡한 피드백 작용을 통해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수준이나마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이아가 살아있다고 말하더라도 지구가 의식적으로 동물이나 세균처럼 살아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능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러브록은 생명이나 지능의 제한된 인간중심적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버네틱스의 비유는 생명과 비-생명, 인간과 기계 간의 단절보다 연속성을 암시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양자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킨다. 브루스 매즐리시는 《네 번째 불연속》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인간과 기계는 연속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매즐리시는 인간이 동물과 기계 양쪽에 기원을 둔 진화적 존재이며, 동물의 성질과

기계의 성질이 공히 인간 본성에 녹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과 기계를 보는 탈인간중심적 관점은 이후 라투르에게서는 비인간 객체에까지 행위성을 부여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에서도 나타난다.

가이아 가설이 과학자들의 공격을 받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었다. 가이아 가설은 생명권이 인류의 생존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설계되었고 이를 가이아라는 전능한 초유기체가 운영한다는 암시를 품고 있으며, 이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브록은 개별 유기체들이 자신의 생명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 항상성의 집단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지월드(Daisyworld) 모델을 만들어 이러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가이아의 탄생과 유지에 어떤 신의 섭리도 작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그의 주장이 진화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쟁만이 아니라 공생이 진화 과정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었다. 가이아의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은 기존의 환원적인 과학으로는 그 실체와 작동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사이버네틱 시스템은 부분들의 집합체가 각 부분들의 단순한 합 이상이 되는 존재이다. 양과 음의 피드백이 무수히 공존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전통적인 선형논리가 통하지 않는 순환논리(circular logic) 회로를 갖는다. 따라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그 안에서 부분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 사이버네틱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수행하는가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가이아의 이러한 사이버네틱적 특징들은 지구를 생명 없는 자원 혹은 인간이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만 하면 뜻대로 조작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복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계로 보는 관점에 반대한다.

이러한 사이버네틱 시스템의 비유를 통한 가이아 개념의 이해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서 인간을 항상 세계의 중심에 놓고 보았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인간은 이 피드백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이며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이다. 1세대 사이버네틱스 연구자들은 시스템 바깥에 있는 관찰자의 존재를 가정한 반면, 2세대 연구자들은 관찰자도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관찰자의 존재가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관찰 행위가 일으킨 변화가 다시 관찰자에게로 되돌아오는 재귀성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간 역시 가이아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스템 외부의 초월적인 관찰자의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 후에 라투르는 “거대한 외부(Great Outside)”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우리가 속한 이 행성뿐, 다른 어떤 출구나 바깥도 없다고 강조한다. 러브록은 가이아가 생물조직처럼 핵심기관과 부수기관을 갖는데, 인간은 부수기관에 불과하므로 가이아의 필요에 따라 신축되거나 생성, 소멸될 수 있고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브록은 가이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생물권을 책임지거나 보살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시혜적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이아는 인간이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이아 이론이 암시하는 바는 인류는 가이아의 파트너이자 일부이며, 우리는 가이아의 일원으로서 매우 민주주의적인 실체 속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브록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며 지배자라는 기독교적 종교관과 인간중심적—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중심적—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왜 다시 ‘가이아’인가?

라투르의 가이아 개념은 상당 부분 러브록이 제안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나, 러브록의 가이아보다 시스템적인 측면을 덜 강조하고 있다. 라투르는 가이아가 살아있는 존재도, 사이버네틱한 것

도 아니며,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분열을 복잡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가이아는 지구가 아니며, 착취할 자원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취약하고 독특한 경이도 아니다. 가이아의 특징은 불활성화deanimate되지도, 과활성화overanimate 되지도 않은 행위주체들로 구성되며, 단일한 행동하는 총체성(totality)으로 너무 빨리 통합되지 않는 행위주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이아는 부분도 전체도 아니고 반-시스템(anti-system)이다. “단 하나의 가이아만이 존재하지만 가이아는 하나가 아니다(There is only one Gaia but Gaia is not One).” 라투르는 가이아를 복수화하고자 한다.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의 총체성으로 통합될 수도 없는 가이아는 “천 개의 이름을 가진” 복수적 존재이다.

라투르가 가이아를 재소환한 데에는 인류세라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류세는 본래 노벨상을 수상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Cruzen)이 제시한 지질학 용어로, 크뤼첸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류세의 대표적인 증거로는 인간 인구의 빠른 확산, 행성 지표면의 30~50 퍼센트 개발, 열대우림 실종, 댐을 통한 물길 변형, 에너지 사용의 기하급수적 성장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대기 중 탄소 비율의 변화이다. 대기의 구성은 멀리 보자면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1784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 이후로 일어났다. 인간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지질학적 힘이 되었다는 인류세의 정의는 이제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전체 생태계의 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인간이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힘으로 되돌아온다. 라투르는 인류세는 인류의 시대가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가 전면으로 드러나고 더는 인간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시대라고 보고, 이러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가이아가 유용한 개념이라고 믿는다. 라투르는 인류세가 '인류'를 내세운 이름과는 달리 이전까지는 단지 인간 활동의 배경으로만 여겨졌던 동식물, 환경,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비-인간들이 행위주체로서 전면에서 나서게 된 시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세에 가이아를 다시 불러내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가이아의 침입(Gaia's intrusion)'이 일어난 셈이다. 이전까지는 인간이 유일한 행위주체로서 모든 이야기를 쓴다고 믿었지만, 이제 가이아를 비롯한 비-인간 행위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구이야기(geostory)'가 씌어지게 된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죽어 있다고 믿었던 비인간 객체들이 인류세의 무대에 행위자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간은 더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진 근대 휴머니즘의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상실했다. 라투르는 인류세에 주체가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맥락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시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한 다른 주체들과 행위성을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인간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고 동식물과 미생물, 기계 등 모든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나름의 행위성을 갖는다고 본다면, 가이아는 일종의 신의 섭리나 궁극인(final cause)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론적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통합된 총체가 아니라, 이 모든 행위자들이 분산된 의도성을 가지고 뒤엉켜 있는 거대한 웅덩이(fine muddle)에 가깝다. 행위자들의 행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거대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기후나 지구 환경은 행위자들의 무작위적이고 국지적인 상호작용들이 가져온 우연의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가이아는 “행위주체들의 모든 뒤영기고 예측불가능한 결과들에 제한하는 이름”일 뿐이며, “그 행위자들 각각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신의 환경을 조작”하고 있다.

라투르가 가이아 개념을 되살리고자 할 때, 그의 의도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에 있다. 라투르는 가이아에 대한 정의에서 가이아가 인간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자연의 힘을 극복한 인간의 승리를 의미하는 '선한 인류세'를 주장하며 인류세의 위기도 지구공학(Geoengineering) 기술을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그러나 라투르가 보기에는 비인간 행위자들로 가득한 인류세의 무대에 인간은 너무 늦게 등장했다. 인간이 인류세에도 여전히 중심적 존재이며, 생태재앙과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인간중심주의와 자연과 비인간 타자를 통제하는 지배적 인간 주체에 대한 환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III.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가이아

1. 가이아에 대한 찬반 논쟁

가이아라는 여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주류 과학계에서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러브록과 라투르는 가이아의 이름을 어머니 대지나 전통적인 모성 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히 라투르는 적극적으로 가이아를 탈젠더화하고자 한다. 라투르는 가이아를 “여신이 아니라 신들 이전 시대의 힘”이라고 말하는 등 비인격적인 힘으로 표현함으로써 탈젠더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이아는 '그녀(he)'라는 여성인칭대명사로 지칭되며, 러브록과 라투르의 글 곳곳에서 가이아를 여성화하는 표현과 비유들이 발견된다. 마굴리스는 가이아가 인간의 의도에 쉽게 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거친 계집(tough bitch)”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다니엘 샌즈(Danielle Sands)는 러브록의 가이아는 아름답지만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여성으로 젠더화되면서 여성성에 대한 전형화된 공포를 드러내며, 라투르 또한 이러한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105-6).

가이아를 둘러싼 젠더 논쟁은 그 이전에 자연의 여성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찬반 논쟁과 관련이 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를 비롯한 급진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가이아를 통해 여신으로서의 지구 이미지가 부활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많은 환경운동 집단들 또한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네스트라 킹(Ynestra King)은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여성을 생명과의 접촉을 경축해야 하는 체현되고 지구에 묶인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라이언 아이슬러(Riane Eisler)는 러브록의 이론이 지구를 본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살아있는 객체이자 위대한 어머니로 보고 여신을 숭배하는 선사시대 사회들의 믿음 체계의 과학적 업데이트라고 평가했다.

반면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패트릭 D. 머피(Patrick D. Murphy)는 여성을 지구로, 남성을 호모사피엔스로 동일시하는 러브록의 관점은 이원성의 여성 쪽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남성중심주의를 강화하므로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구라는 객체를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으로 지칭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굴종적 지위를 보장할 뿐이라고 말한다. 엘렌 크로넌 로즈(Ellen Cronan Rose)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페미니스트가 자연을 어머니와 모성으로 구성하는 것은 잘해야 애매모호하고 나쁘면 여성혐오적 수사가 될 수 있다면서 어머니 지구의 개념이 여성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녀는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은 모성의 힘에 대한 남성의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서 가이아가 영적 차원을 가졌다거나 기초적 상태 이상의 지능을 가졌음을 부인한다고 말한다. 다니엘 샌즈는 가이아 모델이 인류세 과학과 정치에 제공하는 잠재력이 있기는 하지만, 가이아 은유(와 신화)가 남성적 판타지로 역전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오는 긴장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샌즈는 라투르가 가이아의 표현에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고 본다. 첫째는 가이아의 위치를 주체/객체 이분법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행위자로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이아를 의인화하지 않으면서 제시하는 것이다. 러브록 또한 비슷한

난제에 처했고, 라투르는 가이아의 신화적 요소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인간화의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라투르가 가이아를 젠더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젠더화되는 상황을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으며, 가이아의 비-주권성(non-sovereignty)을 강조하는 그의 전략은 결국 여성의 행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여성적인 가이아의 비-주권성을 강조하는 정치는 여성의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라투르는 비-주권적이며 통합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성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여성과 자연을 지배적이며 주권적인 남성 주체의 배경이자 힘의 근원으로 이용한 서구의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의 오류를 되풀이한다고 비판한다.

가이아에 대한 비판은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의 특성들을 본질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은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러브록과 라투르의 가이아 가 에코페미니즘의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라투르는 가이아는 자연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의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만, 이것을 가이아 개념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판의 초점이 어긋나는 셈이다. 또한 비판의 근거는 대부분 가이아라는 젠더화된 이름을 사용한 것 자체에서 비롯된다. 샌즈의 비판은 젠더화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피해가기 어려운 것임에도 남성 이론가들이 흔히 이를 넘어가거나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짚어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이아라는 여신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비롯되는 젠더화의 문제를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는다면 이 비과학적인 명칭 때문에 가이아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주류 과학 공동체의 편협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투르의 가이아 개념에 대한 샌즈의 비판에서 가장 큰 오해는 라투르가 지구에 가이아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행위성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라투르의 ANT에서는 행위성이 인간과 모든 비인간 행위자들에게 분산된다. 가이아가 비-주권적이라 해서 근대과학의 자연 개념처럼 수동적이고 행위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죽은 객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샌즈의 비판은 ANT의 행위자 개념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개념을 가져와 데리다가 어떻게 여성이라는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이를 가부장제에서 떼어내려는 커녕 오히려 여성을 탈물질화하고 탈주권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라투르의 ANT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크게 다르며, 오히려 신유물론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페미니즘의 비판은 다소 협소한 관점과 단순한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는 아쉬움이 있다.

2. 가이아 개념의 페미니즘적 의의

러브록과 라투르가 독립적인 ‘지구 시스템’ 같은 전문용어가 아니라 ‘가이아’라는 여신의 이름을 택했을 때는 비-인간적이고 비-생명적인 객체를 인격화하고 젠더화하는 데 따르는 논쟁과 한계,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위험을 안고 논쟁 속으로 뛰어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한 도발적인 기획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메리 미드글리(Mary Midgley)는 “지구를 의인화한 언어의 사용이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다. 지구 행위자로서 가이아를 불러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하며 전략적으로도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연과 문화의 파괴적인 근대 이분법에 대한 은유적이고 혼종적인 대안으로서 가이아는 우리의 탈자연 세계에 대한 라투르의 이미지에 딱 맞았다고 옹호한다. 마르시아 비요르네루드(Macia Bjornerud)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녀는 가이아의 페미니즘적 의의를 이 이름이 과학 체계의

근간에 도전하는 가정으로 과학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녀가 보기에 대안적 페미니즘 이론의 미덕은 근본적인 정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롱기노(Longino)는 과학자들이 경쟁하는 과학 이론들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불러내는 기준들 중 일부는 암묵적으로 젠더화되어 있어서, 어떤 유형의 설명들은 미리 배제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축되고 승인되는 다수 과학(Major Science)에 맞서, 그녀는 페미니즘적인 대안 과학 가설을 평가하는 기준을 참신성, 존재론적 혼종성, 관계의 복잡성/상호작용의 상호성, 권력의 분산, 현재 인간 필요에 적용가능한가로 새롭게 제시한다. 그녀는 가이아는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가이아와 같은 대안적 가설은 기존 과학 패러다임의 기준들을 뒤흔들어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순과 한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요르네루드는 “가이아는 페미니즘 이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성의 찬양, 권력의 이상타파적 전유, 여성 지배의 핵심 은유를 근거로 “그렇다”는 답을 내놓는다.

가이아 개념은 소수 과학(Minor Science)의 관점을 도입하여 다수 과학의 기준과 틀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 문화와 융합되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오랫동안 과학과 문화는 서로 완전히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두 개의 영역으로 존재해 왔지만, 라투르는 인류세는 과학과 문화의 구분을 흐린다고 본다. 즉 과학적 개념에도 문화적 영향이 녹아들어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리브록은 골딩의 제안에 대해 수세기 전 옛 사람들이 지질학, 지리학 등 지구과학들에 이름 붙일 때 가이아라는 이름을 참조했듯이, 기존 문헌을 인정하는 과학자로서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십년 간 많은 과학자들의 공격에 시달려 왔고 지구 시스템을 가이아로 인격화하는 것이 과학자들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지만, 비유는 지구의 진정한 특성을 폭넓게 이해시키고 눈앞에 닥친 치명적인 위험을 이해시키는 데 최고의 수단이므로 여전히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라투르는 인류세 논의를 위해 리브록보다 더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택했다. 앞서 라투르가 인류세에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지구이야기’를 공동으로 써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류세의 새로운 내러티브이다. 이 내러티브가 필요한 이유는 인류세의 위기는 그 시공간적 규모 면에서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감각 범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재현 방식으로는 이 엄청난 규모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심화되는 복잡성을 포착할 수 없다. 라투르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현상의 범위, 본질, 규모는 너무나 엄청난 반면, 우리의 감정, 사고 습관, 감정과는 완전한 단절(total disconnect)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구를 전체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이기에 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라투르의 견해로는 자연은 더는 관찰자가 모든 것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멀리 떨어진 관점에서 포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시도는 자연스럽지도 않다. 자연은 구성되어야 하는 모순되는 객체들의 이상블라주이다. 따라서 이 ‘지구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공동 저자이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로 참여할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가이아의 이름이 필요하다.

라투르는 “지구를 어떻게 이미 구성된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을지, 물리화학적 시스템에 편승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유기체로 제시하여 지구의 생기를 제거하지 않고 말할지, 어떻게 하면 지구가 행위자임을 이해하면서도 영혼을 부여하지는 않을지”를 고민했다. 가이아는 지구와 동의어가 아니며, 라투르의 표현을 빌면 부신피질호르몬유리인자처럼 분명 자연 속에 존재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감각에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던 실재이다. 부신피질호르몬유리인자는 실제로는 화학작용을 일으키지만, 이를 감지하고 존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

로 이 새로운 비-인간적 힘을 행위자로 인정하려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실재에 내포된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은 배제되거나 왜곡되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라투르는 ‘천 개의 이름을 가진’ 가이아를 택함으로써 가이아를 하나의 이름이지만 그것으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없는 집합체로 복수화하는 동시에 혼종화함으로써 이 딜레마에 대응한다. 가이아를 정치적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통합성의 완전한 부재이다. 가이아라는 개념이 까다로운 것은 존재하는 실재로서 무언가를 명명해야 하지만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원치 않았던 함의들이 고정되거나 포착해야 하는 의미들이 빠져나가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미끄러짐 때문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존재론적 문제로 기호학의 결과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자, 소설가, 과학자들이 행위성을 허용받지 못했던 것에 행위성을 부여할 때 의인화를 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미지의 행위자의 형태를 탐구하려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스타일이나 장르를 부여받지 않으면, 즉 잘 인식된 행위자(well-recognized actor)가 되지 않으면 끊어져서 한 향아리 속에 묻개지고 섞여 형태를 잃어버린다. 무엇으로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행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고, 정치적 대표체로 참여시킬 수도 없다.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까지 참여하는 ‘사물의 의회’를 위해서는 비인간 객체에 행위성을 부여하고 가시화해야 한다. 하만은 라투르가 지향하는 사물 정치를 “모든 실재는 정치적이지만 모든 정치가 인간적이지는 않다(all reality is political, but not all politics is human)”는 말로 요약한다. 그러므로 명명하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감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행위이지만, 명명이 한 번의 선포로 완결되는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협상과 변화의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물런은 현재를 명명하기는 잠정적이고 진행중인 작업이며, 불가피하게 사변적이고 상상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가이아는 고대 신화 속에서는 여신의 이름이었고 러브록과 라투르에게서는 각기 또 다른 의미가 된다. 과거의 의미들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기 어느 정도 의미가 겹치면서도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명하기의 어려움은 가이아와 유사하게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의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인류세라는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질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인류세가 현재 우리 시대를 가리키기에 적절한 이름인가를 놓고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류세 이외에도 자본세(Capitolocene), 툴루세(Chthulucene), 대농장세(Pantationocene), 등등 수많은 명칭들이 있다. 인류세는 부적절한 이름이지만 크루첸의 표현을 빌면 미지의 영역(terra incognita)에 살면서 이런 언어적 불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세라는 이름은 생태적 관심사와 인간의 근심과 열망을 표현하는 담론과 실천들을 위한 촉매로서 더 많은 논쟁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투르는 인류세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것이 “곤란과 함께 살아가기(stay with the trouble)”를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가이아라는 부적절한 이름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러브록과 라투르의 가이아 개념은 인류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연의 재개념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일차적 목표는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 간의 오랜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이는 페미니즘이 서구 남성중심적 문화의 젠더적 이분법에 대항하여 오랫동안 해 온 작업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소통과 연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이아는 자연에 행위성을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이 물질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준다. 에코페미니즘은 본질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여성의 친연성에 주목함으로써 환경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결했다. 시몬느 드 보봐르를 비롯하여 주디스 버틀러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연과 동일시됨으로써 종속적 지위를 강요받는 데 대한 우려로 자연 혹은

물질성을 배제하고 여성성의 언어적, 문화적 구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테이시 알라이모와 수잔 헤크먼은 페미니즘 이론의 주류가 페미니즘과 환경주의의 연합이 순진하고 낭만적인 현실의 설명에 기반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에코페미니즘을 무시해 버렸다고 비판한다(145). 최근 물질성을 강조하는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의 새로운 철학적 경향은 에코페미니즘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리-앤 캐서롯(Marrie-Anne Casserlot)은 자연-문화의 분리를 넘어서서 자연의 ‘새로운 형이상학’에 윤리적 행동의 기초를 두고자 했던 점을 고려하면, 페미니즘적 유물론 사상은 에코페미니즘에 예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74). 러브록과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은 인류세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탈인간중심적 관점으로서의 변화와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대과학의 기계적 자연관에 반기를 들었던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이 페미니즘 유물론으로 계승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은 지구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전을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면서도 ‘가이아’라는 신화 속 이름을 채택함으로써 과학적 객관성과 중립성의 언어가 갖는 한계를 넘어 문화적이고 은유적인 확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투르는 과학과 문화, 혹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 인류세의 복잡성과 혼종성을 재현할 가능성을 이 명칭에서 발견했다. 이 이름은 결코 고정된 실재에 최종적으로 붙이는 꼬리표가 아니며, 잠정적이고 과정적인 것일 뿐이다. 비비안 아네트 라거슨은 라투르의 ANT를 활용한 젠더 연구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집합 과정(assembly process)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이나 논쟁을 어떻게 도입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대상이 여성의 삶의 일부가 될 때 새로운 관계가 다른 인간들과 비인간 객체들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운 불확실성이나 논쟁이 분석되고 다면 다음 단계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거나 논쟁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된 행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한다. 즉, 분산된 행위성을 갖는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유동적인 관계 자체가 연구의 핵심적 대상이다. 러브록과 라투르가 지구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던진 가이아라는 논쟁거리는 기존의 논쟁을 해결하고 확정된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논의를 뒤 흔들고 새로운, 더 많은 논쟁을 이끌어내며,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의도일 것이다.

그로츠를 통해 본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 사유하기¹⁾

이성림(부산대 사회학과 박사과정)²⁾

I. 들어가며

마페졸리(Maffesoli)는 『영원한 순간』에서 “일상적인 사실들과 경험은 그 자체로 형식화되지 않은 채 거기에 있고, 일상적 사실들과 경험에는 뭔가 숙명적인 것이 있다. 두 팔로 껴안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숙명이다. (...) 이는 어떤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넓게 경험하는 것(Maffesoli, 2010: 12)”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 질서에서 비주류의 범주로 밀려나 소외되었던 존재들, 예를 들면 성적 소수자나 육체(body), 섹슈얼리티, 에로티시즘 등에 대한 환대를 강조한다. 마페졸리는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이성과 감정, 주체와 타자라는 근대의 이원론적 사유에 반대하고 언제나 관계 맺음을 중요시하며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가 말한 껴안는 것, 환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만남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 만남은 두 항을 전제한 물리적인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하나 이상과 관계 맺고 연결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 세계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세계에서 기존에서 있었던 그대로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창발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려면, 관계라는 것에 대한 시각과 관계 맺는 존재 개념에 대한 고찰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프랑스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은 개체, 즉 존재의 생성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펼쳐내는 철학자로 기존의 개체의 구성과 형성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원적인 사유를 깨고 '전개체화(preindividual)' 개념을 통해서 변화와 생성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개체를 설정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분리되고 고정되어 닫혀있던 항들에 대한 규정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가능성을 담지한 개체의 특성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몽동의 이론적 개념 중 '전개체화' 개념을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가 사유한 방식과 함께 살펴보고 '단일성 이상, 동일성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체에 대한 사유가 젠더와 관련하여 어떠한 새로움과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

시몽동은 개체화된 존재자의 개체화 과정에 대해 열역학의 용어를 빌려와 새로운 존재 양식과

1) 미완성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gengen@pusan.ac.kr

논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는 존재가 구성되고 형상화되는 개체화 과정에 ‘전개체화’ 과정을 추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개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자 시도했다. 개체의 구성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물질과 비물질을 넘나들며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이들의 관계 맺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매우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시몽동의 논의는 기술철학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ANT(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연구자인 홍성욱은 시몽동(Gilbert Simondon)이 1950년대에 기술의 핵심을 ‘관계’로 파악했다며(홍성욱, 2010: 137)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에 기반한 관계적 측면에서 기술을 바라보게 되면 “기술은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의 사이에 개입하고 존재하면서 기존의 이분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나름의 행위능력(agency)을 가진 존재”(홍성욱, 2010: 137)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시몽동은 ‘전개체화’ 이론으로 개체, 즉 존재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펼치면서 기술과 기계, 동물, 사물 같은 비인간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행위자로서의 이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시몽동의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전통적인 존재론에서 존재와 생성을 분리된 이원화 개념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고 개체들의 절대성이나 분리가 아닌 관계 맺음과 생성에 더욱 주목한다.

1. 고정되거나 안정되지 않은 채 생성하는 ‘전개체화’

시몽동(2017)은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들, 존재들, 관계에서의 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고정되고 완성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철학적 시각들을 거부하며 존재를 완성되고 단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자연적 개체든, 기술적 개체든, 그것의 형성은 결코 하나의 형상을 하나의 질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시몽동, 2017:16-17)이다. 그의 개체화 이론에서 등장하는 ‘전개체화’ 개념은 개체화 이전의 과정을 가리키는데 개체는 이러한 체계의 전개 단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시몽동(2017)에 따르면 ‘전개체화’라는 분화 과정에서는 준안정적(metastable)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과정에는 언제나 항상 잠재적 에너지(potential energy)가 가득 차 있다. 잠재적 에너지란 물질의 구조 안에 이미 축적된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에너지들은 안정적 평형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준안정적 상태로 존재한다. 준안정적 체계에서의 긴장 상태는 잠재적 에너지의 포화로 인한 현상인데, 이때 개체는 어떤 것으로든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정되어있지 않은 과포화된 에너지의 분화로 인해서 다량의 개체화하는 형태들이 솟아나는 것이다(시몽동, 2017: 20).

이렇게 솟아난 개체의 형태들은 그것으로써 완결되거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준안정적 체계의 전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존재로서 파악하는 존재는 이 ‘전개체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생성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각 개체는 에너지의 창발성으로 인해 단일하거나 동일하지 않고 그 개체만의 개체성, 즉 특이성(singularity)을 가지게 된다. 생성의 반복 속에서 물질은 완결되거나 고정된 상태가 아닌, 에너지의 표출 과정에서 맺어지고 드러나는 연속적 과정의 어떤 것이다. 개체 자체가 갖고 있는 전개체적 상태가 유동적으로 다른 물질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체는 애초에 고정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몽동의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전통적 존재론에서 존재가 생성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개념을 비판하는 한편 존재와 생성을 분리시키고 분절시키는 의도적 구별방식을 해체한다. 즉 통합적이고 관계적 관점에서 존재와 생성을 바라본다.

2. 내적공명을 통한 단일성 이상의 ‘전개체화’

시몽동(2017)은 한편 개체들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하는데 그는 내적공명이라는 용어로

이 관계에 대한 성격을 설명한다. 그는 관계를 개체들의 내적공명의 한 국면으로 보는데, 이미 보여지고 드러난 항들 간의 표면적인 관계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서로 공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는 준안정적 체계의 일부이면서 그 개체의 고유하고 고정되어있는 한 형태를 넘어서는 확장된 요소로써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몽동은 데생 화가의 초벌 소묘를 예로 든다. “미래의 회화의 탄생을 위해 전개체적 실타래를 형성하는 펜 끝의 놀림이 그러하다. 데생은 긴장들로 다듬어진 준안정적 장이고 거기서 선들이 점차 출현함으로써 개체화하는 형태들은 안정화된다”(시몽동, 2017: 24). 즉, 전개체적 존재는 단일한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개체화 이후의 개체들의 관계도 표면적인 관계 맺음 이상이다. 그의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물질과 비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존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질서를 비껴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생명의 영역에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 내부의 정보 소통 끈이 내재되어 있고 잠재적 에너지가 포화되어 있는 준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내적공명이 생성되기 때문이다”(시몽동, 2017: 48-49). 즉 생명체는 단지 적응함으로써 환경과의 관계를 변형함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형하면서 새로운 내적 구조들을 발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내적공명의 과정을 통해 개체들은 각 개체만의 특성을 발현시키게 된다(시몽동, 2017).

III. 그로츠의 『The Incorporeal』에 나타난 ‘전개체화’ 개념

1. 특이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진 ‘전개체화’

그로츠(2017)는 『The Incorporeal』에서 ‘전개체화’ 개념을 바탕으로 개체들의 고정된 정체성(identity)이 아닌 유동성과 다원성, 특이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개체로서 드러나게 되는 과정에 집중하고 이항대립으로 설정되어있는 많은 항들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다. 그로츠가 보기에 ‘전개체화’ 단계에는 준안정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어 이것이 개체 발생의 근거가 되고 전개체적 상태에서의 선행 개체는 정체성(identity) 또는 응집력이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다. 이 시스템 안의 에너지들이 강력한 변화를 가져와 개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준안정적인 시스템은 자기 변형 가능성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신 이상의 것이다. 그로츠는 만약 현실을 준안정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일부 영역은 가능한 한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잠재적으로 차별화 가능한 개체화 시스템이 된다(Grosz, 2017: 173)고 설명한다. 그렇게 본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활력과 변형의 잠재력의 집합체로써 역동적인 위치를 구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개체화’ 개념이 존재에 대한 개념의 중심이지만 정체성이나 사물,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보다는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으로써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그래서 ‘전개체화’는 생각과 사물, 마음과 물질에 대한 구별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상태로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개인, 물질, 정신, 생물, 무생물을 가능하게 한다(Grosz, 2017: 174). 이로써 개체의 특성을 정체성이라는 정체된 개념으로 이해했던 기존의 사유를 무한히 변형 가능한 것으로,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불안정하지만 그 개체만의 특이성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의 새로운 질서를 제안한다.

2. ‘전개체화’ 개념을 통해 이분법 질서 넘어서기

『뫼비우스 띠로서 몸』에서 그로츠(2001)는 이미 몸-정신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 몸의 유연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며 몸과 정신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어 어느 것이 선제적으로 중요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데카르트 마인드(mind)-바디(body)의 상하 관

계 이원론을 비판하고 주체가 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과 정신이 물질과 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로츠는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이 비단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생명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성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 개념을 활용하여 이원론적이고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되었던 개념들, 마음과 몸, 이성과 열정, 주체와 타자 등의 관계성을 넘어서는 사유를 시도한다.

그로츠에 따르면 유전자적인 물질로 어떠한 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개체로써의 몸은 전개체적 상태를 담지하고 있는 물질 그 이상이기에 몸으로써 관계 맺을 수 있고 상호교차 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정신을 대표하는 뇌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 즉 정신의 육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몸이라는 실체는 총체이며 절합돼 붙어있는 것도 실체고 총체라고 주장하며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로츠는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을 통해서 몸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개체들의 유연함과 다원성, 특이성(singularity)을 사유하고 관념론만으로 존재할 수도, 유물론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개체들의 다양한 형태로의 섞임에 접근한다.

IV. 생성하는 개체들의 변형 가능성

1. 정체/성을 넘어선 젠더 유동성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구분하는, 이미 완결된 존재를 규정하는 억압적 분류 방식의 사유를 벗어던지도록 이끈다. 본스타인(2015)은 『젠더 무법자』에서 '젠더 유동성' 개념에 대해 제시했는데 '젠더 유동성'이란 자신이 무얼 하는지 인식하면서 길든 짧은, 어떤 변화를 겪든 간에 자유롭게 한 성별 아니면 무한한 젠더 중 여럿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본스타인, 2015: 92). 본스타인과 시몽동의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젠더 이분법, 섹스와 젠더, 여성과 남성, 이성애와 동성애 등의 항들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각 개체들은 매순간 완성되어 있고 고정된, 단일한 존재 양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즉 생성과 변화 속에 이러한 항들과 범주들은 각 개체 마다의 특이성을 발현하면서 범주를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우, 성별화된 몸에 각각 유착되어 명확히 분리되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것은 존재자 내부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정된 두 가지 성별과 이 성질들을 반드시 일치되는 것으로 결부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결부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몽동의 '전개체화' 이론은 성별 이분법 범주의 단일성에 도전하고,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젠더 정체성이 반드시 하나의 성질만을 갖는 것으로, 절대불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저지한다. 즉,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체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전혜은(2010)은 "인터섹스나 트랜스젠더처럼 이원론의 경계를 위반하는 존재들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징질서는 성차를 남과 여라는 단 두 개의 항으로 구획하도록 강요하는데 남/여 이분법의 고정성이 완전히 거부 가능한건지 (...)"(전혜은, 2010: 336) 질문한다. 성별은, 사회문화적으로 나뉘어진 성별적 특성을 이미 기입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서, 의학기술을 통해서 다르게 변화시키고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규정되어있는 몸은 절대적으로 분리되고 혼합될 수 없는 어떤 이원론적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이면서 상호작용하며 관계 맺는 물질 연속성의 존재, 언제나 변형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미 성별 이분법이 기입된 인간의 몸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유 과정을 통해서 더욱 급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체화된 정체성에 관해 질문해 본다면, 존재라고 하는 개체의 잠재적 에너지와 생성 과정들에 집중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의 철학적 개념이 단지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체계 전반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남성들이 반드시 남성이고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여성이지 않음에 대해서 다시, 그리고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 생성하는 개체들의 만남에 관하여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은 개체에 관한 새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 질서의 많은 이분법들과 이항대립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성을 가지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가능하도록 한다. 시몽동은 존재가 생성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기존의 사유들을 비판하고 존재와 생성을 분리·분절시키는 의도적 구별방식을 버리면서 통합적 관점에서 존재와 생성을 바라본다. '전개체화' 단계의 내적공명이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형과 틈새(disparition)를 통해 성별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몸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만나며 또다시 '전개체화' 과정을 거치며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변형될 것이다.

또 '전개체화' 단계에서는 개체가 무수히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때의 네트워크도 함께 변형된다. 개체는 언제나 개체 단독으로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내적공명이 일어나는 관계에는 반드시 두 항이 기본값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개체 안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개체 간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다. '전개체화'의 잠재적 에너지와 그로 인한 내적공명은 단순히 이상적인 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개체에 대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가능성에 관한 사유이다. 즉 갇혀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펼쳐져 나가는 에너지이자 관계성에 관한 사유이다.

시몽동의 '전개체화' 단계에서의 선행 개체들은 특이성을 담지하게 되는데 개체들 간의 비교 불가능하고 독특한, 언제나 다수이고 다르지만 함께 존재하는 이것에 집중한다면 마페졸리의 함께 끼어있음이 가능할 것이고 네트워크 또한 단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더 많은 다원성과 특이성을 담지한 새로운 공간성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개체화' 단계에서 선행 개체들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다.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가며 연결되고 가능성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단 두 성별 중 하나의 모델을 받아들여 정체화해야만 하는 몸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억압을 '전개체화' 개념으로 새롭게 사유할 수 있다면, 유동적인 체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틈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존재하는 새로운 개체 개념으로써의 젠더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 다른 존재 양식과 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에서는 시몽동의 '전개체화'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로츠가 다루었던 방식을 함께 짚어보며 젠더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열어보고자 했다. 또 성별화된 몸이 하나의 단일성을 가질 것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섹슈얼리티, 복수의 몸 개념, 다차원적 공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이 개념으로 개체들의 연결을 방해하고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유방식을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제한적인 성별 이분법과 이항대립의 조악한 기준 자체를 해체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해볼 수 있다. 몸이라는 실체는 단일한 하나가 아니고 어떤 경계와 탈주의 범위를 넘나드는 물질(김은주, 2019)인데 여성 아니면 남성,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만 존재하기를 요구받는 질서 아래에서 누군가는 생식기를 잘라내야만 법적 주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공간에서 탈출구를 찾아 해방감을 갈구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아니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든, 우리는 한 번쯤 성별의 경계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이 사회적 규범을 그대로 복속하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변형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한편으로는 저항적인 감각들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성하는 ‘전개체화’ 과정 중에 어떤 것이다. 개체에 관한 폭넓은 변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생동성을 쫓아가본다면 분명 멈춰진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발되는 에너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에너지들이 넘쳐나는 공간의 틈새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확장시켜 나간다면 누구나 조금 더 쉽게 그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곳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시몽동의 생성철학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존재들과 다양하게 만나고, 다양하게 엮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변화하는 감각에 집중하며 그 감각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희열은 삶을 추동시켜나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을 더 열어젖히고, 세계와 만나자.

<참고문헌>

그로츠, 엘리자베스(2001), 『뫼비우스 띠로서 몸』, 임옥희(역), 여이연.

김은주(2019),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마페졸리, 미셸(2010), 『영원한 순간』, 신지은(역), 이학사.

본스타인, 케이트(2015), 『젠더 무법자』, 조은혜(역), 바다출판사.

라투르, 브루노(2010), “인간과 기계에 대한 ‘발칙한’ 생각”, 『인간·사물·동맹』, 홍성욱(역), 이음.

시몽동, 질베르(2017),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본 전개체화』, 황수영(역), 그린비.

전혜은(2010), 『섹스화된 몸』, 새물결.

Grosz, Elizabeth(2017), *The incorporeal : ontology, ethics, and the limits of materi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인간 사이의 the Third : 그 발견과 구성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브레히트, <영아 살해범 마리 파라에 대하여> 중)

1.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인간만으로는 안 되어서.” Braidotti가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인 자원과 한계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브라이도티, 2015: 21)을 언급하던데, 왜 ‘사물(the thing)’에 관심 있냐고 묻기에, 나도 그렇게 답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서 갈무리를 하게도 되지만 음악을 듣거나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것, 물 흘러가는 소리와 모습,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 하늘, 산, 구름, 저수지의 윤슬, 길가의 풀과 꽃, 달 등이 위안이 되고, 동물들이 주변에서 살아줘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싶다. 고양이가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 동안 세상이 숨을 쉬고 저 너머의 다른 차원이 슬쩍 열리는 것도 같다. 또 내 사정이야 어떻든 버스가 다니고 식당에서 밥을 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줘서,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서 고맙다고 느끼곤 한다.

그런데 한심하고 뻔뻔하게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늘 많은 것을 받고 보살피지면서도 또 어려움에 부딪치면 더 많은 새로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이런저런 성폭력사건들을 접하고 그 처리와 치유를 모색해 오면서, 대립하는 당사자와 종종 무력한 관련 기관이라는 구도 앞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직접적인 관련자와 조직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더 괜찮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더욱이, 여전히 일어난 일을 두고 어찌할 바 몰라 전전긍긍하거나 처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방치되며 부당한 일 자체가 관련자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타개해나갈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궁리하게 됐다. Foucault가 통치의 관건은 사물의 배치(dispositif)에 있다고 했는데(푸코, 2011: 151), 그것을 뒤집어, 자연-문화, 사물, 제도를 또 다르게 편성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든다면, 상황주의자들(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을 좇아 현 상황만 보기보다는 사태를 다르게 전개할 수 있는 괜찮은 우회로(retour)를 풍성하고 두텁게 배치한다면, 그리하여 지배 체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배치들을 끊임없이 고안해 나감으로써 다르게 된다면(becoming)(김은주, 2019: 15), 많은 젠더 사안 역시 세계 전부의 힘으로 겪어나가고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2. 인간만이 아닌 세계

그리고 단언컨대, 그렇게 작정하고 더 도움을 받을 비인간존재와 잘 알 수 없는 힘은 세계에 이미 있다. 스피노자는 “깨어 있을 때에는 감히 하지 못했을 수많은 것들을 꿈속에서 행하는 몽유병자들”과 “인간의 명민함을 크게 벗어나는”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권유했는데(에티카 II, XⅢ), 기실 유령, 흔적(Derrida)이나 Odradek(카프카, 1997: 241-242)과 같은 uncanny한 무언가, 꿈, 무의식, 신비, 주술, 광기, 무한, 물 자체(Das Ding), the Real(Lacan), 그리고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네 가지-말로 표현되는 것(lekton), 무, 장소, 시간-와 같은 ‘몸이 아닌 것들(the Incorporeal)’(자케, 2021, 54-55: Grosz, 2018), 픽션, 판타지, 유토피아 등이 감지되거나 궁구되어 왔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동물은 세계가 빈곤하다는 하이데거와는 생각을 달리 하여, “가지지 않음의 양식으로 세계를 가지는(having a world in the mode of not-having)” 것을 오히려 Dasein의 가장 적절한 묘사로 해석하며 동물에 주목한다(Wolfe, 2013: 79). 예컨대 ‘완전한 동물이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헉슬리, 2013: 376)을 지향하거나 동물을 반려존재, 친구,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다. 페미니스트 역시 사이보그 되기 및 동물과의 ‘공-산’(최유미, 2020)을 표방하는 반려종 선언(해러웨이, 2019)을 하거나, 산다는 것은 생명체와 사물들, 인간과 동식물, 미네랄 등이 상호교직(interlacing) 관계를 맺는 것이고(Irigaray, 2008: 64) 모든 존재는 공기를 통해 지구 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며(이리가레, 2020), ‘동물/지구/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브라이도티, 2015)을 얘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물들이 있다.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유기체 더하기 환경(organism-in-its-environment)’을 생존단위로 봤는데(베이트슨, 2006: 725), Bruno Latour에 따르면 ‘사회적’이라는 낱말의 범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축소되었지만 인간 사회는 결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혹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울타리, 화폐, 제복, 기념물, 선박, 깃발, 결혼반지, 고속도로 등이 필요하다(하먼, 2021: 66). 그리하여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가 그 자체로 행위성을 갖는다고보다는 사물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집합체로서 행위하게 된다고 보며 ‘사물의회/정치’를 통해 사물과 민주적으로 공존하는 세계를 주장한다(라투르, 2010). 나아가, 브라이언트는 “객체를 주체에 대립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브라이언트, 2021: 9) “주체를 비롯한 모든 존재자는 객체”(브라이언트, 2021: 30)라며, ‘객체들의 민주주의’(브라이언트, 2021)를 주창하기도 한다. “객체는 역동적”이며, 다른 객체들과 “번역이나 정보로서”(브라이언트, 2021: 397) 서로 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 - “한 객체가 다른 한 객체에 최대한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교란하는 것인데”(브라이언트, 2021: 409) - “온갖 종류의 놀라운 일의 온상이 된다”(브라이언트, 2021: 10)는 것이다. 나아가, 어떻게 보면 물질 역시 그저 생명이 없는 불활성의 것이라기보다 ‘생동하는’ 것으로서, “나는 물질적 배열”(베넷, 2020: 274)이고, 우주는 인간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활력이 넘치고 흐름들이 있는 존재론적 장이다(베넷, 2020: 284).

3. 인간만이 아닌 인간, impersonal, trans

“어떤 사건에 의해 [지식의]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 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푸코, 2012: 526)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간’을 만들어가야 할 존재로 보는 시각은 이제 꽤 익숙하다. “퐁주(Francis Ponge)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미래”(사르트르, 2007: 65)라고 한다.

인간은 내가 아닌 것 및 인간과 다른 무언가에 근거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해야 한다(Gehlen, 1980: 14). 버틀러도 “위험과 이 세상의 다른 방식의 삶과 삶에 열림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생각할 우리의 능력을 확대해야 하고”(버틀러, 2015: 358) “인간은 다른 국면에서 인간을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낯설어져야 하며 스스로에게 괴물마져 되어야 한다”(버틀러, 2015: 304)고 제안한다.

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한 인간은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며, 인간은 관계의 산물이다. “나는 어떤 일반적인 집합이기도 하고, 질 들뢰즈가 말하는 일종의 배치(asmontage)”이기도 하다(버틀러, 2020: 102). 때문에 예컨대 푸코는 권력관계의 장애 있어 개인적인 삶과 비개인적인(impersonal)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둘은 섞여 있다고 봤다(McWhorter, 1999: 189). 또한 Breton, Aragon과 같은 초현실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산보(flâneries)에 주목한 상황주의자들이 기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표류(dérive) 역시 비개인적인(impersonal) 이론이었다(Kauffman, 2002: 301).

나아가 Simondon은 인간은 모나드가 아니고(시몽동, 2011: 182) 실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항상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김재희, 2017: 20)이라며 pre-individual과 trans-individual을 말한다. 이리가레 역시, “타자는 나와 나의 한계의 지평을 초월한다는 점은 우리의 감수성을 타고 흐른다(trains our sensibility)”(Irigaray, 2008: 134-135)며 ‘감각적 초월(sensible transcendental)’, trans를 역설한다. 가히 생명-죽음 연속체의 생성적 능력은 개인들을 횡단하고 세계를 횡단하고 생태철학적으로 우리를 연결한다(브라이도티, 2015: 175).

그리고 근래 에스포지토는 non-persons(Esposito, 2015)과 impersonal을 표방하면서 종래의 인간 및 개체성에 대한 이해를 넘는, 공통성에 착안한 새로운 꿈을 전개한다. 에스포지토는, 개체 또는 법적 개인은 삶을 스스로에게서 분리시키고 소유물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을 정의하니(Esposito, 2012: 99-100), 오로지 시몬 베유가 말했듯이 신성한 비개인적인(impersonal)(Weil, 1986: 54) 공동체에서만 인간과 권리와와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Esposito, 2012: 103). 에스포지토가 파악하기에 Third Person은 부재하며(absent) 실은 오로지 진정한 복수일(true plural) 뿐(Esposito, 2012: 107-108)이다.

4. the Third의 발견과 구성

그런가 하면 흔히 제3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소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관, 목격자, 이해관계인, 주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젠더법학회, 2021). 또한 좀 범주를 넓혀서 사회 일반, 제도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할 수 있다. 주체를 빈 장소에서 생겨나는 것, impersonal한 것으로 파악하는 랑시에르(Rancière)에 따르면(Lindroos-Hovinheimo, 2018: 72), the Third는 제3의 공통된 장(stage)을 가리킬 수도 있다. 랑시에르는, “해방의 논리에서는 무지한 스승과 해방된 수습생 사이에 늘 제3의 것이 있다. 제3의 것-한 권의 책 또는 전혀 다른 글 조각-은 양측 모두의 바깥에 있다. 쌍방은 그것(제3의 것)을 참조하여 학생이 본 것, 학생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 학생이 본 것에 대해 생각한 것을 공통으로 검증하게 된다”(랑시에르, 2016: 27)고 한다. 해방된 법관 역시 모든 각각의 수행에서 확증될 third thing을 요구하는데, 이 third thing은 법관과 당사자들 모두 공유하는 공통된 틀이다(Etxabe, 2018: 36).

한편, J. Benjamin(2017)은 함께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존중할 원칙을 the Third로 제시한다. the Third는 기존의 방식에 개입해 그를 정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넘어(beyond doer and done to) thirdness의 변환적 공간(transformational space)을 만들어내어 관계적 치

유(relational repair)를 가능케 한다. the Third는 moral하고 lawful한데, lawfulness는 의존할 만한 패턴과 쌍방의 일관된 조직성, 의도의 공유, 공동창출(co-creation)에서의 조화와 차이 등을 의미한다(Benjamin, 2017: 79). 상호인정과 존중, 배려, 신뢰, 기다림, 정의의 추구 등 일반적인 것이 the Third일 수도 있고,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 관련성 있는 이야기 등에서 도움을 추출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도 the Third이다. 무엇보다도 the Third는 당사자들과 관계인이 함께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과정이지만, 혼자서도 the Third는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the Third, 즉 어떤 소중한 것을 관계적으로 공동으로 세우고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이자 실천이다. 이는 누구나 발견하고 구성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깨끗하거나 혹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취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원한다면 the Third는 인간 사이에서 발원된다.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또 우리를 넘어 작용한다.

물론 the Third의 발견과 구성, 그 활용은 당사자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흔히 대립되는 각자의 입장에만 치중하기보다, the Third를 활용하고 존중한 예들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the Third가 운위되는 풍경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 실수나 잘못을 알게 되면 반성하고 달라지고자 노력하는 것,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당한 일에 처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다른 경우도 생각해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타자에게 부당성을 전가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 사람과 사물, 일 처리 모두를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행동만으로 삶 전체를 판단하지 않고자 하는 것, 상처가 자신이나 다른 존재를 장악하도록 하지 않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두 singularities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성과 공동체를 위해 움직여 용서하는 것(Bertolino, 2018: 135), 어떤 나쁜 일로 세상 전체를 절단내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의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 풀이가 쉽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눈에 띄는 처리 외에 삶 전체의 변화를 행하는 것, 다치더라도 세상에의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인간 비인간 모든 존재의 살아감 자체를 긍정하고 서로 배우는 것 등을 the Third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함께 함: 관계, 살핌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이 어우러지는 ‘코스모폴리틱스’(Stengers, 2010)를 산다. 그러니 놀이와 위험, 사랑, 예술, 폭력, 즉 세계, 인간 존재와 우주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생각하고(르페브르, 2013, 82-83) 공존재의 감각을 키우자. 특히 함께 있음/함은 나와 다른 이의 취약성과 세계에서의 관계성을 깨닫고, 다른 존재를 통제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주권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자에게로 기울여(Inclination)(Cavarero, 2016)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모습이 될 것이다. 저마다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서로 다르고 낯설어 관계는 서툴 수 있기에, 때로는 다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과 마주치기도 하면서 서로에 의해 허물어져(버틀러, 2015: 37) 새로운 만남으로 계속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 서로 넘쳐나는(excess) 선물(Bataille, 1991, 1993; 데리다)로 함께 할지니,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미 술한 쓸모없는 것들과 예컨대 ‘고양이 손을 빌리고’ 있을 것이며 이는 실로 엄청난 도움인데, 그에서 나아가 고양이에게 제대로 배운다면 고통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에 연연하지 않으면서(그레이, 2021) 더 괜찮은 the Third를 인간 사이에서만 아니라 이미 인간 사이 및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 발견하고 그 너머의 힘으로 구성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hird가 때로 인간들에 의해 팝진해지더라도 이 세계에 비인간과도 함께 함을 잊지 않는다면 the Third는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the Third도 만나거나 창출할 수 있다. 빼앗기면서도 전부를 주며 또 잃을 돌아내는 나무를 본받아 ‘생각할 수 없는 것’

(스톤, 2003)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자(한강, 2007).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거주할 뿐이고(브라이도티, 2015: 173), 이 세계는 누구의 것도 아니니 무언가 차지하기보다는 살다가 기꺼이 덧없이 스러지자. 다른 무수한 가능한 존재들로 또 달라질 세계는 언제나 미래이다(Irigaray, 2008: 110).

<참고문헌>

- 김은주(2019),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 김재희(2017), 『시몽동의 기술철학』, 아카넷.
-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 한강(2007), 『채식주의자』, 창비.
- 한국젠더법학회(2021), 「춘계학술대회(2021.5.1.) 자료집: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제3자’」.
- 그레이, 존(2021), 『고양이 철학: 고양이와 삶의 의미』, 김희연 역, 이학사.
- 라투르, 브뤼노(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역, 이음.
- 랑시에르, 자크(2016), 『해방된 관객: 지적 해방과 관객에 관한 물음』, 현실문화.
- 르페브르, 앙리(2013),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역, 갈무리.
- 버틀러, 주디스(2015),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지성사.
- 버틀러, 주디스(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역, 창비.
- 베넷, 제인(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현실문화.
- 베이트슨, 그레고리(2006), 『마음의 생태학』, 박대식 역, 책세상.
- 브라이도티, 로지(2015),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 브라이언트, 레비 R.(2021), 『객체들의 민주주의』, 김효진 역, 갈무리.
- 브레히트, 베르톨트(2015), <영어 살해범 마리 파라에 대하여>, 한국브레히트학회(편), 『브레히트 선집 5』, 연극과인간.
- 사르트르, 장 폴(2007), 『지식인을 위한 변명』, 박정태 역, 이학사.
- 스톤, 크리스토퍼 D.(2003), 『법정에 선 나무들』, 허범 역, 아르케.
- 시몽동, 질베르(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역, 그린비.
- 이리가레, 루스·마이클 마더(2020), 『식물의 사유: 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 이명호·김지은 역, 알렙.
- 자케, 샹탈(2021), 『몸: 하나이고 여럿인 세계에 관하여』, 정지은·김종갑 역, 그린비.
- 카프카, 프란츠(1997), 「가장의 근심」, 『카프카 전집 1: 단편전집』, 이주동 역, 솔.
- 푸코, 미셸(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토르망 역, 난장.
- 푸코, 미셸(2012),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 하먼, 그레이엄(2021), 『브뤼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 김효진 역, 갈무리.
- 해러웨이, 도나(2019), 『해러웨이 선언문 -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황희선 역, 책세상.
- 혁슬리, 올더스(2013), 「연애대위법」, 『멋진 신세계/연애대위법』, 이경직 역, 동서문화사.

- Bataille, George(1991, 1993), *The Accursed Share*, Zone Books.
- Benjamin, Jessica(2017), *Beyond Doer and Done to: Recognition Theory, Intersubjectivity and the Third*, Routledge.
- Bertolino, Elisabetta R.(2018), *Adriana Cavarero: Resistance and the Voice of Law*, Routledge.
- Cavarero, Adriana(2016), *Inclinations: A Critique of Rectitude*, Stanford University Press.
- Esposito, Roberto(2012), *Third Person: Politics of life and philosophy of the impersonal*, Polity Press.
- Esposito, Roberto(2015), *Persons and Things: From the Body's Point of View*, Polity Press.
- Etxabe, Julen(2018), "Jacques Rancière and the dramaturgy of law," Mónica López Lerma and Julen Etxabe(eds.), *Rancière and Law*, Routledge.
- Gehlen, Arnold(1980), *Man in the Age of Techn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osz, Elizabeth(2018), *The Incorporeal: Ontology, Ethics, and the Limits of Materi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Irigaray, Lucy(2008), *Sharing the World: From Intimate to Global Relations*, Continuum Intl Pub Group.
- Kauffman, Vincent(2002), "Angels of Purity," Tom McDonough(ed.), *Guy Debord and 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 Texts and Documents*, The MIT Press.
- Lindroos-Hovinheimo, Susanna(2018), "Rancière and the legal subject: Coming to terms with non-existence," Mónica López Lerma and Julen Etxabe(eds.), *Rancière and Law*, Routledge.
- McWhorter, Ladelle(1999), *Bodies and Pleasures: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Sexual Normaliz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tengers, Isabelle(2010), *Cosmo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eil, Simone(1986), "Human Personality," Sian Miles(ed.), *Simone Weil: An Anthology*, Grove Press.
- Wolfe, Cary(2013), *Before the Law: Humans and other Animals in a Biopolitical Frame*, The University of Chicago.

디지털 매체와 페미니즘 윤리

사회: 황정미(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백경흔(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취약성의 윤리와 페미니즘: 기저질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향수(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강사)

게임화된 액티비즘: 대중 페미니즘의 동력

정의솔(요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토론: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¹⁾

백경훈(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

1. 문제제기

한국은 근대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성 생계부양 모델을 대체할 성평등한 젠더질서의 전환 과정에 있다. 젠더 질서 조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동돌봄 제도이다. 여성주의 연구에서 성평등이 아동돌봄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평등 목표를 위해 아동돌봄 제도의 주요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의 관계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여성과 아동의 이해관계는 제로섬 관계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동 관점에서 일하는 엄마의 장시간 보육은 아동안녕을 저해하고, 여성 관점에서 가부장적 집중적 모성은 나쁜 엄마 죄책감과 불쌍한 아동 낙인(스카, 1993)을 통해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한다. 여성과 아동이 모두 행복한 아동돌봄 제도는 불가능할까? 유아교육학, 아동학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주의 연구는 성평등을 주요 가치로 하면서 여성과 가족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아동돌봄 제도에서 성평등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성과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아동돌봄 제도 이면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질문 없이 품질 개선을 추구해오면서 정작 아동돌봄 제도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동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가 전제하는 가치에 대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검토를 돌봄윤리 관점에서 시도한다. 특히, 가부장제에서 2차 시민이었던 여성 문제에서 여성의 돌봄 수혜자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왔던 아동의 관점으로까지 확장해 더 윤리적이고 더 민주적인 돌봄은 어떻게 가능할까의 물음을 아동의 시민됨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문제제기: 미비하고 결핍된 아동돌봄 제도

돌봄윤리 관점의 아동돌봄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아동돌봄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 체계와 추진근거가 미비하다. 미취학 아동은 1991년 영유아법 입법, 2004년 공보육 이념 도입, 2013년 전계층 무상보육이 도입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후가 여성 경력단절 위기의 중요한 시기로 주목받으면서 2004년 초등돌봄교실이 시작되었고, 2013년 계기로 양적 확대가 가속화되었다(정영

1)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3017)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구성한 것입니다. 인용은 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 2019).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근거 법령 없이 운영된다.

둘째, 행정체계가 분절화되어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유사한 정책을 중복 제공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미취학 아동은 보육, 유아교육,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초등돌봄(정영모, 2019)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화되어 있다. 법·제도가 분절화되면서 각 아동돌봄 교사의 자격조건도 다르게 규정된다.

셋째, 아동돌봄 실천이 보육, 교육, 돌봄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실천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 산업화 시기 탁아소나 공부방 등 빈곤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루어졌던 실천이 2000년대 이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되면서 여성 고용지원 방안으로 강화되었다. 미취학 아동은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초등학생은 교육부 방과후/초등돌봄과 보건복지부 다함께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이원화된 트랙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아동돌봄 교사 처우와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최효미 외, 2019). 2018년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168만 9천원과 제수당 44만 1천원을 합해 213만원이다. 초등돌봄은 2020년 현재 돌봄교실 전담사 10명 중 1.7명만 전일제이며, 시간제 채용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한겨레신문, 2020. 12. 14).

3. 아동돌봄 제도를 둘러싼 여성- 아동 문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의 필요성

현재 아동돌봄 제도 현황을 볼 때 왜 여성-아동 문제에 집중하고, 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할까? 가족 임금 붕괴 후 남성 생계부양 모델을 대체하는 성평등 대안은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다(Fraser, 1994). 남성 생계부양 모델의 가장 핵심 문제는 여성-아동을 이상적 돌봄 단위로 하는 가부장제의 돌봄 전략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전일제 모성 통념을 기반으로 여성-아동을 최상의 돌봄 단위로 묶어 공짜로 돌봄을 해결해왔다(Mies, 2014). 젠더질서 조정은 여성-아동 문제를 포함하며, 사적 영역의 여성-아동 관계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젠더/세대/인종/계층의 다양한 부정의가 양산된다.

Rosen and Twamley(2018)는 여성-아동 문제에 대해 여성주의자와 아동 권리 옹호자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아동학과 여성학은 서로 대화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사적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여성주의가 아동 문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여성주의가 아동기 연구에서 배우려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여성주의는 여성을 자연화된 존재로 보는 것을 비판했지만, 아동은 생물학적 존재로 연령 단계의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아동과 아동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동기 이론가들은 여성주의는 성인 중심 기획이며, 그 결과 아동을 사회에서 비가시화시키고, 사회화 대상으로 협소하게 이해했다고 비판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아동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아동돌봄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도 크다. 본 연구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질을 개선하는 것을 뛰어넘어 제도가 전제하는 가치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검토를 시도한다. Dahlberg et al.(2007)는 질은 중립적 개념이 아니며, 이미 전문가 집단에 의해 무엇이 좋은 돌봄인가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근대에 구성된 좋은 질의 기준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면, 정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아동돌봄 제도와 관련된 성불평등과 부정의는 전혀 검토될 수 없다. 현재 필요한 작업은 중립적으로 보이는 표준화된 양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통해 과연 어떤 아동돌봄이 좋은 돌봄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아동기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며 아동기 의미와 아동의 상은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나타낸다(Moss and Petrie, 2002). 그리고, ‘아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관 의미, 교사 역할, 교사 전문성도 변화시킨다.

한국의 미비하고 결핍된 아동돌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성평등 담론에서 빠져 있었던 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제도 이면의 전제에 대해 윤리적, 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4.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아동돌봄 제도의 쟁점: 아동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 논의에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동 문제이고, 그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검토이다. 아동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규범적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백경훈 외, 2017; 송다영 외, 2017; 장수정, 2020). 그러나, 여성-아동, 아동 문제에 집중한 돌봄윤리 검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트론토(2014)의 돌봄민주주의는 개별적 실천에서 제도화의 구조적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분석틀로서 의미가 있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을 배제한 기존의 민주주의 논의를 민주주의 결핍의 문제로 보고, 돌봄을 중심 가치로 ‘함께 돌봄’의 원칙 아래 자유, 평등, 정의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한다. 여기서는 아동의 시민됨을 기반으로 돌봄민주주의 돌봄윤리 관점에서 아동돌봄 제도를 검토한다.

(1) 시민 여성에서 시민 아동으로의 관점 확장

트론토(2014)는 민주시민은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돌봄윤리 관점에서 돌봄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은 시민이다. 돌봄윤리에서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돌봄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필요와 권리 담론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더 민주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아동 관점은 인식론적 강점을 제공한다.

트론토는 ‘함께 돌봄’을 정치적 관심사로 보고, 책임할당의 정치적 과정 참여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두 가지 기제에 주의한다. 첫째, 공사구분이나 인종·민족적 위계를 가정해 독립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해 토론을 제한하고, 배제를 통해 특정 사람 관점에서만 보는 문제이다. 둘째, 특권적 무책임, 무임승차의 기제다. 여성주의는 공사구분으로 인한 돌봄책임의 성별화와 정치적 과정에서 여성 배제와 남성의 특권적 무책임을 비판한다. 그런데,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아동도 여성의 돌봄 수혜자로 비정치화된 상태로 공적 토론의 장에서 배제되어왔다. 더 윤리적이고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 돌봄 연구는 교차성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Tronto, 2021). 여성주의는 성 불평등에서 멈추지 말고, 여성 내부 차이, 더 나아가 여성의 돌봄 대상이라는 통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아동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

트론토(2014)는 불평등한 돌봄이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는지 논의한다. 사회에서 영유아, 허약한 사람, 너무 노쇠한 사람 등을 볼 때 인간은 각자 역량에서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의존적’이거나 온전히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시민에서 배제했다. 고대에는 노예와 여성이 배제 대상이었고, 근대에 와서야 무산자와 노동계급 남성, 나중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기존의 시민권 논의는 아동에게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Lewis, 2006). 그러나, 트론토(2014)는 돌봄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권력구조에 따라 어느 누구도 비시민으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동은 여성의 돌봄 대상으로 사적 존재로 머물러 왔지만, ‘아동’의 시민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은 민주시민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트론토(2014: 286-289)는 돌봄 수혜자의 필요(needs)와 권리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가지 돌봄 권리를 언급한다. 첫째 권리는 모든 사람이 평생 충분한 돌봄 받을 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 받을 권리’이다. 트론토는

이 권리가 마셜(T.H. Marshall, 1981)이 주장한 고전적 사회권(social rights)과 유사해 보이지만, 돌봄은 시민에게 주어지거나 보유할 수 있는 실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본다. 돌봄을 분배해야 하는 것이나 우리의 돌봄 받을 자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돌봄을 ‘함께 돌봄’에 따라 시민이 항상 함께 하는 활동으로 본다.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도 사회적 과정이면서,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의 돌봄은 아동 돌봄이 국가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서(Moss and Petrie, 2002)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돌봄 권리’이다. 트론토는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에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돌봄 권리는 좋은 돌봄에 대한 사람들 견해가 다양해서 더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돌봄 모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돌봄 권리’만큼이나 ‘돌보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좋다고 간주된 어머니 가족 돌봄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돌봄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동안 가부장제에서 이상적 돌봄 제공자로 지목되어 온 어머니 가족이 사회적 억압이나 지배에서 벗어나 돌보지 않을 권리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입장에서 어머니 가족 돌봄만 이상화하면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셋째, 모든 사람이 사회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공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하다. 트론토는 민주적 과정에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경청된다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를 강조한다. 아동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의 공식적 참여 기회뿐 아니라 실질적 수혜자인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지 논의가 중요해진다. 트론토는 기존 돌봄 논의가 돌봄 제공자 관점에서 시작됨을 비판한다. 그리고 돌봄 수혜자가 필수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이 돌봄을 준비하고 충족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봄 수혜자로 보는 관점을 정상화할 때 돌봄 수혜자를 타자로 간주하지 않고 더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돌봄을 생각하게 된다. 연령 체계에서 출생 후 존재론적으로 누군가 돌봄제공자의 필수돌봄에 의존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도 아동돌봄 제도와 관련해 민주적 과정에서 목소리가 중요하게 경청되어야 한다.

영유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정에 참여시키는 이슈는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 38개국 가운데 7개 국가에서 부모뿐 아니라 3세 미만 아동에게 평가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 129-130). 그리고, 부모와 더불어 또 다른 돌봄 제공자인 교사 목소리가 공적 과정에 얼마나 경청되는가의 쟁점도 중요하다. 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늘 지적되어왔고, 최근 보육교사의 노동자 인권에 대한 논의(최효미 외, 2019)나 보육교사의 건강권 관련 논의(임진석 외, 2020; 백경훈·정진주, 2021)가 아동돌봄 제도 안에서 교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한다. 교사 노조 조직화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 강화 등의 논의도 아동돌봄 제도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논의이다.

(2) 아동의 시민성에 기반한 이상적 돌봄규범의 새판짜기

돌봄 민주주의 돌봄윤리 관점에서 아동의 시민됨과 아동돌봄 제도의 민주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일제 모성 통념이다. 여성주의 사회정책 연구는 돌봄의 탈가족화/탈성별화와 공식/비공식화를 분석하지만, 윤리적, 철학적 의미는 질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이 일하냐 돌보냐는 개인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어려움의 문제다(Kremer, 2007). 어떤 돌봄(공식/비공식)이 선호되느냐는 정책뿐 아니라 모성과 아동기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Pfau-Effinger, 2006). Kremer(2007)은 다양한 돌봄 이상과 여성 시민권 관계를 분석한다. 전일제 모성과 전일제 모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체 엄마, 세대간 돌봄 등의 이상이 있고, 전일제 모성 통념을 대체하는 전문적 돌봄과 부모 공유의 이상을 비교 분석한다. 다양한 제도화의 선택지를 볼 때 아동돌봄이 충분히 민주적인가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돌봄민주주의 논의를 기본으로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가. 양자관계 대신 삼각화

가부장제의 이상적 돌봄 규범인 엄마-아동 양자관계에 기반한 전일제 모성은 민주적일까? 트론토(2014)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양자관계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로 대변되는 돌봄 이미지는 부정확하고,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돌봄에는 복합적 사회관계가 개입되며, 양자관계의 전일제 모성이 이상화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본다. 트론토는 아동돌봄에 복합적 사회관계가 개입된다는 점을 페미니스트 영장류 학자 하디(Hrdy)의 ‘알로마더(allomothers)’, 키테이(Kittay)의 둘라(doula)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전일제 모성은 아동을 생물학적 엄마와의 양자 관계에 종속시켜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트론토는 민주적 돌봄은 양자관계로 돌봄을 보는 논리에 도전하고, 위계적 관계를 깰 필요를 지적하고, ‘삼각화’를 제안한다(286). Krermer(2007)가 제시한 전일제 모성의 대안이 되는 대체 엄마(아이돌보미 등)나 세대간 돌봄(조부모 돌봄) 이상도 엄마-아동 양자관계의 이상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한편, 전일제 모성 통념의 또 다른 문제는 냉정한 무관심이다.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회심리학적 기제이다. 수혜자가 될 시민이 과연 지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때 냉정한 무관심이 작동한다(Tronto, 2014).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를 오래 맡기고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 고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이를 맡기고 자기 일을 하는 무책임한 엄마라고 본다. 그래서 보육기관에서 오후 3-4시 조기 하원 규범이 생기고 일하는 엄마들은 고용의 제약을 경험한다(백경훈, 2017; 2021). 냉정한 무관심은 모든 여성이 좋은 돌봄을 위해 연대하지 못하게 위축시키고 전일제 모성 변화는 지연된다.

덧붙여서, 돌봄관계의 삼각화를 돌봄 질에 대한 평가 지표에도 반영할 수 있다. 교사당 아동 수가 아동이 얼마나 충분히 집중적 돌봄을 받는지 중요하게 본다면 향후 아동-교사, 아동-아동 관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평가지표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이 밖에 ‘만3세까지 엄마가’ 혹은 장시간 보육 기피로 인한 보육 서비스 이용 제약에 대한 대안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나. ‘엄마 일’이라는 이상적 돌봄 원형의 극복

전일제 모성 이상에서 ‘엄마 일’은 돌봄 원형이 된다. 전일제 모성은 다양한 돌봄 실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돌봄 실천을 엄마의 일로 제한시킨다. 돌봄윤리 관점에서 성별화된 언어, 가정, 논리 구조가 돌봄노동을 특징 짓는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점이 문제적이다(Tronto, 2014: 57).

전일제 모성 통념은 돌봄을 일반적으로 여성 일로 간주한다. 이에 여성은 배당된 돌봄책임을 떠맡도록, 남성은 돌봄책임을 떠맡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여성성/남성성이 구성된다(146-147). 아동돌봄 제도화에서 엄마의 일이 돌봄 원형이 되면, 대리 엄마 역할이 요구되고, 아동돌봄 부문은 여성화된 자리로 남고, 생물학적 엄마의 역할, 가정과 같은 장소 여성성과 돌봄의 관계가 교사 역할, 실천, 가치 등의 아동돌봄 제도화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전일제 모성은 아동돌봄 실천의 표준을 ‘엄마 일’로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집에서 엄마가 하던 일을 대리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낮은 자격조건, 낮은 처우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륙 유럽 중심의 소설 페다고지 담론(Bacchi, 1999; Dahlberg et al., 2007; Kremer, 2007; Moss and Petri, 2002)은 새로운 대안이 된다. 소설 페다고지 담론은 아동돌봄을 시민인 모든 아동을 위한 문화·사회·경제적 중요성 가진 제도로 정의하고, ‘엄마의 일’을 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 전문적 모델은 전일제 모성보다 더 좋은 돌봄을 주면서 전일제 모성에 강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엄마 죄책감도 최소화한다(Kremer, 2007). 향후 전일제 모성을 넘어 제3의 실천에 대한 상상이 공적 토론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 위계적 분절화를 뛰어넘어 아동의 요구로부터

엄마 일의 돌봄 원형은 돌봄 실천의 분절화와 위계화로 이어진다. 돌봄이 여성성과 연계되고, 남성성이 헤게모니를 가지는 상황에서 엄마 일을 더 닦은 것, 더 여성성과 연계되는 것이 분리되어 저평가되고, 위계적 분절화로 이어진다. 유·보 이원화가 대표적이다. 교육과 보육으로 분절화되고, 보육은 엄마 일을 더 닦았다는 점에서 자격조건, 처우, 전문성이 더 낮게 평가된다(윤연숙, 2004). 엄마 일을 더 닦은 실천이 위계적으로 저평가되고, 교육과 구분되는 현상은 돌봄윤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까? 트론토에 의하면 위계적 분절화는 단지 선호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깊숙하게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와 연계된 문제이다. 아동을 위한 돌봄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사 전문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윤리적, 정치적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사회에서 아동과 아동기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돌봄 실천의 위계적 분절화는 아동에 대해 전체적(holistic)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 제도에 아동이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수단으로 동원되면서 아동에 대한 실천이 분절화되고, 위계화되는 것은 아닐까.

트론토(2014, 127)는 실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천 이면의 요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필요를 해석하는 정치(Fraser, 1989)’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책임 부담에서 가장 먼저 할 결정은 아동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그 질문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회의 테이블에 앉을까 결정하는 일이다. 유·보 이원화는 근대 초기에 이루어진 과거 결정이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기 근대로 변화했지만, 빈곤계층 탁아와 중산층 이상 유아교육의 이원화는 유지된다. 변화된 환경에서 아동이 갖는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은 생략된 채 근대적 정책 틀이 유지되는 것은 아동 관점에서 비민주적이다.

라. 모든 아동을 위한 제도

아동을 위한 돌봄 실천을 결정하기 위해 누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야 할까?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앉아야 한다. 부모(엄마), 교사, 아동이 자유롭게, 평등한 지위에서, 정의롭게 민주적 돌봄을 논의할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모든 아동과 모든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자녀 수, 모의 취업, 부모 소득, 결혼 지위 등의 조건에 의해 우선적 접근권이 특정 집단에 주어진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의지해 돌봄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013년 전일제 무상보육에서 2016년 맞춤형 보육으로 그리고 2020년 3월 연장보육에서 모의 취업지위가 장시간 돌봄 이용의 조건이 되었다. 예산 낭비, 장시간 노동규범 등 한계상황에서 모의 취업지위에 따른 우선적 접근권 부여가 효율적이라고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돌봄윤리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아동을 위한 민주적 제도’가 아니다. 부모 조건에 따라 특정 집단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무임승차하면서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는 훼손된다.

분절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돌봄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 결정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분절화를 통해 계층적 돌봄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검토하면 된다. 한국의 장시간 보육 이탈 경향은 계층화되어 있다(백경훈, 2017; 2021). 이는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적

돌봄의 악순환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다. 트론토는 사람이 자기 삶에만 얼마나 책임 있는지 강조하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것에 무지한 문화에서 특권의식을 깨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한국의 중산층 이상의 강한 사교육열, 자기 자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 돌봄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문화 등은 모든 아동을 위한 더 좋은 돌봄을 위한 토론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을 위한 돌봄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아동 요구로부터 출발되는 아동돌봄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

5. 결론

한국은 후기 근대적 맥락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 근대적 전제를 돌봄윤리 관점에서 비판하고, 아동을 시민으로 하는 성평등한 제도의 방향을 탐색해왔다. 트론토(2014)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많이 나눌수록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더 쉽게 다른 사람을 믿게 될 것이고, 신뢰 관점에서 세상은 점점 더 개방되면서,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로워진다고 본다. 내 아이가 잘 돌보아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든 아동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 논의하는 다양한 민주적 토론이 필요한 때이다. 돌봄 방식의 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아동의 목소리,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백경흔(2017), “중산층의 장시간 보육 이탈로 인한 성평등 지연: 학습중심 모성과 아동기의 형성”, 한국여성학, 33(1), 157-200쪽.
- 백경흔(2021), “근적근적한 바닥의 덫: 조기하원 규범형성과 보육서비스 이용제약”, 비판사회정책, (70), 207-242쪽.
- 백경흔·송다영·장수정(2018),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34(2), 33-70쪽.
- 송다영·장수정·백경흔(2017), “‘민주적 돌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0(1), 121-152쪽.
- 스카, 샌드라(1993[1992]),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현은자 옮김, 서울: 서원. (Scarr, Sandra(1984), Mother care, other care, Basic Books.)
- 장수정(2020),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1), 125-152쪽.
- 정영모(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252), 13-18쪽.
- 최효미·박은정·이혜민(2019),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트론토, 조안(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나상원(역), 서울: 박영사(Tronto, Joan, Caring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19 Edition.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Fraser, N.(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pp. 591-618.

Gunilla Dahlberg, Peter Moss and Alan Pence(2007), 「포스트 모던 유아교육_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 김희연, 신옥순, 염지숙, 유혜령, 정선아 역, 창지사. 1999.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 Taylor & Francis Group.

Kremer, Monique(2007), How Welfare States Care, Amsterdam University Press

Lewis, Jane(2006), "Introduction: children in the context of changing families and welfare states", In Children, Changing Families and Welfare States, edited by Jane Leiw, Edward Elgar, 1-24.

Moss, Peter and Petrie, Pat(2002), From Children's Services to Children's Spaces, New York: Routledge

Pfau-Effinger, Birgit(2006), "7. Cultures of childhood and the relationship of care and employment in European welfare states", in Jane Lewis(ed), Children, Changing Families and Welfare States, Edward Elgar. 137-153.

Pfau-Effinger, Birgit(2011), "Differences in women's employment patterns and family policies: eastern and western Germany," Community, Work and Family, 14(2), pp. 217-232.

Rosen, Rachel and Twamley, Katherine(2018), "Intorudction: The Woman-Child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Childhood, edited by Rosen, Rachel and Twamley, Katherine, London: UCL Press, 1-20.

Tronto, Joan C.(2021), "Caring Democracy: How Should Concepts Travel?" in Urban, Petr and Ward, Lizzie(ed), Care Ethics,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State, Cham: Palgrave Macmillan

취약성의 윤리와 페미니즘 : 기저질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¹⁾

김향수(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강사,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본 발표는 COVID-19 팬데믹 동안 ‘기저질환자’라 호명되는 아픈 이들의 경험을 통해, 페미니즘 장애학에서 주장하는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해 함께 사유하고자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COVID-19는 아픈 이들 뿐 아니라 누구나 전염병으로 인해 신체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왔다. K-방역, 방역 정책은 오로지 의료적 보건적 담론 안에 머무를 뿐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 즉 주변화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본 발표는 지난 2020년 만성질환을 지닌 청년들의 일생활경험 연구 면접에서 이야기된 COVID-19시기 이들의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에 관한 경험과 사유를 페미니즘 장애학 논의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들의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어떻게 교차하며 경험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탈각되는지 살펴 보며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사유하고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문제 제기

○ 사회가 건강에 대한 렌즈를 제공하듯, 건강이나 질병 역시 사회에 대한 렌즈를 제공함. 전염병의 사회학 연구의 포문을 연 Strong은 실존적 위협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함.

“공포, 공황, 낙인, 도덕성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특징짓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의 물결 위에서... 사회는 적어도 한 동안은 누구의 즉각적인 통제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감정적 매력에 사로잡혀 있다. 게다가 이 이상한 상태는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공공질서에 그러한 즉각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사회정치적 대응의 규모, 시기, 형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rong, 1990: 249)”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은 사회 질서의 가시적 특징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불안, 불

1) 이 발표문은 2020년도 사회건강연구소의 “만성질환을 지닌 청년들의 일-생활 균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COVID-19 팬데믹 경험에 대한 면접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집필 중인 원고이기에 재인용을 금함.

확실성, 그리고 위기의 근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계, 상호작용, 일 상에서 당연시된 가정들이 드러나며 불확실해지고 의심스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함. 그렇기에 일군의 의료인류학자들은 전염병의 인류학을 제안하며 전염병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며 관찰 가능한 사회 질서의 뿌리에 대한 질문들이 드러나는 “transparency의 시기(Perlstadt, Dingwall, 2000)”로부터 배울 기회라 명명함.

새로운 위협에 대해 일상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적 대응일 수도 있지만, 확실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지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함. 이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실천과 정책에 기여하는 핵심이며, 생물학적 환경이 변화할 때 사회적 배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임.

○ COVID-19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됨. 지난 K-방역이라는 명명은 전염병 확산과 치료라는 방역과 보건의료정책을 넘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과정은 국가의 위기대응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발전’이나 ‘성공’을 나타내기도 함. 재난 정책을 예방과 복원 전략으로 살펴본다면, 현재의 재난 정책은 방역정책 즉 예방과 치료라는 의과학적 실천들, 보건의료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복원 전략은 재난지원금등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둠. 특히 K-방역이라는 담론은 재난 경험을 이야기함에 의료화 혹은 산업화된 대응을 넘어 팬데믹 경험 속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제문제들, 특히 취약한 이들의 경험은 코로나라는 재난 정책이 아닌 것으로 탈각시킴.

○ 재난 사회학 분야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재난 지역에서 재난 대응,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재난 대비, 위험 커뮤니케이션, 경제 회복, 공공 행정 및 취약성 등 연구를 수행하며 젠더화된 재난 경험에 주목할 것을 주장함. 특히 물성적 재난 대응 정책은 여성의 경험과 욕구를 어머니로만 한정하고, 여성의 돌봄 역할을 확장하여 공동체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소진하게 함을 드러냄. 특히, 재난 시기 여성들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 위험의 증가를 경험하며, 스트레스 뿐 아니라 가족 돌봄 역할로 인해 부상과 사망 위험에 더 노출된 것으로 보고됨. 이러한 재난 경험과 정책은 수십년간 성평등의 성과를 훼손시키며 전통적 젠더 관계를 재강화함(Bolin et als, 1998; Cupples, 2007; Enarson et als, 2018; Lightfoot et als, 2020).

○ 페미니스트 재난 연구는 젠더가 재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특정 종류의 강점과 취약성을 창출하는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경계하여야 함. 쓰나미라는 대형 재난이 기존의 젠더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난 이전의 노동자, 농민, 정치운동가, 한부모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개인의 생애 경험과 교차하며 상호작용함(Buranakul et als, 2005). 또한 DWH 기름유출 뿐 아니라 허리케인 미치 재난 대응과 지원 정책은 특별한 장벽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여성들의 회복력 복원력이 낮았고 특히 한부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저학력 여성과 이주민 남성의 배제(Lightfoot et al, 2020). 이들 연구는 성인지적 재난 대응 정책의 필요성에서 나아가 재난 경험과 회복은 개인의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언어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냄. 재난에서 젠더 연구는 젠더 뿐 아니라 “빈곤이나 신체적 도전,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외, 불안정한 주거, 언어 장벽, 폭력 또는 목소리 부족 등, 또는 이러한 서로 얽혀 있는 요소(Elaine, 2018: 4)”라는 상호교차하는 취약성, 나아가 재난 이후 개인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경험과 사유, 적절한 지원에 주목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에서 “기저질환을 지닌 청년²⁾”들이 자

2) 연구참여자들은 주40시간 이상 일하기 체력적으로 어려운 만성질환을 지닌 20-30대 청년이며, 공개 모집 하였음. 심층면접은 2020년 10월 한달간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됨.

신의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페미니즘 윤리와 페미니즘 장애학에서 취약성, 의존, 돌봄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함. 한국에서 COVID-19 팬데믹은 “기저질환자”는 보건의료전문가만의 용어가 아닌 대중적 용어로 만듦. 이는 2020년 4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환자가 200명이 되었고, 이 중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는 1명 뿐이라 보도에서 시작됨. 당시 전체 확진자 1만382명 중 200명이 사망하였기에 치명률은 1.93%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메디게이트, 2020.4.8.) 기저질환자는 노인과 더불어 COVID-19에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대두됨. 이는 질병관리청이 매일 실시하는 정례 브리핑의 마지막 멘트(“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 및 기저질환자분들께서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에서 확인됨. 이들의 경험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명확히 하여, 특정한 취약성에 개인, 사회 및 제도적 대응이 가능한지 모색하고자 함.

2. 이론적 논의

○ 자유주의 사상에서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이상화된 개념으로 제시되었고, 페미니스트들은 인간 존재의 조건인 타인에 대한 불가피한 의존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함. 특히 사회적 관습이 취약성에 대응하는 책임을 “자연화”하여 여성에게 할당해 왔음을 비판해 왔음 (Walker, 1998: Mackenzie 2014 재인용).

○ 페미니스트 장애학자들은 페미니즘 논의 안에서 돌봄은 주로 비장애 여성이 비장애 아동의 돌봄을 중심으로 혹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비판함. 이러한 분석은 돌봄을 받는 사람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수혜자”로 가정한다는 점에 비판함.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문제로 대두되며 의존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는 간과되곤 함. 독립성 역시 한 사회에서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 즉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됨. (예, ‘독립적인 사람’ 정의)

○ 최근 몇년간, 정치적, 철학적, 이론적, 그리고 비판적 이론가들은 인간 존재와 인간 체현이라는 면으로 취약성을 포용하기 시작. 인간의 토대론적 취약성(ontological vulnerability)에서 나아가

<표1,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진단명(의사진단 기준)	가구원
01	여	36	대학원졸	식도염, 비염, 자가면역성뇌염(2017), 피지낭종(2018), 허리디스크(2020)	3 (배우자, 자녀)
02	남	25	대학재학	크론병(2014)	3 (부모)
03	여	34	대졸	유방암(2017)	3 (부모)
04	여	25	대졸	건선(2017)	1
05	남	31	대학(방통 대)휴학	2017년 발병, 소뇌염, 중추기원현기증(2019) 수면무호흡(2020)	2 (모)
06	여	26	대학원 재학	만성위염, 허리디스크(2015), 퇴행성관절염(2019)	1
07	남	26	고졸	심장병(선천성)	1
08	여	29	대학(방통 대)휴학	소아갑상선, 시신경위축증, 쇼그렘증후군(1995), 베체트병(2015)	1
09	여	35	대학원 졸	B형 간염 (주산기감염)	3(배우자, 자녀)
10	여	35	대졸	크론병 (2006)	1
11	여	32	대학원졸	비염(1997), 위무력증/ 우울증/허리디스크(2013), 갑상선결절(2020)	4 (부모, 동생)
12	남	30	대학원졸	허리디스크(2019), 과민성대장질환(2020), 우울증(조울증)(2017)	1

버틀러(2004)는 체현된 존재로서 신체적 취약성corporeal vulnerability 제시.

○ 의존성, 취약성 및 돌봄의 개념은 페미니스트 윤리의 핵심. 이 개념들 간의 차이에 주목해야 함. 취약성은 “필요의 충족과 능력과 자율성의 개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구체화, 사회적, 관계적 존재의 배열(Dodds, 2014. 182)”으로, 의존성은 “특정한 사람의 지원,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성(ibid)”이며 취약성의 한 형태로 정의함.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항상 취약하지만, 항상 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중략) 우리의 나이, 성별, 건강, 능력, 탄력성,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우리가 취약성을 경험하는 환경과 방법을 통해 의존성(2014: 183)”으로 형성됨.

○ 취약성과 자율성을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자율적 주체와 취약한 주체가 대조된다는 문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취약하지만 자율적 행위자라면, 인간 취약성 인식에 전제된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제기됨.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이들의 보호 뿐 아니라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들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취약성을 사유하고 우리의 의무를 고찰하여야 함(Mackenzie et als, 2014: 16).

○ 취약성과 의존성 사이 구분, 취약성 책임의 사회적 할당과 관련된 복잡성을 조사하기 위해, 일군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취약성의 근원에 따라 취약성을 분류함. 서로 다른 취약성 원인(내재적, 상황적 그리고 병리학적)와 두 가지 다른 취약성 상태(즉, 기질적dispositional과 일시적occurrent)의 분류법을 제안. 이 분류법은 서로 다른 취약성의 근원과 상태를 식별함으로써 인간 조건에 내재된 온톨로지 취약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맥락적 취약성 형태를 식별하게 함(Rogers et als, 2012: Mackenzie et als, 2014: 7-9 재인용).

○ “오직 신체의 의존성, 불안정성의 조건들, 수행성의 가능성들을 긍정하는 상호의존성 개념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만한 삶(livable life)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치적 세계를 사유해 낼 수 있다(Butler, 2015[2020]: 297-8)

3. 분석

○ COVID-19에 기저질환이라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은 신체적 취약성을 재인식하게 됨. 이는 전염병이라는 위험 인식 그리고 이에 따라 일상과 사회활동은 재조직됨.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제가 중증질환, 만성질환이 있으니까 나는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계속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알려진. 영구적인 손상이 저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저한테 있는 증상들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아주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지금보다 면역력이 낮아지고 더 건강이 악화가 될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4)

질환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이고 저희는 약물로서 면역을 억제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백혈구 수치도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려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저희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걸리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조심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직접적인 관련을 지어서 (의료 정보를) 들은 얘기는 없고요. 그냥 면역저하자들은 독감주사 더 빨리 권장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참여자10)

기저질환이라는 신체적 취약성은 내재적 취약성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실천을 둘러싼

보건의료정책의 대응, 일터의 환경, 경제적 자원 등 상황적 취약성이 자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음을 인식. 또한 이는 이들의 건강관리 실천에 영향을 줌.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질환이라는 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원과 제도와 상호교차하며 형성됨.

검색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이 코로나 사망자나 확진자 중에서 많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또 검색해보니까 전문의들은 그 심장, 심혈관 질환과 코로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 도 크론병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면역억제제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정작 그 뭐야 질병관리본부일 때 거기서 나왔을 때는 자가면역질환이나 면역억제제 이야기는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NHS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면역억제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중략) 왜 나한테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프면 아무래도 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를 찾기 힘든 것도 너무 분명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좀 뭔가 기저질환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조심해야 한다. 이리키보다는 뭔가 좀 더 개별 질병에 대해서 전문의들이랑 질병관리청이든 보건복지부가 협업을 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하는지, 평소에 드시던 약은 더 드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적어도 병원들이랑 보건소에는 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받아보지를 못해서 좀 그런 점이 코로나19에서 기저질환과 관련된 대응 중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방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참여자2)

제가 면역력이 약해지며 비염과 호흡기 질환들이 막 엄청 심해졌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드니까 마스크를 자주 내리게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고. 저도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하면 그런데, 저도 다시 올리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참여자5)

저희 연구실 있는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 제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코로나에 걸릴 경우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저희 관이 폐쇄되고 일주일 동안 방역작업해야 하는데. 그 모든 피해 비용이 그제 전부 다 나의 탓이라는 게 연구실 밖으로 퍼져나가면 관 전체에서 욕먹는 거 거든요. 왜냐면 실험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관에서. 저희들은 놓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몇 시간에 한번씩 체크해야 하는데 멈춘다 이거는 저주거든요. 실제로 공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욕 먹었다고 들었어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과에 어떤 연구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첫 번째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대치동에 병원이 있거든요. 서울 전역에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가고 오고 병원에 머무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무조건 한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주치게 되면 온갖 불레임을 받게 되니까. (웃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기침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연구실에서 “어 코로나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열이 한 번 났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나오는 거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서 이마에 손대보시더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열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저 기침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연구실 쫓겨나서 학교 안 보건실 가서 열체크하고 사인 받아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병원을 가요. (참여자6)

제가 원래 벚꽃 축제한다고 보러 가진 않거든요. 올해 벚꽃 축제 때 그 때 확진자가 많은 시기인데도 그때 몇 명이 모였지? 십만명인가? 근 몇 년 동안 거의 최대가 모였다고. 기사가 나온 걸 보고 그렇게 사람이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지금 건강해서 이 시국에 벚꽃 축제를 나가는구나 나는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억울하고. 친한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저 빼고 세명이서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아마 사진 보낸 거는 제가 못 나오지만 못 나오는 저에게 같이 모여 있는 자기들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 의도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소외감과 박탈감이 좀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만성질환 있는 친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2)

○ 돌봄 노동이 왜 필수 노동이 아닌가? 필수 노동은 무엇인가? 이들의 삶에서 돌봄 노동은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음. 많은 대면 노동이 중단되는 현실 속에서,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주변적으로 간주되던 돌봄 노동은 중심 의제로 떠오름. 하지만 이 역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질병과 장애를 지닌 이들은 전염병이라는 위험 완화의 과학적 개입을 채택하여 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접근은 더 깊은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COVID-19 팬데믹으로 장기간 사회복지시설은 휴관되었고, 운영이 재개되었더라도 축소되어 운영됨.

지원을 받으려 해도 기관들이 다 사실 장애 활동지원 기관도 뭐 대부분 센터들이 다 문을 2단계 3단계는 웬만하면 문을 닫으라고 명령이 내려왔고. 24시간 안전감시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응급 알리미 이런 데도 휴무가 들어갔고. 시설 폐쇄가 되고. 일부 그 자살상담 전화도 상담원들을 재택 시스템을 구축 못 한 상태로 시설폐쇄가 들어갔고. 그 것도 중단됐던 거 같아요.(다시 재개된 서비스는 없나요?) 다시 재개된 것은 아름아름 있기는 한데 지금 신규활동지원사 매칭, 신규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 일자리 이런 거는 거의 다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장애인 고용 작업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설 폐쇄하라는 명령이 와서. 취약계층으로 묶이면서 더 비대면, 시설폐쇄 명령이 강화되는 거죠. (참여자8)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집에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안일의 강도가 높아지며, 더 몸이 체력이 딸리는 이러한 경험들. (중략)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집에서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집이기 때문에, 아이는 밖에서 놀고 있고 남편이 애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밥 다 됐다고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집에서 녹음 수업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만약 오후 1시 수업이면 오전에 애 보내고 뭐하나? 집을 치우는 거죠. (웃음) 여기 앉아 있으면 별게 다 보이기 때문에. 치우다 수업해야 하고. 수업 끝나면 밥해야 하고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약간 안 좋은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체력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일가족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은 계속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참여자1)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자가격리 경험, 진료받으러 간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 경험을 이야기 하며,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건강한 시민으로 상정되어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는 현실을 비판함. 방역 정책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홀로” 이 시간을 버티는 현실의 “처연함”을 강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험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6년 10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운영’등을 요구하여 소송하였고, 법원은 지침 마련을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기각함(김도현, 2021: 108-110). 이러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없는 현실에,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이들이 경험하는 의존성은 높아지지만 “각자도생할”수 밖에 없음.

청각장애인으로서 대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이미터 떨어지라는 게 소통이 가능하거나 한 일인가. 시청각 중복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장애인에게 만약에 소변줄 하는 장애인에게 이미터가 떨어져 소변백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의학상을 수상할거라 짐작해요. 그게 정말 지침이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소변백은 누가 비워줘야 하나. 내가 숨을 못 쉬면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코로나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꼭 들어야 하는 가족 한 사람만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격리병동에 10일 14일 입원하는데. 미친 거죠. (만약의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다른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백인 건가요?)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의 동의를 얻어서 활동지원사가 방호복을 입고 격리한다던가.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통지가 간다던가. 근데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하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엄밀히 자가격리 통지로 들어가지 않는데. 만약 그러다 확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감염병 위반이에요. 되게 애매하게 처리하는 거죠. 일처리를. 지원을 안 해줘요. 병원에서 의무적 안내는 보건소의 통지랑 지원은 안 해주는데. 격리해야 하는 의무는 똑같이 발생하고 책임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특별활동지원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게 되어 있고. (참여자 8)

응급실에 가면은 열이 있고 병력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요. 선별진료소 진짜 열악한데. (중략) 한번은 갔을 때는 제 앞에 환자분은 격리구역의 제 앞의 환자분은 심장질환 여자 환자분이셨고. 옆에 환자분은 뇌졸중, 뇌전증 발작을 계속 하셨는데. 거의 굴러떨어지겠다시피하는데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CCTV로 보고 있어요” 하는데. CCTV로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는 뭐지? 4월에 받고 8월까지 받고. 6월에 한달에 3번 받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할 때마다 계속 요구를 했죠. 중간에 한 번 질식으로 죽을 뻔 했거든요. 구토를 했는데 마스크를 못 벗은 상태에서 구토를 해서. 근데 거기서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진짜 최소 인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접촉도 접촉이지만 인력이 없는 거예요. 선별진료소도 하고 격리구역도 하고 입원실도 하고 응급실도 하고 이걸 다 할 여력이 인력이 없으니까 돕고 계속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있는 거고. 발견이 늦었고. 심장병 환자가 간호사 부르고 자기도 심폐기능 때문에 왔는데 뛰어가서 사람 불러왔더라구요. 그날 정말 처연했어요. 저 진료 받고 있는 한쪽에서 다른 환자는 계속 경기하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이게 각자도생인 거죠. (참여자 8)

○ COVID-19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이전부터 사회로부터 ‘거리두어진’ 사람들이 있음. 20대 여성 연구참여자자는 시각장애인이자 만성감염성질환자인 자신의 삶은 항상 투쟁이었다고 이야기함. 시각장애인이자 자신이 장애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학을 다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탐색과 직업 준비하며 “탈조선”을 꿈꾼다고 이야기함.

결국은 탈조선하기 위해서 진학하게 크죠. (중략) 거기는 시청각장애인이 대학 가고 교수도 하고.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동료 교수가 시각장애인이더라구요. 그거를 보고 내가 아 진짜 생각을 바꾸면 바뀌야겠다. 꼭 여기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바꾸야겠다. (중략)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싸우고 30년을 싸웠는데 제도는 바뀐 게 없고 내 부모가 장애인이 되고 질환자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고. 내가 그렇다고 부모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바꾸려면 투쟁을 하더라도 뭘 좀 알아야겠다. 너무 한국어로 기록된 게 없고 한국에서 연구된 게 없고 뭐라도 알아오려면 내가 다른 언어로 알아야 하는구나. 약간 그게 숙명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어떤 제도가. 왜냐면 저한테는 장애 정도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평소 수치라면 낮으면 완전히 안 보이고 안 들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어든 음성언어도 외국어고 외계어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쓴다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 문화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 제도적 장벽이 영어 문화권의 유럽 문화권의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큰 장벽인 거예요. 장애 질환자로서 사회문화적 장벽이. 그러니까 그게 제1정체성이 되버리니까. 거기에 더 잘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게 됐죠. (참여자 8)

그이는 장애인을 향한 “문화적 장벽, 물리적 장벽, 제도적 장벽”은 외국의 “문화적 언어적 장벽”보다 견고하기에, 20대 장애 여성으로 자신의 생애 전망과 진로 준비의 어려움인 시각장애가 자신의 제1정체성으로 여겼음. 하지만, COVID-19 팬데믹은 이전에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성 염증

상태가 방역정책에 따라 제1 정체성으로 대두되었음. “매일 37.4도 정도의 열은” 대중교통도, 학교도 그 어떤 공공 시설에 접근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임.

‘아 내가 제일 일순위의 지금 정체성은 만성감염질환자겠구나.’ 왜냐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발열 체크를 하는 곳은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감염이 아니더라도 만성 염증 상태기 때문에 매일 37.4도 정도의 열이 매일 있는데. 무조건 37.2도부터 철도 같은 데서도 거르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교통시설 웬만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인업무도 그렇고 저기 공공 기관 업무도 다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박탈이 된 게 제일 큰 정체성. 그 다음이 청각장애인이어서 대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이미터 떨어지라는 게 소통이 가능하거나 한 일인가. (참여자 8)

○ 팬데믹은 이들에게 건강한 이데올로기 전염병 전파의 불확실성, 감염의 우려 등으로 신체적 취약성을 경험하고 사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함. 누구나 취약한 존재이며 질병을 자기관리 실패로 바라보며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는 사회적 이상에 질문하며 “누구나 앓을 수 있고”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음에 긍정함. 특히, 질병에 대한 무지와 낙인, 이와 결합된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 이러한 부분적 취약성과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인정은 질병과 장애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계기로 이야기됨.

코로나 시대가 온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이런건 참 많이 아프지만, 모두가 앓을 수 있잖아요. 공평하게 앓을 수 있는 세상이 와서. 사람들이 손도 잘 씻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요새는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고쳐먹은 게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아프면 쉬 수 있는 사회? 너무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참여자4)

폐에도 전이가 돼서 마스크를 평소에도 잘 쓰고 다녔어요.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썼어야 됐거든요. 면역력도 낮아졌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좋다고 해서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녔는데. 그때는 길가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고.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진작에 마스크를 써야하는데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이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고. (참여자3)

퀴어 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에이즈 아니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든요. 면역질환, 지금은 면역질환이 다양한 게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 면역질환 이콜 후천성 면역질환 에이즈. 혹은 게이 레즈가 아프면 무조건 에이즈일 것이다. 성관계를 안 해도 게이나 레즈비언이면 에이즈 옮는다는 편견도 있고.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면역치료 받을 때 마스크 쓰고 다녔다가 소금 맛고 쫓겨난 적도 있고.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인 뭐 출입 가게에서 안 받고 할 때 진짜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참여자 *)

<참고문헌>

- 김도현, (2021)“‘시설 사회’와 코로나19, 그리고 장애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 106-118.
- 메디게이트. 2020.04.08. “코로나19 사망자 200명, 치명률 1.93% : 80세 이상 20.43%,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 1명”<https://www.medigatenews.com/news/1889234181>
- Butler, 김응산, & 양효실.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 주디스 버틀러 지음 ; 김응산, 양효실 옮김.*
- Bolin, R., Jackson, M., & Crist, A. (1998). Gender inequality, vulnerability, and disaster: Issues in theory and research. *The gendered terrain of disaster: Through women's eyes*, 27-44.
- Buranakul, S., Grundy-Warr, C., Horton, B., Law, L., Rigg, J., & Tan-Mullins, M. (2005). The Asian tsunami, academics and academic research.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6(2), 244-248.
- Cupples, J. (2007). Gender and Hurricane Mitch: Reconstructing subjectivities after disaster. *Disasters*, 31(2), 155-175.
- Dodds, S. (2014). Dependence, care, and vulnerability.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181-203.
- Enarson, E., Fothergill, A., & Peek, L. (2018). Gender and disaster: Foundations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Handbook of disaster research* (pp. 205-223). Springer, Cham.
- Lightfoot, E. S., Lesen, A. E., & Ferreira, R. J. (2020). Gender and resilience in Gulf Coast communitie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llowing a technological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50, 101716.
- Mackenzie, C., Rogers, W., & Dodds, S. (2014). Introduction: What is vulnerability and why does it matter for moral theory.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1-29.
- Strong, P. (1990). Epidemic psychology: A model.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2(3), 249-259.

게임화된 액티비즘 : 대중 페미니즘의 동력

정의솔(요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서론

2015년 5월 말 시작된 메르스 갤러리(이하 메깅)의 트롤링(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골탕먹이는 행위 - 트롤¹⁾들이 하는 행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지난 6년간 '메깅'이라는 이름을 수용한 여성들이 여성주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만들었다. 이 '메깅리아 현상'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이 알려지고 퍼지도록 하는 데에 일조했다. 미디어의 관심과 학술적 논의는 이들 '메깅리안'이 운동을 만드는 것(정치적 의미)과 그것을 위해 채택한 방식(운동의 양식), '미러링'을 해석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정치적 활동, 여성 운동, 운동의 주체 등을 찾는 등 기존의 정치적 운동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본 것이다. 이 발표에서 나는 메깅리아 현상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발생하고 발달되었다는 점, 즉 디지털 공간(들)의 동학,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실천, 미디어 안에서의 의사소통의 경향성, 디지털 담론이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낸 '증강된 augmented' 관점으로서의 여성주의와 이 과정에서의 얻어진 경험과 지식이 현실 사회에 적용되어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즉, 온라인의 경험이 섞이고 서로 연관되면서 각자 강화되는 '증강된 정치' (Jurgenson, 2012)의 양상을 만들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메깅리안 운동은 아랍 스프링이나 오쿠파이 무브먼트, 여성행진과 같이 소셜 미디어를 경유한 운동의 형태로, 디지털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액티비즘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난 manifested 운동이다. 사회학자 브라이언 로더와 댄 메르시어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서 조직되고 미디어 바깥에서 나타나는 운동의 형태를 두고 인터넷 민주주의의 첫번째 세대였던 공론장 모델을 대체하는 두번째 세대의 인터넷 민주주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중심의 모델 (Loader & Mercea, 2012)로 분석한다. 이러한 미디어를 경유했다는 속성과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디지털 실천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발표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 가상의(인터넷 세상에서 구성된) '젠더 워'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게임화된 액티비즘'이라고 분석하고 이 요소가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즉 이 운동을 대중화한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젠더 워, 전쟁터, 전투민족, '메깅민족'의 전쟁

1) 인터넷 '트롤'이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올리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댓글을 다는 이용자를 칭한다. <https://techterms.com/definition/troll>

인터넷 세상에서 ‘남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15년 6월 메르스 갤러리에서의 트롤링이 인터넷 전역에 알려지고 난 뒤였다.²⁾ 언론의 이러한 주목은 한국 사회가 여성혐오적 인터넷 문화를 방관해왔으며 그것이 ‘남성’의 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사이버)폭력의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갈 트롤링과 메갈리아 현상이라는 것이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 이후 디지털 공간을 지배한 안티 페미니즘과 여성혐오적 문화를 공유하는 ‘남성 문화’에 개입하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 여성들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의 남성 문화를 주도하는 인터넷 트롤들은 메갈 트롤링 직전 여성 인터넷 이용자 그룹, ‘여성시대’ 회원들을 적으로 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³⁾ 2015년 5월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에서 일어난 ‘이슈, 트렌드, 소식’을 정리한 소식지 ‘월간디시’는 여성시대 유저들을 공격하는 ‘대여시전쟁’에 디시 안의 ‘무한도전갤러리’를 비롯한 남초 커뮤니티 다수가 참여한 경위를 서술하고 이 ‘전쟁’은 여성시대 회원들의 자살한 불법행위(야설 공유 등)를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한다. 이 소식지의 표현에 따르면, (언론이 포착하지 못했지만) 이 남성 트롤들에게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들이 행한 일방적인 공격⁴⁾을 왜 괴롭힘, 공격성 표출, 트롤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부를까? 한국 온라인 공간의 이용자(특히 그들 중 트롤)들은 그들의 디지털 공격성(digital offensiveness)의 행사를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들이 대부분의 인터넷 활동을 ‘전쟁’의 언어로 표현해왔기 때문이고, 이 언어의 사용이 지난 20년간 (특히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들의 디지털 삶을 함께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실시간전략게임들과 MMORPG (massively multi 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 -스타크래프트 (1998 출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2004 출시), 리그오브레전드 (2009 출시) -의 영향을 받은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가 디시의, 혹은 인터넷 문화의 ‘수도’ 이던 시절의 디시를 관찰한 인류학자 이길호는 그의 책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에서 디시 이용자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부족을 구성하고 그 부족간의 전쟁을 치루는,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의례로서의 공격성 수행을 통해 집단에 소속되는 바를 서술하였다. (이길호, 2012)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게임의 언어를 빌어 자신들의 인터넷 의사소통을 표현한 것은 이길호가 관찰한 바와 같이 그들의 활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게임의 문법이 (그리고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게임의 문법이란, 비디오게임의 문법, 적군과 아군을 나누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임 세팅의 전장에서 행동을 적용했다는 것을 뜻한다.⁵⁾ 예를 들어 1990년대부터 성행한 ‘폴페미 물이’나 최근 나온 ‘손가락 억지 논쟁’은 성차별주의의 게임 혹은 여성혐오의 게임의 문법이 적용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폴페미’를 가려내는 데에나 ‘남혐’ 기업을 가려내는 데에는 그 상황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꼴통’ 짓을 하는 페미니스트가 있다, 남혐 ‘메갈’들이 기업에 침투하여 남성

2) 이재윤·김사무엘 (2015, 6, 19) '조롱'과 만난 메르스... "게시판엔 정보 대신 혐오만".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1811281718042&outlink=1&ref=>

3) 디시인사이드 (2015, 6, 1). 월간디시 6월호 : 무도갤의 불. <https://dcnewsj.joins.com/dcarticle/28452>

4) 이를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시대 회원들 또한 그들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거나 그들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해명 노력에 대해서는 여성시대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블로그 포스트 ‘오유와 여시 사태 정리 만화1’ 참조. <https://blog.naver.com/sheygh843yg/220365595958>

5) 사회과학 혹은 경제학에서 사회적 문제를 산술적 모델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게임 이론 (game theory)에서의 정의 (Kandori, 1997)와 무관하다.

혐오의 비밀 신호를 기업 이미지에 삽입한다. 와 같은 명제는 이들이 참여하는 게임의 ‘세계관 backstory’이다. 게임의 세팅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목적은 게임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 안에서 승리를 획득하고 그 승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게임화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해보도록 유도/설계하고 그 게임플레이가 재미있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이건 아니건 ‘플레이어를 쫓아낸다’와 ‘메갈을 처벌한다’는 결과는 승리, 좋은 피드백을 뜻하기에 이들은 다음 게임을 시작한다. 이러한 디지털 의사소통의 게임화는 디지털 공간의 실천 중의 일부인 여성혐오의 행위들 또한 자연스럽게 ‘게임화’ (gamification of misogyny, Lewis, 2012)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메갈’들이 ‘일베에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 (정희진, 2016; 김현미, 2016)로 평가된 이유는 이 게임에서 학살당하는 (게임 세팅에서 플레이어에게 공격당하고 사라지는) ‘몹mob’⁶⁾이던 여성들이 ‘적 플레이어’로 등장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공간이 삶의 현장인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은 인터넷 의사소통에 익숙하고 디지털 실천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며,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즉 메갈리안 실천에 이용했다. (장민지, 2016) 이렇듯 이 게임의 세팅 안에서 메갈들 또한 ‘전투 민족’으로 참여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에 사는 부족이 되었으며, 그들은 (남성 트롤들이 붙여준 이름), ‘메갈민족’이 되었다.

렐즈Lulz, 혹은 타격감 그리고 승리의 액티비즘

그런데 메갈 트롤링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게임적 속성에 있다. ‘메갈’부족은 ‘한남’부족을 상대로 싸우고, 그 전쟁에서 ‘타격감’을 느끼고, 이기거나 지고, 또 이기기 위해, 혹은 다음에는 이기기 위해, 새 게임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더 좋은 ‘타격감’을 쫓아 자신들의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타격감이란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했을 때 그 공격당한 상대가 얼마만큼의 (가상의, 혹은 상징적인) 피해를 입었는가를 가늠하여 얻어지는 만족감이다. 공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타격감이 크다. 이 ‘타격감’ 또한 게임 용어에서 온 단어인데, 플레이어들이 기기의 조작을 통해 게임 안의 상대를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비디오게임이 제공하는 감각적인 신호들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gut response)을 뜻한다.⁷⁾ 타격감은 비디오게임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격감이 약한 게임,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게임은 더 많은 경기를 하도록 하는 동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격감이 주는 촉각적이고 몸적인 신나게 하는 반응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다음 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싸움에서의 타격감은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한 번 더, 게임을 한 번 더 하게 만든다.

따라서 메갈들이 이 온라인 싸움에 계속 참여하도록 만드는, 결국 메갈리안 운동을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정동은 상대를 공격하고 그 상대의 고통을 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이는 인터넷 트롤을 연구한 미디어 학자 휘트니 필립스가 그의 책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에서 이야기하는 렐즈lulz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Phillips, 2015) 렐즈는 ‘lol -laugh out loud’, 우리말로 하면 ‘ㅋㅋㅋㅋ’의 타락한 버전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웃음의 대상이 된 자의 고통

6) 몹은 흔히 MMORPG 게임에서 게이머들이 게임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기능하는 인간/비인간의 형상을 가진 장치로, 플레이어에게 공격적인 제스처를 보여 싸움을 걸고 플레이어에게 죽임을 당하는 용도를 가진다. 몹을 죽임으로써 플레이어는 경험을 쌓거나 임무를 수행하거나 물건을 획득한다.

7) 내 박사논문 ‘Troll feminism: the rise of popular feminism in South Korea’에서 나는 타격감을 ‘hit feel’로 번역하였다. Hit feel은 ‘game feel’을 변형한 말인데, ‘game feel’이란 (대체로 롤플레이) 게임에서 그 게임이 게이머의 기기 조작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촉각적이고 몸적인 감각을 뜻한다. (Swink, 2008).

을 즐기는' 것으로, 트롤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이유가 된다. (2015, 27쪽) 즉, 모든 트롤링은 '웃기니까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발표자는 이 운동을 '재미의 액티비즘'이라고 칭한 바 있다. (Jeong & Lee, 2018) 온라인 싸움에서 '한남' 부족의 일원이 모욕당하고 공격당할 때, 이들이 메갈들의 트롤링에 의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메갈' 부족의 승리를 뜻한다. 이는 메갈들이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를 공유하도록 하면서 메갈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한다. (트롤들이 흔히 하듯이) 공격하는 대상에게서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이끌어내는 것, 즉 타격감이 좋은 것은, 이들에게 더 큰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메갈들은 힘을 모으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더 큰 타격감을 추구한다.

이 '한남'을 괴롭히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메갈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된 정동networked affect으로 강력하게 기능하는 원인은 1990년대부터 20년간 발달시켜온 여성혐오 디지털 문화에 있다. 그간 디지털 공간의 여성혐오적 문화가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는 공격적인 명명과 그 명명을 통한 여성들의 검열과 규제를 작동시켜왔기 때문이다. 김치녀 담론은 여성들이 김치녀로 분류되지 않도록 자기검열을 내재화하도록 하면서 현대 여성들이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에 순응하는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여성을 공격해왔다. (김수아·김세은, 2016; 황슬하·강진숙, 2014; Kim, 2018) 따라서 메갈 트롤링 이후의 어떤 온라인 싸움에서 그 '일반화된 여성'에 대한 공격을 실천해온, '한남 부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특정한 싸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동안 일반화되어 공격당하던 모든 여성에게 '타격감'과 렐즈의 기쁨을 주고 이 승리감을 더 만들고 확대하고자 하는 동력을 만든다. 또한 어떤 구체적인 이용자 간의 대립의 상황에서 메갈의 공격은 그들에 대한 트롤링을 시도하던 남성들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며 트롤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이고 국지적인 '승리들'을 이끌어냈다. 이 승리감, 기쁨, 즐거움, 네트워크된 신나는 정서는 메갈이라는 여성 트롤들이 남성혐오라는 소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적, 여성혐오자, 성차별주의자, 혹은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를 체화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한국의 남성성과 그 남성성의 주된 담지자인 한국 남성을 계속 공격할 동력이 되었다.

게임화된 액티비즘만이 줄 수 있었던 인식론: 가부장제는 여성 집단의 적

“여성은 퀘스트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플레이어입니다.” 이 문장은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과 추모가 이어지던 때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어있던 수천장의 포스트잇 가운데 한 장에 적혀있었다.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2016) 이 문구는 한편으로는 메갈리아 현상 이후 여성들이 획득한 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여성이, 남성이 사회적으로 성취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대상화된 상태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변화된 세계관을 게임의 은유를 통해 보여주고 그 세계관을 이들이 가상 세계의 젠더 워 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현장의 경우 일상적이고 범람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젠더 관계)에 적용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 그들의 전쟁의 대상이 온라인 여성혐오를 넘어 한국 사회의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메갈리아 현상에서 '메갈'들은 '미러링'을 통해 '남성혐오'적 실천을 반복했고 이 실천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대립에서 '한남'이라는 적을 규명하고, 싸움을 반복하고 (혹은 '젠더 워' 게임을 재시작하고),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파워게이머 (Taylor, 2006)가 되어 더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논쟁에는 반응하지 않고 모욕에는 반응한 남성 트롤들이 메갈들을 숙련된 전투민족으로 성장시켰다.⁸⁾ 이 디지털 전장에서 메갈들

8) 초기 메갈 이용자들은 설득이나 토론의 시도가 통하지 않지만 욕설과 트롤링이 효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하

이 만나는 적은 사실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고 내재화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 지배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것이 여성의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에너지와 자원을 남성이 착취하도록 허용하는 한국의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이들에 대한 자신의 적대적인 지위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공격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에야 이들, 가부장제와 가부장제의 수혜자들인 ‘한남’은 물리칠 대상으로 재인식되었다. 메갈들이 이 ‘한국 남성’들과 삶의 공간, 인터넷 공간 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 또한 필연적으로 공유하는 ‘한국 여성’들이기에 이들에 대항하는 것은 메갈들이 살아가는 실제 환경과 물리적 현실에도 적용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페미니스트 운동인 메갈리안 액티비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트롤링이라는 사건은 트롤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현상으로 재구성된다.

여기서 디지털 ‘남녀전쟁’ 혹은 온라인 문화로서의 남혐 대 여혐이라는 꾸며낸 대립은 디지털 공간이 메갈 트롤링 이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 이용자들이 반기를 들 생각도 할 수 없도록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성혐오적 문화의 범람으로 여성들에게 적대적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디지털 공간은 여전히 남성 유저들이 그들의 여성혐오적인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상을 대립 혹은 대결로 재현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전투/게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라도 플레이어로서 ‘한국남성’이라는 적을 식별하고 물리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남성 대 여성이라는 담론적 배치에서 메갈들은 남초 커뮤니티의 ‘평범한’ 이용자들을 여성혐오자, 성차별주의자, 페미니스트 시민의 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세계관이 도출된다. 따라서 메갈들이 참여한 ‘남성혐오’ 게임의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이 세계는 여성혐오의 문화적 지배 하에 통치되어왔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선 ‘남성혐오자’ 들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실질적인 적과 구체적인 싸움의 목적을 부여하는 ‘액티비즘의 게임화’는 팀 ‘한남’과 팀 ‘메갈’이 서로 다른 팀이며 서로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각하고,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을 부당하게 착취하도록 용인하는) 한국의 가부장제라는 이 게임의 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이 같은 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젠더 관계에 대한 인식, 남성과 여성이 가부장제의 수호자와 도전자로 갈려 갈등한다는 관점은, 가부장제의 젠더 관계가 착취적인 상황에 한 집단을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물질적 현실을 젠더화하고 계층화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따라서 페미니즘 운동은 착취당하도록 계층화된 집단이 저항하는 액티비즘이라는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아이디어(Delphy, 1980)에 연결된다. 이 관점은 한국 사회의 젠더 관계, 여성 억압과 여성을 향한 적대를 생산하는 구조적 위계를 질문하지 않거나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믿으며 갈등적인 상황에 이미 참여한 상태를 부인한다면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전장에서의 ‘전투민족’으로서의 위치에서 적대가 페미니스트 운동의 조건임을 알아봄으로써 이 관점은 간단하게 획득된다. 이는 젠더 위를 경험하고 참여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이 가부장제를 알아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다.

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것을 터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메갈 유저의 글 ‘치남이는 너무 길어서 못 읽는 만화’ 참조.
<https://gall.dcinside.com/notmarried/52983>

<참고문헌>

-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2016).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어떤 애도와 싸움의 기록. 서울: 나무연필.
- 김수아, 김세은 (2016).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5-44.
- 김현미. (2016). 시간을 달리는 페미니스트들. *Littor*, 2, 24-28.
- 이길호. 2012.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서울: 이매진.
- 장민지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Digital Native Fe/male Subject)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219-255.
- 정희진. (2016. 12. 30).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754513.html#csidx9af0805813ee8939b1856dd46132e42>
- 황슬하, 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 Jane, E. A. (2014). 'Your a ugly, whorish, slut': Understanding e-bile. *Feminist Media Studies*, 14(4), 531-546.
- Jeong, E., & Lee, J. (2018). We take the red pill, we confront the DickTrix: Online feminist activism and the augmentation of gendered realities in South Korea. *Feminist Media Studies*, 18(4), 705-717.
- Kandori, M. (1997). Evolutionary game theory in economics. *Advances in economics and econometrics: theory and applications*, 1, 243-277.
- Kim, J. (2018). Misogyny for male solidarity: Online hate discourse against women in South Korea. In Vickery, J. R., & Everbach, T. (Eds.) *Mediating misogyny: Gender, technology, and harassment* (pp. 151-169). Retrieved from <https://ebookcentral.proquest.com>.
- Loader, B. D., & Mercea, D. (Eds.). (2012). *Social media and democracy: Innovations in participatory politics*. Retrieved from <http://ebookcentral.proquest.com>
- Lewis, H. (2012, December 7). Anita Sarkeesian and the gamification of misogyny. *NewStatesMan*. Retrieved from <https://www.newstatesman.com/helen-lewis/2012/12/anita-sarkeesian-and-gamification-misogyny>
- Phillips, W. (2015)
- Swink, S. (2008). *Game feel: A game designer's guide to virtual sensation*. Retrieved from <https://ebookcentral.proquest.com>
- Taylor, T. L. (2006). *Play between worlds: Exploring online game culture*. Retrieved from <https://ebookcentral.proquest.com>